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2. 12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2. 12

제1부 국내 재정동향	1
I. 대한민국	3
제2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15
I. 유럽연합(EU)	17
II. 국제통화기금(IMF)	67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9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121
I. 미국	123
II. 일본	191
III. 독일	233
IV. 프랑스	271
V. 영국	309
[주요 자료 출처]	345

제 1 부

국내 재정동향

I. 대한민국



I

대한민국¹⁾

01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2022. 7. 7)

- 정부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 금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재정총량 관리목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과제 등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
-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민간 주도의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4대 정책방향) ①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② 건전재정 기조 확립 ③ 강력한 재정 혁신 ④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¹⁾ 김진아 선임연구원(jina@kipf.re.kr)·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보도·발표·계재자료 등을 발췌·정리하여 작성

표 1-I-1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정책방향	내용
국정과제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확충 등을 통해 국정과제 소요 재원조달
건전재정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Delta 3.0\%$ 이내로 대폭 개선 국가채무: 202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
강력한 재정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공직사회 고통분담 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하여 재정부담 절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로 전환
재정비전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시계에서 과감한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2.7.7.

02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2022. 8. 30)

-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
-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 규모: 총지출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0조원 규모(2022년 2차 추경 대비 6.0% 감소), 총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1% 증가한 625.9조원(2022년 2차 추경 대비 2.8% 증가)
 - 역대 최대 규모($\Delta 24$ 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표 1-1-2 2023년 재정운용(안)

(단위: 조원, %)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본예산	2차 추경	
총수입 (증가율)	553.6 (14.7)	609.1 (26.2)	625.9 (13.1)
총지출 (증가율)	607.7 (8.9)	679.5 (21.8)	639.0 (5.2)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54.1 (△2.5)	△70.4 (△3.3)	△13.1 (△0.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4.1 (△4.4)	△110.8 (△5.1)	△58.2 (△2.6)
국가채무 (GDP 대비 %)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주: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 운용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2.8.30.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 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
- 재정수입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국세수입, 경제성장과 다각적 수입 확충 노력 등에 기인
 - 국세수입은 연평균 7.6%,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연평균 5.4% 수준 증가 전망
 - 재정지출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 계획
 -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국가채무 등을 고려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하고,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
 - 의무지출은 연평균 7.5%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1.5% 증가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022년 △4.4%에서 2026년 △2%대 중반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사회) 지역 계층 세대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고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
- (경제) 경제운용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 미래전략산업 육성, 초격차 기술 개발,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등 역동경제 실현
- (행정) 전략적 ODA 활용, 튼튼한 안보역량 구축, 국민 안심 사회 실현, 유능한 정부 구현 등 행정역량 제고

표 1-I-3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단위: 조원,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2022~2026)
	본예산	2차 추경					
총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국세	343.4	396.6	400.5	418.8	439.2	459.9	7.6
세외	26.1	28.3	25.2	26.9	27.7	28.1	1.9
기금	184.1	184.1	200.3	210.1	218.7	227.2	5.4
총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4.6
의무	303.2	329.7	341.8	361.8	382.5	405.1	7.5
재량	304.5	349.8	297.3	308.0	316.8	323.6	1.5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4.1 (△4.4)	△110.8 (△5.1)	△58.2 (△2.6)	△58.6 (△2.5)	△57.4 (△2.3)	△56.6 (△2.2)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54.1 (△2.5)	△70.4 (△3.3)	△13.1 (△0.6)	△14.0 (△0.6)	△13.7 (△0.6)	△13.4 (△0.5)	
국가채무 (GDP 대비)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1,201.2 (50.6)	1,271.9 (51.4)	1,343.9 (52.2)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2. 8., pp.7~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03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발표(2022. 8. 30)

- 2023년 국세 수입은 2022년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3.8조원(1.0%), 2022년 전망(397.1조원) 대비 3.4조원(0.8%) 증가한 400.5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 2022년 예산(386.2조원) 대비 1.0% 증가한 390.3조원 전망
 - 특별회계: 2022년 예산(10.4조원) 대비 2.1% 감소한 10.2조원 전망
 - 국세증가율 둔화는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산 세수 감소 전망 및 2021년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이연세수 기저효과에 기인

표 1-I-4 2023년 국세수입 전망

	2021년 실적	2022년		2023년 예산(C)	2022년 예산 대비(C-A)		전망 대비(C-B)	
		2차 추경(A)	전망(B)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국세	3,440,782	3,966,498	3,970,886	4,004,570	38,072	1.0	33,684	0.8
일반회계	3,325,048	3,862,322	3,862,084	3,902,539	40,217	1.0	40,455	1.0
특별회계	115,734	104,176	108,802	102,031	△2,145	△2.1	△6,771	△6.2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보도자료, 2022.8.30., p.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131.9조원, 법인세 105.0조원, 부가가치세 83.2조원 수준으로 전망
 - (소득세)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나, 임금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 예상
 - (법인세)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및 2022년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의 기저효과로 금년 수준 예상
 - (부가세) 소비증가·물가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증가 예상²⁾

²⁾ 민간소비증가율(%): ('19) 2.1 ('20)△4.8 ('21) 3.7 ('22e) 3.7 ('23e) 3.2
 소비자물가상승률(%): ('19) 0.4 ('20) 0.5 ('21) 2.5 ('22e) 4.7 ('23e) 3.0



04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500억원 지출 의결(2022. 9. 7)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월 5~6일 양일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경주, 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함
 - 금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
 - * (개산예비비)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 지출

05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2022. 12. 15)

-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 (일반정부 부채(D2)) 2021년 일반정부 부채는 1,066.2조원으로 2020년 945.1조원 대비 121.1조원 증가
 -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110.4조원) 증가 등에 기인
 -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로 증가 폭은 둔화
 - 최근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³⁾ 평균(56.5%)에 근접하는 추세
 - (공공부문 부채(D3)) 2021년 공공부문 부채는 1,427.3조원으로 2020년 1,280.0조원 대비 147.4조원 증가

표 1-I-5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년 대비, %p)	40.1 (△1.1)	40.0 (△0.1)	42.1 (2.1)	48.7 (6.6)	51.5 (2.8)
공공부문 부채 비율 (전년 대비, %p)	56.9 (△2.6)	56.8 (△0.1)	58.9 (2.1)	66.0 (7.1)	68.9 (2.9)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12. 15.

-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³⁾ 2021년 일반정부 부채비율(IMF, 2022년 10월 기준): 기축통화국 92.3%, 비기축통화국 56.5%

06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022. 12. 21)

- 정부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4대 기본방향(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 대비 체질개선) 제시

표 1-I-6 경제정책방향 세부내용

(1) 거시경제 안정관리	① 거시정책 조합
	② 금융시장 안정
	③ 잠재리스크 대응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⑤ 에너지 위기 대응
(2) 민생경제 회복지원	① 물가 안정
	② 생계비 부담 경감
	③ 약자복지 확충
	④ 고용 안정
	⑤ 소상공인 지원 강화
(3) 민간중심 활력제고	① 수출 활성화
	② 투자촉진·규제혁신
	③ 신성장 4.0 전략 추진
	④ 중소·벤처 활성화
	⑤ 공정시장 구현
(4) 미래 대비 체질개선	① 3대 구조개혁
	② 3개 경제혁신
	③ 인구·기후위기 대응
	④ 경제안보 강화
	⑤ 상생·지역 균형 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도자료, 2022. 12. 21., p.6.

07 2023년 예산 국회 확정(2022. 12. 24)

- 2023년 예산의총지출은 정부안인 639.0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한 638.7조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인 625.9조원 대비 0.26조원 감소한 625.7조원으로 국회에서 확정
 - 총지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총지출이 순감으로 전환
- 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Delta 2.6\%$, $\Delta 0.6\%$ 로 유지되고, 국가채무는 1,134.8조원에서 1,134.4조원으로 0.4조원 축소되는 등 건전 재정 기조 견지

표 1-I-7 2023년 확정예산

(단위: 조원, %)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A)	2차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총수입	553.6	609.1	625.9	625.7	$\Delta 0.3$	72.1	13.0
총지출	607.7	679.5	639.0	638.7	$\Delta 0.3$	31.0	5.1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94.1$ ($\Delta 4.4$)	$\Delta 110.8$ ($\Delta 5.1$)	$\Delta 58.2$ ($\Delta 2.6$)	$\Delta 58.2$ ($\Delta 2.6$)	$\Delta 0.0$ ($\Delta 0.0$)	35.9 (1.8%p)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54.1$ ($\Delta 2.5$)	$\Delta 70.4$ ($\Delta 3.3$)	$\Delta 13.1$ ($\Delta 0.6$)	$\Delta 13.1$ ($\Delta 0.6$)	0.0 (0.0)	41.0 (1.9%p)	
국가채무 (GDP대비, %)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1,134.4 (49.8)	$\Delta 0.4$ ($\Delta 0.0$)	70.0 ($\Delta 0.2\%$)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2.12.24., p.2.

표 1-I-8 2023년 정부 예산안 대비 확정예산 주요 증액 내역

증액 내역	주요 내용	규모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확대 • 장애인 근로지원인 추가 배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7조원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 투자 •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0.7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 농어촌 지역 지원 • 기타 지역 현안대응 등 지원 확대 	1.5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2.12.24.

표 1-I-9 2023년 확정예산 주요 감액 내역

(단위: 억원)

부처	세부사업	규모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6,770
기획재정부	예비비	6,000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753
중소기업벤처부	신성장기반자금(용자)	2,955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803
환경부	무공해차보급사업	1,750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1,2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3.1.17. 주요 감액 내역 중 1천억원 이상 정부안 대비 감액된 사업 작성.

표 1-I-10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2년(A)	2023년 정부안	2022년 최종(B)	증감 (B-A)
총지출	607.7	639.0	638.7	+31.0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226.0	+8.3
2. 교육 (교부금 제외)	84.2 (19.1)	96.1 (18.9)	96.3 (20.5)	+12.1 (+1.4)
3. 문화·체육·관광	9.1	8.5	8.6	△0.5
4. 환경	11.9	12.4	12.2	+0.3
5. R&D	29.8	30.7	31.1	+1.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26.0	△5.3
7. SOC	28.0	25.1	25.0	△3.0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24.4	+0.7
9. 국방	54.6	57.1	57.0	+2.4
10. 외교·통일	6.0	6.4	6.4	+0.4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22.9	+0.6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98.1 (33.0)	111.7 (36.4)	112.2 (36.9)	+14.1 (+3.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2.12.24., p.9.

제 2 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 I. 유럽연합(EU)
- II. 국제통화기금(IMF)
-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

유럽연합(EU)*

표 2-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7.12.	EU 이사회, 크로아티아 유로지역 가입 승인
2022.7.12.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발표
2022.7.13.	EU 이사회, 2023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2022.7.13.	EU 집행위, 회원국의 2022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2022.7.14.	EU 집행위, 2022년 여름 경제전망 발표
2022.7.20., 7.26., 8.5.	EU 이사회, 겨울 가스 소비 15% 감축 합의
2022.9.7.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거시금융지원(MFA) 발표
2022.10.20.	EU 의회, 2023년 EU 예산결의안 가결
2022.11.9.	EU 집행위, 180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제안
2022.11.11.	EU 집행위,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2.11.14.	EU 이사회·의회, 2023년 EU 연간 예산 합의
2022.11.22.	EU 집행위,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제출한 2023년도 재정계획안에 대한 평가 발표
2022.11.22.	EU 집행위, 2023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
2022.11.22.	EU 집행위,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ASGS) 발표
2022.12.3.	EU 이사회,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
2022.7.21., 9.8., 12.15.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
2022.12.18.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및 사회기후기금 조성
2022.12.19.	EU 이사회, 천연가스(TTF) 가격 상한제 적용 기준을 1MWh당 180유로로 결정

*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01 유럽연합(EU) 예산

※ EU 연간 예산은 집행위 예산안 편성, 이사회 입장 채택, 의회 입장 채택, 이사회·의회 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사회와 의회 입장이 다를 경우 개시되며 합의 실패 시 집행위가 새로운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EU 이사회, 2023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2022.7.13.)¹⁾
 - (규모²⁾) 2023년 EU 예산안으로 승인기준 1,840억유로, 지급기준 1,657억유로를 채택해 집행위 안 대비 각각 16억유로, 5억유로 감액
 -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가 각각 12억유로, 4억유로 감소해 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중 EU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³⁾이 각각 7억유로, 2억유로 감액됨
 -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하위 분야와 파트너 및 세계 분야, 기타 특수 기금은 원안 유지됨
 - (부대의견) 집행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회에 행정 예산 절감을 요청
 - 현재 및 지난 다년도 재정 체계(특히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하위분야와 농촌 개발 부문)의 프로그램 이행을 계속 면밀하고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2023년 지급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 이사회는 이번 입장 채택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9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연동임금(automatic salary update, automatic wage indexation)의 영향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행정 지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1)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3: Council agrees its position," 2022.7.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13/eu-budget-for-2023-council-agrees-its-position/>, 검색일자: 2022.7.20.

2)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3) 기후 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EU의 경쟁력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기후 변화 적응, 암, 해양과 강 복원,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토양 회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

- 한편 다년도 예산의 행정 분야 지출 상한은 모든 EU 기구의 직원 수를 안정화하고 행정 지출을 감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신규 및 증원 계획은 행정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계
- (향후 일정) 9월 6일까지 공식 서면 절차를 완료한 후, 이후 의회와 심의·조정을 진행할 예정

표 2-1-2 2023년 집행위 EU 예산안과 이사회 입장 비교

(단위: 백만유로)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집행위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차이 (B-A)	집행위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차이 (B-A)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568	20,333	-1,235	20,901	20,523	-378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0,087	69,849	-238	55,840	55,809	-32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2,923	62,923	0	49,131	49,131	0
2b. 회복력 및 가치	7,164	6,926	-238	6,709	6,678	-32
3. 천연자원 및 환경	57,223	57,178	-45	57,445	57,439	-6
4. 이주 및 국경관리	3,727	3,677	-50	3,067	3,017	-50
5. 안보 및 국방	1,901	1,889	-12	1,111	1,110	-2
6. 파트너 및 세계	16,782	16,782	0	13,774	13,774	0
7. 유럽 공공 행정	11,449	11,386	-63	11,449	11,386	-63
기타 특수 기금	2,855	2,855	0	2,680	2,680	0
합계	185,591	183,949	-1,641	166,268	165,738	-530

자료: EU 이사회,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3: Council position(technical annexes)*, 2022. 7. 12.,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1075-2022-ADD-2/en/pdf>, 검색일자: 2022. 7. 20.

- EU 의회, 2023년 EU 예산결의안 가결(2022.10.20.)⁴⁾
 - (정책방향) 2023년 예산안은 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② 에너지와 기후 문제 해결 ③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을 강조
 - (규모) 의회는 2023년 예산안 규모를 승인기준 1,873억유로, 지급기준으로 1,676억유로로 채택
 - 이사회가 삭감한 예산(약 16억유로 규모) 대부분이 증액되어 집행위가 초기 제안했던 예산안 수준으로 편성

표 2-I-3 2023년 EU 예산안 규모

(단위: 십억유로)

구분	집행위 편성	이사회 채택		의회 채택		
	금액 (1)	금액 (2)	차이 (2)-(1)	금액 (3)	차이 (3)-(1)	차이 (3)-(2)
승인기준 예산	185.6	184.0	-1.6	187.3	+1.7	+3.3
지급기준 예산	166.3	165.7	-0.5	167.6	+1.3	+1.9

자료: EU 집행위·이사회·의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주요 내용) 의회는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정책에 자금지원을 늘림
 - (우크라이나 재건)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난민들을 돕는 자금지원을 늘리는 등 집행위 예산안 대비 8.5억유로 증액
 - (에너지·기후) 녹색전환 및 에너지 다양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EU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 예산안 대비 5.3억유로를 증액

4) EU 의회, "MEPs want EU budget for 2023 to focus on Ukraine, energy and pandemic," 2022.10.20.,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1014IPR43214/meps-want-eu-budget-for-2023-to-focus-on-ukraine-energy-and-pandemic>, 검색일자: 2022.10.21.;
 EU 의회, "EU budget 2023 - timeline & quick reference," 2022.9.29.,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929IPR41806/eu-budget-2023-timeline-quick-reference>, 검색일자: 2022.10.21.

- (팬데믹 회복) 이사회가 통합 보건 프로그램인 EU4Health⁵⁾ 사업에서 삭감한 2억유로를 복구하고, 보건 시스템 구축과 문화와 가치 등을 위해 2.5억유로를 추가 증액
- (향후 일정) EU 의회와 이사회 입장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3주간(10.25.~11.14.) 열릴 예정

표 2-1-4 집행위 예산안 대비 증액 내역

(단위: 억유로)

구분	금액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재건	8.5	학생 교류 프로그램(Erasmus+), 유럽연대 봉사단, 마리퀴리 연구지원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EU이민통합기금, 국경관리와 비자정책, EU 남부 및 동부 지역의 근린국가 지원, 개발 및 국제협력(NDICI), 유럽방위기금, 군사이동성
에너지·기후	5.3	Horizon 유럽 연구 프로그램, 유럽횡단 운송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럽연결시설, 환경 및 기후 활동을 위한 LIFE 프로그램,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팬데믹 회복	2.5	EU 시민 보호 메커니즘(UCPM), 문화·창작 프로그램,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권리 및 가치 프로그램, 유럽 검찰청(EPPC)

자료: EU 의회, “MEPs want EU budget for 2023 to focus on Ukraine, energy and pandemic,” 2022. 10. 20.,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1014IPR43214/meps-want-eu-budget-for-2023-to-focus-on-ukraine-energy-and-pandemic>, 검색일자: 2022. 10. 21.

□ EU 이사회·의회, 2023년 EU 연간 예산 합의

- (규모) 확정된 2023년 예산은 승인기준 1,866억유로, 지출기준 1,686억유로
 - 이는 EU 27개국 GNI 대비 각각 1.14%, 1.03%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23년 예산은 EU 장기 예산인 2021~2027년 EU 다년도 재정체계(MFF)⁶⁾의 세 번째 단년도 예산안이며 다년도 재정체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소요에 4억유로를 추가 지출 가능

5) 코로나19로 인한 EU 차원의 대응으로 의료 시스템 및 의료 직원 지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의 디지털 전환 강화 등을 목표

6) 다년도 재정체계는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EU가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각 해마다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규율한 것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재정체계를 준수해야 함. 2021~2027년 동안 1조 743억유로 규모(2018년 가격기준)의 EU 장기예산이 편성되어 시행 중.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0 참고



- (주요 내용⁷⁾)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디지털 전환, 보다 회복력 있는(resilient) 유럽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며, 이웃과 전 세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자 함
 - 인근국 지원, 개발원조 및 국제협력(NDICI)에 147억유로 지원
 - EU 이민통합기금에 15억유로, 국경관리와 비자정책에 9.6억유로 지원
 - 유럽횡단 운송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럽연결시설에 30억유로, 군사 이동성에 2.9억유로 지원
 - 학생 교류 프로그램(Erasmus+)에 37억유로, 문화·창작 프로그램에 3.3억유로 투자
 - 경제, 사회 및 지리적 통합에 629억유로 지원
 - 유럽 농어민 지원, 농수산 부문 회복력 강화,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에 536억유로 편성
 - Horizon 유럽 연구 프로그램에 124억유로를 편성하여 연구(건강, 디지털, 산업, 우주, 기후, 에너지 및 이동성 등의 분야)를 지원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6억유로 편성
 - 통합 보건 프로그램인 EU4Health 프로그램에 7.4억유로 편성
 -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기금(Just Transition Fund)에 15억유로, 환경 및 기후 행동 LIFE 프로그램에 7.6억유로 편성
 - 대내 안보 기금에 4억유로, 유럽 방위 기금에 9.5억유로, 유럽방위산업강화에 1.6억유로 지원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10월호, 2022 참고

표 2-1-5 2023년 EU 확정 예산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548	20,901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0,587	58,059
3. 천연 자원과 환경	57,259	57,456
4. 이주 및 국경관리	3,727	3,038
5. 안보 및 국방	2,117	1,208
6. EU 주변국 및 세계	17,212	13,995
7. 유럽 공공 행정	11,311	11,311
기타 특수 기금 ¹⁾	2,855	2,680
합계	186,617	168,649
(EU27 GNI 대비 %)	(1.14%)	(1.03%)

주: 1) 기타 특수 기금은 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SEAR),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EGF), Brexit Adjustment Reserve(BAR)임

자료: EU 집행위,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EU Annual Budget 2023," 2022. 11.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785, 검색일자: 2022. 11. 15.

02 European Semester

- ※ European Semester는 회원국들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한 연간 순환과정임
 - ※ 통상 EU의 차년도 우선순위 설정(11월) 및 회원국별 평가(1~3월), 회원국의 국가별 계획 제출 및 EU의 국가별 정책 권고 발표(4~7월), 회원국의 권고 반영 및 국가별 예산안 제출(7~10월) 등으로 진행
- EU 집행위, 회원국의 2022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2022. 7. 13.)⁸⁾
- ※ 동 보고서는 2022년 봄 EU 회원국들이 제출한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SCPs)⁹⁾과 EU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EU 차원의 재정 전망, 재정기조, 정책 조합 등을 검토
 - (2021년 평가) 2021년 EU 경제는 EU 차원의 지침 완화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강건한 회복을 보였으며, 경제 회복에 따라 재정 지표들도 개선됨
 - 안정성장협약¹⁰⁾의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¹¹⁾과 국가 지원(State Aid) 임시 프레임워크¹²⁾는 회원국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8)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an Overview, with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2-stability-convergence-programmes_en, 검색일자: 2022. 7. 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22 No. 5] European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July 2022"를 참고 바람(<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International/kiPublish/CA4/Center/view.do>)

9) 매년 4월, EU 회원국은 향후 3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유로 국가들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비유로 국가들은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에서 재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10)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EU 국가들이 건전 재정을 추구하고 재정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①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거나 ② 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서 충분한 속도로 채무를 감축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초과적자 시정절차(EDP)가 개시될 수 있음. 또한 중기재정목표(MTO)를 위반(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와 지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심각한 위반 시정 절차(SDP)를 개시할 수 있음

11) 특수한 상황일 때 재정준칙 준수 의무에서 예외적인 이탈을 용인하는 규정

12) EU 기능조약 제107조 제1항은 조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경쟁 왜곡 지원이 역내시장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은 역내시장과 양립하는 지원 형태를 규정함 집행위는 제2항 b호(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와 제3항 b, c호에 따라 국가 지원을 승인함

- 했으며, 동시에 EU 차원에서는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RE)¹³⁾과 회복·복구기금(RRF)¹⁴⁾ 등을 통해 피해 경감과 경제 회복을 촉진
- 그 결과, EU의 실질 GDP는 2020년 5.9% 감소했으나 2021년 5.4% 성장
 - 경제 회복에 힘입어 EU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0년 6.8%에서 2021년 4.7%로 개선되었고 GDP 대비 총채무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92%에서 2021년 90%로 하락
- (2022~2023년 전망) 2022~2023년 EU 경제는 2021년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재정 지표는 2022~2023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집행위 봄 전망(2022년 EU 기준 2.7%)과 회원국의 SCPs(3.5%) 전망 모두 전년 대비 둔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SCPs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최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해 집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망치가 더 높음
 - 2022년 재정 적자는 경제 회복 진행과 코로나19 임시 조치의 감소를 반영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가계·기업에 대한 에너지 가격 인상 부담 완화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등 새로운 조치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전망
 - 2023년은 경제 회복 진행, 팬데믹 임시 조치와 에너지 가격 인상 부담 완화 조치의 단계적 종료에 따라 적자가 더욱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채무는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이자율 및 높은 성장률로 인해 대부분 회원국에서 감소할 전망

EU 법령포털(EUR-Lex),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12008E107&from=EN>, 검색일자: 2022.5.26.

EU 집행위, "The State Aid Temporary Framework," https://ec.europa.eu/competition-policy/state-aid/coronavirus/temporary-framework_en, 검색일자: 2022.5.26.

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회원국의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한 EU의 단시간 근로 지원 정책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자영업자 소득 보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국에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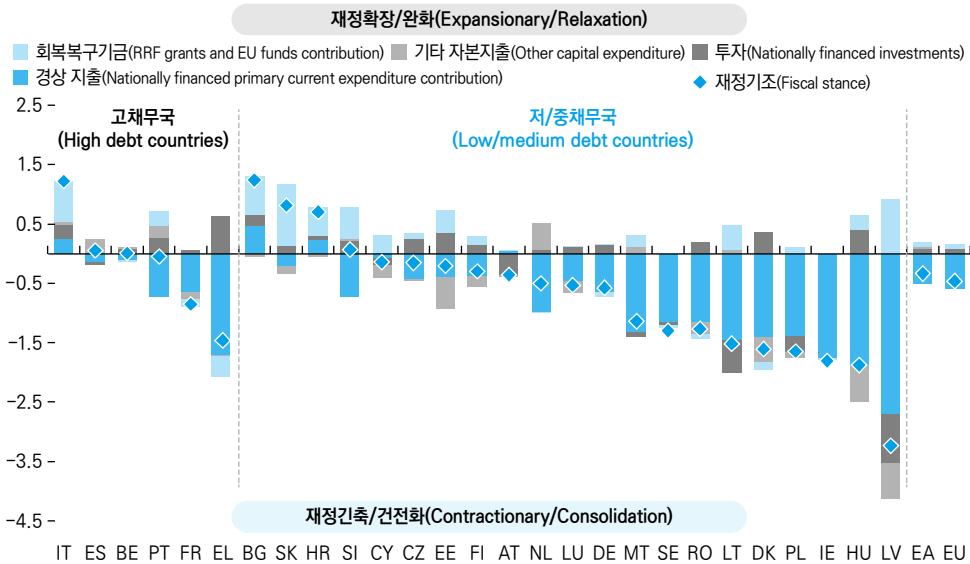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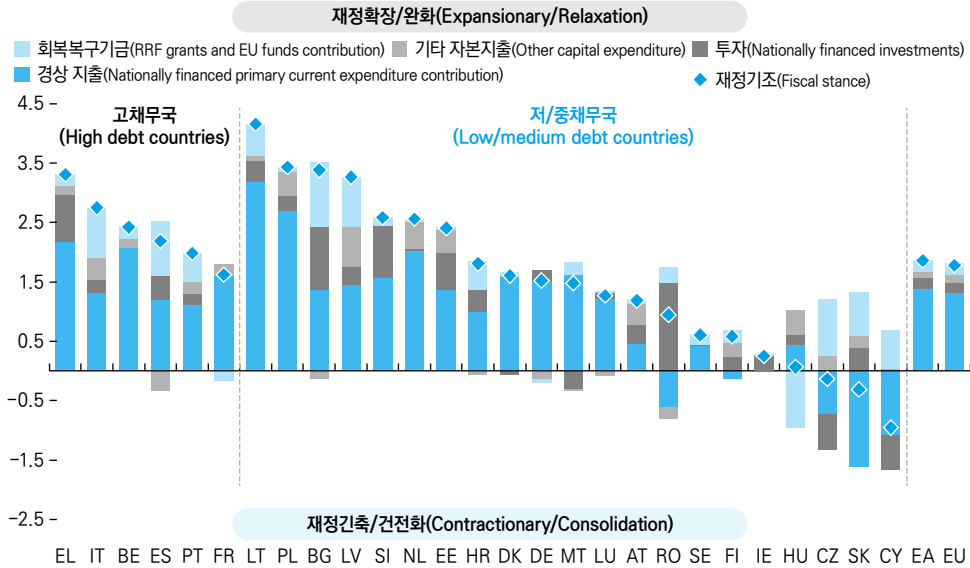
14)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6,725억유로(2018년 불변 가격), 7,238억유로(경상 가격) 규모 자금을 회원국에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지원.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 (재량 지출) 주로 코로나19 지원, 경제 회복 지원, 에너지 관련 조치가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각 규모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전망
 - 코로나19 긴급 조치 규모는 2021년 GDP 대비 3.2%에서 2022년 0.8%로 급감하고 2023년에는 전면 종료될 예정
 - 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1.4%에서 2022년 2.3%로 증가해 2023년에도 2.1% 수준을 유지하며, 회복·복구기금 등 EU 보조금보다는 회원국 자체 재원이 큰 부분을 구성
 - 에너지 관련 조치는 2021년 말 0.1%에서 시작돼 2022년 0.5%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거의 종료될 예정
- (회원국별 재정기조¹⁵⁾) EU 예산과 회원국 예산을 합한 EU 회원국의 재정기조는 2022년 지원적(supportive)이다가 2023년에는 긴축적으로 전환될 전망
 - 2022년에는 22개 회원국이 GDP 대비 0.5% 이상의 뚜렷한 확장 재정기조, 3개국이 중립 기조로 나타나며, 건전 재정을 권고받은 고 채무 회원국이 모두 확장 재정을 계획
 - 2023년에는 14개 회원국이 GDP 대비 0.5% 이상의 뚜렷한 긴축 재정기조를 보일 전망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EU의 회복복구기금(RRF) 보조금과 회원국 자체 투자가 재정 확장적 요소로 기여
 - 2024~2025년에는 대부분 회원국에서 긴축 재정기조를 계획했으며,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루마니아는 대체로 중립적 기조를 계획

¹⁵⁾ 재정기조는 잠재 GDP를 감안한 기초 재정 수지의 변화로 측정. 코로나19 임시 긴급 지원, 실업 급여, 이자지출, 예외적 조치는 제외하며, EU 지원으로 조달한 지출은 포함

그림 2-I-1 2022년(위)과 2023년(아래) EU 회원국의 재정기조

(단위: GDP 대비 %)



주: IT 이탈리아, HR 크로아티아, SI 슬로베니아, LT 리투아니아, PT 포르투갈, EL 그리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CZ 체코, MT 몰타, SE 스웨덴, LV 라트비아, AT 오스트리아, BG 불가리아, CY 키프로스, BE 벨기에, DE 독일, SK 슬로바키아, DK 덴마크, HU 헝가리, FI 핀란드, RO 루마니아, PL 폴란드, NL 네덜란드, IE 아일랜드, EE 에스토니아, LU 룩셈부르크, EA 유로지역, EU 유럽연합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an Overview, with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2022*, p. 26~27, Graph 2.8&2.9

- (유로지역의 재정기조) 유로지역은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정책 조합이 중요
 - (재정기조)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2021년 GDP 대비 약 1.25%, 2022년 1.75%로 지원적이었다가 2023년에는 0.5%로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될 전망
 - (통화 기조) 통화정책 기조는 2021년 완화적이었으나,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야기하면서 2022~2023년 중 정상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정책 조합) 현 상황에서 광범위한 재정부양책은 적절하지 않고, 재정정책은 건전(prudent)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민첩성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을 피하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EU 집행위,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제출한 2023년도 재정계획안에 대한 평가 발표 (2022. 11. 22.)¹⁶⁾
 - ※ 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유로지역 국가들은 차년도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EU 집행위는 11월에 회원국의 재정계획안이 안정성장협약(SGP)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함¹⁷⁾
 - 유로 지역에 가입 예정(2023.1.1.)인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재정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집행위는 전반적으로 공공재정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
 - 특히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 에너지안보를 지원하는 성장 강화(growth-enhancing) 투자를 포함

¹⁶⁾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 "2023 Draft Budgetary Plans - Overall assessment," 2022.11.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3_en, 검색일자: 2022. 11. 15.

¹⁷⁾ 2013년 제정된 EU 규정에 따라 유로화 사용 회원국들 간의 재정정책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예산안을 검토 및 평가하고 과도한 적자 시정을 보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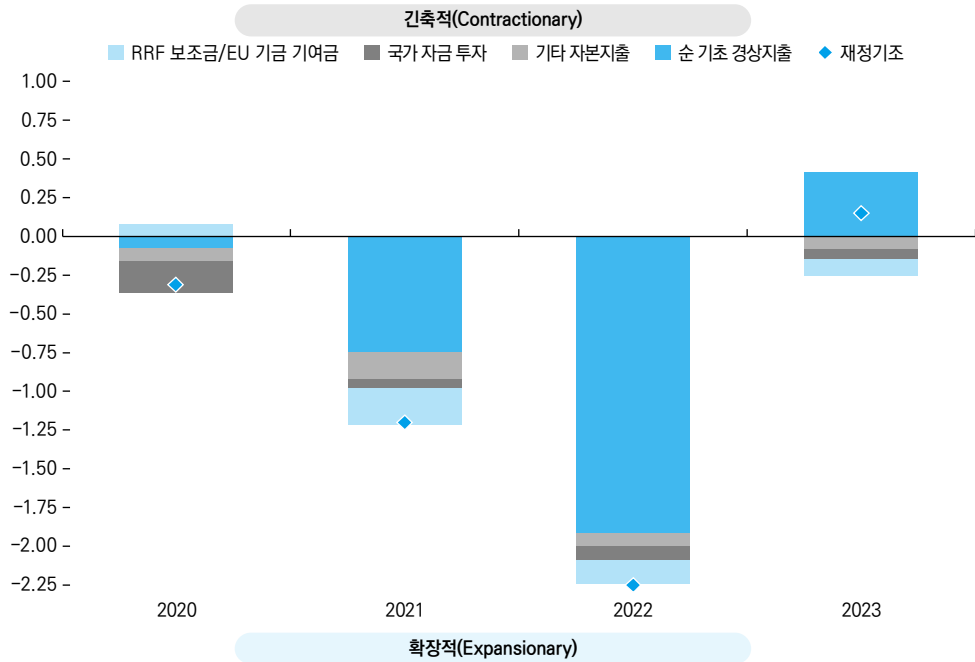
-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한 지원 조치로 2023년 재정적자와 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회원국들은 취약한 가계와 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
- 2023년에 유로지역은 이사회 권고에 따라 중립적 재정기조¹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가격 변동과 에너지 지원 조치 연장 등으로 보다 확장적일 위험이 존재
 - (경제전망) 2022년 가을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2%, 2023년 0.3%로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0년에 7%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2년 3.5%, 2023년 3.7%로 전망
 - (에너지 지원책) 유로지역 에너지 지원 조치의 예산 비용(net budgetary cost)은 2023년에 GDP 대비 0.9% 규모로 추산
 - (국가채무) 2023년 유로지역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92.3%로 전망되며, 6개 회원국(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GDP 대비 100%를 초과 전망
 - (재정기조) 2020~2022년 확장적* 재정기조 이후 2023년에는 대체로 중립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그림 2- I -2] 참고)
- (고채무 회원국 평가) 높은 채무 수준의 국가들은 신중한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기초 경상 지출(primary current expenditure)¹⁹⁾ 증가를 중기 잠재성장률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 *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 (저·중채무 회원국 평가) 낮은 혹은 중간 채무 수준의 국가들은 기초 경상 지출 증가를 중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권고
 -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18) '10년 평균 명목 잠재성장률 대비 순 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 증가율'로 재정기조를 판단 (순 기초지출=총 지출-이자지출-주기적 실업수당-일회성지출-팬데믹 관련 긴급조치). 결과 값이 (-)/(+) 일수록 확장적/긴축적 재정기조로 보며, 0에 가까운 수준을 중립적 재정기조로 평가

19) 기초 경상 지출은 순 기초 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에서 국가자금투자(nationally financed investment), RRF 보조금, EU 기금, 기타 자본지출을 제외

그림 2-I-2 유로지역의 재정기조(2020-2023년)

(단위: GDP 대비 %)



주: 1. 10년 평균 잠재성장률 대비 순 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 변화로 재정기조를 평가
 2. 순 기초지출=총 지출-이자지출-주기적 실업수당-일회성지출-팬데믹 관련 긴급조치
 3. (-)/(+)일수록 확장적/긴축적 재정기조로 보며, 0에 가까운 수준을 중립적 재정기조로 평가
 자료: EU 집행위, 2023 Draft Budgetary Plans - Overall assessment, p. 14, Graph 2.5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가을패키지의 일환인 2023 경고체계보고서 (Alert Mechanism Report) 발표(2022. 11. 22.)²⁰⁾

※ 경고체계보고서(AMR)는 EU의 경제 기능을 저해하는 불균형(imbalance)을 확인하고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²¹⁾의 첫 단계인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국가를 선별함

²⁰⁾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22, 11, 22.,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023-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 검색일자: 2022. 11. 23.

²¹⁾ 경고체계보고서(AMR)를 통해 심층검토 대상 국가 지정(11월경)→대상 국가에 대한 심층검토보고서 발표(차년도 2월경)→초과불균형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 시행

- (전반적 평가) 인플레이션과 경기하방으로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이 있는 가운데, 높은 에너지 가격, 신재생에너지로 구조적 전환, 금융시장 위험 평가(pricing of risk)로 추가 금리 인상 등이 대내외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 (심층검토 대상) 대내외 불균형 및 경쟁력 지표²²⁾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거시경제 불균형 또는 과도한 불균형 상태로 확인된 17개 회원국을 2023년 심층검토(in-depth review) 대상으로 지정
 - 사이프러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은 전년도에도 심층검토 대상이었으며, 기존 평가를 업데이트 하고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지 검토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는 2021년, 2022년에 심층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로운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이 있다고 평가
 - (향후 단계) 집행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별 심층 주제를 먼저 평가 후, 심층검토보고서는 2023년 봄 발표 예정
 - * ① 주택가격 변동, 모기지 시장 및 가계 대출 관련 위험 ②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 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 경상수지 지속가능성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의 가을패키지의 일환인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ASGS) 발표(2022. 11. 22.)²³⁾
- ※ 지속가능 성장 조사는 내년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2023년 European Semester(회원국의 경제 및 고용 정책 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

²²⁾ i) 대외 불균형 및 경쟁력 지표군: 경상수지(3년 평균), 순국제투자지위, 실질실효환율, 수출시장비율, 명목단위노동비용지수, ii) 대내 불균형 지표군: 주택 가격지수, 민간부문 여신, 민간부문 채무, 실업률, 총금융부문부채, iii) 고용지표군: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실업률, 청년실업률(15~24세)

²³⁾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Semester: 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2022.11.22.,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023-european-semester-annual-sustainable-growth-survey_en, 검색일자: 2022.11.24.

- (개요) 2023년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는 EU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회복력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을 강조
- EU의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competitive sustainability)’을 위해 ① 환경 지속가능성 ② 생산성 ③ 공정성 ④ 거시경제 안정성 증진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

표 2-I-6 2023년도 정책 우선순위 설정

구분	단기 정책 우선순위	중기 정책 우선순위
환경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 •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친환경 전환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 경제를 극대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단일시장(특히 서비스분야)의 심화(deepen)를 위한 구체적 노력 참여 •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개혁 개시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가격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유연화와 미스매치 해소에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시행 •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 채택,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한 전환(fair transitions)
거시경제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금융 안전성 보장 • 신용채널(credit channels) 유지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지속가능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재정정책 설계

자료: EU 집행위, 2023 *European Semester: 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를 바탕으로 작성

03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코로나19 대응

- EU 집행위,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조치 발표(2022.9.2.)²⁴⁾
 - 집행위는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을 회원국에 제안
 -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인구집단 간 백신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
 - 적격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접종(primary vaccination)과 3차 접종(first booster dose)을 추진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기타 중증 위험군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4차 접종(additional booster dose)을 우선 시행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캠페인을 통합하고 대중과 정기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시행
 - 1일 유럽 의약품청의 오미크론 개량 백신 승인과 관련해, 어떤 백신을 어떤 집단에 투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백신 전략을 수립하고 즉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류 능력을 확보
 - 또한 바이러스 감시 강화, 비약물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공중 보건 역량 강화 등도 중요
 - 바이러스 확산과 변이 출현 감지를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
 - 역학적 상황과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모임 인원 제한 등 공중 보건 조치를 재도입하기 위한 전략 준비
 - 의료 시스템의 예산 및 인력을 충원해 공중 보건 역량을 강화

²⁴⁾ EU 집행위, "COVID-19: Commission rallies Member States to prepare for autumn and winter," 2022. 9.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302, 검색일자: 2022.9.5.

나.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구호물자 지원 현황 발표(2022.8.11.)²⁵⁾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주택, 수도, 전기, 난방은 물론 학교, 의료 시설과 같은 공공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음
 - 이에 EU 27개국 및 노르웨이, 튀르키예, 북마케도니아 등 30개국은 EU 시민 보호메커니즘(EU Civil Protection Mechanism)*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6만 6,224톤, 추정 가치 4억 2,500만유로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이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지원임
 - * EU 회원국과 기타 6개 참여국이 재난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시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공동 대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통합하고 구호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함²⁶⁾
 - 의료 용품, 대피소 물품 외에도 구급차, 소방차, 발전기, 중장비 차량, 부교 등이 포함됨
 - EU의 비상대응조정센터(Emergency Response Coordination Center)가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위기 대응을 조정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물류 허브를 설치
 - 추가적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3억 3,500만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배정
 - 식량, 식수, 필수 가정용품, 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비상 대피소, 긴급 교육 등 보호, 현금 보조 등을 지원

²⁵⁾ EU 집행위, "Ukraine: the EU has coordinated the delivery of more than 60,000 tonnes of life-saving assistance," 2022.8.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945, 검색일자: 2022.8.22.

²⁶⁾ EU 집행위,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https://civil-protection-humanitarian-aid.ec.europa.eu/what/civil-protection/eu-civil-protection-mechanism_en, 검색일자: 2022.8.22.

□ EU 집행위, 50억유로의 우크라이나 거시금융지원(MFA)* 발표(2022.9.7.)²⁷⁾

* 예외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EU 인접국, 후보·잠재후보국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장기 대출 혹은 보조금 형태로 구성되며, 수혜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IMF 개혁 이행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지난 5월 발표한 최대 90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²⁸⁾의 일환으로, 7월 10억 유로 지원²⁹⁾에 이은 두 번째 제안
-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 안정과 전반적인 회복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번 지원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자금 소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U 보증을 바탕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형태로 분할 지원되며 이자 비용과 수수료는 EU가 부담

□ EU 집행위, 180억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제안(2022.11.9.)³⁰⁾

- 2023년에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형태로 매달 평균 15억유로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180억유로 규모의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
 - 2033년부터 35년 장기 차관 형태로 상환되며, 이자 비용도 EU 회원국들의 추가 지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정부 및 IMF가 추정하는 2023년 단기 자금수요(매달 30~40억 유로)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지원 패키지에 우크라이나 반부패 사법개혁 등 부문별 및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 재정지원을 보완

²⁷⁾ EU 집행위,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second €5 billion tranche of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Ukraine," 2022.9.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373, 검색일자: 2022.9.9.

²⁸⁾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5월호를 참고

²⁹⁾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7월호를 참고

³⁰⁾ EU 집행위, *Commission proposes stable and predictable support package for Ukraine for 2023 of up to €18 billion*, 2022.1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699, 검색일자: 2022.11.11.

- 우크라이나는 임금 및 연금 지급과 병원, 학교, 이주자들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며 수도, 운송 네트워크, 도로·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 이사회, 러시아 ‘유지 및 조정(maintenance and alignment)’ 제재 패키지 발표 (2022. 7. 21.)³¹⁾
 - EU는 G7 등 동맹 및 협력국의 제재에 맞춰 조정(align)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추가 제재를 채택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금의 직·간접적 구매, 수입, 이전을 금지
 - 러시아 군사·기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
 - 공공 조달, 항공 및 사법 등 분야의 기존 조치를 명확화
 -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자산 동결 대상의 보고 요건을 강화
 - 단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러시아와 제3국 간의 농산물 및 식품 무역은 제한하지 않음
- EU 이사회, 러시아 8차 제재 패키지 발표(2022. 10. 5.)³²⁾³³⁾
 -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³¹⁾ EU 이사회,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maintenance and alignment” package,” Press Release, 2022. 7.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21/russia-s-aggression-against-ukraine-eu-adopts-maintenance-and-alignment-package/>, 검색일자: 2022. 8. 22.

EU 이사회, “Question and Answers: “maintenance and alignment”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2022. 7. 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4643, 검색일자: 2022. 8. 22.

³²⁾ EU 이사회, “EU adopts its latest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the illegal annexation of Ukraine’s Donetsk, Luhansk, Zaporizhzhia and Kherson regions,” Press Release, 2022. 10. 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0/06/eu-adopts-its-latest-package-of-sanctions-against-russia-over-the-illegal-annexation-of-ukraine-s-donetsk-luhansk-zaporizhzhia-and-kherson-regions/>, 검색일자: 2022. 10. 11.

³³⁾ EU 집행위, “Ukraine: EU agrees on eigh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2. 10. 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989, 검색일자: 2022. 10. 11.

EU 집행위,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a new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2022. 9. 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2_5856, 검색일자: 2022. 9. 29.

지역을 불법 주민투표로 병합하려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추가 제재 패키지를 부과하기로 결정

- 합의된 8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70억유로 규모의 수입 제한조치, 첨단 기술 품목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
 - 제3국으로 해상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선 설정하고,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제3국으로의 해상 운송에 대한 추가 제한을 시행하는 근거를 EU 법률에 도입
 - 6차 제재에서 발표된 러시아산 원유(2022년 12월) 및 석유제품(2023년 2월) 금수 조치가 시행 예정
 - 러시아산 철강 제품, 종이, 목재 펄프, 담배, 플라스틱, 화장품, 보석 산업 재료, 식물, 신발, 가죽, 도자기 등으로 수입 제재 품목 확대
 - 항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판매, 공급 이전, 수출 제한
 - 불법 주민투표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전쟁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금지
 - 점결탄(러시아 산업 공장에서 사용), 러시아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전자 부품, 항공 부문의 기술 품목, 특정 화학 물질, 소형 무기 등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 향상 또는 국방 및 보안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수출 금지
 - EU 시민이 러시아 국영 기업, 러시아 통제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
 - 러시아인 및 거주자에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 금지(이전에는 최대 1만유로 까지 허용)
 - 러시아 기업에 건축, 엔지니어링, IT 컨설팅,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금지
 -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비정부 통제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과의 경제 교류 제한을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확대

- EU 이사회, 러시아 9차 제재 패키지 발표(2022. 12. 16.)³⁴⁾
 - 합의된 9차 제재 패키지는 수출 제한 품목 및 제재 대상 확대, 언론매체, 광산업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
 - 드론(완구용 포함), 발전기, 노트북, 컴퓨터 부품, 카메라 및 렌즈,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등을 수출 제한 품목에 추가
 - 금융 제재 대상에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을 추가하고, 자산동결 대상자 목록에 약 200명의 개인 및 단체를 추가
 - 특정 광물 채취를 제외하고 러시아 광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주변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의도의 허위 정보 선전을 막기 위해 4개의 러시아 언론매체³⁵⁾에 대한 방송라이센스를 정지
 -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농산품(밀과 비료를 포함) 및 식품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개인의 자산 동결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

표 2-I-7 EU의 러시아 주요 제재 조치

주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러시아 1차 제재 패키지	2.23.	러시아 의원·주요 개인 및 단체 제재, 비정부 통제 지역과의 경제 교류 제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러시아 2차 제재 패키지	2.25.	푸틴 러 대통령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제재 대상 확대, 금융·에너지·교통·기술 제재, 비자 제재
러시아 3차 제재 패키지	2.28. 3.2. 3.9.	러시아 항공사 비행 금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 제재 대상 확대, 러시아 국영매체 방송 금지, 러시아 은행 SWIFT 배제, 대 러시아 수출 제재
러시아 4차 제재 패키지	3.15.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거래·투자 등 금지, 수출 제재 확대, 제재 대상 확대
러시아 5차 제재 패키지	4.8.	석탄 및 기타 고체 화석 연료 수입 금지,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금지
러시아 6차 제재 패키지	6.3.	원유 및 특정 석유류 구매, 수입, 이전을 금지, 러시아·벨라루스 은행의 국제 결제망 배제

³⁴⁾ EU 이사회,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9th package of economic and individual sanctions," Press Release, 2022, 12,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6/russia-s-war-of-aggression-against-ukraine-eu-adopts-9th-package-of-economic-and-individual-sanctions/>, 검색일자: 2022, 12, 19.

³⁵⁾ NTV/NTV Mir, Rossiya 1, REN TV, Pervyi Kanal

표 2-1-7 의 계속

주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러시아 7차 제재 패키지	7.21.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금의 직·간접적 구매, 수입, 이전을 금지
러시아 8차 제재 패키지	10.5.	석유가격 상한제, 70억유로 규모의 수입 제재 확대, 개인 및 단체 제재 대상 확대
러시아 9차 제재 패키지	12.16.	드론, 항공기 엔진 등 수출제한, 러시아 지역개발은행 금융제재, 추가 언론매체 제재, 광산업 투자 제한, 자산동결 대상자 추가 등

주: 1차~9차 제재패키지를 통해 개인 1,386명 및 171개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2월호·4월호·6월호·8월호·10월호·12월호 참고

- EU 이사회,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2022. 12. 3.)³⁶⁾
- (배경) EU 이사회는 2022년 10월 6일 러시아산 원유(2022년 12월 5일 기준) 및 석유제품(2023년 2월 5일 기준)의 제3국으로의 해상 운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
 - (주요 내용) 12월 5일부로 EU, G7국가, 호주에서 배럴당 60달러를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보험·운송 등의 해상 서비스가 금지
 -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메커니즘을 평가하기로 합의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최소 5% 낮게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
 - 12월 5일 이전 선적한 후 12월 19일까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45일의 전환기간을 적용하고, 향후 가격 상한선이 변경될 때마다 90일의 전환기간을 설정하여 가격상한선이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함
 -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을 해제하는 긴급조항을 마련

³⁶⁾ 유럽 이사회, "Russian oil: EU agrees on level of price cap," Press Release, 2022. 12. 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03/russian-oil-eu-agrees-on-level-of-price-cap/>, 검색일자: 2022. 12. 20.

다. 기후 및 에너지 가격 대응

- EU 이사회, 겨울 가스 소비 15% 감축 합의(2022.7.20., 7.26., 8.5.)³⁷⁾
 - 집행위는 7월 20일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 또는 중단에 대비해 유럽의 가스 사용을 줄이는 법안과 수요 감축 계획을 제안
 - 모든 회원국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가스 수요를 지난 5년 평균 소비량 대비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9월 말까지 회원국은 감축 목표에 맞춰 국가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격월마다 진행 현황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급 위기 시 집행위가 연합 경보(Union Alert)를 선언해 회원국에 의무 감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가스 수요 감축 계획을 채택해 회원국 감축 조치의 방향 및 원칙을 제시
 - 가능한 경우 가스를 재생가능 연료,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 석유, 원자력으로서의 전환도 허용
 - 에너지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경매, 입찰 제도 등 시장 기반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임시 위기 프레임워크에 따라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을 허용
 - 냉난방의 감소를 위해 대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및 냉방 절약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
 - 에너지 이사회는 에너지 감축안에 대해 7월 26일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의견을 교환한 뒤 8월 5일 공식 합의
 - 다른 회원국의 가스망과 연결되지 않거나, 전력망이 유럽 전력 시스템과 동

³⁷⁾ EU 집행위, "Save Gas for a Safe Winter: Commission proposes gas demand reduction plan to prepare EU for supply cuts," 2022.7.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608, 검색일자: 2022.8.23.

EU 이사회, "Member states commit to reducing gas demand by 15% next winter," Press Release, 2022.7.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26/member-states-commit-to-reducing-gas-demand-by-15-next-winter/>, 검색일자: 2022.8.23.

EU 이사회, Council adopts regulation on reducing gas demand by 15% this winter, 2022.8.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8/05/council-adopts-regulation-on-reducing-gas-demand-by-15-this-winter/>, 검색일자: 2022.8.23.

기화되지 않고 전력 생산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거나, 가스 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중요 산업이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회원국 등 면제 사례를 설정

- 연합 정보 발령은 집행위의 제안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감축 조치를 시행할 때 가계와 의료 및 국방 등 사회 필수 서비스 등 보호 대상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

□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긴급시장개입 제안(2022.9.14.)³⁸⁾

-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사회에 제안
 - 피크 시간대(예: 평일 3~4시간)에 전력 수요 5% 감축을 의무화
 - 또한 회원국들이 2023년 3월까지 전반적인 전력 수요를 최소 10%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금전적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 저비용 발전사들에 대한 수입 상한 설정을 고려
 - 이들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은 안정적인 데 반해 전기 도매 가격 상승으로 이례적인 수입을 얻고 있음
 - MWh당 180유로로 수입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은 각 회원국이 징수해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 완화에 활용
-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 석탄 발전사 및 정유사들에는 임시 초과 이윤에 대한 임시 연대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를 제안
 - 최근 3년간 평균 이윤보다 20% 이상 증가한 2022년 이윤에 대해 징수
 - 각 회원국이 징수해 가계, 기업, 에너지 집약 산업 등 취약 부문 지원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

³⁸⁾ EU 집행위, "Energy prices: Commission proposes emergency market intervention to reduce bills for Europeans," 2022.9.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489, 검색일자: 2022.9.16.

- EU 이사회,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REPower EU’에 대한 입장에 동의 (2022.10.4.)³⁹⁾
 - ※ EU 집행위는 지난 5월 18일, 2027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은 1) 에너지 절약 2)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3)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로 REPowerEU 추진에 2027년까지 총 2,1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⁴⁰⁾
 - 10월 4일 개최된 경제재무이사회에서 ‘REPowerEU’의 자원 조달 방식, 국가별 분담 비율 등을 논의했으며 합의에 도달
 - ‘REPowerEU’는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EU 에너지 공급의 독립성 및 안보를 높여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투자 및 개혁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⁴¹⁾을 일부 개정하여 EU 회원국 RRF 보고서에 REPowerEU 챕터를 추가하여 제출 예정
 - 회복·복구기금의 여유 대출(2,250억유로) 외에 추가 200억유로 재원을 혁신기금(Innovation Fund, 75%), 선불 ETS 허용량(25%)을 통해 조달해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을 보장하면서 EU 배출권거래시스템(ETS)의 기능은 방해하지 않을 계획
 - 위원회는 브렉시트조정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 BAR) 및 공정 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JTF)으로부터 자발적 이전 가능성도 고려

³⁹⁾ EU 이사회, “REPowerEU: Council agrees its position,” Press Release, 2022.10.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0/04/repowereu-council-agrees-its-position/>, 검색일자: 2022.10.12.

⁴⁰⁾ EU 집행위, “REPowerEU: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for Europe”,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repowereu-affordable-secure-and-sustainable-energy-europe_en, 검색일자: 2022.10.12.

⁴¹⁾ 회복·복구기금(RRF)은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7,500억유로 규모)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6,725억유로(보조금 3,125억유로, 대출 3,600억유로) 규모 자금을 회원국에 지원.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1을 참고

- EU 정상회의, 추가적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 필요성에 동의(2022.10.21.)⁴²⁾⁴³⁾
- (배경) 집행위는 10월 18일에 높은 가스 가격에 대응하고 겨울철 에너지 공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스 공동구매, 한시적 TTF⁴⁴⁾ 가스 가격 상한제, 회원국 간 연대 조치, 투명한 인프라, 가스 수요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제안⁴⁵⁾
 - (논의 결과) 정상회의(10월 20~21일)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배급제 시행⁴⁶⁾을 피하며 공급 안보 보장과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완전무결한 단일시장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
 - 집행위에 다양한 에너지원과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영향 평가를 포함한 구체적 결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전력시장 구조적 개혁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
 - 유럽 에너지 주권과 기후 중립이라는 이중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연합으로 추가 진전을 촉구
 - (주요 내용) 집행위가 제안한 다음의 주요 방안들을 의제로 논의
 - (자발적 공동구매)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로 15%의 가스 비축량을 공동구매
 - (새로운 LNG 가격지표) 현재 가격지표 역할을 하는 TTF는 LNG시장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23년 3월까지 가스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개발
 - (TTF 가격 변동폭 제도) 과도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한시적 가격 변동폭 제도(temporary dynamic price corridor) 시행

42)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20-21 October 2022,” 2022.10.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2/10/20-21/>, 검색일자: 2022.10.24.

43) 정상회의(10월 20~21일)에서는 에너지 대책 외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입장, 우크라이나 군사 및 재정지원, 주요 기반시설(송유관) 보호, 대중국 전략, 이란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합의

44) TTF(Title Transfer Facility)는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가상거래소로 영국 NBP(National Balancing Point)와 함께 유럽 2대 천연가스 거래 중심지이며, 네덜란드 TTF 가스선물 가격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 역할을 함

45) EU 집행위, “Commission makes additional proposals to fight high energy prices and ensure security of supply,” 2022.10.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225, 검색일자: 2022.10.20.

46) EU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위기시 가스배급제 시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원리에 벗어난 가스배급제 시행은 경제 하방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 가스 소비 증가를 방지하고 자금 조달, 분배, EU 국경 너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전용 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임시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 포함 요구
 - (에너지 시장 기능 개선)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유동성 스트레스 완화, 가스 가격 변동성 요인 제거, 재무 안정성 유지 보장
 - (허가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및 그리드(grid)의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 (에너지 위기 대응 연대 기금) 국가, 지역 또는 EU 차원에서 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 간 가스 공유를 위한 에너지 연대 조치
 - (향후 계획) 10월 25일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있었으나 에너지안 대응책 중 가격 변동폭 제도,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다음 달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논의 예정
-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및 사회기후기금 조성(2022. 12. 18.)⁴⁷⁾
- (배경) EU는 2021년 7월 14일 발표한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함
 - (주요 내용)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및 확대 등
 - (감축목표)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의 62%(1990년 배출량의 45%)로 감축목표를 상향
 - (감축속도) 연간 감축속도를 현행 2.2%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4.3%, 2028년 이후 4.4%로 약 2배 가까이 높임
 - (범위) 해운 부문을 포함하여 ETS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 및 도로 수송 부문은 2027년부터 별도의 ETS를 도입할 계획

⁴⁷⁾ EU 이사회, “Fit for 5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deal 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the Social Climate Fund,” Press Release, 2022. 12.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8/fit-for-55-council-and-parliament-reach-provisional-deal-on-emissions-trading-system-and-the-social-climate-fund/>, 검색일자: 2022. 12. 19.

- (무료 할당제 폐지) ETS ‘무료 할당제(free allowances)’⁴⁸⁾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34년에 완전히 폐지 예정
 - (탄소국경세) 철강 등 EU 역내 수입품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TS와 연동해 탄소가격을 부과할 계획
 - 내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2026년 이후부터 적용 품목을 확대해 시행
 - (사회기후기금) 공정한 전환을 위해 2026~2032년 기간 동안 사회기후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가구와 소기업을 지원
 - 에너지효율 증가를 위한 가정용 단열, 열펌프,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 이동성 등에 투자 지원과 직접소득지원 조치 등 포함
 - (향후 일정) EU 의회 및 이사회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안 채택 후 공식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
- EU 이사회, 천연가스(TTF)⁴⁹⁾ 가격 상한제 적용 기준을 1메가와트시(MWh)당 180 유로로 결정(2022.12.19.)⁵⁰⁾
-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가스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적용 기준을 1MWh당 275유로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재논의 후 최종적으로 180유로로 합의
 - (주요 내용)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시장조정메커니즘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상한가격 이상의 거래가 금지
 - (요건) ① 3일간 TTF 가격이 1MWh당 180유로를 넘는 상황이 지속 ② 3일간 TTF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35유로 이상 초과

48) 무료 할당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비료 등 특정 산업에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탄소 배출권 구매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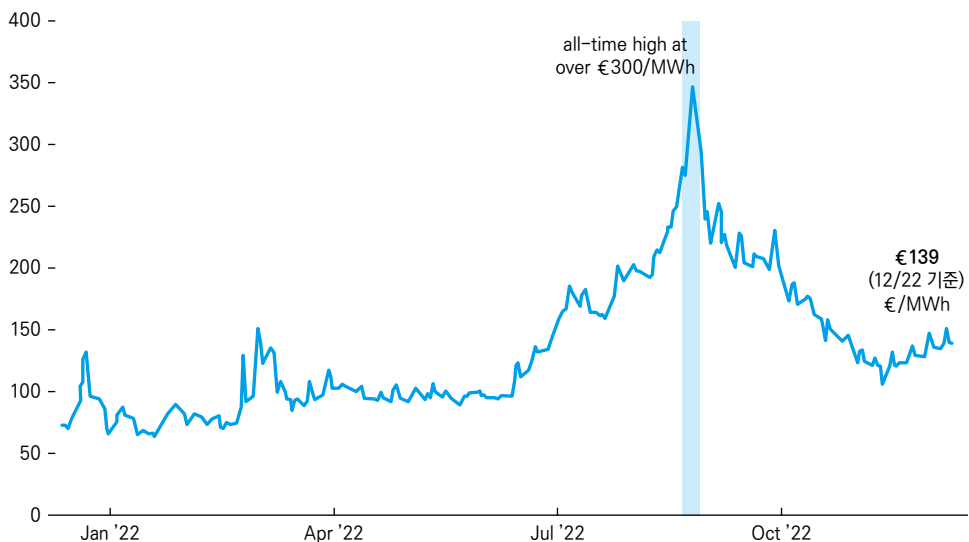
49)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50) 유럽 이사회, “Council agrees on temporary mechanism to limit excessive gas prices,” Press Release, 2022.12.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2/19/council-agrees-on-temporary-mechanism-to-limit-excessive-gas-prices/> 검색일자: 2022.12.21.

- (적용 범위) 이 규정은 EU의 가상가스 거래플랫폼에 도입되며, 1개월, 3개월 및 1년 선물 상품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
- (해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활성화되면 최소 20영업일간 적용되며, 3영업일간 TTF 가격이 180유로 이하이면 자동으로 비활성화
- (안전장치) EU 집행위원회,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에너지조정협력국(ACER)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공급안보, 금융 안정성, EU 내 가스 수요·공급에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조정메커니즘을 중단할 수 있음
- 가스 수요가 한 달 내에 15% 또는 두 달 동안 10% 이상 증가, LNG 수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TTF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면 즉시 중단

그림 2-I-3 EU 가스가격 추이

(단위: €/MWh)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 - A market mechanism to limit excessive gas price spikes*, 2022. 12. 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a-market-mechanism-to-limit-excessive-gas-price-spikes/>, 검색일자: 2022. 12. 21.

라. ECB 통화정책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2022.7.21.)⁵¹⁾
 - ECB 정책 위원회는 7월 27일부로 정책금리(기준금리 0.0%, 한계대출금리 0.25%, 수신금리-0.50%)를 각각 0.5%p씩 인상하기로 결정
 - 이는 2011년 7월⁵²⁾ 이후 11년 만의 인상임
 - 지난 회의⁵³⁾에서 0.25%p 인상을 사전 안내했으나, 인플레이션 위험 평가를 갱신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짐으로써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보폭을 더 넓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이 6월 8.6%로 더 상승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의 여러 지표들도 더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정상화가 적절하되 구체적인 정책 금리 경로는 매 회의마다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언급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원금을 충분한 유동성 조건과 적절한 통화 정책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까지 재투자하고 긴급매입 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의 원금도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통화정책 기초가 유로지역의 모든 국가에 원활하게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 파급경로보호수단(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을 신규 도입

51)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7.21.,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721~53e5bdd317.en.html>, 검색일자: 2022.8.22.

유럽중앙은행, “The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2022.7.21.,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pr220721~973e6e7273.en.html>, 검색일자: 2022.8.22.

52)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2.6.20.

53)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2를 참고 바람

- 통화 정책 파급 경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부적절하고 무질서한 시장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시될 수 있음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별 기초여건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융 조건의 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발행된 채권을 유통 시장에서 매입
 - * EU 재정프레임워크 준수,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imbbalances) 부재, 재정 지속가능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정책 등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2.9.8., 10.27., 12.15.)⁵⁴⁾⁵⁵⁾⁵⁶⁾
 - ECB 정책 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부로 3대 정책금리(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2.5%, 2.75%, 2.0%로 각각 0.5%p 추가 인상
 - 이미 7월, 9월, 10월에 각각 0.5%p, 0.75%p, 0.75%p씩 세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⁵⁷⁾한 바 있으며, 정책금리를 적시에 증기 인플레이션 목표(2%)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
 - 유로지역 11월 물가상승률은 10%로 지난달(10.6%)에 비해 에너지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식품 및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 및 긴급매입프로그램의 만기채권 원금은 재투자할 계획

54)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9.8.,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908~c1b6839378.en.html>, 검색일자: 2022.9.13.

유럽중앙은행, “ECB temporarily removes 0% interest rate ceiling for remuneration of government deposits,” 2022.9.8.,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pr220908~0705913289.en.html>, 검색일자: 2022.9.13.

55)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10.2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1027~df1d778b84.en.html>, 검색일자: 2022.10.28.

56)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12.15.,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1215~f3461d7b6e.en.html>, 검색일자: 2022.12.16.

57)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7월호, 9월호, 10월호 참고

마. 기타

- EU 이사회, 크로아티아 유로지역 가입 승인(2022.7.12.)⁵⁸⁾
 - EU 이사회는 크로아티아의 유로지역 가입에 대한 최종 법적 절차를 채택
 - 이에 앞서 2020년 7월 10일 크로아티아의 환율조정메커니즘(ERM II)⁵⁹⁾ 참여, 2022년 6월 1일 집행위⁶⁰⁾와 유럽중앙은행(ECB)⁶¹⁾의 각 수렴 보고서(Convergence Report)⁶²⁾ 평가, 16일 유로그룹⁶³⁾ 권고,⁶⁴⁾ 17일 이사회 권고 채택,⁶⁵⁾ 24일 정상회의 지지,⁶⁶⁾ 7월 5일 의회 동의,⁶⁷⁾ 12일 이사회 최종 승인⁶⁸⁾을 거침
 -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 유로화를 공식 채택하면, 2015년 리투아니아에 이어 20번째 유로지역 가입국이 됨

58) EU 이사회, "Croatia set to join the euro area on 1 January 2023: Council adopts final required legal acts," Press Release, 2022.7.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12/croatia-set-to-join-the-euro-area-on-1-january-2023-council-adopts-final-required-legal-acts/>, 검색일자: 2022.7.20.

59) 환율조정메커니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은 유로화 대비 자국 화폐의 환율 변동 폭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로지역 후보국은 최소 2년간 이 제도에 참여해 환율 안정을 유지해야 함

60) EU 집행위, "Convergence Report reviews Member States' preparedness to join the euro area and paves the way for Croatia's euro adoption on 1 January 2023," 2022.6.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312, 검색일자: 2022.7.20.

61) 유럽중앙은행, "ECB reports on EU countries' progress towards euro adoption," 2022.6.1.,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pr220601_1~207feb131d.en.html, 검색일자: 2022.7.20.

62) 격년마다 유로지역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

63) 유로지역 재무장관 회의

64) EU 이사회, "Euro area member states recommend that Croatia become the 20th member of the euro area," Press Release, 2022.6.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6/16/eurogroup-endorses-welcoming-croatia-as-20th-member-country-of-the-euro-area/>, 검색일자: 2022.7.20.

65) EU 이사회,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17 June 2022, 2022.6.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22/06/17/>, 검색일자: 2022.7.20.

66)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23-24 June 2022, 2022.6.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2/06/23-24/>, 검색일자: 2022.7.20.

67) EU 의회, "MEPs approve Croatia's entry into the eurozone," 2022.7.5.,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701IPR34360/meps-approve-croatia-s-entry-into-the-eurozone>, 검색일자: 2022.7.20.

68) EU 이사회, "Croatia set to join the euro area on 1 January 2023: Council adopts final required legal acts," Press Release, 2022.7.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7/12/croatia-set-to-join-the-euro-area-on-1-january-2023-council-adopts-final-required-legal-acts/>, 검색일자: 2022.7.20.

0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동향·전망

□ EU 집행위, 2022년 여름 경제전망 발표(2022.7.14.)⁶⁹⁾

- ※ EU에서는 연 4회 경제 전망(겨울 전망, 봄 전망, 여름 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업데이트함
- (경제) 유로지역과 EU 경제는 2022년 각각 2.6%, 2.7%의 성장세를 보인 뒤 2023년 각각 1.4%, 1.5%로 둔화될 전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대응을 야기하는 등 지난 봄 전망에서 인식한 하방 위험 요인들이 실현되어 2023년 성장률이 봄 전망 대비 0.8%p(이하 EU 기준) 하향 조정됨
 - 다만 작년 반등세의 지속과 금년 1분기의 예상보다 높은 실적⁷⁰⁾이 연간 성장을 뒷받침해 2022년은 성장 전망이 조정되지 않음
- (물가) 유로지역과 EU의 물가(HICP) 상승률은 2022년 각각 7.6%, 8.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3년 각각 4.0%, 4.6%로 하락할 전망
 -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물가 압력이 서비스 및 기타 상품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 중임
 - 봄 전망에 비해 2022년 1.5%p, 2023년 1.4%p 상향 조정됨
 - 인플레이션이 2022년 3분기 8.9%까지 상승한 후 공급망 제약 및 원자재 가격 압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하락해 2023년 말에는 3%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

⁶⁹⁾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2*,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ummer-2022_en, 검색일자: 2022.7.20.

EU 집행위, "Summer 2022 Economic Forecast: Russia's war worsens the outlook," 2022.7.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4511, 검색일자: 2022.7.20.

⁷⁰⁾ 주료 재고 축적에 기인

- 근원 물가 압력도 유로화 약세, 투입 비용 상승, 공급망 장애, 임금 상승 등으로 2023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위험) 경제 및 물가 전망 위험은 부정적 측면이 우세하며, 전쟁 진행 상황, 특히 가스 공급 영향에 크게 의존
 -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을 야기해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EU 내 코로나19 재유행이 경제에 새로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 혹은 그 외 지역의 봉쇄정책이 공급 병목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표 2-1-8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여름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2년 7월 여름 전망		2022년 5월 봄 전망		2022년 7월 여름 전망		2022년 5월 봄 전망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벨기에	2.3	1.3	2.0	1.8	9.4	2.9	7.8	1.9
독일	1.4	1.3	1.6	2.4	7.9	4.8	6.5	3.1
에스토니아	1.6	1.9	1.0	2.4	17	4.7	11.2	2.5
아일랜드	5.3	4.0	5.4	4.4	7.3	3.3	6.1	3.1
그리스	4.0	2.4	3.5	3.1	8.9	3.5	6.3	1.9
스페인	4.0	2.1	4.0	3.4	8.1	3.4	6.3	1.8
프랑스	2.4	1.4	3.1	1.8	5.9	4.1	4.9	3.1
이탈리아	2.9	0.9	2.4	1.9	7.4	3.4	5.9	2.3
키프로스	3.2	2.1	2.3	3.5	7.0	3.3	5.2	2.7
라트비아	3.9	2.2	2.0	2.9	15.5	6.0	9.4	3.5
리투아니아	1.9	2.5	1.7	2.6	17.0	5.1	12.5	3.0
룩셈부르크	2.6	2.1	2.2	2.7	8.5	3.0	6.8	2.3
몰타	4.9	3.8	4.2	4.0	5.6	3.3	4.5	2.6
네덜란드	3.0	1.0	3.3	1.6	9.4	3.3	7.4	2.7
오스트리아	3.7	1.5	3.9	1.9	7.4	4.4	6.0	3.0

표 2-I-8 의 계속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2년 7월 여름 전망		2022년 5월 봄 전망		2022년 7월 여름 전망		2022년 5월 봄 전망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포르투갈	6.5	1.9	5.8	2.7	6.8	3.6	4.4	1.9
슬로베니아	5.4	1.0	3.7	3.1	7.6	4.9	6.1	3.3
슬로바키아	1.9	2.7	2.3	3.6	10.5	8.2	9.8	6.8
핀란드	1.8	1.2	1.6	1.7	6.4	2.8	4.5	2.3
유로지역	2.6	1.4	2.7	2.3	7.6	4.0	6.1	2.7
불가리아	2.8	2.3	2.1	3.1	12.5	6.8	11.9	5.0
체코	2.3	2.0	1.9	2.7	13.9	5.8	11.7	4.5
덴마크	3.0	1.2	2.6	1.8	7.5	3.4	5.1	2.7
크로아티아	3.4	2.9	3.4	3.0	8.2	3.6	6.1	2.8
헝가리	5.2	2.1	3.6	2.6	11.8	7.6	9.0	4.1
폴란드	5.2	1.5	3.7	3.0	12.2	9.0	11.6	7.3
루마니아	3.9	2.9	2.6	3.6	11.1	7.2	8.9	5.1
스웨덴	1.3	0.8	2.3	1.4	6.6	3.6	5.3	3.0
EU 27개국	2.7	1.5	2.7	2.3	8.3	4.6	6.8	3.2

 자료: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2, 2022, p. 45~46, Table 1&3.

 □ EU 통계청, 2022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2.9.7.)⁷¹⁾

- 2022년 1분기 유로지역 19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보다 0.1%p 상승한 0.8%, EU 27개국의 성장률은 0.1%p 하락한 0.7%로 집계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유로지역 4.1%, EU 4.2%를 기록해 두 지역 모두 1분기 성장률(각각 5.4%, 5.5%)보다 하락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네덜란드(2.6%), 루마니아(2.1%), 크로아티아(2.0%)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폴란드(-2.1%), 에스토니아(-1.3%), 라트비아(-1.0%), 리투아니아(-0.5%) 등 4개국은 역성장을 기록

⁷¹⁾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2, 2022.9.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98162/2-07092022-AP-EN.pdf>, 검색일자: 2022.9.9.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 전 분기 대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0.6%p, 정부 최종 소비지출이 0.1%p, 총고정자본형성이 0.2%p, 재고증감이 0.0%p, 수출이 0.7%p를 기여한 반면, 수입은 -0.8%p를 기여
- 코로나 이전(2019년 4분기)과 비교해 유로지역과 EU의 GDP 규모는 각각 1.8%, 2.3%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표 2-1-9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2년 2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1		2022		2021		2022	
	Q3	Q4	Q1	Q2	Q3	Q4	Q1	Q2
벨기에	2.1	0.4	0.5	0.2	5.1	5.7	4.9	3.3
불가리아	1.0	1.2	0.9	0.8	5.3	5.0	4.2	4.0
체코	1.7	0.8	0.6	0.5	3.8	3.5	4.6	3.7
덴마크	1.3	2.5	-1.1	0.9	3.9	6.7	5.2	3.6
독일	0.8	0.0	0.8	0.1	1.8	1.2	3.5	1.7
에스토니아	0.8	0.8	0.0	-1.3	9.2	7.2	4.5	0.3
아일랜드	4.4	-1.9	6.2	1.8	10.2	13.9	11.0	10.8
그리스	2.4	0.9	2.9	1.2	11.7	8.3	8.0	7.7
스페인	2.6	2.2	0.2	1.1	3.5	5.5	6.3	6.3
프랑스	3.4	0.5	-0.2	0.5	3.6	5.0	4.7	4.2
크로아티아	1.8	1.1	2.8	2.0	14.7	10.1	6.8	7.8
이탈리아	2.7	0.7	0.1	1.1	4	6.4	6.3	4.7
키프로스	2.6	1.4	1.3	0.6	5.8	6.2	6	6.1
라트비아	0.6	0.0	3.4	-1.0	4.8	2.8	6.4	2.9
리투아니아	0.7	1.3	1.2	-0.5	5.3	5.0	4.4	2.6
룩셈부르크	0.9	1.0	1.2	-	5.1	4.9	4.0	-
헝가리	1.0	2.2	2.1	1.0	6.5	7.1	8.0	6.5
몰타	3.7	3.1	1.0	0.8	14.0	11.6	8.1	8.9
네덜란드 ²⁾	1.5	0.7	0.5	2.6	5.4	6.1	6.6	5.3
오스트리아	3.7	-0.9	1.9	1.5	5.2	6.4	9.3	6.2
폴란드	2.6	1.8	2.5	-2.1	6.1	8.0	9.2	4.7
포르투갈	2.7	1.7	2.5	0.0	4.4	5.9	11.8	7.1
루마니아	-2.9	1.0	5.1	2.1	6.9	2.4	6.4	5.3

표 2-I-9 의 계속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1		2022		2021		2022	
	Q3	Q4	Q1	Q2	Q3	Q4	Q1	Q2
슬로베니아	1.3	5.2	0.7	0.9	4.7	10.4	9.4	8.3
슬로바키아	0.4	0.4	0.4	0.5	1.2	1.2	3.0	1.7
핀란드 ²⁾	0.9	0.7	0.5	0.9	3.1	2.9	3.9	3.0
스웨덴	1.6	1.3	0.2	0.9	4.1	5.7	4.1	4.1
유로지역(EA19)	2.2	0.5	0.7	0.8	3.7	4.6	5.4	4.1
EU 27개국(EU27)	2.0	0.7	0.8	0.7	4.0	4.8	5.5	4.2

주: 1. 음영색 처리된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

1) 본 표의 수치는 계절 조정 및 달력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계절 비조정 및 달력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2*, 2022.9.7., p.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98162/2-07092022-AP-EN.pdf>, 검색일자: 2022.9.9.

□ EU 집행위,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2. 11. 11.)⁷²⁾

- (경제) 유로지역과 EU의 GDP 성장률은 2022년에 각각 3.2%, 3.3%이며, 2023년은 유로지역과 EU 둘 다 0.3%로 하락 전망

* 여름 전망(7월 발표)에서 유로지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각각 2.7%, 2.6%에서 2023년 1.5%, 1.4%로 전망하였음

-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이후 특히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높은 에너지 가격, 가계 구매력 하락, 외부환경 약화와 자금 경색으로 인해 유로지역 및 EU 대부분의 회원국이 올해 4분기에 경기 침체를 보일 전망

⁷²⁾ EU 집행위, *Autumn 2022 Economic Forecast: The EU economy at a turning point*, 2022.11.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782, 검색일자: 2022. 11. 15.

- 2024년까지 유로지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1.5%, 1.6%로 점진적으로 회복 전망
- (물가) 유로지역과 EU의 물가상승률(HICP⁷³⁾)은 2022년에 각각 8.5%, 9.3%에서 2023년에 6.1%, 7.0%로 감소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높은 가스 및 전기 도매가격이 반영되어 여름 전망 대비 2022년 1%p, 2023년 2%p 이상 상향 조정
- (노동) 2022년 상반기 경기 확장으로 200만명이 추가 고용되는 등 노동시장은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둔화에도 노동시장 회복력이 유지될 전망
 - 고용률과 노동참여율이 지난 수십 년간 최고 수준이며, 9월 실업률은 6.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 EU 고용 증가율은 2022년 1.8%, 2023년 0%, 2024년 0.4%로 전망되며, EU 실업률은 2022년 6.2%, 2023년 6.5%, 2024년 6.4%로 전망
- (재정)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에너지 지원 대책이 재정 부담 증가 요인
 - (재정수지) 유로지역과 EU의 재정적자는 2022년 각각 GDP 대비 3.5%, 3.4%에서 2023년 3.7%, 3.6%로 소폭 증가 전망
 - 2022년 강력한 명목 성장률과 팬데믹 관련 지원의 단계적 중단으로 인해 EU 재정 적자가 2020년 6.7%, 2021년 4.6%에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 정부의 재량 조치 확대로 다시 증가될 전망
 - (국가채무) 유로지역과 EU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각각 97.1%, 89.4%에서 2024년 91.4%, 84.1%로 개선 전망
-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추가 경제 혼란 가능성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가스 공급 부족(특히 2023~24년 겨울)이 가장 큰 위험요소
 - EU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원자재시장 추가 충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 지속과 고금리에 대응하는 무질서한 세계 금융 시장 조정도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

⁷³⁾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 재정 지원 확대가 디스인플레이션 목표에 역행할 위험이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목표 간의 잠재적 불일치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

표 2-I-10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벨기에	2.8	0.2	1.5	10.4	6.2	3.3	5.8	6.4	6.3	-5.2	-5.8	-5.1
독일	1.6	-0.6	1.4	8.8	7.5	2.9	3.1	3.5	3.5	-2.3	-3.1	-2.6
에스토니아	-0.1	0.7	2.1	19.3	6.6	2.6	6.1	6.6	6.2	-2.3	-3.7	-3.3
아일랜드	7.9	3.2	3.1	8.3	6.0	2.8	4.4	4.8	5.0	0.2	0.8	1.2
그리스	6.0	1.0	2.0	10.0	6.0	2.4	12.6	12.6	12.1	-4.1	-1.8	-0.8
스페인	4.5	1.0	2.0	8.5	4.8	2.3	12.7	12.7	12.6	-4.6	-4.3	-3.6
프랑스	2.6	0.4	1.5	5.8	4.4	2.2	7.7	8.1	7.7	-5.0	-5.3	-5.1
이탈리아	3.8	0.3	1.1	8.7	6.6	2.3	8.3	8.7	8.5	-5.1	-3.6	-4.2
키프로스	5.6	1.0	1.9	8.0	4.2	2.5	7.2	7.2	6.9	1.1	1.1	1.6
라트비아	1.9	-0.3	2.6	16.9	8.3	1.3	7.1	8.1	7.9	-7.1	-3.4	-1.3
리투아니아	2.5	0.5	2.4	18.9	9.1	2.1	6.0	7.1	7.0	-1.9	-4.4	-1.8
룩셈부르크	1.5	1.0	2.4	8.4	3.8	3.1	4.7	5.1	4.9	-0.1	-1.7	-0.5
몰타	5.7	2.8	3.7	6.1	4.0	2.4	3.2	3.1	3.0	-6.0	-5.7	-4.4
네덜란드	4.6	0.6	1.3	11.6	4.2	3.9	3.7	4.3	4.3	-1.1	-4.0	-3.1
오스트리아	4.6	0.3	1.1	8.7	6.7	3.3	5.0	5.2	5.3	-3.4	-2.8	-1.9
포르투갈	6.6	0.7	1.7	8.0	5.8	2.3	5.9	5.9	5.7	-1.9	-1.1	-0.8
슬로베니아	6.2	0.8	1.7	9.2	6.5	3.5	4.1	4.3	4.1	-3.6	-5.2	-2.7
슬로바키아	1.9	0.5	1.9	11.8	13.9	3.6	6.3	6.4	6.4	-4.2	-5.8	-4.7
핀란드	2.3	0.2	1.4	7.2	4.3	1.9	7.0	7.2	6.9	-1.4	-2.3	-2.3
유로지역	3.2	0.3	1.5	8.5	6.1	2.6	6.8	7.2	7.0	-3.5	-3.7	-3.3
불가리아	3.1	1.1	2.4	12.8	7.4	3.2	5.2	5.2	5.3	-3.4	-2.8	-2.5
체코	2.5	0.1	1.8	15.6	9.5	3.5	2.7	3.3	3.6	-4.3	-4.1	-3.0
덴마크	3.0	0.0	1.3	7.9	3.7	2.0	4.5	5.5	5.6	1.8	0.5	0.4
크로아티아	6.0	1.0	1.7	10.1	6.5	2.3	6.3	6.3	5.9	-1.6	-2.4	-2.7
헝가리	5.5	0.1	2.6	14.8	15.7	3.9	3.6	4.2	4.2	-6.2	-4.4	-5.2
폴란드	4.0	0.7	2.6	13.3	13.8	4.9	2.7	3.0	3.1	-4.8	-5.5	-5.2
루마니아	5.8	1.8	2.2	11.8	10.2	6.8	5.4	5.8	5.4	-6.5	-5.0	-4.8
스웨덴	2.9	-0.6	0.8	8.1	6.6	1.8	7.2	7.6	7.8	0.2	0.2	0.0

표 2-I-10 의 계속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EU 27개국	3.3	0.3	1.6	9.3	7.0	3.0	6.2	6.5	6.4	-3.4	-3.6	-3.2
영국	4.2	-0.9	0.9	7.9	7.5	2.9	3.8	4.4	4.8	-6.4	-4.4	-3.7
중국	3.4	4.5	4.7	:	:	:	:	:	:	:	:	:
일본	1.7	1.6	1.2	2.5	3.1	1.8	2.7	2.5	2.5	-6.9	-4.7	-3.4
미국	1.8	0.7	1.7	7.9	3.4	2.3	3.7	4.1	4.4	-5.9	-6.7	-7.1
세계	3.1	2.5	3.1	:	:	:	:	:	:	:	:	:

주: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2*, 2022, p. 166, Table 1.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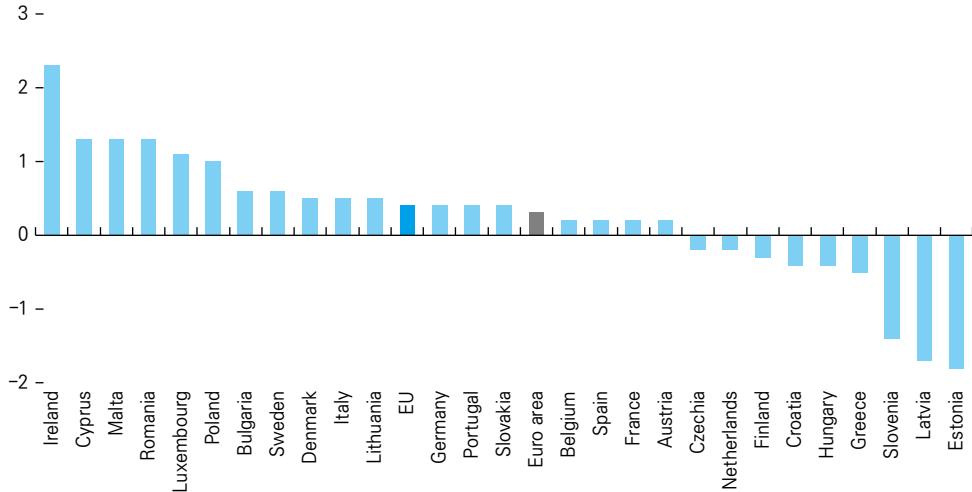
□ EU 통계청, 2022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2.12.7.)⁷⁴⁾

- (전체) 2022년 3분기 유로지역 19개국과 EU 27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0.3%, 0.4%로 집계되어 2분기 성장률(0.8%, 0.7%)보다 하락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유로지역 2.3%, EU 2.5%를 기록해 두 지역 모두 2분기 성장률(각각 4.2%, 4.3%)보다 하락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아일랜드(2.3%)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키프로스, 몰타, 루마니아 3개국(1.3%)이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에스토니아(-1.8%), 라트비아(-1.7%), 슬로베니아(-1.4%) 순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0.4%p, 총 고정자본형성이 0.8%p, 재고증감이 0.2%p 기여한 반면, 국제수지가 -1.1%p (수입은 -2.0%p, 수출이 0.9%p), 정부 최종소비지출이 0.0%p 기여

⁷⁴⁾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544700/2-07122022-AP-EN.pdf/a66a9850-ff2f-4df1-bb16-4b5668ee890c>, 검색일자: 2022.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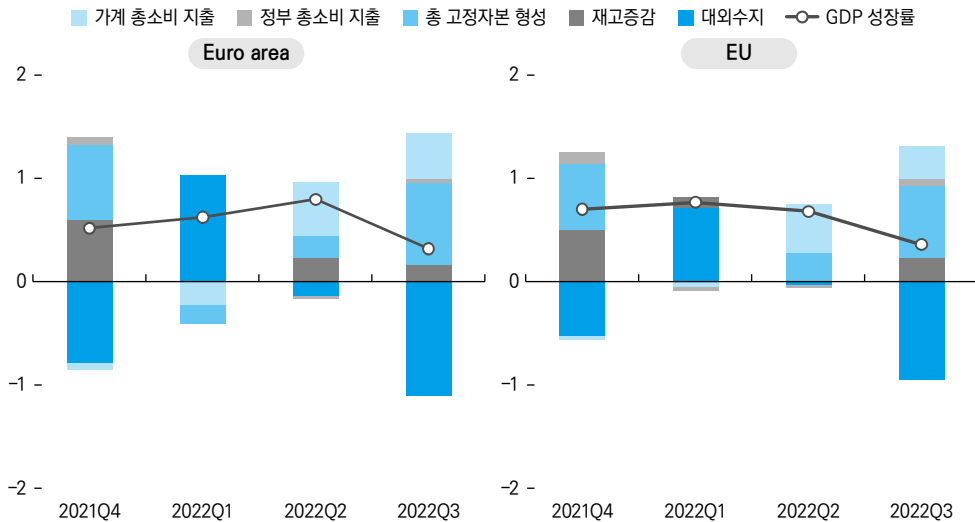
그림 2-I-4 2022년 3분기 EU 회원국별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 7.

그림 2-I-5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 7.

표 2-I-11 EU 27개국의 2022년 3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1	2022			2021	2022		
	Q4	Q1	Q2	Q3	Q4	Q1	Q2	Q3
벨기에	0.6	0.6	0.5	0.2	6.1	5.3	4.1	1.9
불가리아	1.5	0.4	0.8	0.6	7.6	5.2	4.6	3.3
체코	0.8	0.6	0.4	-0.2	3.5	4.6	3.6	1.7
덴마크	2.5	-0.5	0.8	0.5	6.5	5.0	3.8	3.4
독일	0.0	0.8	0.1	0.4	1.2	3.5	1.7	1.3
에스토니아	0.8	0.0	-1.3	-1.8	7.2	4.5	0.2	-2.3
아일랜드	-1.1	7.0	2.2	2.3	14.0	11.9	12.2	10.6
그리스	0.6	2.2	0.6	-0.5	8.8	7.9	7.1	2.8
스페인	2.3	-0.2	1.5	0.2	6.6	6.7	6.8	3.8
프랑스	0.6	-0.2	0.5	0.2	6.6	6.7	6.8	3.8
크로아티아	1.5	2.8	1.5	-0.4	12.3	7.6	8.5	5.5
이탈리아	0.8	0.2	1.1	0.5	6.5	6.4	5.0	2.6
키프로스	2.0	1.7	0.3	1.3	6.6	6.6	6.3	5.4
라트비아	-0.4	1.8	0.0	-1.7	2.5	5.0	2.7	-0.4
리투아니아	1.1	0.6	0.3	0.5	5.8	4.1	2.8	2.5
룩셈부르크	1.6	0.7	-0.5	1.1	4.1	2.8	1.7	3.0
헝가리	2.1	1.6	0.8	-0.4	7.4	7.9	6.3	4.1
몰타	1.8	1.1	0.9	1.3	13.4	8.3	9.4	5.2
네덜란드 ¹⁾	0.6	0.3	2.4	-0.2	6.1	6.6	5.1	3.1
오스트리아	-1.4	1.2	1.9	0.2	6.1	8.4	6.2	2.0
폴란드	1.6	4.3	-2.3	1.0	8.7	10.5	5.6	4.5
포르투갈	1.9	2.4	0.1	0.4	6.6	12.0	7.4	4.9
루마니아	0.5	1.5	1.3	1.3	4.6	4.4	3.9	4.7
슬로베니아	5.2	-0.1	0.2	-1.4	10.7	9.3	7.9	3.9
슬로바키아	0.3	0.3	0.4	0.4	1.1	2.9	1.3	1.4
핀란드 ¹⁾	0.6	0.3	0.7	-0.3	2.9	3.6	2.6	1.0
스웨덴	1.3	-0.1	0.7	0.6	5.9	4.1	4.0	2.6
유로지역(EA19)	0.5	0.6	0.8	0.3	4.8	5.5	4.2	2.3
EU 27개국(EU27)	0.7	0.7	0.7	0.4	5.1	5.6	4.3	2.5

주: 1. 캘린더 효과 조정 자료(calendar adjusted data)로부터 계산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

2. 음영색 처리된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 7.

나. 재정 동향·전망

- EU 통계청, 2022년 1분기 재정통계 발표(2022.7.21.)⁷⁵⁾
 - (재정수지) 유로지역⁷⁶⁾ 19개국과 EU 27개국의 2022년 1분기 GDP 대비 일반 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2.3%, -2.2%로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개선됨
 - 두 지역의 GDP 대비 적자 감소는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크고 GDP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난 분기보다는 감소했으며, 재정수지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
 - (정부채무) 유로지역과 EU의 2022년 1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95.6%, 87.8%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1%p, 0.3%p 하락
 - 두 지역 모두 채무 자체는 증가했으나 GDP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규모가 하락
 - 채무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89.3%), 이탈리아(152.6%), 포르투갈(127.0%)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7.6%), 룩셈부르크(22.3%), 불가리아(22.9%) 순으로 집계됨
 - 전 분기 대비 프랑스(1.9%p), 이탈리아(1.8%p), 키프로스(1.3%p) 등 8개국은 채무 비율이 상승한 반면, 그리스(-4.0%p), 리투아니아(-4.0%p), 덴마크(-3.7%p) 등 19개국은 하락

⁷⁵⁾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2% of GDP in the EU*, 2022.7.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44647/2-21072022-BP-EN.pdf>, 검색일자: 2022.8.2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5.6% of GDP in euro area*, 2022.7.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44644/2-21072022-AP-EN.pdf>, 검색일자: 2022.8.22.

⁷⁶⁾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표 2-I-12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7개국의 2022년 1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Q1	2021Q4	2022Q1(잠정치)
유로지역(EA19)			
재정수지	-6.9	-3.4	-2.3
정부수입	47.2	48.3	47.0
정부지출	54.0	51.7	49.3
정부채무	100.0	95.7	95.6
EU 27개국(EU27)			
재정수지	-6.3	-3.3	-2.2
정부수입	46.8	47.5	46.3
정부지출	53.1	50.8	48.5
정부채무	92.3	88.1	87.8

주: 1.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달러조정·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2% of GDP in the EU*, 2022. 7.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44647/2-21072022-BP-EN.pdf>, 검색일자: 2022. 8. 2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5,6% of GDP in euro area*, 2022. 7.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44644/2-21072022-AP-EN.pdf>, 검색일자: 2022. 8. 22.

- EU 통계청, 2022년 2분기 재정통계 발표(2022. 10. 21.)⁷⁷⁾
- (재정수지) 2022년 2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유로지역은 GDP 대비 -2.1%, EU 27개국은 GDP 대비 -1.8%로 전 분기 대비 적자폭이 감소
 - 유로지역 및 EU의 GDP 대비 적자 감소는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보다 크고 GDP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지난 분기보다는 약한 수준

⁷⁷⁾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1% of GDP in the euro area and 1,8% of GDP in the EU*,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8/2-21102022-CP-EN.pdf/852930e9-0374-d456-b4d9-588cd689bd6e>, 검색일자: 2022. 10. 24.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4,2% of GDP in euro area*,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5/2-21102022-BP-EN.pdf/eeb714b8-83c4-cd8c-56b8-e9aa7c5798a8>, 검색일자: 2022. 10. 24.

- (재정채무) 유로지역의 2022년 2분기 말 GDP 대비 채무비율은 94.2%로 전 분기 95.2%에서 1.0%p 감소, EU 27개국은 전 분기 87.5%에서 86.4%로 1.1%p 감소
 - 유로지역 및 EU의 정부채무 수준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GDP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채무비율이 감소
 - 채무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82.1%), 이탈리아(150.2%), 포르투갈(123.4%), 스페인(116.1%), 프랑스(113.1%), 벨기에(108.3%) 순이며,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6.7%), 불가리아(21.3%), 룩셈부르크(25.4%) 순으로 집계
 - 전 분기 대비 룩셈부르크(2.8%p), 체코(0.6%p), 네덜란드(0.1%p) 3개국은 채무비율이 상승한 반면, 24개국은 채무비율이 감소
 - 특히 사이프러스(-6.8%p), 그리스(-6.3%p), 크로아티아(-3.0%p), 몰타(-2.3%p), 이탈리아(-1.9%p), 아일랜드(-1.8%p)가 큰 폭으로 감소

표 2-I-13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7개국의 2022년 2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Q2	2022Q1(잠정치)	2022Q2(잠정치)
유로지역(EA19)			
재정수지	-6.4	-2.5	-2.1
정부수입	46.8	47.0	47.2
정부지출	53.2	49.5	49.3
정부채무	97.9	95.2	94.2
EU 27개국(EU27)			
재정수지	-5.7	-2.3	-1.8
정부수입	46.5	46.4	46.5
정부지출	52.2	48.6	48.4
정부채무	90.5	87.5	86.4

주: 1.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달러조정·계절조정된 수치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1% of GDP in the euro area and 1.8% of GDP in the EU*,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8/2-21102022-CP-EN.pdf/852930e9-0374-d456-b4d9-588cd689bd6e>, 검색일자: 2022. 10. 24.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4.2% of GDP in euro area*, 2022. 10.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5131955/2-21102022-BP-EN.pdf/eeb714b8-83c4-cd8c-56b8-e9aa7c5798a8>, 검색일자: 2022. 10. 24.

다. 경제·재정 관련 주요 보고서

□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⁷⁸⁾ 2021 발표(2022.7.12.)⁷⁹⁾

※ 동 보고서는 EU 공공 재정에 관한 주요 재정정책 동향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음.
아래 내용은 1장 EU의 경제·재정 상황 및 ECB의 통화 전략 검토를 정리함⁸⁰⁾

- 유로지역 경제는 장기적이고 강건한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
 -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물류 및 공급망 병목 등 역풍 요인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공급망 장애를 일으키고 원자재 가격 압력을 증가시킴
 - 집행위 봄 전망⁸¹⁾에 따르면 유로지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3%로 겨울 전망(각각 4.0%, 2.7%) 대비 하향 조정됨
 - 인플레이션 전망은 2022년 6.1%, 2023년 2.7%로 겨울 전망(각각 3.5%, 1.7%)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됨
- 재정 상태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나, 빠른 경제 회복과 재정수입 개선에 힘입어 당분간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재정 적자는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조치가 축소됨에 따라 2021년 5.1%에서 2022년 3.7%, 2023년 2.3%로 감소
 - 재정기조는 주로 회원국 자체 조달을 통한 순 기초 경상 지출 증가에 영향을 받아 2020~2022년 확장적으로 유지되다가, 2023년에는 긴축적으로 전환될 전망

⁷⁸⁾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⁷⁹⁾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report-public-finances-emu-2021_en, 검색일자: 2022.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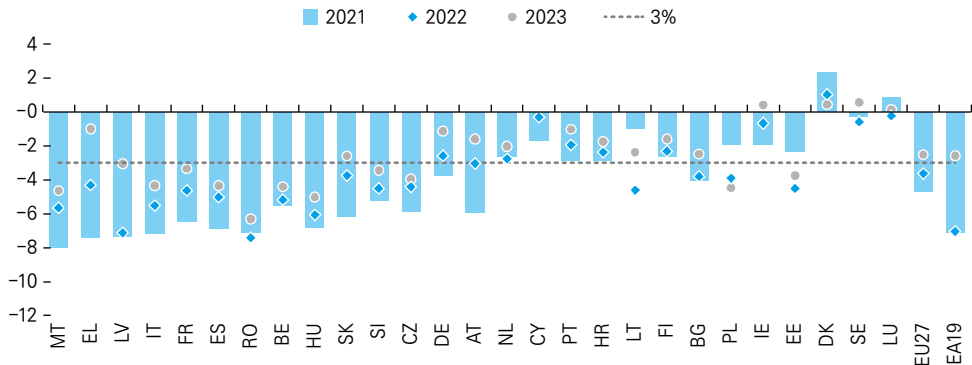
⁸⁰⁾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은 제1~4장으로 이루어짐. 제2장에서는 EU 재정 감독 동향을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차이(이자율-성장률)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재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제4장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준칙이 EU 재정준칙 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다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을 참고 바람. (<https://www.kipf.re.kr/cfa/>)

⁸¹⁾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2를 참고 바람

- GDP 대비 채무는 2020년 사상 최고치(99.2%) 기록 후 낮은 이자율과 높은 성장률(favourable interest rate-growth differential), GDP 디플레이터 상승에 힘입어 2023년 92.7%까지 하락할 전망

그림 2-I-6 EU 회원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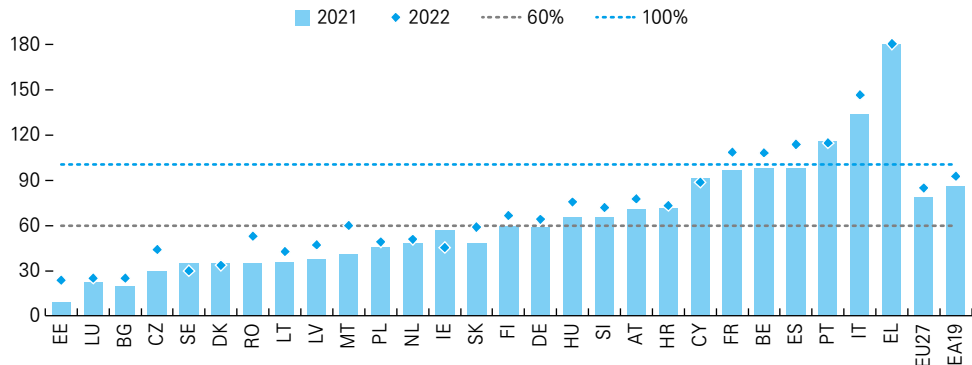


주: IT 이탈리아, HR 크로아티아, SI 슬로베니아, LT 리투아니아, PT 포르투갈, EL 그리스, ES 스페인, FR 프랑스, CZ 체코, MT 몰타, SE 스웨덴, LV 라트비아, AT 오스트리아, BG 불가리아, CY 키프로스, BE 벨기에, DE 독일, SK 슬로바키아, DK 덴마크, HU 헝가리, FI 핀란드, RO 루마니아, PL 폴란드, NL 네덜란드, IE 아일랜드, EE 에스토니아, LU 룩셈부르크, EU27 유럽연합, EA19 유로지역

자료: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2022*, p. 11, Graph I.1.4.

그림 2-I-7 EU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

(단위: GDP 대비 %)



주: 상단 그림주 참고

자료: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1, 2022*, p. 14, Graph I.1.7.

- 한편 2021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검토 결과⁸²⁾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 관점에서 정리
 - 지난 2003년 검토 이후 유로지역 경제는 실효 금리 하한, 잠재 성장률 하락, 디지털화 및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 2%의 대칭적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채택하고 야심찬 기후 변화 행동 계획에 대해 동의하며, 특히 정책 조합과 관련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실효 금리 하한 상황에서 정책수단으로 유효하며 재정정책이 중요한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
 - 아울러 정책 상호작용에 대한 ECB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실효 금리 하한 상황 등에서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나, 재정우위 (fiscal dominance)에 빠질 수 있는 등 문제도 내포한다고 지적
 - 유로지역 회원국의 비대칭적인 채무 수준이 통화정책 파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채무 감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절한 재정·구조정책이 필요하고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

⁸²⁾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8월호, 2021을 참고 바람



II

국제통화기금(IMF)*

표 2-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7.12.	IMF,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2.7.26.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업데이트 발표
2022.8.1.	IMF, 이탈리아와 연례협의 종료
2022.9.27.	IMF 제1부총재 한국 성평등 포럼 발언
2022.10.11.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22.10.12	IMF, 재정감시보고서 발표
2022.10.13.	IMF, 유럽지역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22.10.14.	EU, IMF의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PRGT)에 1억유로 기여
2022.10.27.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2022.11.15.	IMF, 호주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2.11.20.	IMF,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2.12.20.	오스트리아, 소말리아 및 수단 부채 탕감 지원을 위해 IMF의 PRG-HIPC 신탁에 1,490만 유로 기여

* 김정은 선임연구원(jekim@kipf.re.kr)

01 경제 전망 및 평가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2. 7. 26.)⁸³⁾
 - 세계 경제는 2021년 잠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하방 리스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2022년 3.2%, 2023년은 2.9% 성장할 전망(4월 전망 대비 -0.4%p, -0.7%p)
 -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성장둔화, 전쟁 및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4월 전망 대비 선진국은 -0.8%p,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0.2%p 하향 조정됨
 - (선진국) 미국은 강력한 통화 긴축 및 구매력 하락으로 4월 전망 대비 -1.4%p 하향 조정,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대폭 하향 조정 됨
 - (신흥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하향 조정,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빠른 긴축정책으로 하향 조정
 - (인플레이션) 2021년부터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선진국 6.6%(4월 전망 대비 +0.9%p), 신흥시장 및 개도국 9.5%(4월 전망 대비 +0.8%p), 2023년은 선진국 3.3%(4월 전망 대비 +0.8%p), 신흥시장 및 개도국 7.4%(4월 전망 대비 +0.9%p)를 기록할 전망
 - 미국(2022년 6월, 9.1%)과 영국(2022년 5월, 9.1%)은 40년 만에 최대, 유로존(2022년 5월, 8.1%)도 통합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위험) 고물가, 물가대응 과정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 전쟁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계 생계비 부담 증가, 임금 상승 압력, 주요국 긴축에 따른 신흥국 부채부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부동산 위기에 의한 성장 억제,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세계 경제 분열 등 상존

⁸³⁾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7/26/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2>, 검색일자: 2022. 7. 28.

- (정책권고) 정책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두되, 국가별 물가 상승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정책 필요
 -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시적인 선별지원 등 추진
 - (금융정책)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 의존도 완화, 대외충격을 환율로 흡수하기 힘든 경우 외환 개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고려
 - (국제협력) 식품·에너지 관련 수출 무역장벽 제거, 글로벌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보급 노력 강화

표 2-II-2 세계 경제 전망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실적	전망		2022년 4월 전망 ¹⁾ 대비 차이	
		2021	2022	2023	2022
세계 경제	6.1	3.2	2.9	-0.4	-0.7
선진국	5.2	2.5	1.4	-0.8	-1.0
미국	5.7	2.3	1.0	-1.4	-1.3
유로지역	5.4	2.6	1.2	-0.2	-1.1
독일	2.9	1.2	0.8	-0.9	-1.9
프랑스	6.8	2.3	1.0	-0.6	-0.4
이탈리아	6.6	3.0	0.7	0.7	-1.0
스페인	5.1	4.0	2.0	-0.8	-1.3
일본	1.7	1.7	1.7	-0.7	-0.6
영국	7.4	3.2	0.5	-0.5	-0.7
캐나다	4.5	3.4	1.8	-0.5	-1.0
한국	4.0	2.3	2.1	-0.2	-0.8
신흥개도국	6.8	3.6	3.9	-0.2	-0.5
아시아 신흥개도국	7.3	4.6	5.0	-0.8	-0.6
중국	8.1	3.3	4.6	-1.1	-0.5
유럽 신흥개도국	6.7	-1.4	0.9	1.5	-0.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6.9	3.0	2.0	0.5	-0.5

표 2-II-2 의 계속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실적	전망		2022년 4월 전망 ¹⁾ 대비 차이	
	2021	2022	2023	2022	2023
중동 및 중앙 아시아	5.8	4.8	3.5	0.2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6	3.8	4.0	0.0	0.0
저소득 개도국	4.5	5.0	5.2	0.4	-0.2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²⁾					
선진국	9.1	5.3	3.2	-0.3	-1.4
신흥개도국	11.7	2.2	3.3	-1.8	-0.9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³⁾	67.3	50.4	-12.3	-4.3	1.0
비연료	26.1	10.1	-3.5	-1.3	-1.0
소비자 물가(미 달러)					
선진국 ⁴⁾	3.1	6.6	3.3	0.9	0.8
신흥개도국 ⁵⁾	5.9	9.5	7.3	0.8	0.8

참고: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27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

2) 수출입량 증가율의 단순 평균

3) 영국 브렌트, 두바이 파테,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의 단순 평균. 2021년 평균 가격은 배럴당 69.0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추정 가격은 2022년 103.88달러, 2023년은 91.07달러

4)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7.3%, 3.9%(유로지역), 1.9%, 1.3%(일본), 7.7%, 3.0%(미국)

5) 베네수엘라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22 Update," 2022, p.7, Table 1을 편집, 한국 자료는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2/Update/July/English/data/WEOJuly2022update.ashx>, 검색일자: 2022.7.28.

□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22.10.11.)⁸⁴⁾⁸⁵⁾

- (동향) 글로벌 경제활동은 수십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고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축 재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유행 장기화가 전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84)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10/11/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2>, 검색일자: 2022.10.12.

85) 본 재정동향에 실린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의 원문 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

- (경제전망) 세계 경제는 2021년 6.0% 성장에서 2022년 3.2%, 2023년 2.7%로 둔화될 전망
 - (선진국)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및 금융과 재정 긴축 따라 2022년 1.6% 성장으로 대폭 하향 조정, 유럽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통화긴축 등으로 인해 2023년 성장률은 0.5%까지 침체될 전망
 - (신흥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및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감안하여 하향 조정, 러시아는 원유 수출 및 강력한 부양 정책으로 상향 조정
-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8.8%(7월 전망 대비 +0.5%p)로 오른 뒤 2023년 6.5%(7월 전망 대비 +0.8%p)로, 2024년 4.1%로 완화될 전망
 - 4분기 기준 예상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3분기 9.5%를 정점으로 2023년 4분기에는 4.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
- (위험) 고물가, 고환율, 높은 불확실성 등 취약성 증가로 높은 경기 하방위험
 - 과잉·과소 통화정책 위험, 국가별 정책 여건으로 인한 달러 강세 지속과 국가 간 긴장 증가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유럽 가스 공급 중단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전염병 재확산, 중국 부동산 문제 악화, 세계경제 분절화 및 국제협력 약화 등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통화 및 재정정책 추진
 - (통화정책) 실업 증가 및 임금 하락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각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 추진
 - (재정정책)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현금 이전 지원하되 광범위한 가격 상한 또는 식품 및 에너지 보조금은 지양,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긴축 재정기조 유지 및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금융정책) 환율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자본흐름관리(CFM) 등 활용, 주택시장 시스템리스크 경계
- (미래대비) 어린이 돌봄, 근로장려세제(EITC), 이민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기후대응 탄소가격 설정,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투자
- (국제협력) 취약국 백신공급, 경제 분절화 경계, 자유무역기조 강화 등 다자 협력

표 2-II-3 세계 경제 전망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 변화)

	전망			2022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2022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2021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세계경제	6.0	3.2	2.7	0.0	-0.2	-0.4	-0.9
선진국	5.2	2.4	1.1	-0.1	-0.3	-0.9	-1.3
미국	5.7	1.6	1.0	-0.7	0.0	-2.1	-1.3
유로지역	5.2	3.1	0.5	0.5	-0.7	0.3	-1.8
독일	2.6	1.5	-0.3	0.3	-1.1	-0.6	-3.0
프랑스	6.8	2.5	0.7	0.2	-0.3	-0.4	-0.7
이탈리아	6.6	3.2	-0.2	0.2	-0.9	0.9	-1.9
스페인	5.1	4.3	1.2	0.3	-0.8	-0.5	-2.1
일본	1.7	1.7	1.6	0.0	-0.1	-0.7	-0.7
영국	7.4	3.6	0.3	0.4	-0.2	-0.1	-0.9
캐나다	4.5	3.3	1.5	-0.1	-0.3	-0.6	-1.3
한국	4.1	2.6	2.0	0.3	-0.1	0.1	-0.9
신흥시장 및 개도국	6.6	3.7	3.7	0.1	-0.2	-0.1	-0.7
신흥시장 및 개도국 아시아	7.2	4.4	4.9	-0.2	-0.1	-1.0	-0.7
중국	8.1	3.2	4.4	-0.1	-0.2	-1.2	-0.7
신흥시장 및 개도국 유럽	6.8	0.0	0.6	1.4	-0.3	2.9	-0.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6.9	3.5	1.7	0.5	-0.3	1.0	-0.8
중동 및 중앙 아시아	4.5	5.0	3.6	0.2	0.1	0.4	-0.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3.6	3.7	-0.2	-0.3	-0.2	-0.3
유럽연합	5.4	3.2	0.7	0.4	-0.9	0.3	-1.8
저소득 개도국	4.1	4.8	4.9	-0.2	-0.3	0.2	-0.5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10.1	4.3	2.5	0.2	-0.7	-0.7	-1.9

표 2-II-3 의 계속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 변화)

	전망			'22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22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2021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원자재 가격 (미 달러)							
오일 ¹⁾	65.9	41.4	-12.9	-9.0	-0.6	-13.3	0.4
비연료	26.3	7.3	-6.2	-2.8	-2.7	-4.1	-3.7
소비자 물가							
선진국 ²⁾	3.1	7.2	4.4	0.6	1.1	1.5	1.9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³⁾	5.9	9.9	8.1	0.4	0.8	1.2	1.6

참고: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주: 1)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 파테(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 평균가격. 2021년 평균 유가는 배럴당 69.42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2년 98.19달러, 2023년은 85.52달러

2)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8.3%, 5.7%(유로지역), 2.0%, 1.4%(일본), 8.1%, 3.5%(미국)

3) 베네수엘라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2022, p.9, Table 1.1.

한국 수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2022, p.9, Table A2. 참고하여 재계산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2022.10.12.)⁸⁶⁾⁸⁷⁾

- (동향) 많은 국가에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저물가·저금리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자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표면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력이 고갈된 고채무국을 중심으로 위기 시 적자재정을 통한 정책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가계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의 위험을 높임

86)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2,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2/10/09/fiscal-monitor-october-22>, 검색일자: 2022.10.13.

87) 본 재정동향에 실린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의 원문 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참고

- (재정적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선진국은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등 2019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지출 반영, 신흥시장국은 세입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곱힘
 - 석유 수출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재정 흑자를 계상하였으나, 반대로 중국은 2022년에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 상대적으로 팬데믹 대응 재정 정책이 적었던 국가의 재정적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부채) GDP 대비 세계 정부부채는 2022년 GDP의 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수준보다 약 7.5%p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많은 신흥시장국과 저소득개발도상국은 2022년 스프레드 확대에 직면해 있음
 - 부채가 안정화 되더라도 GDP 대비 이자비용은 향후 몇 년 동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변동이 커지면 투자자는 장기 채권에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차입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음
 - 저소득국의 60% 가까이가 이미 부채가 과다한 상태거나 고위험에 처해 있어 채무 구제를 위한 강력한 공통 프레임워크가 필요
- (정책권고) 팬데믹 이후를 위한 일관된 중기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장기간 지속되는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을 가격 통제, 보조금 또는 감세를 통해 제한하려는 시도는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꾸준한 재정 긴축이 필요
 - 또한 선별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어 저소득 가구를 대규모 실질 소득 감소로부터 보호하고 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표 2-II-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총채무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재정수지			총채무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선진국	-6.4	-3.8	-3.6	117.9	112.4	111.3
미국 ¹⁾²⁾	-10.9	-4.0	-5.7	99.6	94.7	96.9
유로지역	-3.9	-3.6	-2.9	95.3	93.0	91.3
프랑스	-5.2	-4.6	-4.8	112.6	111.8	112.5
독일	-3.1	-3.0	-1.8	69.6	71.1	68.3
이탈리아	-5.1	-5.7	-3.6	150.9	147.2	147.1
스페인 ³⁾	-4.3	-4.5	-4.2	118.5	113.6	112.1
일본	-6.3	-7.3	-3.2	262.5	263.9	261.1
영국	-7.1	-4.3	-1.7	95.3	87.0	79.9
캐나다 ²⁾	-4.4	-2.4	-1.2	112.9	102.2	98.7
한국	0.2	-1.6	0.3	51.3	54.1	54.4
신흥국	-3.5	-4.3	-3.3	64.4	65.1	68.5
아시아	-5.0	-6.9	-5.3	71.2	75.4	80.8
중국	-5.2	-7.9	-6.1	71.5	76.9	84.1
인도	-4.9	-4.6	-4.6	84.2	83.4	83.8
유럽	-0.9	-2.1	-1.6	35.8	31.6	31.9
러시아	1.1	-2.0	-1.7	17.0	16.2	16.9
라틴아메리카	-1.0	0.0	-0.4	72.2	68.0	68.1
브라질 ⁴⁾	0.7	0.8	-0.8	93.0	88.2	88.9
멕시코	0.0	0.8	0.3	57.6	56.8	58.7
중동·북아프리카	-2.0	1.7	1.2	48.0	40.6	39.5
사우디아라비아	-2.1	5.8	4.2	30.0	24.8	25.1
저소득개도국	-2.7	-3.1	-2.6	48.6	48.8	48.8

주: 1)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적립연금채무(unfunded pension liabilities)에 대한 이자 및 근로자 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제외했으며,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SNA를 적용 중인 국가들(호주, 캐나다, 홍콩, 미국)의 미적립연금채무(unfunded pension liabilities)를 제외함

3) 금융 부문 지원을 포함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2 p.44, p.50, p.53, p.58, p.61, p.64, Table A1,A7,A10,A15,A18,A21
참고하여 재구성

- IMF, 유럽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2022.10.13.)⁸⁸⁾
 - (동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가계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새로운 보조금 지원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일부 상쇄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었고 광범위한 글로벌 통화 정책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망) 유럽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졌으며,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선진국 및 신흥유럽국(분쟁국 및 튀르키예 제외) 성장은 2022년 각각 3.2% 및 4.3%에서 2023년 0.6% 및 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2022년 7월 전망 보다 0.7%p, 1.1%p 하락)
 - (위험) 인플레이션 및 유럽 일부 지역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경기 침체는 유럽 전역에서 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제일 큰 위험은 에너지 공급의 차질로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가스 부족, 추가 에너지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더 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플레이션 또한 식품 가격,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 오래 지속되어 사회적 긴장도 커질 우려가 있음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긴축 정책 기조가 필요
 - (재정정책) 재정 여력을 재건하고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충격을 관리해야 함
 -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더 빠른 인상이 요구됨. 중기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긴축 통화

⁸⁸⁾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THE FOG OF WAR CLOUDS THE EUROPEAN OUTLOOK*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2/10/12/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october-2022>, 검색일자: 2022.10.14.

정책 기조가 필요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가격의 순환 상승을 저지하는 것임

- (미래대비)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탄력성을 강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형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 차세대 EU 프로그램 실행 등은 중기적으로 성장을 높이고 가격 압력을 완화하는 데 필수

□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2022.10.27.)⁸⁹⁾

- (동향)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는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 강력하게 반등했지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여파는 약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수요 둔화 등의 여파에 직면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 또한 회복세를 늦추고 있음
-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4.0%로 4월 전망치보다 0.9%p 하락하였으며, 2023년 전망치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4월 4.4%에서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23년(4.4%)과 2024년(4.5%)에도 5%를 밑돌 것으로 예측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1.7%에 머물다 2023년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와 민간 투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 이어 2023년 2.0%, 2024년 2.7%로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동남아 국가들은 국제 공급망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2022년 7%, 필리핀은 6.5%,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⁸⁹⁾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 and Pacific,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APAC/Issues/2022/10/13/regional-economic-outlook-for-asia-and-pacific-october-2022>, 검색일자: 2022.10.31.

- 태평양 제도 국가에서는 여행 규제 완화로 관광업에 기반을 둔 국가들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2022년 0.8%에서 2023년에는 4.2%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인플레이션) 2022년 3분기에 평균 4.2%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국제적인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미국 달러화에 대한 통화 가치 하락 등에 의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통화 가치 하락은 아시아 전역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장기간 진행될 수 있음
- (위험) 세 가지 위험 요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있으나 세계 경제에 비해 비교적 호재를 보이고 있음
 - 금융 환경의 급격한 긴축으로 정부 차입비용이 상승하고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수록 금융환경에 대한 압박이 예상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경제 활동을 급격히 둔화시키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수입량의 큰 폭의 감소가 특히 이웃 일본과 한국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음
- (정책권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 인플레이션 관리, 금융 안정성 관리 등에 힘써야 함
 -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금융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이미 국채수익률이 최저 수준에 근접한 중국과 일본 제외)
 - 일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targeted)하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재정건전화 필요
 - 지정학적인 분쟁 확대를 피하고 무역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 및 잠재적 생산 능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 개혁 필요

02 연례협의

□ IMF, 미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2. 7. 12.)⁹⁰⁾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감시 활동
-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통화 정책 및 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은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고, 생산량은 현재 팬데믹 이전 추세에 근접했으며, 2020년 말 이후 8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그러나 수요의 빠른 회복과 에너지 가격 상승,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가속화되며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된다면 연준은 더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경제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음
 -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3월에 통과된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인해 전체 정부 적자는 GDP의 9% 가까이 증가
 - 이후 재정적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채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현저히 높으며 중기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급속한 수요 반등이 인플레이션의 급증을 동반하여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임금과 물가 상승을 신속하게 늦추는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매우 효과적이며 적절하다고 평가

⁹⁰⁾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7/12/pr22254-imf-executive-board-concludes-2022-article-iv-consultation-with-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2. 7. 13.

- IMF 이사회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머지 개혁 의제를 통과시켜 경제의 공급 측면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력 참여, 세수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및 이민 정책의 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
 - 또한 지난 5년 동안 도입된 무역 제한과 관세 인상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다자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

표 2-II-5 미국 주요 경제 지표

	2020	2021	전망	
			2022	2023
실질 GDP(%)	-3.4	5.7	2.3	1.0
실업률(%)	8.1	5.4	3.7	4.6
물가상승률(CPI inflation, Q4/Q4, %)	1.2	6.7	6.6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GDP 대비 %)	-14.5	-10.9	-4.8	-5.4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134.5	128.1	122.8	123.8
10년물 국채 수익률(%)	0.9	1.4	3.1	4.1
경상수지(GDP 대비 %)	-3.0	-3.7	-3.8	-3.1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2022. 7. 1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7/12/pr22254-imf-executive-board-concludes-2022-article-iv-consultation-with-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2. 7. 13.

- IMF, 이탈리아와 연례협의 종료(2022. 8. 1.)⁹¹⁾
 - (현황) 이탈리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서 강력하게 반등했고, 고용 및 노동 참여율이 회복되었으며, 은행의 부실채권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 통화 정책, 계속되는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완만해지고 억제될 것으로 예상

⁹¹⁾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taly,"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7/28/pr22278-italy-imf-executive-board-concludes-2022-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2. 8. 2.

- 경제는 2022년에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0.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6.7%로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NRRP(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⁹²⁾에 따른 공공 투자 지출이 강화되면서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평가) IMF 집행위원회는 국가 회복 및 회복 계획에 대한 정책 및 차세대 EU 관련한 시기적절한 이행을 높이 평가함
 - 공공 투자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노동 생산성, 투자 및 잠재적 성장을 높이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권고

표 2-II-6 이탈리아 주요 경제 지표

	2020	2021	전망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9.0	6.6	3.0	0.7
실업률(%)	9.3	9.5	8.8	9.3
물가상승률(%)	-0.1	1.9	6.7	3.5
재정수지(Fiscal balance, GDP 대비 %)	-9.6	-7.2	-5.6	-3.9
채무(Public debt, GDP 대비 %)	155.3	150.9	147.7	146.3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taly," 2022.8.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7/28/pr22278-italy-imf-executive-board-concludes-2022-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2.8.2.

⁹²⁾ 재원의 대부분을 EU 코로나19 회복 기금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회복계획으로 공공행정 개혁·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국가 경제 사회 시스템 혁신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경제 혁신 계획

□ IMF, 호주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2. 11. 15.)⁹³⁾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 입장문

- 팬데믹 이후 호주의 경제 회복은 선진국 중 가장 강력했지만,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2023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높은 이자율,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수출 수요 약화, 주택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성장률은 2022년 3.7%(예상치)에서 FY2023-24년 약 1.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현황) 202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오미크론 변이, 호주 동부의 홍수,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둔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 상반기 대비 3.4%의 성장을 보임
 - 노동시장 또한 고용 및 노동력 참여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50년 만에 최저 수준
 - 인플레이션은 높은 원자재 가격, 공급망 압력 및 높은 국내 수요 등에 의해 2022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3%로 크게 상승
- (정책권고) 내수 조정 및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
 - 호주연방준비은행(RBA)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하며, 재정 정책은 신중한 예산 집행과 초과세수 적립을 통해 국내 수요 성장을 완화하도록 조절해야 함
 - 호주의 강화된 기후 위기 대응 목표⁹⁴⁾ 달성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과 강력한 부문별 정책 등 정책 조치가 필요

□ IMF,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2. 11. 20.)⁹⁵⁾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 입장문임

-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에서 회복된 프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에 직면

⁹³⁾ IMF, "Australia: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2 Article IV Mission,"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1/15/australia-staff-concluding-statement-of-the-2022-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2. 11. 16.

⁹⁴⁾ 수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2005년 수준에서 43% 감소), 2050년까지 순 제로

⁹⁵⁾ IMF, "France: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2 Article IV Mission,"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1/18/france-staff-concluding-statement-of-the-2022-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2. 11. 22.

- 2021년 경제성장률은 6.8%로 반등했고 3분기 말에는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22년에는 약 2.5%, 2023년에는 약 0.75%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소비, 투자, 고용 및 노동력 참여 모두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빠르게 반등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원자력 비중이 높고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에너지 충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작았지만,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공급 측면을 악화시켜 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인해 급증
 - 소비자물가지수(HICP)⁹⁶⁾ 상승률은 10월에 7.1%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통제 및 보조금으로 인해 EU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 인상은 약 2~3%p 정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최고조에 이른 뒤 가격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2025년에는 약 2%로 점차 감소할 전망
- (정책권고) 위기지원에 집중하고 적자 축소에 힘써야 함
 - 2020~2022년에 걸친 프랑스의 팬데믹 재정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지만 이로 인해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
 - 에너지 충격에 대한 GDP의 2%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대응 또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시켰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재정비용을 증가시킴
 - 재정건전화는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경상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출효율화와 동시에 녹색 및 디지털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⁹⁶⁾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HICP), Regulation(EU) 2016/792 및 관련 시행 규정에 정의된 조화된 정의에 따라 계산되는 각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생산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안정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생활비 지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HICP 데이터는 Eurostat에서 발행하며 각국의 CPI 기본 개념과 방법과는 다름

03 금융지원

- EU, IMF의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PRGT)에 1억유로 기여(2022. 10. 14.)⁹⁷⁾
 - EU는 IMF의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에 1억유로(약 9,720만달러) 보조금 기여 계약에 서명
 - 이번 EU의 기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의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0차 및 11차 유럽 개발 기금⁹⁸⁾에 따라 발표된 6억유로 패키지의 일부
 - 식량 생산 및 식량 시스템 회복(3억 5천만유로), 인도적 지원(1억 5천만유로), IMF의 PRGT(1억유로)를 통한 거시 경제 지원
 - EU는 2024년까지 파트너 국가의 식량 안보 및 식량 시스템 프로그램에 77억 유로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
 - 이 기금을 통해 IMF는 국제수지 어려움에 직면한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ACP)를 위해 약 6억 3천만유로 상당의 양허성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

- 오스트리아, 소말리아 및 수단 부채 탕감 지원을 위해 IMF의 PRG-HIPC 신탁⁹⁹⁾에 1,490만유로 기여(2022. 12. 20.)¹⁰⁰⁾

⁹⁷⁾ IMF, "EU contributes €100 million to IMF's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to support vulnerable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0/14/pr22351-food-security-eu-contributes-100-million-euros-to-imf-prg-to-support-vulnerable-countries>, 검색일자: 2022. 10. 17.

⁹⁸⁾ 유럽연합의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지역 국가의 주요 개발원조 제공 수단으로, 제8차부터 제11차 까지 EDF 프로그램은 EU예산으로 자금을 조달받지 않고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제공됨

⁹⁹⁾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1996년 IMF와 세계은행이 가난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부담에 직면하지 않도록 빈곤국들의 외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 HIPC 이니셔티브로 외채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HIPC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함. 현재까지 HIPC 이니셔티브에 따른 부채경감을 받은 국가는 37개국임

¹⁰⁰⁾ IMF, "Austria contributes €14.9 million to IMF's PRG-HIPC Trust in support of Somalia and Sudan Debt Relief,"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2/20/pr22450-austria-contributes-to-imfs-prg-hipc-trust-in-support-of-somalia-and-sudan-debt-relief>, 검색일자: 2022. 12. 21.

- 2022년 12월 16일 오스트리아는 IMF의 과채무 빈곤국 이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Initiative)를 위해 1,490만유로(약 1,5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함
 - 이 기여로 IMF는 HIPC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소말리아와 수단에 부채 탕감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소말리아와 수단은 2020년 3월 25일과 2021년 6월 29일, IMF에 대한 연체를 청산하고 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각각의 의사결정 지점(decision point)¹⁰¹⁾에 도달함
- HIPC 완료 단계(Completion Point)¹⁰²⁾에서 제공될 부채 탕감은 소말리아와 수단이 빈곤을 해결하고 이들 국가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필수적인 개혁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임

¹⁰¹⁾ HIPC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단계로 네 가지 조건 충족 혹은 충분한 진전을 이루면 IMF와 세계은행 집행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부채 탕감 자격을 결정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상황에 대해 즉시 임시 구제를 받기 시작할 수 있음

¹⁰²⁾ HIPC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완료 단계에 도달하여 의사결정 시점에서 약정된 전체 부채를 완전 탕감받을 수 있음

04 기타

- IMF 제1부총재 한국 성평등 포럼 발언(2022.9.27.)¹⁰³⁾
 - 2022년 9월 27~28일에 열린 한국 성평등 포럼에서 기타 고피너스 IMF 제1부총재는 “성 평등은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촉진한다”는 주제로 발언
 -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지난 10년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소득과 노동 참여율 모두에서 노동시장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
 - 2020년 기준 32%였던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거의 20%p 높음
 - 2017년 기준 여성 관리직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32%에 비해 16%로 낮은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에서 2021년까지 53%에서 60%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간의 성별 노동참가율 격차가 15%p인 것에 비해 한국은 18%p임
 - IMF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까지 오르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여성 노동력 참여를 늘리기 위한 IMF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근로 유지를 위해 보육 서비스의 품질과 경제성 강화, 공동 육아휴직 촉진, 근로 시간 단축과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를 포함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권장
 - 여성의 필요에 맞춘 보다 광범위한 분야와 직위에 맞게 조정된 경력 전환 지원 및 기술 향상 훈련이 필요

¹⁰³⁾ IMF, “Gender Equality Boosts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9/27/sp092722-ggopinath-kgef-gender-korea>, 검색일자: 2022.9.28.

- 부소득자(second earner)에 대한 중립적인 세제 혜택 및 기업의 여성 고용 및 리더십에 대한 기준 도입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 장려
- 또한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및 경력 재취업을 위한 추가 조치와 분야별 훈련, 보육의 질적 향상, 조기 학령기 공교육 등의 지원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 2-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7.1.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한 OECD의 정책 제언: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Shaping the path to economic recovery) 발표
2022.7.4~5.	OECD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에 대한 회의 개최
2022.8.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의 위기(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endangered by Russia's war on Ukraine) 발표
2022.8.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발표
2022.9.9.	2022년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발표
2022.9.19.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발표
2022.9.26.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
2022.11.21.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2022.11.21.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 발표
2022.12.1.	OECD Pensions Outlook 2022 발표
2022.12.13.	2022년 3분기 G20 실질 GDP 성장률 발표

* 박신아 선임연구원(sinapark@kipf.re.kr)

0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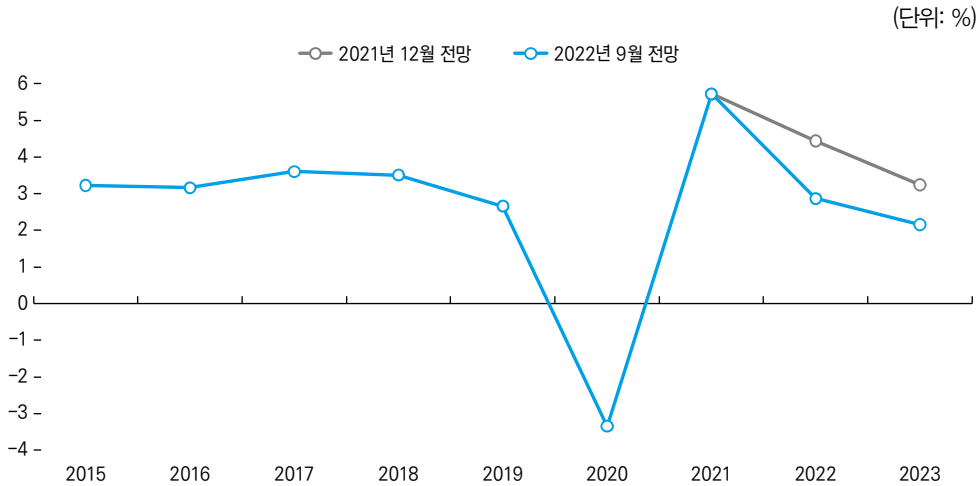
-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2022.9.26.)¹⁰⁴⁾¹⁰⁵⁾¹⁰⁶⁾
 - (경제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가중되어 세계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2%로 전망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실질가처분소득의 잠식, 낮은 소비자 신뢰,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대비 0.6%p 하향 조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12월 전망과 비교해서는 2022년과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각각 1.5%p, 1.0%p 하향 조정

¹⁰⁴⁾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2022.9.26.,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2/issue-1_ae8c39ec-en, 검색일자: 2022.9.27.

¹⁰⁵⁾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는 연 2회 OECD Economic Outlook(통상 5월, 11월 발표)의 중간시점(3월 및 9월)에 발표하는 G20 국가 중심의 경제전망보고서

¹⁰⁶⁾ 본 보고서는 개요 및 주요 내용의 요약본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원문 보고서 참고

그림 2-III-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세계경제성장 전망 비교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2022.9.26., p.11, Figure 7 재구성

- OECD 회원국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로지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3%로 예상되며,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전망
 - 미국과 유럽국가 대비 다소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한국, 호주 역시 대외수요의 약세로 향후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8%, 2.2%로 전망하여, 기존 대비 2022년 0.1%p 상향, 2023년 0.3%p 하향 조정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부동산 시장 약세 속에 3.2%까지 떨어지거나 GDP의 최대 2%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의 조치로 2023년 4.7%로 회복 전망

표 2-III-2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중간경제 전망	2022.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022.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세계	5.8	3.0	0.0	2.2	-0.6
G20 ¹⁾	6.2	2.8	-0.1	2.2	-0.6
호주	4.9	4.1	-0.1	2.0	-0.5
캐나다	4.5	3.4	-0.4	1.5	-1.1
유로지역	5.2	3.1	0.5	0.3	-1.3
독일	2.6	1.2	-0.7	-0.7	2.4
프랑스	6.8	2.6	0.2	0.6	-0.8
이탈리아	6.6	3.4	0.9	0.4	-0.8
스페인 ²⁾	5.5	4.4	0.3	1.5	-0.7
일본	1.7	1.6	-0.1	1.4	-0.4
한국	4.1	2.8	0.1	2.2	-0.3
멕시코	4.8	2.1	0.2	1.5	-0.6
튀르키예	11.0	5.4	1.7	3.0	0.0
영국	7.4	3.4	-0.2	0.0	0.0
미국	5.7	1.5	-1.0	0.5	-0.7
아르헨티나	10.4	3.6	0.0	0.4	-1.5
브라질	4.9	2.5	1.9	0.8	-0.4
중국	8.1	3.2	-1.2	4.7	-0.2
인도 ³⁾	8.7	6.9	0.0	5.7	-0.5
인도네시아	3.7	5.0	0.3	4.8	0.1
러시아	4.7	-5.5	4.5	-4.5	-0.4
사우디아라비아	3.4	9.9	2.1	6.0	-3.0
남아프리카	4.9	1.7	-0.1	1.1	-0.2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나 G20 집계 시 자체적으로 회원인 국가만 포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청국

3)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2022.9.26., p.4, Table 1

- (물가전망) G20 국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8.2%, 2023년 6.6%(기존 대비 0.6%p, 0.3%p 상향 조정)로 전망되며, G20 선진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6.2%에서 2023년 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긴축 통화 정책과 공급능력 향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 전망
 - 타 국가 대비 조기에 통화긴축을 시작한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에 진전을 보이거나, 유로지역, 영국 등의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023년 물가상승률은 미국 3.4%, 영국 5.9%, 독일 7.5%, 프랑스 5.8% 등으로 전망
 - 한국의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5.2%, 3.9%로 기존 대비 각각 0.4%p, 0.1%p 상향 조정

표 2-III-3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headline inflation) 전망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중간경제 전망	2022년 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022년 6월 전망치 대비 차이
G20 ¹⁾	3.8	8.2	0.6	6.6	0.3
호주	2.8	6.1	0.9	4.4	0.3
캐나다	3.4	6.9	0.9	4.5	0.6
유로지역	2.6	8.1	1.1	6.2	1.6
독일	3.2	8.4	1.2	7.5	2.8
프랑스	2.1	5.9	0.7	5.8	1.3
이탈리아	1.9	7.8	1.5	4.7	0.9
스페인 ²⁾	3.0	9.1	1.0	5.0	0.2
일본	-0.2	2.2	0.3	2.0	0.1
한국	2.5	5.2	0.4	3.9	0.1
멕시코	5.7	7.9	1.0	4.9	0.5
튀르키예	19.6	71.0	-1.0	40.8	1.9
영국	2.6	8.8	0.0	5.9	-1.5

표 2-III-3 의 계속

(단위: %, %p)

구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중간경제 전망	2022년 6월 전망치 대비 차이	중간경제 전망	2022년 6월 전망치 대비 차이
미국	3.9	6.2	0.3	3.4	-0.1
아르헨티나	50.9	92.0	31.9	83.0	32.4
브라질	8.3	10.8	1.1	6.6	1.3
중국	0.8	2.2	0.2	3.1	0.1
인도 ³⁾	5.5	6.7	0.0	5.9	-0.6
인도네시아	1.6	4.1	0.3	3.9	0.1
러시아	6.7	13.9	-2.3	6.8	-6.5
사우디아라비아	3.1	2.5	0.3	3.2	0.5
남아프리카	4.6	6.7	0.7	5.9	0.1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나 G20 집계 시 자체적으로 회원인 국가만 포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청국
 3)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2: Paying the Price of War*, 2022.9.26., p.4, Table 1

- (위험요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외 공급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추운 겨울 영향으로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은 악화될 가능성
 - 기준 전망은 코로나19 상황과 유럽 에너지 위기의 점진적 해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
 - 유럽의 에너지 위기(천연가스 부족) 심화 시 2023년 기준 전망 대비 세계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물가상승률은 0.5%p 이상 상승, 유럽 경제 성장률은 1.25%p 이상 하락, 물가상승률은 1.5%p 상승 전망
- (정책권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 기후변화 및 식량 안보에 대한 대응 등을 권고
 -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통화긴축을 제고해야 하며, 주요 선진국의 추가 정책 금리 인상 필요하나 과도한 긴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취약 계층의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적 재정정책 필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 기후 등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

□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 발표(2022. 11. 22.)¹⁰⁷⁾¹⁰⁸⁾

- ※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제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 2022 No.8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를 참고 바람
- 둔화된 성장세, 지속되는 고물가, 약화된 경기 심리, 높은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는 산적한 도전에 직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
 - 최근 몇 달 동안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조치가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크게 위축된 국제 금융여건은 신흥국 경제가 직면한 압박과 이자에 민감한 지출의 부담을 가중
 - 노동시장이 경색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금상승이 물가상승보다 더더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은 감소
- (세계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팬데믹에서 반등한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2023년 2.2%로 더 둔화된 뒤, 2024년 2.7%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의 소폭 반등은 여러 국가가 정책금리를 완화하기 시작하기 때문

¹⁰⁷⁾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 Volume 2022 Issue 2: Preliminary version*, 2022, 2022.11.22.,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november-2022/>, 검색일자: 2022.11.23.

¹⁰⁸⁾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6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제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 세계경제전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세로 2023년 세계 경제성장의 3/4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 수요압력 약화, 운송비 및 운송 시간 정상화 등으로 2022년 6.3%에서 2023년 4.25%, 2024년 2.5%로 완화될 전망
- (주요국 경제전망) 세계경제성장은 2023년 둔화된 후 2024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경제성장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1.8%에서 2023년 0.5%, 2024년 1.0%로 전망
 - 높은 물가,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활동 약화, 실질임금 하락 등의 요인이 경제성장 제약
 - (일본)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8%, 2024년 0.9% 전망
 - 높은 에너지 가격은 실질가계소득과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요 교역국가의 성장둔화로 수출 성장 억제
 - (유로지역) 우크라이나 전쟁 및 외부 수요 약세로 2022년 말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3.3%에서 2023년 및 2024년 각각 0.5%, 1.4%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은 높은 에너지 및 식량 가격, 계속되는 공급병목 현상,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둔화 전망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8%, 2024년 1.9%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2022년 5.2%, 2023년 3.9%, 2024년 2.3%로 점진적 완화 전망
 - 민간소비 제약의 요인은 고(高)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부진
 - 수출의 경우 반도체 경기 하락, 글로벌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을 전망
 - (중국)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23년과 2024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6%, 4.1%로 전망

- 최근 신선식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식품가격 관리에 관한 조치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22년 2.0%, 2023년 2.2%, 2024년 2.0% 유지 전망
- (인도) 경제성장률은 FY2022-23¹⁰⁹⁾ 6.6%에서 FY2023-2024 5.7%로 감소한 후 FY2024-2025 6.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팬데믹 이전 추세와 일치
- 국제관광을 포함한 대면서비스의 강력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으로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외부 수요의 약세로 2023년 경제성장 둔화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전망) 세계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상실되었으며, 세계교역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3년 6.5%, 2024년 5.1%로 전망되며, G20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3년 6.0%에서 2024년 5.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물가상승률은 미국 3.5%, 영국 6.6%, 독일 8.0%, 프랑스 5.7%, 일본 2.0% 등으로 전망
 -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9%(2022년 6월 전망대비 0.1%p 상향 조정), 2.3%로 전망
 - (고용)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2023년 5.3%, 2024년 5.5%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실업률은 지난 20년 동안 최저수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임금 증가율은 증가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급격히 하락
 - 2023년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2024년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
 - (무역) 세계무역은 2022년 상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무역 성장세 둔화될 가능성
 - 세계 실질무역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 3.8%로 전망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3년 -3.6%, 2024년 -3.1%로 예상

109) 회계연도 2022년 4월~2023년 3월

표 2-III-4 세계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1	2022	2023	2024	2022 Q4	2023 Q4	2024 Q4
실질 GDP 성장률¹⁾								
세계 ²⁾	3.4	5.9	3.1	2.2	2.7	2.0	2.3	3.0
G20 ²⁾	3.5	6.2	3.0	2.2	2.7	2.0	2.2	3.0
OECD ²⁾	2.2	5.6	2.8	0.8	1.4	1.2	0.9	1.8
미국	2.4	5.9	1.8	0.5	1.0	0.2	0.3	1.6
유로 지역	1.9	5.3	3.3	0.5	1.4	1.4	0.7	1.7
일본	0.8	1.6	1.6	1.8	0.9	2.0	1.2	0.7
한국	-	2.5	2.7	1.8	1.9	-	-	-
Non-OECD ²⁾	4.4	6.2	3.4	3.3	3.8	2.7	3.6	4.0
중국	6.8	8.1	3.3	4.6	4.1	4.4	4.5	4.0
인도 ³⁾	6.8	8.7	6.6	5.7	6.9	-	-	-
브라질	-0.4	4.9	2.8	1.2	1.4	-	-	-
실업률 ⁴⁾	6.5	6.2	5.0	5.3	5.5	5.0	5.5	5.5
인플레이션¹⁾								
G20 ²⁾⁵⁾	3.0	3.9	8.1	6.0	5.4	8.0	5.5	5.5
OECD ⁶⁾⁷⁾	1.6	3.8	9.4	6.5	5.1	9.6	5.5	5.1
미국 ⁶⁾	1.4	4.0	6.2	3.5	2.6	5.5	3.1	2.3
유로 지역 ⁸⁾	0.9	2.6	8.3	6.8	3.4	9.6	4.9	2.9
일본 ⁹⁾	0.9	-0.2	2.3	2.0	1.7	3.2	1.4	1.9
한국	-	2.5	5.2	3.9	2.3	-	-	-
재정수지¹⁰⁾	-3.2	-7.3	-3.7	-3.6	-3.1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¹⁾	3.4	10.0	5.4	2.9	3.8	2.4	3.2	4.0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6)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7)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개인소비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private consumption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8)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9) COICOP 2018 분류 기준 소비자물가지수(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10) GDP 대비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 2022, 11, 22., p.15, Table 1.1, 재구성

- (주요국 재정 전망) 각 국가들은 보편적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선별적 재정정책 지원 필요
 - (미국) 2023~2024년 기초재정수지가 잠재 GDP 대비 2%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지는 2023년 -3.7%, 2024년 -3.7% 전망
 - (영국) 재정수지는 2022년 -6.2%에서 2023년 -7.6%, 2024년 -6.8% 예상
 -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2021년 12월 0.1%에서 2022년 11월 3%로 상향 조정
 - 가계 및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 보장 및 에너지 요금 경감제도 등을 도입
 - (유로지역) 유로지역 내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부터 에너지 관련 재정지원의 단계적 폐지 예상
 - 2023년 팬데믹 관련 지원의 전면 종료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에너지 관련 비용을 상쇄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상당한 부양책 예상
 - (독일) 재정수지는 2022년 -2.7%에서 2023년 -3.2%, 2024년 -2.2%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2023년 광범위한 에너지 가격 지원으로 인해 확대되었다가 2024년 축소 전망
 - 팬데믹 관련 재정지원프로그램은 2022년 6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세 가지 에너지지원 패키지(950억유로; GDP의 2.6%)와 에너지지원 기금(2천억유로; GDP의 5.5%) 발표
 - (프랑스) 재정기조는 2023년 중립 유지 예상되며, 재정수지는 2023년 -5.2%, 2024년 -4.7% 전망
 - 2023~2024년 에너지가격에 대한 임시 상한선, 임시 보조금, 현금 이전 등의 에너지 지원 정책의 단계적 폐지 예상
 - (일본)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의 만료 등으로 2023년 재정기조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 재정수지 2023년 -5.9%, 국가채무 250.6% 전망
 - (한국) 재정 건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편적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취약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 필요

- 재정수지는 2022년 및 2023년 각각 0.7%, 0.9% 예상되며,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3년 49.3%, 2024년 48.9%로 점차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3년 3.9%, 2024년 2.3% 예상
 - 재정준칙 채택,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시 재정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권고
- (중국) 2021년 말 이후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의 두 차례 인하 등 통화정책은 필요한 유동성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정책은 세금 삭감 및 예비비(reserve funds) 지출의 형태로 지속될 전망

표 2-III-5 OECD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수지 ¹⁾					
미국	-14.9	-12.1	-4.1	-3.7	-3.7
일본	-9.0	-5.5	-6.7	-5.9	-4.3
영국	-13.1	-8.2	-6.2	-7.6	-6.8
유로지역	-7.1	-5.2	-3.7	-3.8	-3.1
프랑스	-9.0	-6.5	-4.9	-5.2	-4.7
독일	-4.3	-3.9	-2.7	-3.2	-2.2
중국	-6.9	-6.6	-6.6	-6.6	-6.8
한국	-2.7	-0.8	0.2	0.7	0.9
국가채무 ²⁾					
미국	133.3	126.2	121.9	121.9	122.3
일본	241.3	241.6	248.0	250.6	251.8
영국	152.0	145.6	142.6	145.9	149.9
유로지역	121.0	115.4	113.5	113.0	112.9
프랑스	146.2	138.4	138.6	140.1	141.9
독일	78.5	77.6	78.3	78.8	79.4
중국	-	-	-	-	-
한국	50.0	50.5	50.3	49.3	48.9

주: 1)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

2) 일반정부 총 채무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Ch.3의 국가별 경제 및 재정전망 표 재구성, 2022.11.22.

- (위험요인)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차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신흥국의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
 - (에너지) 에너지 공급 차질은 중요한 하방요인이며, 유럽의 천연가스 확보와 수요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철 수급난 심화 예상
 - 가스 가격 상승 및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2023~2024년 유럽 및 세계의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심화
 - (금리) 금리 상승은 기업, 정부, 가계의 채무상환에 악영향
 - 저소득국가의 절반 이상은 채무위기 및 긴축재정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저소득국가와 신흥국의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 하락은 위험을 가중시킴
 - (식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가격,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 세계 취약계층은 식량 수급 불안정의 위험에 직면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 잠재적 성장 촉진 및 포용적인 회복 달성을 위한 고용 촉진 등을 권고
 - (재정 및 통화)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하에서 통화정책과 긴밀한 연계 필요
 -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에너지 위기 대응 재정지원은 일시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하며, 기존의 조치(에너지 가격상한제, 가격 및 소득보조, 세금 감면 등) 유지는 향후 에너지 절약 유인 저해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가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
 - (에너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장려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에너지원 다원화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장려, 에너지 그리드 강화, 에너지 효율 및 녹색기술 투자 등 제시
 - (무역)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지양하고 정부의 시장 개방 및 국제무역의 흐름 유지 필요
 - (고용) 잠재적 성장을 촉진하고 보다 포용적인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 촉진이 필수적이며,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새로운 기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권고

0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

- OECD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한 OECD의 정책 제언: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Shaping the path to economic recovery)(2022. 7. 1.)¹¹⁰⁾
 - (개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단기 조치, 거시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조치를 제시하고 투자환경 및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지원,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
 - (현황)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자원을 약화시키고 있음
 - (경제 일반) 2022년 손실된 생산능력 및 경제활동은 전쟁 전 대비 30~50% 수준으로 추정(우크라이나 기업의 거의 절반의 기업이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 수출량 역시 1/2 수준으로 감소
 - (농업) 전 세계 곡물 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봄 경작한 농작물이 평년대비 약 70% 수준이었으며, 농업 비축량이 손괴되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이 위태로워지고 있음
 - 2020년 우크라이나의 듀럼밀(durum wheat)과 메슬린(meslin), 밀 수출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 5위 이내에 해당하며, 식물성 기름(해바라기씨유 등)의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남¹¹¹⁾
 - (무역) 연료와 같은 핵심 품목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했지만 수출 대비 적게 감소하여 경상수지 자금 조달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

110) OECD,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한 OECD의 정책 제언: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 "Shaping the path to economic recovery," 2022. 7. 1.,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shaping-the-path-to-economic-recovery-78475265/>, 검색일자: 2022. 7. 18.

111)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2022, 2022년 6월 경제전망, Box 1.1 참고,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 7. 21.

- (물가) 2022년 4월까지 물가가 16% 이상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음
- (재정) 전쟁 발발 이후 세수는 80% 감소하고 매월 약 47억유로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앙은행 또는 공식적인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에서 2022년 6월 7일 사이 주로 인도주의적 보조금 명목으로 79억달러 이상, 대출 및 기타 자금으로 494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았음
- (자금 조달) 2022년 6월 초 이후 우크라이나는 국제 파트너로부터 280억유로 이상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정부자금조달을 위한 다자간 지원을 포함함
 - EU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Rebuild Ukraine Facility)은 재건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 제공
 - IMF 관리의 우크라이나 계정(Account for Ukraine)은 IMF의 회원, 공식 기관, 정부 간 기관 및 조직이 국제수지 및 예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대출 지원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20억유로 규모의 회복 및 생계 프레임워크(Resilience and Livelihoods Framework)는 부채 상환 및 구조 조정, 우크라이나의 긴급 유동성 금융 중점 지원
 -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다중 기부 지원(multi-donor facility)은 필수 공공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 (정책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대응이 필요
 - 현재 즉각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 회복에 필요자금이 조달된 상태이며, 단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은행 시스템과 환율에 대한 신뢰 유지가 필요
 - 재정 및 경상계정 지원을 위해 상환기간이 길고 고정이자 비용이 낮은 보조금 또는 대출 상품 모색 필요
 -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제공 등

- 중장기적(2023년 이후)으로 손실된 생산능력과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재건을 위해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유입의 균형적 분배가 필요
 - 재정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회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중기재정프레임워크¹¹²⁾ 구축이 필요
 - 수출 경쟁력과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보호하면서 자금유입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이 요구됨
 - 전쟁 후 지출 프로그램을 검토 및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호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공공지출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의 세금시스템과 과세기반 조정을 통한 세금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 강화
 - 경제 통계를 작성하고 사용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구축
 -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능력 향상 필요
- 근로자의 기술 향상 및 기업의 노동수요를 해결하고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재건 등을 통한 우크라이나 노동시장 정책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투자 유치 및 지속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요구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이어져 영구적 기술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근로자의 30% 이상이 실직하고 약 15%가 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 근무시간과 임금이 삭감된 상태임
 -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근로자의 기술 향상, 전쟁 이전에 진행되었던 공공고용서비스인 취업 연결 프로그램 향상에 중점을 두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 또한 민간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반독점위원회(AMC)의 역할 강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

¹¹²⁾ 2021년 합의된 중기예산목표는 기본 예산 흑자를 달성하고 공공부채를 GDP 대비 60% 미만으로 유지

- OECD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에 대한 회의 개최(2022.7.4.~5.)¹¹³⁾
 -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재건(The OECD and Ukraine's recovery and reconstruction)’을 주제로 여섯 가지 주요 정책 제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우크라이나의 경제회복, 인프라 복구, 포용적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 공공 거버넌스,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디지털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환경적 영향과 녹색재건에 대한 전망 발표¹¹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의 위기(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endangered by Russia's war on Ukraine) 보고서를 발표(2022.8.4.)¹¹⁵⁾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에 영향을 받는 OECD 회원국들은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현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점유율이 높은 주요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세계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공급의 차질로 특정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일부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알루미늄, 니켈, 팔라듐 및 바나듐 등)의 차질은 현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에너지 전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전 세계 원자재 생산량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알루미늄(Aluminium) 5.5%, 니켈(Nickel) 11%, 팔라듐(Palladium) 43%, 바나듐(Vanadium) 21%, 칼륨(Potash) 18%로 나타남

¹¹³⁾ <https://www.oecd.org/country/ukraine/#rebuilding-ukraine>

¹¹⁴⁾ 정책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구보고서 참고, <https://www.oecd.org/ukraine-hub/en/#resources>, 검색일자: 2022.7.18.

¹¹⁵⁾ OECD, *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endangered by Russia's war on Ukraine*, 2022.8.4.,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the-supply-of-critical-raw-materials-endangered-by-russia-s-war-on-ukraine-e01ac7be/>, 검색일자: 2022.8.23.

표 2-III-6 원자재별 사용처

원료	산업 응용	녹색에너지 전환 관련성
알루미늄	자동차, 비행기, 건설, 전력부문, 식품 및 음료 포장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및 경량 차체 부품, ¹⁾ 손전선로, 태양광 발전 ²⁾
니켈	건설, 운송, 의료장비, 전자기기 및 발전용 스테인리스 스틸, 자석 및 합금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
팔라듐	보석, 치과, 촉매변환기, 전자 장치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촉매 변환기
칼륨	과일, 채소, 쌀, 밀 및 기타 곡물, 설탕, 옥수수, 대두, 팜유 및 면화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식물 및 작물의 영양소	
바나듐	우주선, 원자로 및 비행기에 적용되는 강철 합금의 안정성과 내식성 향상, 초전도 자석에 일부 사용	재생에너지 저장, 전기차 배터리의 바나듐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주: 1) 전기차 모델의 알루미늄 함량은 내연기관 모델 대비 40~50% 높음

2) 알루미늄은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 부품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패널 프레임에 사용됨

자료: OECD, *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endangered by Russia's war on Ukraine*, 2022.8.4., p.2.

- (권고사항) 원자재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제한에 대한 재협약 및 규율 등이 필요
 - 원자재 가용성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제약, 수출 제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여 국제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자간 또는 지역적인 차원, 양자 간 차원에서 기존의 무역정책 조치와 수출제한에 대한 협약 및 새로운 규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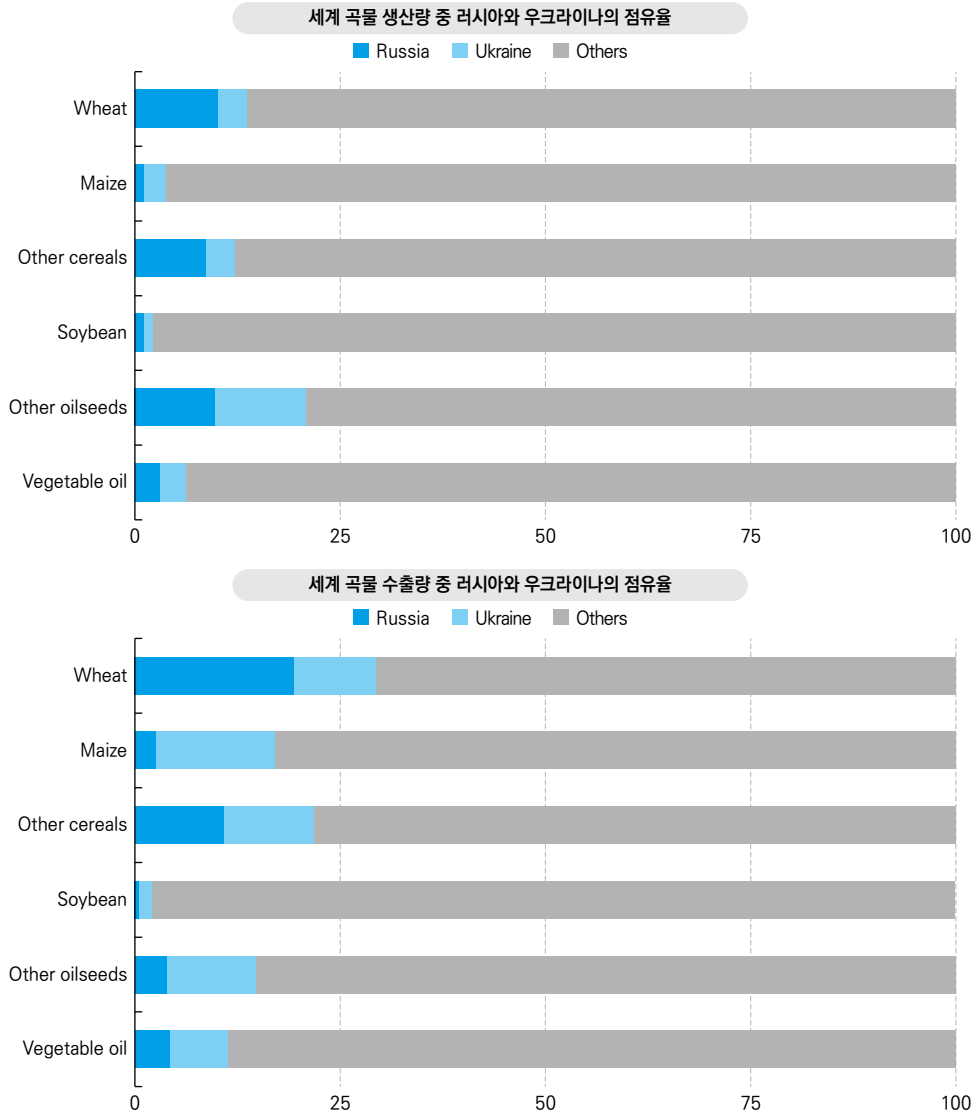
□ OECD,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보고서를 발표(2022.8.5.)¹¹⁶⁾

¹¹⁶⁾ OECD, *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2022.8.5.,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the-impacts-and-policy-implications-of-russia-s-aggression-against-ukraine-on-agricultural-markets-0030a4cd/>, 검색일자: 2022.8.23.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크라이나에 물류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중기 조치가 필요
- (현황)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 및 수출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 생산국으로 밀, 유채, 보리, 식물성 기름,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이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자 보리와 해바라기 씨의 중요한 수출국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생산량의 각각 10%, 3%(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 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보리 생산량의 20%,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5% 미만, 해바라기씨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함
 - 러시아의 경우 작물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그림 2-III-2 세계 곡물 생산 및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점유율
(2016/17년~2020/21년 평균)

(단위: %)



- 주: 1. 기타 작물에는 밀, 옥수수 및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이 포함됨(주로 보리, 수수, 귀리 및 호밀)
- 2. 기타 유지종자에는 유채씨, 해바라기씨 및 땅콩이 포함됨
- 3. 식물성 기름에는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땅콩유, 팜핵유 및 코코넛유 등이 포함됨

자료: OECD, *The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agricultural markets*, 2022.8.4., p.3, 그림1

- (권고사항)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특히 식량과 비료)이 가능하도록 물류지원이 요구되며, 중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
 - (국제무역)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출 촉진을 위해 흑해 항구 사용가능 조치, 대체 경로를 통한 수출 등의 단기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함
 -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일로에 보관되어 있는 2,200만톤의 곡물의 흑해 항구를 통한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터키와 유엔의 지원 계약에 각각 서명함
 - 우크라이나 수출 시 육로 국경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도로 및 철도 연결 개선, 다뉴브 강 항구의 무역 증가 등
 - (공급) 2022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43억 달러로 추산되며, OECD는 손실된 자산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 타 국가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량 증가, 동물 질병 통제 등의 노력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요) 농산물의 비식품 용도(사료 및 연료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1인당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등 식이변화를 촉진하는 노력 등이 필요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 2022년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발표(2022.9.9.)¹¹⁷⁾¹¹⁸⁾
 -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현황,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 지원 정책, 노동시장의 수요독점(monopsony¹¹⁹⁾)과 집중(concentration), 임금불평등에서 기업 성과와 임금 결정 관행의 역할(The role of firm performance and wage-setting practices in wage inequality)¹²⁰⁾ 등을 분석
 - (현황 및 전망) OECD 회원국들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회복세 약화
 - 2022년 7월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4.9%로 2019년 12월 5.3% 대비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미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와 같이 일자리유지제도¹²¹⁾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국가는 코로나19 위기 발발 직후 실업률이 더 크고 빠르게 증가

117)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2022.9.9.,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bb305a6-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1bb305a6-en>, 검색일자: 2022.9.21.

118) 노동시장의 현황,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설계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요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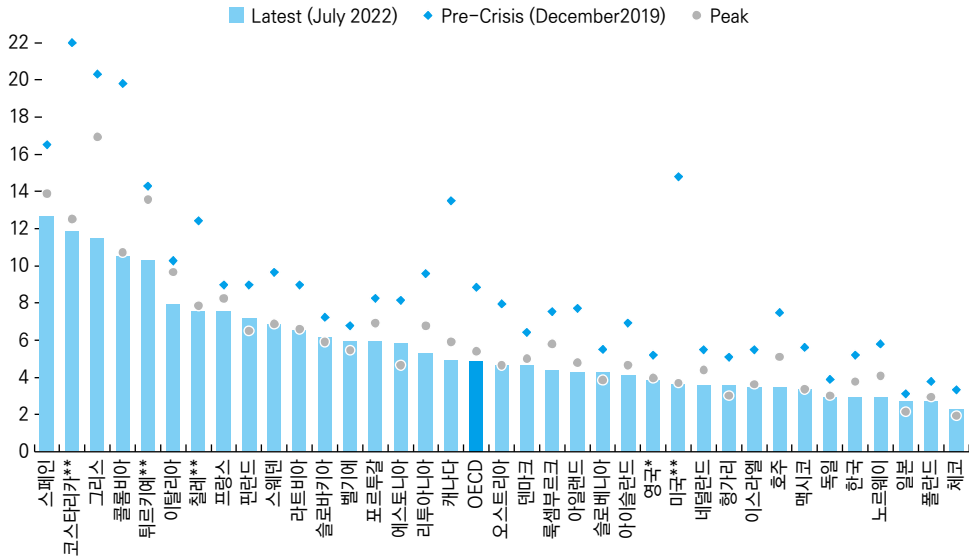
119) 고용주가 일반적인 임금결정권한이 있어 고용과 임금이 비효율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낮은 임금뿐 아니라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의미

120) 전체 임금 불평등의 1/3은 근로자의 자격 수준이나 성과의 차이보다 기업 간의 임금결정관행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

12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을 직접 보조하는 단축 근로형, 휴가형(furlough scheme) 및 임금보조형 등의 일자리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소득보전 지원

그림 2-III-3 코로나19 위기 이전, 정점, 최근 실업률 비교(계절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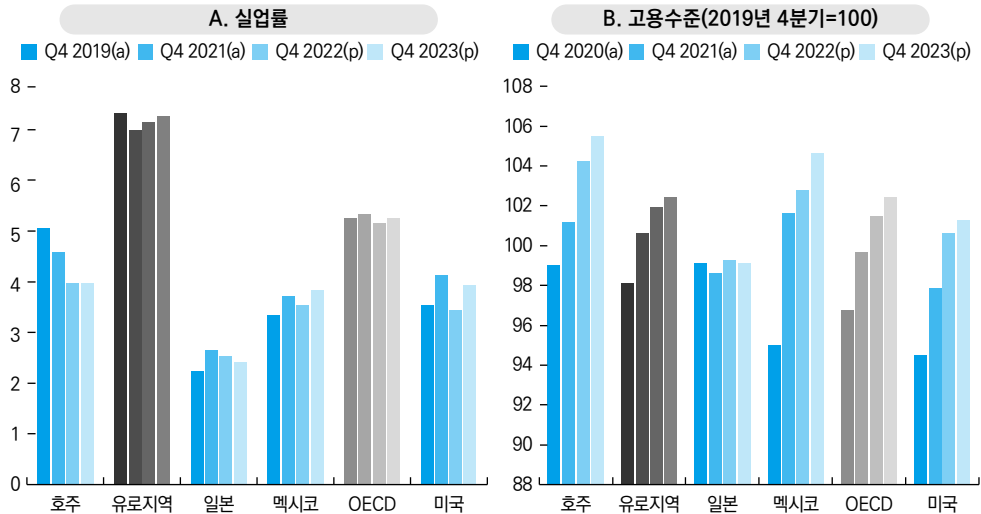
주: *, **, ***는 각각 최신 자료 시점이 2022년 5월, 6월, 8월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의 최신 자료 시점은 2022년 7월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2022.9.9., p.23, Figure 1.4 재구성

-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초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특히 요식업 및 숙박업 등 일부 저임금부문) 현상이 나타났으며, 2022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실질가처분소득 감소
- 향후 OECD 회원국들의 고용 성장은 둔화되고 2022년 및 2023년 말 실업률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유럽 공급 중단, 인플레이션 압력, 정책금리 변화 등의 하방위험 잔존

그림 2-III-4 2022년 및 2023년 실업률 및 고용수준 전망

(단위: %)



주: 1. (a) 실제값, (p) OECD 전망

2. 유로지역은 유로화를 통화로 하는 17개국 EU 회원국을 의미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2022.9.9., p.26, Figure 1.5 재구성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 정책 분석
 - (일자리 유지 제도)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당시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단시간 근로 또는 관련 임금보조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2021년 11월 기준 13개 국가는 일자리 유지관련 조치를 종료
 - (실업수당)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팬데믹 대응 조치로 실업수당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소득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
 -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유지 제도, 실업수당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소득보호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 중
 - (유급 병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근로자의 건강, 직업 및 소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2021년 공공고용서비스¹²²⁾(OECD 회원국의 약 80%)와 훈련 및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¹²³⁾ 조치(OECD 회원국의 60%)에 대한 예산 증가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재배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또한 각 국가들은 원격서비스 제공 확대, 정책 설계 조정, 디지털화 가속화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및 사회 정책) 여성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식 보육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가정의 무급 노동 부담 증가, 가정폭력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조치
- (청소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기간에 졸업한 청년, 공공고용 또는 사회 지원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 또는 비활동 청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 등에 대한 추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
- (일선 근로자를 위한 정책)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장기요양, 필수 소매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급여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일선 일자리에 대한 대규모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
- (소수 인종 및 민족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한 OECD 회원국 중 50%는 팬데믹 시기에 소수 인종 및 민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또는 사회정책 시행
- (2022년 이후 정책권고) 강력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 설계 필요
 - 구직, 실직 및 실직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투자 등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 공공고용서비스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디지털 서비스 접근에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조치 등 노동시장 포용 개선 정책 필요
 - 기술향상 지원, 디지털화 및 녹색전환 정책 제고가 요구됨

¹²²⁾ 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

¹²³⁾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

-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발표
(2022.9.19.)¹²⁴⁾¹²⁵⁾
 - (경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으며 수출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은 2022년 2.8%, 2023년 2.2%로 전망
 -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 등 견조한 성장세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2년 5.2%, 2023년 3.9%로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의 하방위험 존재

표 2-III-7 한국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

구분	2021	2022		2023	
		2022년 6월 OECD EO	2022년 9월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 6월 OECD EO	2022년 9월 한국경제보고서
GDP 성장률 (전년 대비 %)	4.1	2.7	2.8	2.5	2.2
민간소비 (전년 대비 %)	3.7	2.3	3.7	2.9	2.4
총고정자본형성 (전년 대비 %)	2.8	0.5	-1.5	2.8	2.8
수출 (전년 대비 %)	10.8	9.2	4.7	4.1	3.2
실업률 (%)	3.6	3.2	2.9	3.1	2.6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	2.5	4.8	5.2	3.8	3.9
경상수지 (GDP 대비 %)	4.9	5.3	4.3	5.0	4.0

124)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9.19.,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22_20bf3d6e-en, 검색일자: 2022.9.24.

12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22.9.1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Id1=MOSF_000000000061095&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2.9.24.

표 2-III-7 의 계속

구분	2021	2022		2023	
		2022년 6월 OECD EO	2022년 9월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 6월 OECD EO	2022년 9월 한국경제보고서
재정수지 (GDP 대비 %)	-0.8	-	-0.1	-	0.6
일반정부 채무 (GDP 대비 %)	46.4	49.9	46.8	51.1	46.1

자료: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9.19., p.10, Table 1 재구성

- (재정정책)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현재 타 국가에 비해 낮으나 향후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빠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재정지원이 요구되며,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 필요
 -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높이 평가
- (통화정책)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관리, 완만한 명목임금 인상 수준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
- (정책권고) 경제회복의 탄력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증대 정책 권고
 - (경제회복의 탄력성 제고)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새로운 재정 준칙 채택 및 준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배출허용총량 NDC 목표와 일치,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필요 등
 -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문제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개선 필요 등
 -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추진, 노인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개혁 등
-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 및 개별급여 상향,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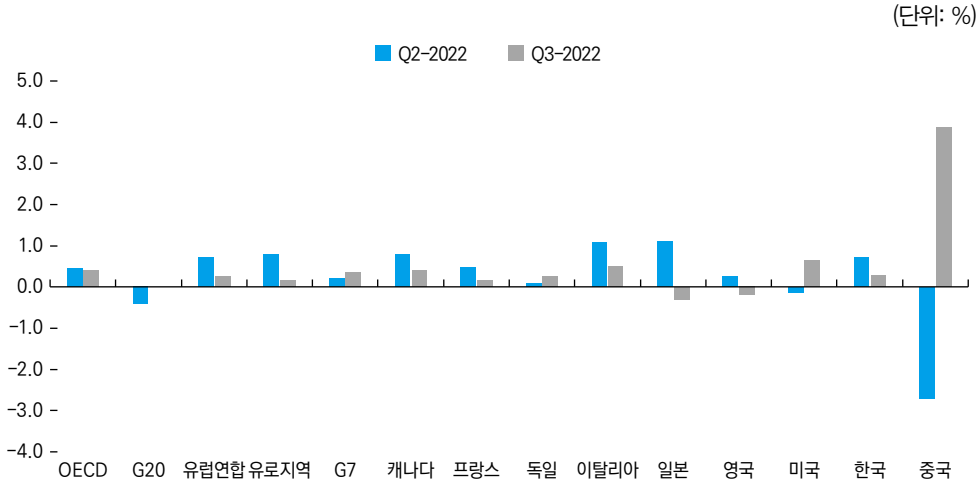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급여체계,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등
 - (청년고용 증대)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 추진, 상품 및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고용기반 마련 등
-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2.11.21.)¹²⁶⁾
- 2022년 3분기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독일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성장세 강화
 - 미국은 순수출¹²⁷⁾의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0.1%에서 2022년 3분기 0.6%로 반등
 -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0.3%(2022년 2분기 0.1%)로 성장세가 전 분기 대비 소폭 강화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성장세 둔화
 - 영국의 경우 순수출¹²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내수 위축이 성장세를 크게 제약하여 2022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p 감소(2022년 2분기 0.2% → 2022년 3분기 -0.2%)
 - 프랑스는 순수출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0.5%에서 2022년 3분기 0.2%로 둔화
 - 일본 역시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1.1%에서 2022년 3분기 -0.3%로 크게 둔화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0.3%(2022년 2분기 0.7%)로 성장세가 전 분기 대비 소폭 둔화
 - 2022년 3분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실질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하였으나 영국의 2022년 3분기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대비 0.4% 낮은 수준

¹²⁶⁾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OECD," 2022.11.21., <https://www.oecd.org/sdd/na/g20-gdp-growth-Q2-2022.pdf>, 검색일자: 2022.11.22.

¹²⁷⁾ 상품수출 4% 증가, 상품수입 2.3% 감소

¹²⁸⁾ 상품수출 14.7% 증가, 상품수입 5.0% 감소

그림 2-III-5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자료: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11.21., p.1, 그림 1 재구성

표 2-III-8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누적 성장 (2019 Q4부터 2022 Q3까지)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9.4	1.0	0.8	1.7	1.2	1.3	0.3	0.5	0.4	3.7
G20	7.9	1.8	0.6	1.3	1.0	1.7	0.5	-0.4	-	-
유럽연합	11.6	-0.1	0.1	2.0	2.1	0.7	0.7	0.7	0.2	2.7
유로지역	12.4	-0.3	-0.1	2.0	2.3	0.5	0.6	0.8	0.2	2.1
G7	9.4	0.8	0.6	1.8	1.0	1.3	-0.0	0.2	0.4	2.5
캐나다	9.0	2.2	1.1	-0.8	1.3	1.6	0.8	0.8	0.4	2.1
프랑스	18.4	-0.9	0.1	1.1	3.3	0.6	-0.2	0.5	0.2	1.1
독일	9.0	0.6	-1.5	1.9	0.8	-0.0	0.8	0.1	0.3	0.2
이탈리아	14.5	-0.8	0.3	2.5	2.8	0.8	0.1	1.1	0.5	1.8
일본	5.3	1.7	-0.3	0.5	-0.6	1.0	0.1	1.1	-0.3	0.5
영국	16.6	1.2	-1.2	6.5	1.8	1.6	0.7	0.2	-0.2	-0.4
미국	7.9	1.0	1.5	1.7	0.7	1.7	-0.4	-0.1	0.6	4.2
한국	2.3	1.2	1.7	0.8	0.2	1.3	0.6	0.7	0.3	-
중국	3.2	2.4	0.8	1.4	0.4	1.3	1.6	-2.7	3.9	-

자료: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11.21., p.2, 표 1

표 2-III-9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전체	-3.5	-2.5	-0.1	13.3	4.8	5.2	4.6	3.3	3.3
G20	-1.9	-0.3	3.6	12.0	4.9	4.7	4.6	2.8	-
유럽연합	-3.7	-3.8	-0.7	13.8	4.2	5.0	5.6	4.3	2.4
유로지역	-3.8	-4.1	-0.8	14.2	3.9	4.8	5.5	4.3	2.1
G7	-3.6	-2.6	-0.3	13.0	4.2	4.7	4.1	2.4	1.8
캐나다	-4.9	-3.1	0.2	11.7	3.8	3.2	2.9	4.6	3.6
프랑스	-3.6	-4.2	1.5	18.6	3.6	5.1	4.7	4.2	1.0
독일	-2.5	-2.1	-2.2	10.2	1.8	1.2	3.5	1.7	1.1
이탈리아	-6.0	-6.1	0.1	16.7	4.8	6.6	6.4	5.0	2.6
일본	-5.3	-0.9	-1.7	7.3	1.2	0.5	0.9	1.6	1.9
영국	-10.3	-9.2	-7.8	24.3	8.5	8.9	10.9	4.4	2.4
미국	-2.0	-1.5	1.2	12.5	5.0	5.7	3.7	1.8	1.8
한국	-0.8	-0.9	2.2	6.3	4.0	4.2	3.0	3.0	3.0
중국	4.8	6.4	18.3	7.9	4.9	4.0	4.8	0.4	3.9

자료: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 11. 21., p. 3,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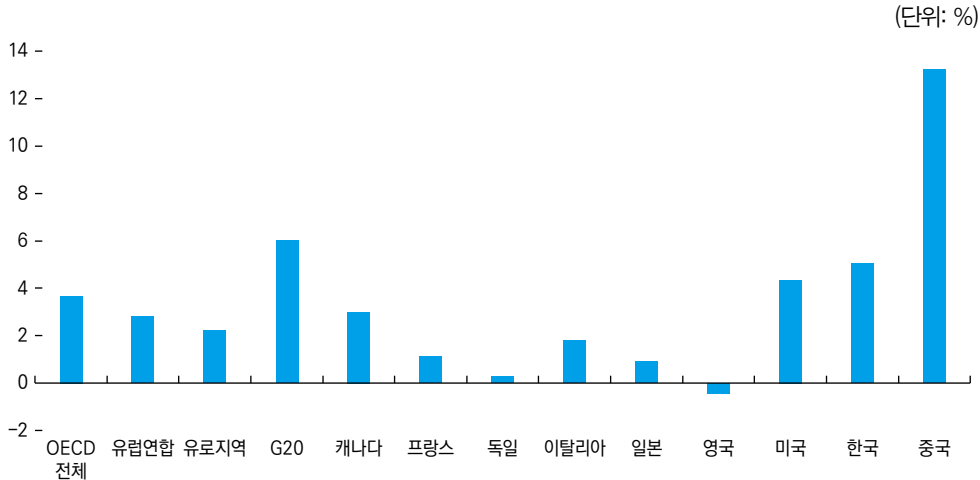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G20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2. 12. 13.)¹²⁹⁾

- 2022년 3분기 G20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 증가, OECD 전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0.4%로 약세 유지
 - 2022년 3분기 G20 국가들의 실질 GDP 성장률의 회복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로 인한 순수출 증가에 기인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분기 -2.7%에서 2022년 3분기 3.9%로 반등
 - G20 국가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성장세 둔화
 - 영국의 경우 2022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p 감소(2022년 2분기 0.2% → 2022년 3분기 -0.2%)
 - 일본의 경우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1.1%에서 2022년 3분기 -0.2%로 크게 둔화

¹²⁹⁾ OECD, "G20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OECD, 2022. 12. 13., <https://www.oecd.org/newsroom/g20-gdp-growth-third-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2. 12. 15.

- 2022년 3분기 G20 국가들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6.0% 초과하였으며, 영국의 2022년 3분기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대비 0.4% 낮은 수준

그림 2-III-6 2019년 4분기 이후 누적 성장률(계절조정)



자료: OECD, "G20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 13., p. 1, 그림 1 재구성

표 2-III-10 2022년 3분기 G20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조정)

구분	2020		2021				2022			누적 성장 (2019 Q4부터 2022 Q3까지)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전체	9.4	1.0	0.8	1.7	1.2	1.4	0.2	0.5	0.4	3.7
유럽연합	11.5	-0.1	0.2	1.9	2.2	0.7	0.7	0.7	0.4	2.8
유로지역	12.4	-0.3	-0.1	2.0	2.3	0.5	0.6	0.8	0.3	2.2
G20	7.8	1.8	0.7	1.4	0.8	1.6	0.6	-0.3	1.3	6.0
캐나다	9.0	2.2	1.3	-0.6	1.4	1.7	0.7	0.8	0.7	3.0
프랑스	18.3	-0.9	0.1	1.1	3.3	0.6	-0.2	0.5	0.2	1.1
독일	9.0	0.6	-1.5	1.9	0.8	0.0	0.8	0.1	0.4	0.3
이탈리아	14.5	-0.8	0.3	2.5	2.8	0.8	0.2	1.1	0.5	1.8
일본	5.6	1.9	-0.1	0.3	-0.5	1.2	-0.5	1.1	-0.2	0.9
영국	16.6	1.2	-1.2	6.5	1.8	1.6	0.7	0.2	-0.2	-0.4
미국	7.9	1.0	1.5	1.7	0.7	1.7	-0.4	-0.1	0.7	4.3
한국	2.3	1.2	1.7	0.8	0.2	1.3	0.6	0.7	0.3	5.0
중국	3.2	2.4	0.8	1.4	0.4	1.3	1.6	-2.7	3.9	13.2

자료: OECD, "G20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 13., p. 2, 표 1

표 2-III-11 2022년 3분기 G20 실질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3.4	-2.4	0.0	13.4	4.8	5.2	4.5	3.2	2.5
유럽연합	-3.7	-3.9	-0.8	13.7	4.2	5.1	5.6	4.3	2.5
유로지역	-3.8	-4.1	-0.8	14.2	3.9	4.8	5.5	4.2	2.3
G20	-1.8	-0.3	3.6	12.1	4.8	4.6	4.6	2.8	3.3
캐나다	-4.7	-2.9	0.5	12.1	4.3	3.9	3.2	4.7	3.9
프랑스	-3.6	-4.2	1.5	18.6	3.6	5.1	4.7	4.2	1.0
독일	-2.5	-2.1	-2.2	10.2	1.8	1.2	3.5	1.7	1.3
이탈리아	-6.1	-6.1	0.1	16.7	4.8	6.5	6.4	5.0	2.6
일본	-5.0	-0.5	-1.1	7.8	1.7	0.9	0.6	1.4	1.7
영국	-10.3	-9.2	-7.8	24.3	8.5	8.9	10.9	4.4	2.4
미국	-2.0	-1.5	1.2	12.5	5.0	5.7	3.7	1.8	1.9
한국	-0.8	-0.9	2.2	6.3	4.0	4.2	3.0	3.0	3.1
중국	4.8	6.4	18.3	7.9	4.9	4.0	4.8	0.4	3.9

자료: OECD, "G20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 12. 13., p. 3, 표 2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 I. 미국
- II. 일본
- III. 독일
- IV. 프랑스
- V. 영국



I

미국*

□ 2022회계연도: 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표 3-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6.24.	CBO, 연방 신용 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
2022.7.1.	CBO, FY2023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시한 재량지출 전망 분석 보고서 발표
2022.7.1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7.13.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7.20.	의회 하원, FY2023 minibus(부분세출예산) 법안(H.R.8294) 가결
2022.7.27.	CBO, 2022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2022.7.27.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8.9.	반도체 지원 법안(CHIPS and Science Act; H.R.4346), 대통령의 법안 서명 후 입법 발효
2022.8.10.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8.12.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H.R. 5376) 가결
2022.8.23.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전망(MSR) 발표
2022.8.25.	미 상무부(BEA), 2022년 2분기 GDP(속보, 수정치) 발표
2022.9.7.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9.13.	CBO, FY2023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2022.9.1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9.21.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 구윤모 선임연구원(ymgoo@kipf.re.kr)·이정은 선임연구원(jeunlee@kipf.re.kr)·서동규 연구원(dkseo@kipf.re.kr)

표 3-I-1 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22.9.22.	미 의회예산처(CBO), 2019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소득 수준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2022.9.24.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 발표
2022.9.30.	FY2023 1차 임시 예산안(H.R. 6833) 입법 발효
2022.9.30.	미 의회, 분유 대란 대응을 위한 관세 조정 법안(H.R. 8982) 통과 의결
2022.10.11.	CBO, FY2022(2021.10.1.~2022.9.30.) 잠정 결산 발표
2022.10.1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10.19.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10.27.	미 상무부(BEA), 2022년 3분기 GDP(속보치) 발표
2022.11.2.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11.10.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11.15.	CBO, 2019 가구소득 분배 보고서 발표
2022.11.25.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 전망
2022.11.30.	미 상무부(BEA), 2022년 3분기 GDP(1차 수정치) 발표
2022.11.30.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12.7.	CBO, 2022 예산대안(Budget Options) 보고서 발표
2022.12.1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12.14.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12.16.	FY2023 2차 임시 세출예산안(H.R. 1437) 입법 발효
2022.12.20.	의회, FY2023 정규 예산안(H.R. 2617) 합의안 마련
2022.12.22.	미 상무부(BEA), 2022년 3분기 GDP(2차 수정치) 발표
2022.12.23.	FY2023 3차 임시 예산안(H.R. 4373) 입법 발효
2022.12.23.	의회, FY2023 정규세출예산 최종 합의 도달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FY2022 수정 예산안

-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전망(Mid-Session Review, MSR) 발표(2022. 8. 23.)¹⁾
 - (재정수지) 올해(FY2022) 재정적자는 3월에 발표된 본 예산안 전망 수치 1조 4,150억달러 대비 3,830억달러 감소한 1조 320억달러 추정
 - * (GDP 대비 재정적자 수치 변화) 3월 전망(5.8%) → 8월 전망(4.2%)
 - (수입) FY2022 총수입은 3월 추정치(4조 4,437억달러) 대비 11.4%(5,040억달러) 상향 조정된 4조 9,410억달러(GDP 대비 20.0%) 추정
 - FY2022 수입 변화는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s) 변화로 인한 전망 상향 조정(410억달러) 및 기술적 수치 수정(technical revisions)으로 인한 상향 조정(4,620억달러) 등으로 총 5,040억달러 상향 조정
 - * 경제적 가정 변화로 인한 세입 변화는 임금 등(wages and salaries)의 상승 전망으로 인해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급여세가 각각 760억달러, 10억달러 상향 조정되었으며, 법인세(-90억달러), 기타(-270억달러)는 하향 조정됨
 - (지출) FY2022 총 재정지출은 3월 추정치(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2.1%(1,200억달러) 상향 조정된 5조 9,720억달러(GDP 대비 24.2%) 계획
 - 재정 수반 신규 입법에 의해 2022 회계연도 총지출 규모 860억달러(재량지출 770억달러, 의무지출 90억달러) 수치 상향 조정
 - * 재량지출 주요 신규 입법으로는 ① 2022 회계연도 본 예산 ② 우크라이나 추경세출예산 ③ 총기 제한 법²⁾ 등이 있음

1) OMB,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8/msr_fy2023.pdf, 검색일자: 2021. 8. 25.

2) ①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P.L. 117-103), ② Additional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P.L. 117-128), ③ 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 (P.L. 117-159)

- 기술적 수치 조정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결과, 2022 회계연도에 약 350억달러 수치 상향 조정
- (경제전망) 올해(2022년) 4분기 실질성장률은 전년 동기(5.5%) 대비 3.7%p 하락한 1.4%로 전망되며, 내년(2023년)에는 소폭 상승한 1.8% 전망
- 올해(2022년) 실업률은 전년(5.4%) 대비 개선된 3.7%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3.8%를 유지할 전망

표 3-I-2 경제전망 비교(MSRvsCBOvsFOMC)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 ¹⁾)		2019	2020	2021	2022	2023	····	2032
		실적			전망			
실질 GDP성장률 ²⁾	MSR(정부)	2.3	-2.4	5.5	1.4	1.8	····	2.3
	CBO(의회)				3.1	2.2	····	1.7
	FOMC(연준)				1.7	1.7	····	1.8
CPI(Urban) ³⁾	MSR(정부)	2.0	1.2	6.7	6.6	2.8	····	2.3
	CBO(의회)				4.7	2.7	····	2.3
	FOMC(연준)				5.2	2.6	····	2.0
실업률	MSR(정부)	3.7	8.1	5.4	3.7	3.7	····	3.8
	CBO(의회)				3.8	3.5	····	4.5
	FOMC(연준)				3.7	3.9	····	4.0

주: 1. 실질성장률, CPI, 항목은 전년도 4분기 대비(Fourth quarter over Fourth quarter) 수치

2. 전망 기준 일자: MSR: 2022.6./CBO: 2022.7./FOMC: 2022.6.16.

주: 1) CY = Calendar Year

2) Chain(2012) Dollars

3) 계절 조정된 도시소비자 물가 지수

자료: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MSR, 2022.8.23., p.7, Table 2

[참고] 대통령 예산안상의 재량지출 전망 분석

□ 의회예산처(CBO), FY2023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시한 재량지출 전망 분석 보고서 발표(2022. 7. 1.)³⁾

※ 본 보고서는 CBO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2022.5.25.)된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을 기준으로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전망 수치임

○ (재량지출 총 규모) CBO에서 분석한 FY2023 재량지출(권한) 요청 규모는 전년 대비 2%(380억달러) 감소한 1.71조달러 전망

*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안된 규모는 1.67조달러로 CBO 분석 규모와 약 400억달러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감소되는 재량지출의 대부분은 의무지출로 전환(330억달러)되는 재량지출 프로그램에 기인

○ (기준선 전망과의 비교) CBO에서 분석한 FY2023 대통령 예산안의 재량지출 권한 규모는 1.7조달러로 5월 기준선 전망 수치(1.8조달러) 대비 약 1천억달러(5.7%)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방예산) CBO에서 분석한 FY2023 대통령 예산안의 국방 분야 재량지출권한 규모는 전년 대비 2%(170억달러) 증가한 8,130억달러 전망

- 국방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국방관련 R&D 자금(9%; 110억달러)과 인건비(4%; 70억달러)의 증가가 언급되고 있음

○ (비국방예산) CBO에서 분석한 FY2023 대통령 예산안의 비국방 분야 재량지출 권한 규모는 전년 대비 5.8%(550억달러) 감소한 8,920억달러 전망

- 비국방 분야 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 상업·주택신용(Δ570억달러), 천연자원·환경(Δ380억달러) 예산의 감소가 언급되고 있음

³⁾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972>, 검색일자: 2022. 7. 13.

표 3-I-3 미국 재량지출 예산권한(authority) 전망 비교

구분	재정 전망	전망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0	2031	2032	2023~ 2027	2023~ 2032
(단위: 십억달러)												
국방	기준선 전망	796	828	851	872	894	...	985	1,010	1,031	4,361	9,288
	대통령 예산안 분석		813	842	850	864	...	888	895	901	4,240	8,683
비 국방	기준선 전망	947	981	1,008	1,032	1,055	...	1,162	1,191	1,220	5,159	10,977
	대통령 예산안 분석		892	878	895	913	...	928	948	969	4,446	9,088
총계	기준선 전망	1,743	1,809	1,859	1,905	1,949	...	2,147	2,200	2,251	9,521	20,265
	대통령 예산안 분석		1,705	1,720	1,745	1,777	...	1,816	1,843	1,871	8,686	17,771
(단위: GDP 대비 %) ¹⁾												
총계	기준선 전망	7.0	6.7	6.6	6.6	6.6	...	6.3	6.3	6.2	6.6	6.5
	대통령 예산안 분석		6.7	6.4	6.3	6.2	...	5.6	5.4	5.3	6.3	5.09

주: 1) 기준선 전망과 대통령 예산안 분석에 대한 GDP 대비 수치는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기준 수치

자료: CBO, *An Analysis of the Discretionary Spending Proposals in the President's 2023 Budget*, 2022. 7. 1., pp. 6~7, Table 3.

[참고]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

- 의회예산처(CBO), FY2023 대통령 예산안 분석(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3 Budget) 보고서⁴⁾ 발표(2022.9.13.)⁵⁾
 - (기준선(5월) 수치와의 비교)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2023-2032년 누적 재정적자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수치 대비 2.6조달러 낮은 13.1조달러(GDP 대비 평균 4.2%) 전망
 - (수입) 같은 기간 동안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수입은 지난 5월 수치 대비 1.7조달러 상승한 58.2조달러(GDP 대비 평균 18.7%) 전망
 - (주요 상승 요인) 향후 10년간 법인세율 인상(21%→28%) 정책안으로 인한 증가분(8,730억달러)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정책(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증가분(1,700억달러) 등
 - (지출)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 지출은 지난 5월 수치 대비 9,170억달러 감소한 71.3조달러(GDP 대비 평균 22.9%) 전망
 - (주요 증가 요인) 연방 보건 지출 증가, 교육지출 증가, 소득 보장 지출 등의 의무지출 차이(+1조 150억달러) 등
 - (주요 감소 요인) 국방과 비국방 분야 지출 절감분(-1조 6,670억달러) 및 이자지출의 절감분(-2,650억달러)으로 구성
 - (예산안(3월) 수치와의 비교)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2023-2032년 누적 재정적자는 당초 정부가 발표(3.28.)한 규모 대비 1.3조달러 하향 조정
 - * 정부안과 CBO의 재정적자 전망 규모는 의무지출에 대한 전망 규모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
 - (수입) 같은 기간 동안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수입은 정부가 발표한 규모보다 510억달러 하향 조정
 - FY2022 GDP 대비 재정수입은 19.6%로 전망되며, 이후 향후 몇 년간 감소하다가 FY2026부터 증가세로 전환 전망(장기적으로는 18.7%를 유지할 전망)
 - (지출) CBO가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의 누적 재정 지출은 정부 발표 대비 1.4조달러 하향 조정

4)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예산안에서 공개된 정책들에 대한 CBO의 자체 분석 보고서

5)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3 Budget*, 2022.9.13., <https://www.cbo.gov/publication/58417>, 검색일자: 2022.9.23.

- FY2022 GDP 대비 재정수입은 23.8%로 전망되며, 이후 향후 몇 년간 감소하나 FY2025부터 증가세로 전환 전망
 - * FY2025부터 증가하는 GDP 대비 지출 규모는 FY2029에 한 차례 하락하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
- (연방채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FY2023 연방 정부 채무는 GDP 대비 102%로 전망되나, CBO 분석에 의하면, 95% 후반대로 감소할 전망
 - CBO는 FY2022 97.9%이던 GDP 대비 연방채무가 10년 뒤인 FY2032에 102.5%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 OMB는 FY2022에 102.4%이던 GDP 대비 연방채무가 10년 뒤인 FY2032에 역대 최고 규모였던 106.1%(1946년)을 넘어선 106.7%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3-I-4 미국 예산안 전망 비교 (정부 VS CBO)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1	2032	2023~2032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정부	2,524	2,105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	6,795	7,083	58,264
	CBO					4,836	4,988	5,089	5,176	...	6,593	6,855	58,213
지출	정부	2,983	3,518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	8,477	8,867	72,685
	CBO					5,872	5,895	6,010	6,320	...	8,246	8,613	71,321
재정 적자	정부	459	1,414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	1,682	1,784	14,421
	CBO					1,036	908	921	1,145	...	1,653	1,758	13,108
국가 채무 ¹⁾	정부	5,803	7,544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	37,727	39,542	-
	CBO					24,173	25,117	26,007	27,179	...	35,824	37,593	-
예산총량(GDP대비 %)													
수입	정부	17.7	14.8	16.3	18.1	18.3	18.1	18.3	18.3	...	19.1	19.1	18.8
	CBO					19.6	19.0	18.6	18.3	...	18.7	18.7	18.7
지출	정부	21.0	24.7	31.2	30.5	24.1	22.7	22.8	23.1	...	23.9	23.9	23.4
	CBO					23.8	22.5	22.0	22.4	...	23.3	23.5	22.9
재정 적자	정부	3.2	9.9	14.9	12.4	5.8	4.5	4.5	4.8	...	4.7	4.8	4.7
	CBO					4.2	3.5	3.4	4.0	...	4.7	4.8	4.2
국가 채무 ¹⁾	정부	40.8	53.0	100.1	99.6	102.4	101.8	102.2	103.1	...	106.3	106.7	-
	CBO					97.9	95.7	95.3	96.1	...	101.4	102.5	-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자료: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23 Budget*, 2022.9.13., p.4, Table 2.

2) FY2023 임시 예산

- 의회는 2023 회계연도 개시일(2022. 10. 1.) 전까지 정규세출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최근까지 총 3회의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킴
 - 이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2차 임시예산의 만료시한(~12.23.)을 3일 앞둔 2022년 12월 20일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합의가 진행되는 중에 의회는 정부 폐쇄(shutdown)를 피하기 위해 3차 임시 예산안을 의결함

- FY2023 1차 임시 예산안(H.R. 6833; P.L. 117-180) 입법 발효(2022.9.30.)⁶⁾
 - (배경) FY2022 만료일(2022.9.30.)이 도래하였으나, FY2023의 총 12개 분야 세출예산 모두 통과되지 않은 상황⁷⁾
 - 의회 하원은 지난 7월 20일에 6개 분야⁸⁾에 대한 부분세출예산(minibus)을 가결하였으며, 이후 7월 26일에 동 세출법안(H.R. 8294)은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계류 중인 상태
 - (규모 및 만료시한) 동 임시 예산법은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⁹⁾로 진행되며, 만료시한은 2022년 12월 16일로 규정
 - 동 임시 세출예산법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경세출예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23억 5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사 훈련, 무기, 장비 및 자금 지원 등을 계획
 - * (법안 진행) 상원 통과(9.29.; 72:25) → 상원 통과(9.30.; 230:201) → 대통령 서명(9.30.)

6) 의회 하원 세출예산위원회, "House Passes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3," 2022.9.30.,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continuing-appropriations-and-ukraine-supplemental-appropriation>, 검색일자: 2022.10.4.

7) CRFB, "Q&A: Everything You Should Know About Government Shutdowns," 2022.9.23., <https://www.crfb.org/papers/qa-everything-you-should-know-about-government-shutdowns>, 검색일자: 2022.9.23.

8) ① 교통·주택도시개발 ② 농업 등 ③ 에너지·수자원 ④ 금융·일반정부 ⑤ 내무·환경 ⑥ 군사시설·재향군인 등

9) FY2022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5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네 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3월 15일 통과

- FY2023 2차 임시 세출예산안(H.R. 1437; P.L. 117-229) 입법 발효(2022.12.16.)¹⁰⁾
 - (배경) 1차^{*} 임시예산의 만료시한이 다가왔음에도 정규세출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 1차 임시 예산법(P.L. 117-180)의 시한은 2022년 12월 16일에 만료
 - (규모 및 만료시한) 2차 임시 세출예산법의 예산규모는 1차 임시 세출예산법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¹¹⁾로 진행되며, 만료시한은 12월 23일까지로 규정
 - 1차 임시 세출예산법안에 포함되었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정세출 예산¹²⁾은 해당 예산에 대한 가용 기간이 2023 회계연도 만료 시까지 규정되었기에 당해 예산의 효력은 정규 세출예산법안 의결과 별개로 효력 지속
 - * 총 123억 5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사 훈련, 무기, 장비 및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
 - ※ (법안 진행 일지) 하원 통과(12.14.; 224:201) → 상원 통과(12.15.; 71:19) → 대통령 서명(12.16.)

- FY2023 3차 임시 세출예산안(H.R. 4373) 입법 발효(2022.12.23.)¹²⁾
 - 의회는 지난 9월 30일에 제정된 1차 임시예산법(P.L. 117-180)의 만료 시한(12.23.)을 1주 연장¹³⁾한 수정법안을 의결함으로써 12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임시예산의 효력 재차 유지
 - 의회는 FY2023의 정규예산의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임시예산의 만료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정규예산 작업을 진행함

10) 미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1437," 2022.12.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12/16/press-release-bill-signed-h-r-1437/>, 검색일자: 2022.12.18.

11) FY2022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5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네 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3월 15일 통과

12)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4373," 2022.12.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12/23/press-release-bill-signed-h-r-4373/>, 검색일자: 2022.12.26.

13) 의회는 2차 임시예산법의 만료시한을 수정하지 않고, 2023 회계연도 최초 임시예산법인 1차 임시예산법의 만료시한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2차 임시예산의 만료시한을 연장

3) FY2023 정규 예산

- 의회 하원, 2023 회계연도 minibus¹⁴⁾(부분세출예산) 법안(H.R.8294) 가결 (2022.7.20.)¹⁵⁾
- (개요) 의회 하원은 총 12개 세출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가결함
 - (통과된 6개 분야) ① 교통·주택·도시개발¹⁶⁾ ② 농업¹⁷⁾ 등 ③ 에너지·수자원¹⁸⁾ ④ 재무·일반정부¹⁹⁾ ⑤ 내무·환경²⁰⁾ ⑥ 군사시설·재향군인²¹⁾
 - (주요 예산 증감) 농업 및 에너지·수자원 등의 분야를 제외하곤, 나머지 4개 분야는 모두 전년도 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농업 등) 전년 대비 8%(20억달러) 증가한 272억달러, (에너지·수자원) 전년 대비 6.4%(34억달러) 증가한 562억달러, (교통·주택·도시개발) 전년 대비 12%(99억달러) 증가한 909억달러, (재무·일반정부) 전년 대비 17%(43억달러) 증가한 298억달러, (내무·환경) 전년 대비 18%(68억달러) 증가한 448억달러, (군사시설·재향군인) 전년 대비 10%(295억달러) 증가한 3,141억달러

14) (minibus) 미국 의회 세출위원회는 총 12개 분야의 세출소위원회로 구성되며, 12개 전체 분야 예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omnibus라고 하며, 소수의 분야만 별도로 묶어 처리하는 법안을 minibus라 칭하고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2018.9 제2호 재정동향」, 2018.10., p.10에서 발췌)

15)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Passes Six-Bill Government Funding Package," 2022.7.20.,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ix-bill-government-funding-package>, 검색일자: 2022.8.25.

16) Transportation, an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17)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8)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19)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20) Interior, Environment, and Related Agencies

21)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 미 의회, FY2023 정규 예산안(HR. 2617) 합의안 마련(2022. 12. 20.)²²⁾ 후 최종 합의 도달(2022. 12. 23.)²³⁾²⁴⁾
 - (개요)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 구분 기준(국방vs비국방 예산)인 비국방 예산은 전년(7,300억달러) 대비 9.3% 증가한 8천억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국방 예산은 8,580억달러)
 - 이번 최종 합의안에는 약 449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함께 기근, 허리케인,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27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예산안 포함
 - (예산 구성 및 규모) 총 12개²⁵⁾ 세출예산분야가 모두 포함된 FY2023 재량지출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²⁶⁾은 다음과 같음
 - (노동·보건복지·교육) 총 규모 2,268억달러, 전년 대비 6.2% 증가
 - 미국 노동관계위원회²⁷⁾(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예산 확대(전년 대비 2,500만달러 증가)
 - 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증진 예산(Title I) 확대(전년 대비 8억 5천만달러 증가)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Pell Grants) 상한 금액 확대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예산 확대(전년 대비 25억달러 증가)

22) 미 의회 세출위원회, “DeLauro releases 2023 government funding legislation,” 2022. 12. 20.,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delauro-releases-2023-government-funding-legislation>, 검색일자: 2022. 12. 21.

23) 백악관, “Statement from President Joe Biden on Passage of the Bipartisan Year-End Omnibus,” 2022. 12.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3/statement-from-president-joe-biden-on-passage-of-the-bipartisan-year-end-omnibus/>, 검색일자: 2022. 12. 26.

24)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Government Funding Legislation,” 2022. 12. 23.,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2023-government-funding-legislation>, 검색일자: 2022. 12. 26.

25) 1) 노동·보건복지·교육 2) 통상·사법·과학 3) 국토안보 4) 내무·환경 5) 입법부 6) 국무부·외교 7) 농업·도시개발·FDA 8) 국방 9) 교통·주택·도시개발 10) 에너지·수자원 11) 재무·일반정부 12) 군사시설·재향군인

26)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Victories for the People,” 2022. 12. 23.,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Democratic%20Priorities%20FY23.pdf>, 검색일자: 2022. 12. 26.

27) 미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노동 분쟁 조정 등을 다루는 행정기관

- (통상·사법·과학) 총 규모 842억달러, 전년 대비 11.1% 증가
 - 주 및 법 집행(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지원 보조금 지원에 44억 달러 배정(전년 대비 506억달러 증가)
 -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legal aid)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업체에 5억 6천만달러 편성(전년 대비 7,100만달러 증가)
 - 혐오범죄(hate crimes)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보조금 4,500만달러 배정(전년 대비 2배 증가)
- (내무·환경) 총 규모 389억달러, 전년 대비 2.4% 증가
 - 미국 국립 예술 장려 위원회(NEA²⁸⁾) 및 국립인문재단(NEH²⁹⁾)에 총 2억 700만달러 배정(전년 대비 2,700만달러 증가) 등
- (국토안보) 총 규모 607억달러, 전년 대비 5.6% 증가
 - 이주민들을 위한 쉼터/서비스 프로그램에 8억달러 배정(전년 대비 6억 5천만달러 증가)
 - 난민지위신청 절차를 밟는 난민들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해 연방이민국(USCIS)에 1억 3,300만달러 배정
- (입법부) 총 규모 69억달러, 전년 대비 16.4% 증가
 - 의원 수당(Members Representational Allowance, MRA) 인상(전년 대비 3,560만달러 증가)
 - 의회 하원의 아동 보호 보조 프로그램 신설 및 학자금 프로그램 확대
 - 의원들의 주거지 보안 지속 지원
- (국무부·외교) 총 규모 597억달러, 전년 대비 6.4% 증가
 - AIDS·결핵·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금 20억달러 배정(전년 대비 4억 4천만달러 증가)
 - 유네스코 재가입 및 기관 지원 등³⁰⁾

²⁸⁾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²⁹⁾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³⁰⁾ 미국은 지난 2017년 10월 12일에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 통보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1월 1일 유네스코를 전격 탈퇴함(자료: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unesco-ko/brd/m_8646/view.do?seq=1333132&page=1, 검색일자: 2022.12.27.)

- (농업·도시개발·FDA) 총 규모 255억달러, 전년 대비 1.5% 증가
 - 마약성 진통제 위기(opioid crisis) 및 식량난 조기 대응, 영아 식품 중금속 검열 등의 개선을 위해 FDA에 35억달러 배정(전년 대비 2억 2,600만달러 증가)
 - 대외식량원조(Title II) 지원에 18억달러 배정
 - * 미국의 Food for Peace Act에 근거한 외국의 긴급 혹은 비긴급 식량 필요에 대한 미국 농산물의 기부(donation)³¹⁾
- (국방) 총 규모 7,977억달러, 전년 대비 9.5% 증가
 - 중국 및 근접한 위협 국가들 대응 등을 위한 예산에 1,615억달러를 배정 하였으며, 이 중 320억달러는 약 11개의 해군 함정 조달 예산으로 배정
 - 기후변화 대응(20억달러) 및 군부대 시설에 공립학교 건설
 - 주거 및 식량 수당 11% 증가
- (교통·주택·도시개발) 총 규모 873억달러, 전년 대비 7.8% 증가
 - 교통망(transportation networks) 안전 개선과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 인프라 투자에 17억달러 투자
 - 저소득 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퇴역군인, 장애인 노령층 등을 대상으로 2만 1,500개 이상의 적격 주택 단지 계획
 - 노숙자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구 임대 주택(PSH)³²⁾ 건설에 7,500만달러 배정
- (에너지·수자원) 총 규모 546.5억달러, 전년 대비 0.6% 감소³³⁾
 - 매립국(Bureau of Reclamation) 및 공병단(Corps of Engineers)을 통한 카운티 전역의 수자원 인프라 지원에 106억달러 배정(전년 대비 3억 4,700만 달러 증가)
 - 기후대응을 위한 클린 에너지 배치/연구개발 및 국내 에너지 공급망 확보 등에 153억달러 배정(전년 대비 12억달러 증가)

31) 송주호 외, 『2012년 미국 농업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12.

32)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33) 올해 발표된 전년도 수치와 전년도에 발표된 확정 수치가 소폭 다르기에 다른 몇몇 분야를 포함하여 에너지·수자원 분야의 전년도 수치(549.7억달러)는 전년도에 발표된 세출위원회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재무·일반정부) 총 규모 276억달러, 전년 대비 8.2% 증가
 - 독점금지,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³⁴)에 4억 3천만달러 배정(전년 대비 5,350만달러 증가)
 - 선거의 공정성 및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선거 사무소에 선고 보조금 7,500만달러 배정
- (군사시설·재향군인) 총 규모 3,227억달러, 전년 대비 13.0% 증가
 - 퇴역군인 의료 지원에 1,187억달러 배정(전년 대비 217억달러 증가)
 - 에너지 복원(resilience) 및 보존(conservation) 투자 프로그램에 6억 5,330만 달러 배정

표 3-1-5 FY2023 12개 세출분야 확정 예산 수치

(단위: 억달러, %)

분야	FY2022 확정예산	FY2023 확정예산	증감율
① 노동·보건복지·교육	2,136	2,268	6.2
② 통상·사법·과학	758	842	11.1
③ 내무·환경	380	389	2.4
④ 국토안보	575	607	5.6
⑤ 입법부	59.3	69	16.4
⑥ 국무부·외교	561	597	6.4
⑦ 농업·도시개발·FDA	251.3	255	1.5
⑧ 국방	7,285	7,977	9.5
⑨ 교통·주택·도시개발	810	873	7.8
⑩ 에너지·수자원	549.7	546.5	-0.6
⑪ 재무·일반정부	255	276	8.2
⑫ 군사시설·재향군인	2,847	3,227	13.0

자료: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 Summary Of Appropriations Provisions by Subcommittee," 2022. 12. 23.;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 R. 2471, Funding For The People Division-By-Division Summary Of Appropriations Provisions,"³⁵⁾ 2022. 3.

³⁴⁾ Federal Trade Commission(FTC)

³⁵⁾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 R. 2471, Funding For The People Division-By-Division Summary Of Appropriations Provisions," 2022. 3.,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Appropriations%20Division-by-Division%20Summary.pdf>, 검색일자: 2022. 12. 29.

나. 결산

- 미 의회예산처(CBO), 2022 회계연도(2021.10.1.~2022.9.30.) 잠정 결산 발표 (2022.10.11.)³⁶⁾
 - (재정수지) FY2022 재정적자는 전년(2.78조 달러) 대비 50.4%(1.4조달러) 감소한 약 1.38조 달러 예비 추정
 - FY2022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1%(8,500억달러) 증가, 지출은 8.0%(5,480억 달러) 감소
 - FY2022 수입 증가분은 지출 감소분 대비 55%(3,020억달러) 더 크게 확대
 - ※ GDP 대비 재정적자와 지출 규모는 FY2020에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FY2022 말 기준)까지 감소 추세로 전환³⁷⁾

표 3-I-6 미국 재정(실적) 추이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잠정
수입	2,524	2,105	2,163	2,303	2,450	3,330	3,463	3,421	4,047	4,896
지출	2,983	3,518	3,457	3,603	3,527	4,109	4,447	6,554	6,822	6,273
재정적자 (GDP 대비)	459 (3.1)	1,413 (9.8)	1,294 (8.7)	1,300 (8.4)	1,077 (6.7)	779 (3.8)	984 (4.7)	3,132 (15.0)	2,775 (12.4)	1,377 (-)

주: ()안은 GDP 대비 %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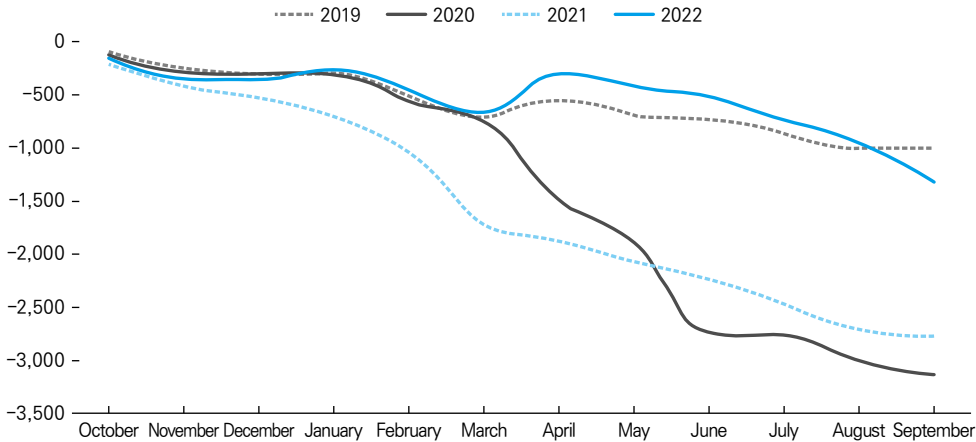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September 2022," 2022.10.11.;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Historical Tables)*, 2022.3.28.

³⁶⁾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2," 2022.10.11., <https://www.cbo.gov/publication/58493>, 검색일자: 2022.10.19.

³⁷⁾ FY1945: GDP 대비 재정적자(21.0%), GDP 대비 지출(41.0%)

그림 3-I-1 FY2019~FY2022 월별 누적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주: (2020.12.27.) 트럼프 정부 코로나19 부양책 입법 → (2021.3.10.) 미국구조개혁법 의회 통과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September 2022," 2022.10.11., p.2, Figure 1

- (세입) FY2022 세입은 전년 대비 21%(8,500억 달러) 증가한 4조 8,960억달러 예비 추정
 - 주요 세입항목인 개인소득세(29%), 법인세(14%) 및 사회보험급여세(13%) 수입 모두 전년 대비 증가 (기타 수입도 증가)
 - (개인소득세)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높아진 임금·급여로 인한 수입 증가가 부분적인 영향을 끼쳐 전년 대비 29%(5,930억달러) 증가한 2조 6,370억달러
 - (사회보험급여세) 사회보험급여세* 유예 및 분할 지급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1,650억달러) 증가한 1조 4,790억달러
 - * 사회보험급여세의 경우, 2020년 3월 27일 제정된 코로나 대응 법(CARES Act)에 의해 특정 기간(2020.3.27.~12.31.) 동안의 대부분의 고용주들 부담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되었으며,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50%,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 지급³⁸⁾
 - (법인세) 전년 대비 14%(530억달러) 증가한 4,250억달러

³⁸⁾ IRS, "Deferral of employment tax deposits and payments through December 31, 2020," 2022.4.22., <https://www.irs.gov/newsroom/deferral-of-employment-tax-deposits-and-payments-through-dece-mber-31-2020>, 검색일자: 2022.10.19.

- (기타수입) 관세(customs duties)는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25%(200억달러) 증가, 연준(Fed)으로부터의 이전수입(remittances)은 전년부터 매입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의 영향으로 7%(70억달러) 증가 등 전년 대비 13% 증가한 3,560억달러
- (세출) FY2022 세출은 전년 대비 8%(5,480억 달러) 감소한 6조 2,730억달러 예비 추정
 - (증가 분야) 주요 세출항목인 사회보장지출(7%), 메디케어(3%), 메디케이드(14%) 등 의무지출과 채무 이자지출(29%) 등은 모두 증가
 - (감소 분야) 주요 지출 감소 항목으로는 팬데믹 대응 관련 지출과 관련한 환급성 세액공제*, 실업급여,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프로그램, 코로나 재정지원 자금 등으로 구성
- * 환급성 세액공제³⁹⁾는 코로나19 시기에 확대된 아동 수당과 함께 코로나19 초창기에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s) 등이 포함
- (환급성 세액공제) 전년 대비 62%(4,860억달러) 감소한 2,920억달러
- (실업급여) 코로나19 시기에 확대된 실업급여 정책은 2021년 9월에 종료됨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도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90%(3,590억달러) 감소한 380억달러
- (중소기업청 대출) 급여보호 프로그램⁴⁰⁾(PPP⁴¹⁾을 통해 이행된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93%(3천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
- (코로나 재정지원 자금) 주/지방 및 하위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 재정지원 자금은 전년 대비 56%(1,380억달러) 감소한 1,06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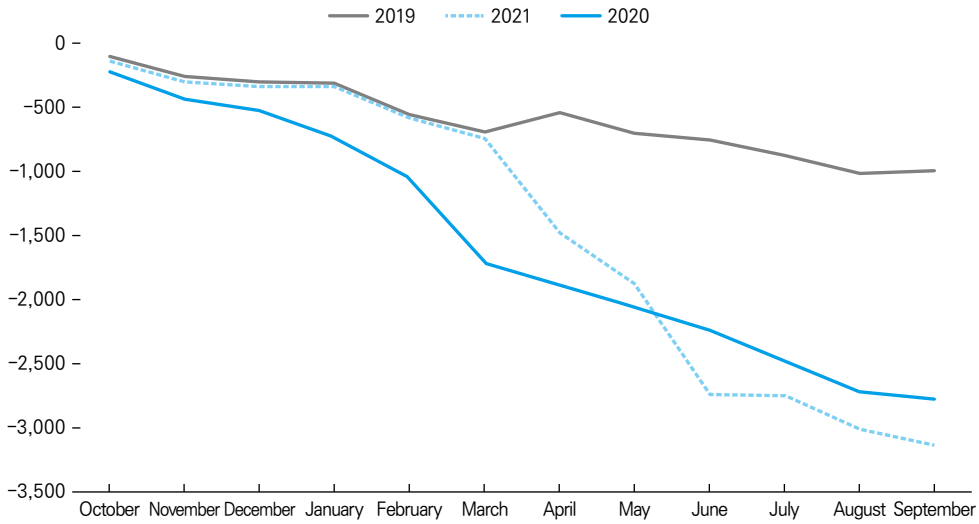
³⁹⁾ refundable tax credits

⁴⁰⁾ 급여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0년 3월 2호, 2020.4.6. 참고

⁴¹⁾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그림 3-I-2 2019~2021 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Summary for Fiscal Year 2021," 2021. 11. 8., p. 2, Figure 1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재정 정책

1)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 H.R. 5376, P.L. 117-169) 가결(2022.8.12.)⁴²⁾
 - (배경) 인플레이션 감축 법은 2021년 11월 19일에 의회 하원을 통과한 후 교착 상태에 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⁴³⁾ BBB) 법안을 대체하는 법안
 - ※ 동 법안은 의회 상원의 양당이 50:50 동률을 이루는 상황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 전원이 동 법안에 반대하였기에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51:50로 통과
 - (정책 규모) 지출 총 규모 4,370억달러의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기후변화 대응, 보건 정책(처방약가 인하 등), 최저법인세율 신설 등 포함
 - 보건 정책으로 인한 지출 절감분(2,650억달러) 및 세입 정책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4,720억달러) 등 동 정책으로 발생하는 총 수입은 7,370억달러 추정
 -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순 적자(net deficit) 감축 규모는 약 3천억달러 전망
 - (주요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 법은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
 - ①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및 조세 감면 ② 건강보험(ACA) 지원 및 백신 정책 등이 포함된 보건 지출 ③ 지출 절감을 위한 보건 정책 ④ 수입 강화 조치(최저법인세율 15% 및 국세청의 세금집행 강화 지원)으로 구성

⁴²⁾ 의회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검색일자: 2022.8.17.

⁴³⁾ BBB: 2021년 4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 가족계획(AFP)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이후 건강보험, 기후변화, 교육 분야 등이 포함된 휴먼 인프라 법안으로 논의되던 중 작년 말(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최종적으로 총 1.75조달러 규모로 구성된 build Back Better 법안의 명칭으로 재논의 과정을 거침

- (정책 관련 이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의 경우 최대 4천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한국산 및 유럽산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미 양국 간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음⁴⁴⁾

표 3-I-7 인플레이션 감축법 구성 항목

(단위: 억달러)

정책 항목	규모
지출 및 세액공제 (①+②+③)	4,370
①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3,690
② 보건 지출 (건강보험 확대 지원 연장(3년) 및 백신 관련 지원 등)	640
③ 서부 기근 대응	40
지출절감 보건정책 및 수입 강화조치 (④+⑤)	7,370
③ 지출절감 보건 정책 처방약가 특정 규칙(drug rebate rule) 폐지, 처방약가 인상 한도 및 특정 약가 협상 등	2,650
④ 수입 강화조치	4,720
법인세 최저세율(15%)	2,220
국세청 세금집행 강화	1,240
기타	1,260
순 적자 감축 규모 [(④+⑤) - (①+②+③)]	3,000

자료: 의회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⁴⁵⁾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022.8.11.

44) 백악관, "BY THE NUMBER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2022.8.1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15/by-the-numbers-the-inflation-reduction-act/>, 검색일자: 2022.8.29. (관련 링크: VOA, <https://www.voakorea.com/a/6717447.html>, 검색일자: 2022.8.29.)

45) 관련 링크: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2)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지원 법안(CHIPS and Science Act; H.R. 4346), 대통령의 법안 서명 후 입법 (P.L. 117-167) 발효(2022.8.9.)⁴⁶⁾
 - (법안 목표) 총지출 규모 542억달러를 통해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투자 및 제조업 활성화, 민간 투자 활성화 촉매제 역할,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⁷⁾
 - (주요 정책)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연구개발(R&D), 인력개발에 527억달러 지원
 - 제조 관련 인센티브 390억달러, R&D 및 인력 개발 132억달러, 추가적으로 반도체 제조 및 관련 장비 비용에 대해 25% 세액 공제
 - 반도체 지원 항목과는 별개로 대법원 안보 위협에 대응한 추정 예산(1,940만 달러)이 포함되어 있음
 - (정책 관련 이슈⁴⁸⁾)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액공제 지원을 규정하면서 수혜 요건으로 투자 기업들의 중국 및 특정 지역에서의 신규 생산시설 증설 제한(10년)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주요 현안으로 언론에 언급되고 있음⁴⁹⁾

46) 백악관, "Bills Signed: H.R. 4346," 2022.8.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08/09/bills-signed-h-r-4346/>, 검색일자: 2022.8.16.

47) 백악관,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2022.8.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09/fact-sheet-chips-and-science-act-will-lower-costs-create-jobs-strengthen-supply-chains-and-counter-china/>, 검색일자: 2022.8.17.

48) 주한미국대사관,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2022.8.10., <https://kr.usembassy.gov/081022-fact-sheet-chips/>, 검색일자: 2022.8.20.

49) BusinessKOREA,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Concerned for Chips and Science Act," 2022.8.26.,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82>, 검색일자: 2022.8.29.

3) 학자금 대출

□ 미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 발표(2022.9.24.)⁵⁰⁾

- (채무 경감 및 요건) 저소득 및 중산층에 속하는 학자금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면제 계획(소득 상한 요건: 개인소득 규모 12만 5천달러 미만, 부부합산 25만달러)
 - ※ 일반적인 학생 기준, 학부를 졸업하는 시점에 약 2만 5천달러의 채무를 떠안게 되며, 현재 약 4,500만명이 1.6조달러(누적규모)에 달하는 학자금 채무 소유⁵¹⁾
 - 펠그랜트(pell grant)⁵²⁾ 장학금 수여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의 일환으로 펠그랜트 수여자는 최대 2만달러, 미수여자는 최대 1만달러 면제 조치 계획
 - ※ 학자금 채무자 중 약 60%가 펠그랜트 장학금을 받고 있기에 약 2,700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면제가 이루어질 전망(미 교육부 분석)
 - 독립하지 않은 학생(dependent student)의 경우, 학생 개인의 수입이 아닌 부모의 수입을 근거로 면제(또는 완화) 규모 책정
- (기타 세부 계획) 채무상환 방식 변경 및 원활한 정책 전환을 위해 연말(~2022.12.31.)까지 상환 유보 등 계획
 - 소득기반을 근거로 책정되는 채무상환(Income-Driven Repayment, IDR) 방식을 재구성하여 월 상환 규모 한도 하향 조정(현 소득의 10% → 5%)
 - 연방 빈곤선 225% 미만자들은 월 상환금을 내지 않도록 할 계획
 - 학자금 원금 1만 2천달러 이하 채무자들은 10년 동안(현행 20년) 꾸준히 갚을 경우 남은 원금 면제
- (재정 영향) 초당파 비영리 재정전문기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학자금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비용은 향후 10년간 4,400억~6천억 달러 전망

50)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udent Loan Relief for Borrowers Who Need It Most," 2022. 8.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24/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student-loan-relief-for-borrowers-who-need-it-most/>, 검색일자: 2022. 9. 24.

51) (완화 대상자들의 연령 구분) 25세 이상: 21%, 26~39세: 44%, 40세 이상: 35%

52)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 학비 장학금

- 채무 면제 또는 완화 정책 비용: 3,300억~3,900억달러
- 채무상환방식 개정: 900억~1,900억달러
- 상환 유보(~2022.12.31.): 약 200억달러

4) 분유 대란 대응

- 미 의회, 분유 대란 대응을 위한 관세 조정 법안(Bulk Infant Formula to Retail Shelves Act; H.R. 8982; P.L. 117-192) 통과 의결(2022.9.30.)⁵³⁾
 - (배경) 미 의회 하원은 영아 분유 대란⁵⁴⁾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18일 2,800만달러 규모의 추경 세출 예산안(H.R. 7790) 가결 → 이후 상원에서 계류 중
 - (현황) 분유 관련한 추경 세출예산 시도와 함께 이후 추가적으로 수입 분유 제품에 대한 일시적(~2022.12.31.) 관세 유예 법안(H.R. 8351⁵⁵⁾)의 제정(2022.7.21.)에도 불구하고 조제분유 대란 장기화 상황 진행 중
 - (주요 내용) 분유 제조를 위한 핵심 성분인 기초 분말 가루(infant formula base powder) 수입에 대해서도 통합관세율표⁵⁶⁾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적용을 일시적(~2022.12.31.)으로 유예하는 조항 포함
 - 관세 면제 제한 사항으로는 수입 중량이 2,600M/T⁵⁷⁾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의회 입법 일지) 동 법안은 하원에서 9월 26일 발의되었고, 양원(상/하원)에서 모두 구두 투표(voice vote)로 통과된 후, 대통령 서명으로 10월 10일 입법 발효

⁵³⁾ 백악관, "Bills Signed: H.R. 468, H.R. 1766, H.R. 4877, H.R. 5641, H.R. 7500, H.R. 7846, H.R. 8982," 2022.10.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10/10/bills-signed-h-r-468-h-r-1766-h-r-4877-h-r-5641-h-r-7500-h-r-7846-h-r-8982/>, 검색일자: 2022.10.26.

⁵⁴⁾ 미국의 영아 분유 대란 관련 세부 설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6월호, 2022.6.30. 참고

⁵⁵⁾ 백악관, "Bill Signing: H.R. 8351," 2022.7.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07/22/bill-signing-h-r-8351>, 검색일자: 2022.10.26.

⁵⁶⁾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 Chapter 99," <https://hts.usitc.gov/view/release?release=2022HTSARev11>, 검색일자: 2022.10.25.

⁵⁷⁾ M/T: Metric Ton → 중량 단위로서 1천kg을 뜻함

나. 경제 동향(통화·금융)

1) 베이지북

[참고] 베이지북

- 베이지북은 2022년 하반기 총 4회(7.13., 9.7., 10.19., 11.30.) 발표
 -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로, 연 8회 발표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지난 상반기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상이
 - (고용) 고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임금 상승도 지속
 - (물가)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7.13.)⁵⁸⁾
 - (전반적인 경제활동) 5월 이후 경제활동은 균형적으로 성장
 -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료품과 유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 지출이 감소,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 후퇴 우려
 - 接客 및 여가 분야는 사업 및 단체 여행의 상승세가 있었으나, 제조업은 공급망 붕괴와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이 발생
 - 비금융 서비스 분야는 수익이 예상을 초과했으나 주택수요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둔화되는 경향

⁵⁸⁾ Fed, *Beige Book - July, 2022*, 2022.7.1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7.htm>, 검색 일자: 2022.7.18.

- 이전 베이지북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6~12개월간 수요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시장 여건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악화
 -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 가용성이 다소 개선
 -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금 인상을 보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비용 상쇄를 위해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
 - 25%의 지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임금 상승률이 계속 상승할 전망
- (물가)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목재와 철강 분야에서는 조정(moderation)이 발생
 - 기업들은 소비자의 반발 없이 큰 규모의 비용을 전가했고, 대부분 지역에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9.7.)⁵⁹⁾

- (전반적인 경제활동) 7월 초부터 경제활동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식품 및 필수 품목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
 - 자동차 매매는 재고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잠잠(muted)했던 반면,接客 및 관광업은 단체 여행 위주로 증가세를 보였고, 일부 지역의 제조업은 공급망 붕괴와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
 - 금융 서비스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대출 수요의 약세를 보인 반면, 비금융 서비스업에서는 수요의 약한 증가세가 관찰

⁵⁹⁾ Fed, *Beige Book - September, 2022*, 2022.9.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9.htm>, 검색일자: 2022.9.7.

- 이전 베이지북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부정적
 - (노동시장)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했고, 임금도 모든 지역에서 증가
 - 제조업, 건설업,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 가용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은 어려움
 - 고용 유지율은 향상되었고, 임금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완만해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생활비 상쇄를 위한 연중 임금 인상이 이루어짐
 - 연말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인상폭에 대한 기대는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
 - (물가)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승률은 어느 정도 완화
 - 음식, 임대료, 공공시설 등에서 상당한 가격 인상이 있었고, 제조 및 건설비용 상승이 있었지만, 연료 가격이 감소해 화물 운송료 부담이 완화
 - 일부 지역에서는 철강, 목재, 구리 등의 가격이 하락
 - 대부분 지역에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10.19.)⁶⁰⁾
- (전반적인 경제활동) 9월 이후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었으나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향후 경제 성장은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
 - 전체적으로 9월 이후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었으나, 4개 지역(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시카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개 지역(뉴욕, 세인트루이스)은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수요가 둔화

⁶⁰⁾ Fed, *Beige Book - October 2022*, 2022.10.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10.htm>, 검색일자: 2022.10.25.

-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자동차 매매는 재고 부족, 높은 가격, 금리 상승으로 판매 부진이 지속, 여가 활동의 지속적인 강세와 해외 출장의 재개로 여행 및 관광업 활동이 크게 증가
- 제조업은 공급망 차질의 완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동이 없거나 증가세를 보였고,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경제 성장은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했고 여러 지역에서 임금 인상률이 완화되었으나, 향후 임금 인상이 계속될 전망
 -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수요가 감소했으며,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금 인상 및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유지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
 - 여러 지역에서 임금인상률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물가 상승 및 생활비 상승,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 압력 등에 기인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언급
 - 현재 환경에서 인재 유지를 위해서는 높은 임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계속될 전망
- (물가) 일부 지역에서 완화가 언급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향후 물가 상승은 완만할 전망
 - 상품, 연료, 운임 비용이 일부 하락하였으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입 비용이 대폭 상승
 - 향후 물가 상승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11. 30.)⁶¹⁾
- (전반적인 경제활동) 지난 보고서(10월 19일) 이후 경제활동이 보합 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성장세가 둔화
 - 5개 지역(리치먼드, 애틀랜타, 미니애폴리스, 달라스, 샌프란시스코)의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성장하였으며, 나머지 7개 지역은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
 -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및 비관론이 증대
 -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 지출은 소폭 증가했으며 자동차 매매는 소폭 감소, 여행 및 관광업 활동은 완만하게 증가
 - 제조업 활동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높은 금리에 기인하여 주택 매매가 감소
 - (노동시장)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고용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거나 둔화될 전망
 - 노동시장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유지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
 - 임금은 평균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
 - 향후 고용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거나 둔화될 것이며, 임금 상승이 완만하게 지속될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나, 공급망 개선 및 수요 약화에 기인하여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
 - 할인 물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매가격은 하방 압력에 직면
 - 목재, 철강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식료품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했거나 높은 가격을 유지
 - 주택 가격은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하락

⁶¹⁾ Fed, *Beige Book - November 2022*, 2022.11.3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11.htm>, 검색일자: 2022.12.13.

2) 통화정책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2022.7.27.)⁶²⁾
 - FOMC 참석자(participants)⁶³⁾들은 7월 26~27일 개최된 FOMC 회의⁶⁴⁾에서 최근 소비와 생산 지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강했음을 언급
 -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관련 공급 및 수요 불균형,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물가 압력을 반영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쟁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 위원(member)⁶⁵⁾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1.50~1.75% 수준에서 2.25~2.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공공 보건,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금융 시장 등의 정보를 고려해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2022.9.21.)⁶⁶⁾
 - FOMC 참석자(participants)⁶⁷⁾들은 9월 20~21일 개최된 FOMC 회의⁶⁸⁾에서 최

⁶²⁾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7.27.,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727a.htm>, 검색일자: 2022.7.29.

⁶³⁾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⁶⁴⁾ 페이지북 6월호를 참고 바람

⁶⁵⁾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⁶⁶⁾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9.21.,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921a.htm>, 검색일자: 2022.9.23.

Fed, "September 21, 2022: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2022.9.2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20615.htm>, 검색일자: 2022.9.23.

근 지표들이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언급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견조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광범위한 압력으로 작용
-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 위원(member)⁶⁹⁾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2.25~2.50% 수준에서 3.00~3.2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
 -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계획대로 국채 및 주택담보 증권권을 축소, 인플레이션을 장기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 2022년 5월 FOMC는 6~8월 3개월간 대차대조표 규모를 매월 475억달러(국채 3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175억달러) 감축한 뒤, 9월에 감축 규모를 950억달러(국채 6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35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 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는 2022~2024년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6월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2~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월 대비 하향 조정되었으나 장기 전망치는 유지
 - * FOMC의 경제 전망은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실질 GDP성장률,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에 대해 제출한 전망으로 작성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FOMC 회의가 끝난 직후 발표

67)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68) 페이지북 9월호를 참고

69)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표 3-I-8 FOMC 경제 전망(중위값)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장기
실질 GDP	0.2	1.2	1.7	1.8	1.8
(6월 전망)	1.7	1.7	1.9		1.8
실업률	3.8	4.4	4.4	4.3	4.0
(6월 전망)	3.7	3.9	4.1		4.0
PCE 인플레이션	5.4	2.8	2.3	2.0	2.0
(6월 전망)	5.2	2.6	2.2		2.0
Core PCE 인플레이션	4.5	3.1	2.3	2.1	-
(6월 전망)	4.3	2.7	2.3		-
기준금리(FFR)	4.4	4.6	3.9	2.9	2.5
(6월 전망)	3.4	3.8	3.4		2.5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9.21., p.2, Table 1 재구성

표 3-I-9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단위: 명)

기준금리	2022	2023	2024	2025	장기 ¹⁾
4.875		6			
4.750					
4.625	1	6	2	1	
4.500					
4.375	9	6	2		
4.250					
4.125	8		2		
4.000					
3.875	1	1	4		
3.750					
3.625			3	2	
3.500					
3.375			3	2	
3.250					
3.125			1	4	
3.000					2
2.875			1	3	

표 3-1-9 의 계속

(단위: 명)

기준금리	2022	2023	2024	2025	장기 ¹⁾
2,750					
2,625			1	3	1
2,500					8
2,375				4	1
2,250					6

주: 1) 1명의 위원이 장기 전망 미제출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9.21., p. 4, Figure 2 재구성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2022.11.2.)⁷⁰⁾
- FOMC 참석자(participants)⁷¹⁾들은 11월 1~2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최근 지표⁷²⁾들이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계속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관련 수급 불균형,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광범위한 물가 압력을 반영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위원(member)⁷³⁾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maximum employment)과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3.00~3.25% 수준에서 3.75~4.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⁷⁰⁾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11.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1102a.htm>, 검색일자: 2022.11.9.

⁷¹⁾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⁷²⁾ 베이지북 10월호를 참고 바람

⁷³⁾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는 누적된 긴축적 통화정책과 경제 활동, 인플레이션, 금융 상황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공공 보건,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금융 및 국제 상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조절할 것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2022.12.14.)⁷⁴⁾

- 12월 13~14일 개최된 FOMC 회의에서는 최근 지표⁷⁵⁾들이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관련 수급 불균형,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광범위한 물가 압력을 반영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대규모 인적·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FOMC 위원(member)⁷⁶⁾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maximum employment)과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3.75~4.00% 수준에서 4.25~4.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 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FOMC 경제 전망에서는 2022~2025년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9월 대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3~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5년 전망치와 장기 전망치는 9월 전망치와 동일

⁷⁴⁾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12.1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1214a.htm>, 검색일자: 2022.12.16.

⁷⁵⁾ 페이지북 11월호를 참고 바람

⁷⁶⁾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표 3-I-10 FOMC 경제 전망(중위값)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장기
실질 GDP	0.5	0.5	1.6	1.8	1.8
(9월 전망)	0.2	1.2	1.7	1.8	1.8
실업률	3.7	4.6	4.6	4.5	4.0
(9월 전망)	3.8	4.4	4.4	4.3	4.0
PCE 인플레이션 ¹⁾	5.6	3.1	2.5	2.1	2.0
(9월 전망)	5.4	2.8	2.3	2.0	2.0
근원 PCE 인플레이션 ¹⁾	4.8	3.5	2.5	2.1	-
(9월 전망)	4.5	3.1	2.3	2.1	-
기준금리(FFR)	4.4	5.1	4.1	3.1	2.5
(9월 전망)	4.4	4.6	3.9	2.9	2.5

주: 1) PCE 인플레이션과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각각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물가지수와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PCE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의미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12.14., p.2, Table 1 재구성

표 3-I-11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단위: 명)

기준금리	2022	2023	2024	2025	장기 ¹⁾
5.625		2	1	1	
5.500					
5.375		5			
5.250					
5.125		10	1		
5.000					
4.875		2	3		
4.750					
4.625			2		
4.500					
4.375	19			1	
4.250					
4.125			7	1	
4.000					
3.875			3	1	

표 3-I-11 의 계속

(단위: 명)

기준금리	2022	2023	2024	2025	장기 ¹⁾
3,750					
3,625				2	
3,500					
3,375			1	2	
3,250					1
3,125			1	4	
3,000					1
2,875				2	
2,750					
2,625				4	1
2,500					9
2,375				1	2
2,250					4

주: 1) 1명의 참석자가 장기 전망 미제출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12.14., p.4, Figure 2 재구성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성장률

- 미 상무부(BEA), 2022년 2분기 GDP(속보, 수정치) 발표(2022.8.25.)⁷⁷⁾
 - 2022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0.6%(연율, 수정치)로 2022년 1분기(-1.6%)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
 - 속보치는 -0.9%로 수정치에는 소비 지출과 민간 재고투자의 수정 사항이 반영
 - 전 분기와 비교해 고정 투자(1.28→0.84, 이하 기여도), 주거(0.02→-0.83) 등의 기여도가 감소했지만, 운송 서비스(-0.05→0.17), 수출(-0.55→1.88) 등의 기여도 증가
 - 명목 GDP 성장률은 8.4%로 2022년 1분기 성장률(6.6%)보다 증가
- 미 상무부(BEA), 2022년 3분기 GDP(속보치, 수정치) 발표(2022.10.27., 2022.11.30., 2022.12.22.)⁷⁸⁾⁷⁹⁾⁸⁰⁾
 - 2022년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연율, 속보치)로, 1, 2분기 연속 하락세(2022년 1분기 -1.6%, 2022년 2분기 -0.6%)에서 상승세로 전환

⁷⁷⁾ BEA,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7.28.,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second-quarter-2022-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2.8.25., BEA, *Gross Domestic Product(Second Estimate), Corporate Profits(Preliminary Estimate), Second Quarter 2022*, 2022.8.25.,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second-estimate-and-corporate-profits-preliminary-second-quarter>, 검색일자: 2022.8.25.

⁷⁸⁾ 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10.27.,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third-quarter-2022-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2.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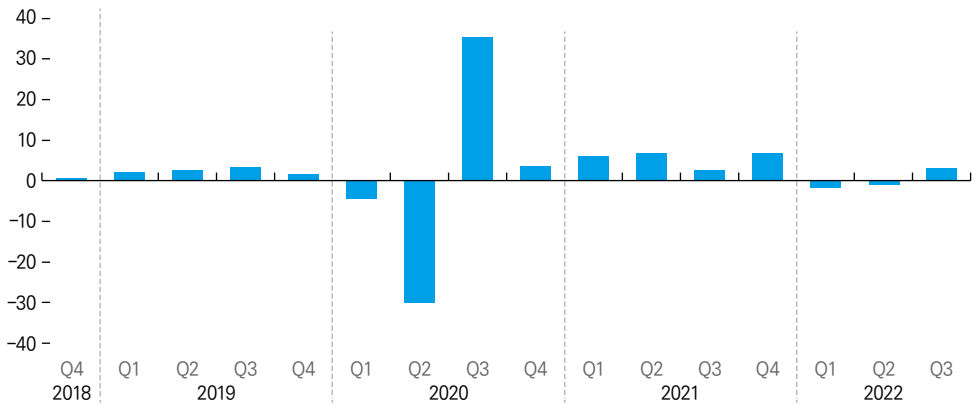
⁷⁹⁾ BEA, "Gross Domestic Product(Second Estimate) and Corporate Profits (Preliminary), Third Quarter 2022," 2022.11.30.,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second-estimate-and-corporate-profits-preliminary-third-quarter>, 검색일자: 2022.12.14.

⁸⁰⁾ BEA, "Gross Domestic Product(Third Estimate) and Corporate Profits (Preliminary), Third Quarter 2022," 2022.12.22.,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third-estimate-gdp-industry-and-corporate-profits-revised-third>, 검색일자: 2022.12.26.

- 2022년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1차 수정치는 2.9%(연율)로, 개인 소비 지출, 비주거 고정투자 등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속보치(2.6%)보다 상향 조정
- 2022년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2차 수정치는 3.2%(연율)로, 개인 소비 지출, 비주거 고정투자, 정부 소비 지출 및 총 투자 등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두 번째 수정치(2.9%)보다 상향 조정
 - 실질 GDP 증가는 수출(14.6%), 개인 소비 지출(2.3%), 비주거 고정투자(6.2%), 정부 소비 지출 및 총투자(3.7%)의 증가에 기인하며, 주거 고정투자(-27.1%)의 감소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
 - 수출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수입은 감소

그림 3-I-3 실질 GDP 추이

(단위: 전 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자료: BEA, *Gross Domestic Product(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Revised Estimate), and GDP by Industry, Third Quarter 2022*, p.1.

표 3-I-12 주요 분야 계절조정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전 분기 대비 % 변화)

구분	2021	2021		2022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GDP	5.9	2.7	7.0	-1.6	-0.6	3.2
개인 소비 지출	8.3	3.0	3.1	1.3	2.0	2.3
상품	12.2	-7.9	2.3	-0.1	-2.6	-0.4
서비스	6.3	9.2	3.5	2.1	4.6	3.7
총민간 국내투자	9.0	10.4	32.0	5.4	-14.1	-9.6
고정투자	7.4	-1.1	0.6	4.8	-5.0	-3.5
비주거	6.4	0.6	1.1	7.9	0.1	6.2
주거	10.7	-5.8	-1.1	-3.1	-17.8	-27.1
순수출	-	-	-	-	-	-
수출	6.1	-1.1	23.5	-4.6	13.8	14.6
수입	14.1	6.6	18.6	18.4	2.2	-7.3
정부 소비 지출 및 총 투자	0.6	-0.2	-1.0	-2.3	-1.6	3.7
연방	2.3	-7.2	0.0	-5.3	-3.4	3.7
주 및 지방	-0.5	4.5	-1.6	-0.4	-0.6	3.7

자료: BEA, *Gross Domestic Product(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Revised Estimate), and GOP by Industry, Third Quarter 2022*, p.9, Table. 1. 재구성

나. 물가상승률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7.13.)⁸¹⁾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9.1%로 집계
 -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8.6%)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3%로 5월(1.0%)에 비해 증가해 물가 상승이 지속

81)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une 2022*, 2022.7.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7.19.

백악관, *President Biden Statement on CPI Inflation in June*, 2022.7.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7/13/president-biden-statement-on-cpi-inflation-in-june/>, 검색일자: 2022.7.19.

-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5.9%로 5월(6.0%)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
- 대부분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
 - 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볼 때, 증유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이 나타났으며, 가솔린(11.2%), 유틸리티가스(8.2%) 등 에너지 관련 항목 물가가 크게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모든 항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증유(98.5%), 가솔린(59.9%) 등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 크게 인플레이션이 발생
- 이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인플레이션 하락을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statement)를 통해 물가상승률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작년 이후 최초로 6% 이하 수준에 도달했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 높은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1일 1,210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략 비축분 방출 및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처방약,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8.10.)⁸²⁾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5%로 집계
 -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9.1%)에

⁸²⁾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une 2022*, 2022.7.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7.19.

백악관, *President Biden Statement on CPI Inflation in June*, 2022.7.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7/13/president-biden-statement-on-cpi-inflation-in-june/>, 검색일자: 2022.7.19.

- 비해 소폭 하락했고,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0%를 기록해, 7월 물가는 6월 물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로 6월 수준을 유지
 - 대부분 항목의 물가가 전월 수준을 유지
 - 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볼 때, 가솔린(-7.6%), 증유(-11.0%) 등 에너지 항목의 물가가 하락
 - 그 외 대부분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9.13.)⁸³⁾
 -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3%로 집계
 -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월(8.5%) 대비 소폭 감소
 -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0.1%로 7월(0.0%)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6.3%, 전월 대비 0.6%로 7월(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에 비해 소폭 상승
 -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
 -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을 볼 때, 증유(-5.9%), 가솔린(-10.6%) 등 에너지 항목과 중고차 및 트럭(-0.1%) 항목은 전월에 이어 하락세 유지
 - 반면 가정식 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13.5%로, 1979년 3월 이후 가장 높고, 식료품 전체 항목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1.4%로 1979년 5월 이후 가장 높고 빠르게 상승

8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August 2022*, 2022.9.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9.19.

백악관, *Statement of President Joe Biden on Consumer Price Index in September*, 2022.9.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9/13/statement-of-president-joe-biden-on-consumer-price-index-in-september/>, 검색일자: 2022.9.19.



- 이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할 일이 많다고 평가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statement)를 통해 유가 하락 및 가정식의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실질 임금 역시 2달 연속 상승해 미국 내 가계에 숨통을 틔웠다고 언급
 -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료, 처방약, 에너지 분야의 비용을 낮추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언급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를 낮추면서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10.13.)⁸⁴⁾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2%로 8월(8.3%)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6.6%로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의 상승률은 각각 11.2%, 19.8%로, 8월 대비(식료품 11.4%, 에너지 23.8%) 상승폭이 감소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6.6%로 8월(6.3%)에 비해 상승, 이는 198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 식료품, 의료 서비스 항목의 상승에 기인하여 0.4%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6%로 집계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0.4%로 8월(0.1%)에 비해 소폭 상승
 - 주거(0.7%), 식료품(0.8%), 의료 서비스(1.0%) 항목의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솔린(-4.9%) 항목의 하락이 부분적으로 이를 상쇄
 -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6%로 8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⁸⁴⁾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September 2022*, 2022.10.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10.17.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September Consumer Price Index Report*, 2022.10.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3/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september-consumer-price-index-report>, 검색일자: 2022.10.17.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물가상승률 발표가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2% 수준으로, 이는 물가상승 압박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국가와 국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⁸⁵⁾을 통해 의료보험료, 가계 에너지 비용 등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11.10.)⁸⁶⁾
 -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7%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 2022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9월(8.2%)에 비해 둔화된 7.7%로 집계
 -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 상승률도 각각 10.9%, 17.6%로 9월 대비(식료품 11.2%, 에너지 19.8%) 낮은 수준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9월(6.6%)에 비해 하락

⁸⁵⁾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 H.R. 5376): 지출 총규모 4,370억달러의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기후변화 대응, 보건 정책(처방약가 인하 등), 최저법인세를 신설 등 포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8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2.9.1., p.22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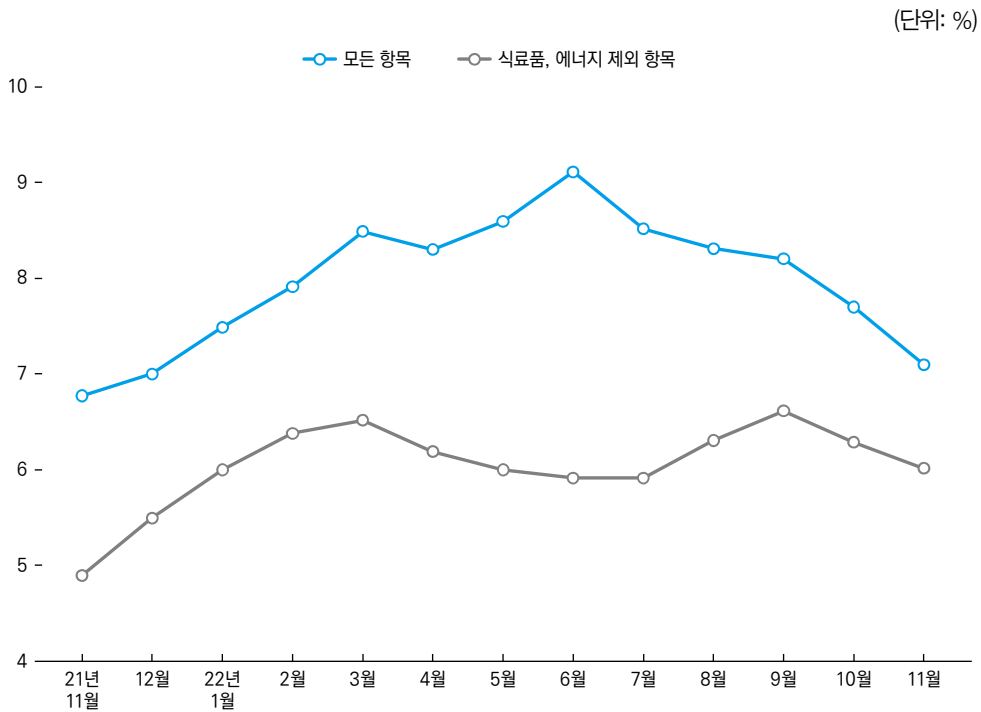
⁸⁶⁾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October 2022*, 2022.11.10.,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11.11.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October Consumer Price Index Report*, 2022.11.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0/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october-consumer-price-index-report>, 검색일자: 2022.11.11.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4%로 9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3%로 집계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0.8%), 에너지(1.8%), 식료품(0.6%) 항목의 상승에 기인하여 0.4% 상승
 -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3%로 9월(0.6%)에 비해 하락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물가상승률 발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정책을 지속하고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 둔화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
 - 또한 본인의 경제 계획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이 강력한 위치에서 세계적인 경제 문제에 맞서고 있다고 언급
 -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정책을 지속하고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12.13.)⁸⁷⁾
-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1%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0월(7.7%)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6월(9.1%)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둔화
 -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 상승률도 각각 10.6%, 13.1%로 10월 (식료품 10.9%, 에너지 17.6%) 대비 낮은 수준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6.0%로 10월(6.3%)에 비해 하락

⁸⁷⁾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November 2022*, 2022.12.1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12.14.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1%로 10월(0.4%) 대비 둔화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주거(0.6%), 식료품(0.5%) 항목의 상승에 기인하며, 에너지(-1.6%) 항목의 하락이 이를 일부 상쇄
 -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2%로 10월(0.3%)에 비해 소폭 하락

그림 3-I-4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CPI-U) 변화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November 2022*, 2022. 12. 13., p. 2, Chart 2

표 3-I-13 물가상승률(CPI-U)의 변화율

(단위: %)

구분	계절조정,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²⁾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모든 항목	1.0	1.3	0.0	0.1	0.4	0.4	0.1	7.1
식료품	1.2	1.0	1.1	0.8	0.8	0.6	0.5	10.6
가정식	1.4	1.0	1.3	0.7	0.7	0.4	0.5	12.0
외식 ¹⁾	0.7	0.9	0.7	0.9	0.9	0.9	0.5	8.5
에너지	3.9	7.5	-4.6	-5.0	-2.1	1.8	-1.6	13.1
에너지 상품	4.5	10.4	-7.6	-10.1	-4.7	4.4	-2.0	12.2
가솔린	4.1	11.2	-7.7	-10.6	-4.9	4.0	-2.0	10.1
중유 ¹⁾	16.9	-1.2	-11.0	-5.9	-2.7	19.8	1.7	65.7
에너지 서비스	3.0	3.5	0.1	2.1	1.1	-1.2	-1.1	14.2
전력	1.3	1.7	1.6	1.5	0.4	0.1	-0.2	13.7
유틸리티 가스	8.0	8.2	-3.6	3.5	2.9	-4.6	-3.5	15.5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0.6	0.7	0.3	0.6	0.6	0.3	0.2	6.0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0.7	0.8	0.2	0.5	0.0	-0.4	-0.5	3.7
신차	1.0	0.7	0.6	0.8	0.7	0.4	0.0	7.2
중고차 및 트럭	1.8	1.6	-0.4	-0.1	-1.1	-2.4	-2.9	-3.3
의류	0.7	0.8	-0.1	0.2	-0.3	-0.7	0.2	3.6
의료 상품 ¹⁾ (medical care commodities)	0.3	0.4	0.6	0.2	-0.1	0.0	0.2	3.1
에너지 제외 서비스	0.6	0.7	0.4	0.6	0.8	0.5	0.4	6.8
주거	0.6	0.6	0.5	0.7	0.7	0.8	0.6	7.1
교통	1.3	2.1	-0.5	0.5	1.9	0.8	-0.1	14.2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services)	0.4	0.7	0.4	0.8	1.0	-0.6	-0.7	4.4

주: 1) 계절조정되지 않음

2) 전년 동월 대비는 계절조정되지 않음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November 2022*, 2022.12.13., p.2, Table A

표 3-I-14 물가상승률(CPI-U)의 변화율(전년 동월 대비)

(단위: %)

구분	계절조정, 전년 동월 대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모든 항목	9.1	8.5	8.3	8.2	7.7	7.1
식료품	10.4	10.9	11.4	11.2	10.9	10.6
가정식	12.2	13.1	13.5	13.0	12.4	12.0
외식 ¹⁾	7.7	7.6	8.0	8.5	8.6	8.5
에너지	41.6	32.9	23.8	19.8	17.6	13.1
에너지 상품	60.6	44.9	27.1	19.7	19.3	12.2
가솔린	59.9	44.0	25.6	18.2	17.5	10.1
중유 ¹⁾	98.5	75.6	68.8	58.1	68.5	65.7
에너지 서비스	19.4	18.8	19.8	19.8	15.6	14.2
전력	13.7	15.2	15.8	15.5	14.1	13.7
유틸리티 가스	38.4	30.5	33.0	33.1	20.2	15.5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5.9	5.9	6.3	6.6	6.3	6.0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7.2	7.0	7.1	6.6	5.1	3.7
신차	11.4	10.4	10.1	9.4	8.4	7.2
중고차 및 트럭	7.1	6.6	7.8	7.2	2.0	-3.3
의류	5.2	5.1	5.1	5.5	4.1	3.6
의료 상품 ¹⁾ (medical care commodities)	3.2	3.7	4.1	3.7	3.1	3.1
에너지 제외 서비스	5.5	5.5	6.1	6.7	6.7	6.8
주거	5.6	5.7	6.2	6.6	6.9	7.1
교통	8.8	9.2	11.3	14.6	15.2	14.2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services)	4.8	5.1	5.6	6.5	5.4	4.4

주: 1. 전년 동월 대비는 계절조정되지 않음

1) 계절조정되지 않음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June 2022*, p.2, 2022.7.13., Table A 재구성BLS, *Consumer Price Index-July 2022*, p.2, 2022.8.10., Table A 재구성BLS, *Consumer Price Index-August 2022*, 2022.9.13., p.2, Table A 재구성BLS, *Consumer Price Index-September 2022*, 2022.10.13., p.2, Table A 재구성BLS, *Consumer Price Index-October 2022*, 2022.11.10., p.2, Table A 재구성BLS, *Consumer Price Index-November 2022*, 2022.12.13., p.2, Table A 재구성

다. 인플레이션 영향

- 미 의회예산처(CBO), 2019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소득 수준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2022.9.22.)⁸⁸⁾
 - CBO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각 소득 분위별 평균 소비 묶음을 사용해 물가 변동이 각 분위 평균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소득은 조정 세전 소득(adjusted market income)과 조정 세후 소득(adjusted income after transfers and taxes)으로 나누어 분석
 - ※ 조정 세전 소득은 세전 소득에서 직장 기반 건강 보험의 노동자 부담분을 제한 것으로 정의, 조정 세후 소득은 세후 소득에서 직장 기반 건강 보험의 노동자 부담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을 제한 것으로 정의

표 3-I-15 소득분위별 2019년 소비 묶음 구성

(단위: %)

구분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식품					
가정식	12.6	11.2	9.9	8.9	7.3
외식	5.1	5.5	5.7	6.1	6.6
소계	17.6	16.7	15.6	15.1	13.8
에너지					
상품	4.0	4.0	3.8	3.6	2.6
서비스	4.2	3.8	3.3	3.0	2.4
소계	8.2	7.8	7.2	6.6	4.9
주거					
임대	15.6	12.2	8.6	6.0	3.8
자가	15.9	18.8	21.6	23.4	25.3
소계	31.5	30.9	30.1	29.4	29.1
기타 재화					
내구재	11.4	12.0	12.7	13.1	12.8

⁸⁸⁾ CBO, *How Inflation Has Affected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Since 2019*, 2022.9.22., <https://www.cbo.gov/publication/58426>, 검색일자: 2022.9.23.

표 3-I-15 의 계속

(단위: %)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내구재	8.8	8.3	7.9	7.6	7.7
소계	20.2	20.3	20.6	20.7	20.4
기타 서비스	22.5	24.4	26.5	28.3	3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CBO, *how inflation has affected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since 2019*, 2022.9.22., p.9, Table 1 재구성

- 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상이하게 관찰
 - 세후 소득 기준, 2019년 대비 2022년에 모든 소득 분위에서 세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이 낮아져,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하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의 세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비중이 증가
 - 이는 팬데믹 관련 단기 재정 정책의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 세전 소득 기준 인플레이션 효과는 세후소득 인플레이션 효과와 다른 모습
 - 세전 소득 기준, 2019년 대비 2022년에 1분위에서 세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이 증가
 - 이는 1분위 소비 묶음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분위의 소비 묶음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
 - ※ 1분위 소비 묶음 가격은 2019-2022년 연평균 4.6% 증가해, 5분위(4.3%) 및 CPI-U(4.4%)의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
 - 반면 2021년 대비 2022년의 세전 소득 대비 2019년 소비 묶음 구매 비중을 분석한 경우, 1분위와 5분위에서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표 3-I-16 소득 대비 2019 소비 묶음 구매 비중 변화

(단위: %)

소득분위	2019년 대비 2022년		2021년 대비 2022년	
	조정 세전 소득	조정 세후 소득	조정 세전 소득	조정 세후 소득
1분위	2.9	-0.6	-1.5	21.0
2분위	-3.7	-2.2	0.5	16.0
3분위	-1.8	-0.9	2.9	13.6
4분위	-4.5	-2.6	2.1	8.3
5분위	-9.4	-7.4	-1.1	0.9

 자료: CBO, *how inflation has affected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since 2019*, 2022.9.22., pp.3~4, Figure1, Figure2 재구성

라. 장기 재정 전망

□ 의회예산처(CBO), 장기재정 전망(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22.7.27.)⁸⁹⁾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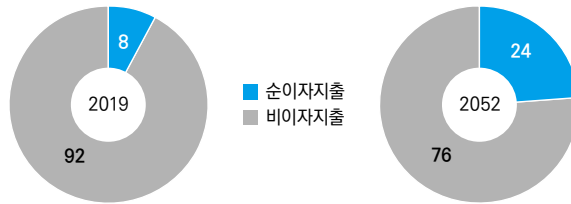
- * 동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은 CBO에서 발표(2022년 5월)한 2022~2032 기준선 전망을 근거로 이후 20년(2033~2052)에 대한 확장 전망(총 30년)을 보여주고 있음
- * 전망 분석 기준 일자: (입법 사항) 2022년 4월 8일, (경제 상황) 2022년 3월 2일
 - (재정수지) FY2022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4% 추정 → FY2052 재정적자는 약 11% 전망(FY2022 대비 약 3배 증가)
 - FY2022 재정적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대응 지출이 약해(wane)지고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0~2021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이자지출 증가에 기인하여 상승 전망
 - 기초재정수지적자(primary deficit)는 GDP 대비 2.3%(FY2022) → 3.9% (FY2052) 증가
 -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적자 최근 50년 평균: 1.5%

⁸⁹⁾ CBO, *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7.27., <https://www.cbo.gov/publication/57971>, 검색일자: 2022.7.28.

⁹⁰⁾ CRFB, "Analysis of CBO's July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7.27., <https://www.crfb.org/papers/analysis-cbos-july-2022-long-term-budget-outlook>, 검색일자: 2022.8.19.

- 높은 기초재정수지적자로 인한 채무 증가는 이자율 상승과 맞물려, 향후 30년 뒤인 FY2052의 GDP 대비 순이자지출은 FY2022(1.6%) 대비 4배 이상 상승한 7.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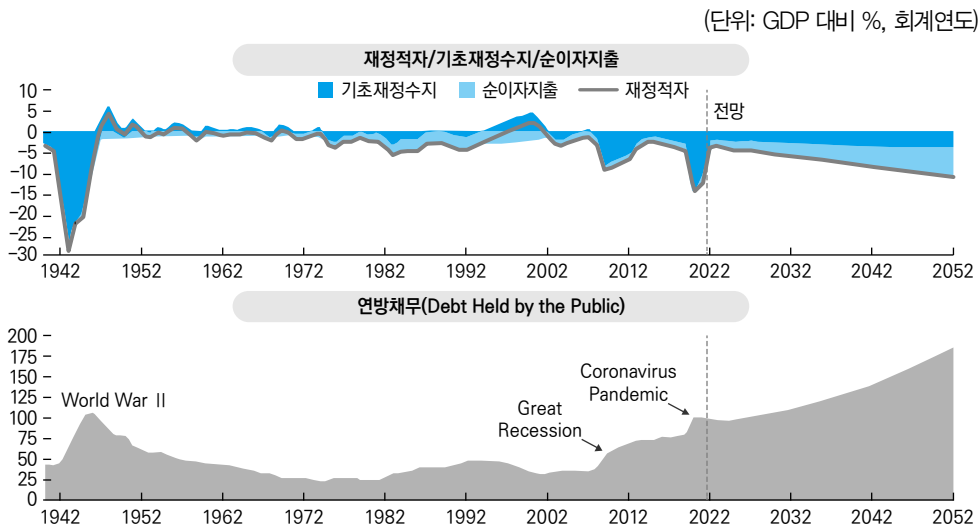
그림 3-I-5 연방 지출 구성(2019vs2052)



자료: CBO, *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 7. 27., p. 18, Figure 2-3

- o (연방채무) FY2022 연방 채무⁹¹⁾는 GDP 대비 98% → FY2023은 96% 전망
- 연방 채무는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2052년에는 185%를 기록하면서 미 역사상 최고인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치(1946년: 106%)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전망

그림 3-I-6 연방 재정수지 및 채무



자료: CBO, *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 7. 27., p. 6, Figure 1-1

⁹¹⁾ debt held by the public

- (지출전망⁹²⁾) FY2022 GDP 대비 총 재정지출은 전년(30.5%) 대비 7%p 감소한 23.5% 전망
 - * GDP 대비 총지출 전망: (2032) 24.3% → (2052) 30%
 - (재량지출) GDP 대비 수치는 2021년에 7.3%(실적) 기록 후, 올해('22) 7.0%로 하락 → 2036년에 6.0%까지 하락한 후 남은 전망기간(~2052) 동안 6.0%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1970년에 GDP 대비 11.5%였던 재량지출은 2019년에 6.3%까지 하락하였으나, 팬데믹 대응 조치로 인해 2020년, 2021년에 각각 7.8%, 7.3% 수준으로 확대됨
 - (의무지출) FY2022 GDP 대비 의무지출은 전년(21.6%) 대비 6.7%p 감소한 14.9% 전망
 - 의무지출 증가는 주요 구성 항목인 사회보장지출과 대규모 보건 프로그램의 증가가 주요 요인
 - * 보건 지출은 1인당 보건비용 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보장 지출 및 보건 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의무지출⁹³⁾은 팬데믹 대응으로 인해 2020년, 2021년에 각각 GDP 대비 10.4%, 10.8%로 전 기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전망 기간(2022~2052) 동안 감소 추세
 - * 기타 의무지출은 1960년대 중반 ~ 2019년까지 GDP 대비 2~4% 구간에서 유지되었음
- (수입 전망) FY2022 GDP 대비 재정수입은 전년(18.1%) 대비 1.5%p 증가한 19.6% 전망
 - 2023~2025년 구간에서 개인소득세 증가 요인(팬데믹 이후 효과)이 사라지면서 GDP 대비 수입은 감소하나, 2026~2027년에는 세금감면정책⁹⁴⁾의 만료로 재상승 전망
 - * 2017년 말에 입법되어 2018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세금감면정책(2017 Tax cut and Jobs Act;⁹⁴⁾ P.L. 115-97)은 일몰조항에 의해 2025년 말에 만료 예정

⁹²⁾ 시기별 GDP 대비 총지출 평균: (1972~2021년) 21% → (2022~2052년) 26%

⁹³⁾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실업수당, 연방 공무원 및 군인 연금, 특정 퇴역군인,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I-17 장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추정	연평균 전망		
	2019	2020	2021	2022	'23-'32	'33-'42	'43-'52
수입							
개인 소득세	8.1	7.7	9.1	10.6	9.6	10.0	10.5
사회보험급여세 (payroll tax)	5.9	6.2	5.9	5.9	5.9	5.8	5.8
법인세	1.1	1.0	1.7	1.6	1.5	1.4	1.3
기타	1.3	1.4	1.4	1.4	1.1	1.2	1.3
총 수입	16.3	16.3	18.1	19.6	18.1	18.4	18.9
지출							
의무지출	12.9	21.8	21.6	14.9	14.2	15.8	16.8
사회보장	n/a	n/a	n/a	4.9	5.5	6.1	6.3
주요 보건 지출	n/a	n/a	n/a	5.8	6.2	7.6	8.6
기타	n/a	n/a	n/a	4.3	2.4	2.1	1.9
재량지출	6.3	7.8	7.3	7.0	6.5	6.0	6.0
순이자지출	1.8	1.6	1.6	1.6	2.6	4.0	6.2
총 지출	21.0	31.2	30.5	23.5	23.2	25.8	28.9
재정적자	4.6	14.9	12.4	3.9	5.1	7.4	10.0
연방채무 (debt held by the public)	79.2	100.1	99.6	98	110	140	185

자료: CBO, *The 2020 Long-Term Budget Outlook*, 2020.9.21.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2.11.
 C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4.
 CBO, *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2022.7.27.

94) 2017 세금감면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 11호 참조

- (경제) 향후 30년간의 실질 성장률(real potential GDP) 평균 전망치는 1.7%로 지난 30년간(1992~2021)의 성장률(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
 - * 실질 성장률 전망: (2022~2032) 1.9% → (2033~2042) 1.6% → (2043~2052) 1.5%
 -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규모는 2052년까지 연평균 0.4% 증가율 전망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 * 경제활동인구 추세: (2022) 1억 6,400만명 → (2052) 1억 8,100만명
 -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향후 30년간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인구 증가 속도 감소 및 인구 고령화⁹⁵⁾
 - 비농업(non-farm business)부문 총요소생산성은 전망기간(~2052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1.1% 전망(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 연방채무 이자율(명목)은 같은 기간(~2052년) 동안 연평균 3.3% 전망(지난 30년간의 연평균은 4.2%)

[참고] 인구 추계

- 올해(2022) 초, 3억 3,500만명에서 시작한 인구는 연평균 0.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52년에 3억 6,900만명 도달 전망(지난 30년 동안의 인구 연평균 성장률은 약 0.9% 수준)
 - (출생률/기대수명) 출생률은 2021년 1.60명 → 2030년 1.75명으로 소폭 상승, 기대 수명은 2022년 77.1세 → 2052년 82.3세로 5.1세 상승 전망
 - (순 이민자 수 연평균 증가) '23-'32: 95만명 → '43-'52: 110만명
 - (65세 이상 인구) 2052년에는 총인구의 22% 비중을 차지할 전망(현재 17%)
- 사회보장 지출 수혜 인구의 경우, ('22) 6,600만명 → ('52) 9,700만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지출 또한 GDP 대비 ('22) 4.9% → ('32) 5.9% → ('52) 6.4% 증가 전망
 -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베이비 붐 세대의 사망시기가 도래하면서 증가 속도는 약해질 전망

⁹⁵⁾ 한편 실업률의 경우, 전망기간(2022~2052년) 동안의 연평균 수치는 4.2%로 전망되며, 지난 30년(1992~2021년) 간 평균 수치는 5.9%

마. 연방 신용 프로그램

- 의회예산처(CBO), 연방 신용 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2022.6.24.)⁹⁶⁾
 - (프로그램 구분) 연방 신용(대출 및 대출보증 등) 프로그램은 총 118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중 CBO에서 분석 편의를 위해 크게 4개(① 주택·부동산 대출 ② 상업 대출 ③ 학자금 대출 ④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분
 - (신용 규모) 2023 회계연도에 이행될 대출 및 대출보증 규모는 약 2.2조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주택·부동산 신용 규모가 가장 큰 비중(88%)을 차지
 - * 공공부문인 Fannie Mae and Freddie Mac의 수치를 제외할 경우 주택·부동산 신용 규모의 비중은 총 신용 규모의 71%로 나타남⁹⁷⁾
 - 총 규모(2.2조달러)에서 직접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10억달러), 대출보증을 92%(2.0조달러)
 - (생애 비용) 2023 회계연도에 신규 이행될 대출 및 대출보증을 생애비용(lifetime costs)은 일반적인 연방여신 기준(FCRA⁹⁸⁾)으로는 411억달러 흑자가 추정됨
 - 시장 가치(market value)가 반영된 공정 가치(fair-value)로 측정할 경우 약 511억달러의 적자 발생
 - * 공정가치의 경우 FCRA보다 비교적 높은 market risk premium(생산성 및 고용 등 거시경제 상황 반영)을 적용하기에, 신용 프로그램의 생애비용 측정 시 FCRA로 인한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도출됨

⁹⁶⁾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3," 2022.6.24., <https://www.cbo.gov/publication/58031>, 검색일자: 2022.7.19.

⁹⁷⁾ 미 행정부는 FY2023 총 신용추정 규모 중 Fannie Mae and Freddie Mac 소관의 신용 프로그램(약 1.3조달러)은 연방 정부의 일반적인 정부 행위(governmental activities)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경우 총 연방신용 규모는 8,840억달러로 이에 따른 연방 신용 규모에서 주택·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270억달러)로 하향 조정됨 → CBO는 정부 행위로 간주

⁹⁸⁾ 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FCRA)는 1990년에 도입된 연방여신개혁법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연방예산상의 신용 측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정 가치로 측정한 신용 프로그램 비용 비중(subsidy rate)은 연방여신 기준 (FCRA) 수치 대비 평균 4.2%p 높게 나타남
- * FCRA 비용 평균 비중: -1.9%/공정가치 비용 평균 비중: 2.4%

표 3-I-18 FY2023 연방 신용 프로그램 비용 추정

구분	프로그램 수	규모	생애 비용	
			FCRA 방법	공정가치 방법
대출 종류별 구분				
주택·부동산 대출	40	1,915	-41.7	27.6
상업 대출	71	173	2.1	15.7
학자금 대출	5	85	-1.4	7.7
소비자 대출 ¹⁾	2	*2)	*2)	*2)
총계	118	2,172	-41.1	51.1
부처 및 기관별 구분				
Fannie Mae and Freddie Mac	1	1,288	-33.8	3.9
주택도시개발	21	327	-10.3	12.4
재향군인	5	265	2.6	9.1
교육부	6	85	-1.4	7.8
농무부	45	66	-0.1	3.6
중소기업청	7	58	0.2	5.0
국제지원	11	30	0.3	2.2
에너지	3	18	2.0	4.4
수출입은행	5	16	-0.6	0.2
교통	3	12	*2)	1.6
기타	11	8	0.1	0.9
총계	118	2,172	-41.1	51.1

주: 1)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이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국 송환이 가능하도록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본국 송환 대출(repatriation loans) 및 재향군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대출(VA's vocational rehabilitation loans)로 구분되어 있음

2) * : 0보다 크거나 5천만달러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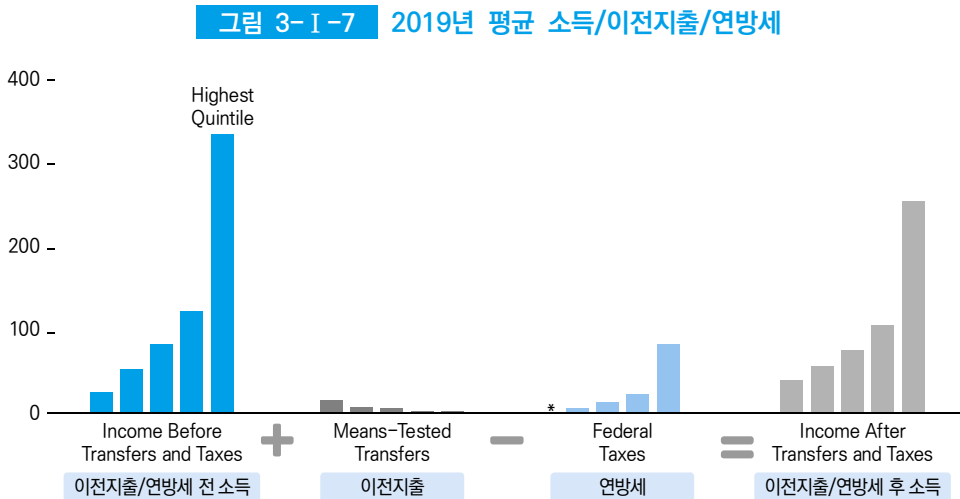
자료: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3," 2022.6.24., p. 4, Table 1

바. 2019년 가구소득 분배

□ 의회예산처(CBO), 2019 가구소득 분배(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보고서 발표(2022.11.15.)⁹⁹⁾

- (개요) 본 보고서는 가구 소득, 소득에 기반(자산조사)한 이전지출¹⁰⁰⁾(means-tested transfers)(이하 이전지출), 연방 세금을 종합하여 1979~2019년까지의 가구소득 분배 변화 제시

※ 2019년 기준, 총 가구 수: 1,280만가구 / 총소득 규모: 총 15.4조달러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11.15., p.3, Figure S-1

- (소득) 1979~2019년 동안 이전지출/연방세 전·후의 평균 소득은 모든 계층(총 5개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 최상위 분위(5분위)에서 가장 높게 증가

⁹⁹⁾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11.15.,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11/58353-HouseholdIncome.pdf>, 검색일자: 2022.11.22.

¹⁰⁰⁾ 자산조사 이전지출: 소액 자산 및 저소득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방/주/지방정부의 현금(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 지출(메디케이드 및 영양보조지원 프로그램(SNAP) 등)을 의미(자료: Robert A. Moffitt, "Mean-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NBER, 2003, <https://www.nber.org/system/files/chapters/c10253/c10253.pdf>, 검색일자: 2022.11.22.)

- (이전지출) 1979~2019년 동안 모든 이전지출의 50% 이상이 최하위 분위 (1분위)를 대상으로, 1/4은 2분위를 대상으로 지급(지난 41년간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 대비 이전지출 비중의 증가는 메디케이드 지출이 주요 요인)
- * 메디케이드의 경우, 지급대상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모든 분위에서 지난 41년 동안의 이전지출 증가분의 8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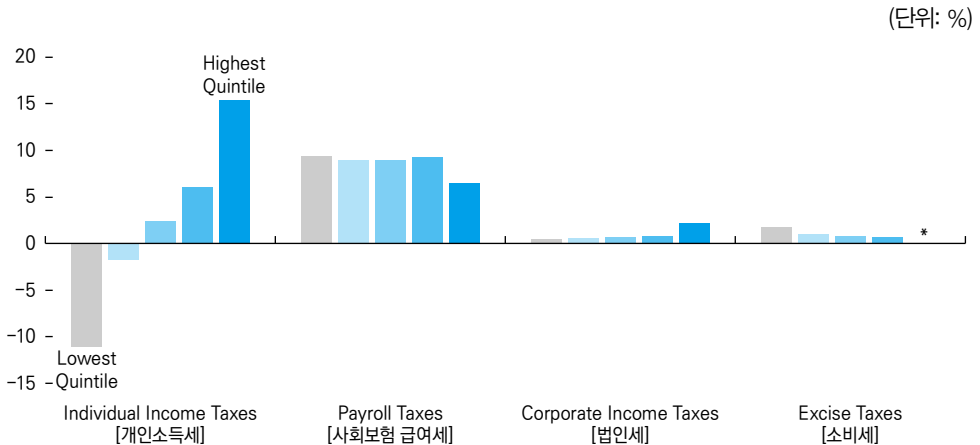
표 3-I-19 메디케이드(CHIP) 대상 및 수혜금액 확대 추이

구분	1979년	2019년
수혜 인원	2천만명	9,500만명
수혜 금액 (1인당 규모)	1,800달러	5,900달러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 (연방세¹⁰¹⁾) 1979~2019년 동안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 연방세율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최하위 분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1979~2019 평균 연방세율은 21%, 2019*년 평균 연방세율은 19%
 - * 최상위 분위: 24%, 3분위: 13%, 최하위 분위: 0.5%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1%는 30%
 - * 2019년 총소득에서 최상위 분위의 비중은 55%(연방세는 총 세금에서 69%), 최하위 분위의 총소득 비중은 4%(연방세는 0.1%)로 집계

그림 3-I-8 2019년 평균 연방세율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Exhibit 13*

¹⁰¹⁾ 연방세는 본 보고서에서 개인소득세, 사회보험급여세, 법인세, 소비세로 한정하여 분석

- (소득불평등) 1979~2019년 동안 이전지출과 세금은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는 하였지만, 이전지출/연방세 전·후의 지니계수 모두 증가
 - 소득불평등도는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의 경우, 누적 소득 증가율이 상이함으로 인해 1979년 대비 2019년이 더 높았으나, 이전지출/연방세 후 소득의 경우 조정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
-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 1979~2019년 동안 최상위 분위의 실질 평균 소득은 최하위 분위보다 더 많이 증가(2019년 모든 가구의 이전지출/연방세 전 평균 소득은 11만 9,600달러)
 - 다만 전년(2018년) 대비 실질 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 41년(1979~2019년) 기록과는 달리 최하위 분위가 최상위* 분위보다 더 크게 증가(7%)
 - * 중위(3분위) 분위 4%, 최상위 분위 1% 증가
 - 1979~2019년 동안 최상위 분위의 실질 평균 소득은 114%(연율 1.9%) 증가, 중위 3개 분위(2,3,4 분위) 43%(연율 0.9%) 증가, 최하위 분위 45%(연율 0.9%) 증가

표 3-I-20 이전지출/연방세 전 평균 소득 비교(1979vs2019)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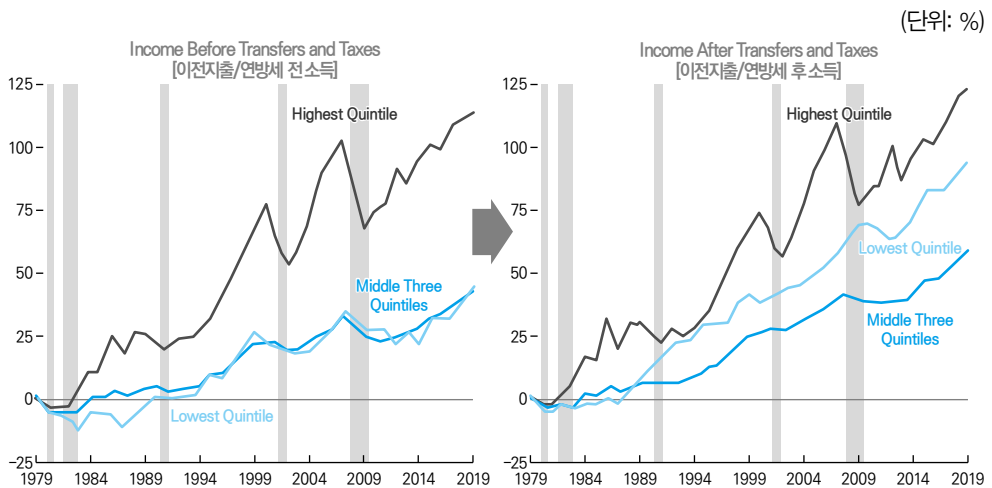
분위/연도	1979년 (a)	2019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최상위(5분위)	154,900	332,100	+177,200	114
중위(2,3,4분위)	60,000	85,700	+25,700	43
최하위(1분위)	16,300	23,800	+7,500	45

주: (2019년 이전지출/연방세 후 소득) 최상위 분위: 25만 2,100달러 / 최하위 분위: 3만 8,900달러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p. 8.*

- (이전지출/연방세 후 소득) 1979~2019년 동안 이전지출 및 연방세 전 소득보다 균등(more evenly)하게 증가(2019년 모든 가구의 이전지출/연방세 후 평균 소득은 10만 2,400달러*
 - * 이전지출/연방세 후 모든 가구의 평균 소득은 이전지출/연방세 전 평균 소득(11만 9,600달러)에서 가구당 평균(5,900달러) 합산 후, 가구당 평균 연방세금(2만 3,200달러)을 차감한 결과 10만 2,400달러로 집계

- 1979~2019년 동안 최상위 분위*(5분위)의 누적 소득은 123%(연율 2.0%) 증가 (최상위 1%의 경우, 1979년 대비 262% 증가)
 - * 최상위 분위 소득 추이: (1979) 11만 3,100달러 → (2019) 25만 2,100달러
- 같은 기간 동안 중위 3개 분위(2,3,4 분위)의 누적 소득은 59%(연율 1.2%) 증가
 - ※ 소득 분포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3분위의 경우, 이전지출 수입보다 세금 지출이 더 많기에 2019년 이전지출/연방세 후 평균 소득이 이전지출/연방세 전보다 7천달러(최상위 분위는 8만달러) 낮은 7만 4,800달러로 최종 집계
- 최하위 분위(1분위)의 누적 소득은 94%(연율 1.7%) 증가한 3만 8,900달러
 - 이전지출과 연방세의 영향으로 최하위 분위와 최상위 분위의 이전지출/연방세 후 평균소득은 조정 전 대비 각각 64%(1만 5,100달러) 증가한 3만 8,900달러, 24%(8만달러) 하락한 25만 2,100달러 집계
 - 한편 이전지출과 연방세의 영향으로 상위 1% 구간의 평균 가구소득은 60만 달러 감소한 140만달러, 상위 0.01% 구간의 소득은 1,300만달러 감소한 3천만달러

그림 3-1-9 이전지출/연방세 전·후 누적 평균 소득 증가 비교



주: 음영은 경기 침체기(recession)를 의미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p.3, Figure S-1

- (소득불평등) 1979~2019 기간 동안 모든 소득¹⁰²⁾별 지니계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상위 분위의 시장 수입(market income¹⁰³⁾)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증가에 주로 기인
 - ※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자본소득(capital income)의 비중이 큰 최상위 분위의 자본소득의 상당한(significant) 손실에 주로 기인하여 소득불평등 일시적 감소
 - 이전지출/연방세 전 대비 후 소득 지니계수는 1979년(전: 0.412 → 후: 0.352) 보다 2019년(전: 0.516 → 후: 0.432)에 더 감소

표 3-I-21 연도별 이전지출/연방세 전·후 소득 지니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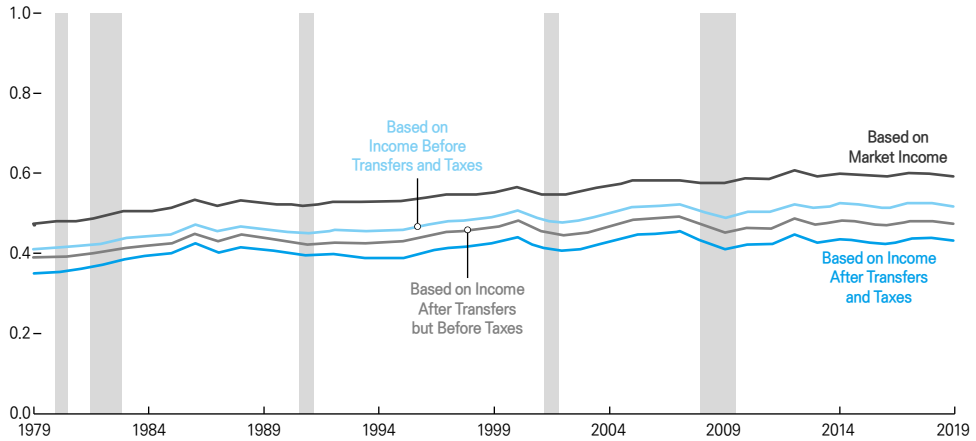
구분	이전지출/연방세 전 (a)	이전지출/연방세 후 (b)	증감 (b-a)	증감률 (b-a)/a
1979년	0.412	0.352	-0.06	-14.6%
2019년	0.516	0.432	-0.084	-16.3%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를 토대로 표 구성

102) ① 시장수입(market income) ② 이전지출/연방세 전 수입(income before transfers and taxes) ③ 이전지출 후/연방세 전 수입(income after transfers but before taxes) ④ 이전지출/연방세 후 수입(income after transfers and taxes)

103) Market Income은 ① labor income(wages and salaries) ② business income(자영업자 소득 등), ③ capital income(이자, 배당금, 임대 수입 등) ④ 기타(퇴직금 등)로 구성

그림 3-I-10 소득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도 추이 비교



- 주: 1. Market Income: 노동 임금, 자영업자 임금, 자본 소득 등
 2. Means-tested Transfers: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준 현금성 지출(메디케이드, 영양지원 등)
 3. Income Before Transfer and Taxes: Market Income + 사회보험 지출(사회보장, 메디케어, 실업보험 등)
 4. Income After Transfer and Taxes: Income Before Transfer and Taxes + 이전지출 - 세금
 5. 음영은 경기 침체기(recession)를 의미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p. 31, Exhibit 22

- (평가) 이전지출/연방세 후의 소득 분배는 최상위층으로 치우쳐진 모습이긴 하나, 이전지출/연방세의 영향으로 소득 불평등은 감소
 - 이전지출/연방세는 결과적으로 누진적인 결과를 가져옴
 - 소득불평등도는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의 경우, 분위별 소득의 누적 증가율이 상이함으로 인해 1979년 대비 2019년이 더 높았으나, 이전지출/연방세 후 소득의 경우 조정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
 - 199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중반 등의 경제성장기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최상위 분위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기에 소득불평등도 증가
 - 사실상(virtually) 모든 가구가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모든 가구가 이전지출 수혜를 받은 것은 아님

사. 예산대안(Budget Options by CBO)

- 의회예산처(CBO), 2022 예산대안(Budget Options¹⁰⁴⁾¹⁰⁵⁾ 보고서 발표(2022.12.7.)¹⁰⁶⁾
 - (개요) 2022 예산대안 보고서는 2권(2 volumes)의 연속 시리즈로 발표
 - (Volume 1) 각 정책대안의 재정수지 개선 규모가 3천억달러 이상*으로 구성된 총 17개¹⁰⁷⁾의 대규모 예산대안 제시
 - * 향후 10년간 재정수지 개선 규모는 각 예산대안별로 최대 3조달러 내에 분포
 - 향후 10년간의 ① 재정수지 개선 수치와 함께 ② 경제효과 ③ 분배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
 - (Volume 2) 각 정책대안의 재정수지 개선 규모가 3천억달러 미만*으로 구성된 총 59개(지출분야 36개¹⁰⁸⁾/세입분야 23개)의 비교적 소규모의 예산대안 제시
 - 향후 10년간 재정수지 개선 규모는 각 예산대안별로 70억~2,720억달러 구간에 분포
 - (Vol. 1 감축대안 예시) 신규 급여세 부과를 2개 옵션(① 1% 부과 ② 2% 부과)으로 구분하여 재정수지 개선 효과 분석
 - (재정수지 개선 효과) 향후 10년간의 재정수지 개선 규모는 1% 부과할 경우 약 1.1조달러, 2% 부과할 경우 약 2.3조달러 추정

104) 예산대안 분석은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정책대안을 논하는 보고서로서, 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용할 경우의 재정 변화를 추계한 보고서로 정책 제안이 아닌 각 예산대안의 주요 특이사항을 간략히 제시

105) 예산 대안은 의회 예산위원회의 요청으로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의회 실무진, 정부 부처/기관 및 민간단체(private groups) 등 다양한 구성원 그룹에서 제시된 사안들이 활용됨(참고 링크: <https://www.cbo.gov/publication/58611>, <https://www.cbo.gov/publication/58164>)

106) CBO, *Director's Statement on CBO's Latest Volumes of Budget Options*, 2022.12.7.; CBO,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3 to 2032—Volume I: Larger Reductions*, 2022.12.7.

107) 지출분야 10개 + 세입분야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다시 의무지출 8개(총 8개의 의무지출 중 7개 지출은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로 구성) + 재량지출 2개로 구성 → 향후 10년간 사회보장지출(24%)과 메디케어(16%) 및 메디케이드(9%) 지출이 총 지출의 약 50% 차지

108) 의무지출 18개, 재량지출 18개

- (분배효과) 급여세 징수 항목인 급여(earnings) 형태의 소득이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적용
 - ※ 평균 임금소득의 경우, 미국 소득계층 최상위 1%는 임금 소득이 총 소득의 1/3(최상위 0.01%는 70%)을 차지하며, 최하위 계층¹⁰⁹⁾ (1분위)은 61%, 중위계층(2,3,4분위)은 69%를 차지(2019 기준)¹¹⁰⁾
- (경제효과) 한계세율이 증가할 경우 더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CBO에 따르면 전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

표 3-I-22 신규 급여세 부과로 인한 연도별 재정수지 개선 규모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3	2024	2025	...	2030	2031	2032	2023~2032
1% 부과	51.3	106.4	109.7	...	127.8	132.1	136.5	1,135.7
2% 부과	101.5	211.1	217.7	...	253.5	262.0	270.8	2,252.7

자료: CBO,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3 to 2032 - Volume 1: Larger Reductions*, 2022.12.7., p.82, Option 15

표 3-I-23 지출·항목별 재정수지 개선 대안 - Vol. 1

(단위: 십억달러)

Option	지출 구분	주요 내용	재정수지 개선규모 2023~2032
1	의무 지출	메디케이드 연방지출 상한 설정	501~871
2		의료진에 대한 주세(state taxes) 제한	41~526
3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매칭율 축소	68~667
4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 인상	57~448
5		메디케어 Advantage 프로그램 축소	392
6	세입	피고용주에 대한 직장가입자(employment-based) 의료보험 세금 보조 축소	500~893
7	의무 지출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혜택 축소	40~184
8	지출	사회보장지출 혜택 일정금액(연방빈곤선 기준)으로 설정	270~593

¹⁰⁹⁾ 최하위 계층의 주 소득은 임금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보험 혜택으로 인한 소득이 그 뒤를 잇고 있음

¹¹⁰⁾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11.15.

표 3-I-23 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Option	지출 구분	주요 내용	재정수지 개선규모 2023~2032
9	세입	사회보장지출 급여세 관련 과세 소득 상한 인상	670~1,204
10	의무 지출	기타 의무지출(재향군인 장애 수당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 감축	580
11	재량 지출	국방부 연간 예산 감축(국방 인력 감축 등)	995
12	지출	비국방 지출 감축	332
13	세입	개인소득세율 인상	502~1,329
14		세금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규모 축소	541~2,507
15		신규 급여세 신설	1,136~2,253
16		소비세 신설	1,950~3,050
17		탄소(greenhouse gas) 배출세 신설	571~865

자료: CBO,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3 to 2032 - Volume 1: Larger Reductions*, 2022.12.7., p.4, Table 1

아. 미 의회 중간선거

□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 전망(2022. 11. 25.)¹¹¹⁾

- (개요) 지난 2022년 11월 8일에 연방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중 1/3인 35명, 50개 주(州)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선거 진행
 - ※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4년 중간에 실시되기에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로 불림
 - (사전 투표¹¹²⁾) 2018년 중간선거 사전투표에 3,910만명,¹¹³⁾ 2022년 중간선거 사전투표 인원(11월 9일 기준)은 4,710만명 집계¹¹⁴⁾
 - (최대 격전지)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으로 분류
- (선거 결과) 하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 확보, 상원은 공화/민주당 양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거나 1석(재투표가 예정된 조지아주) 차이로 인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현 구도가 유지될 전망(주지사는 공화당 주: 26개, 민주당 주: 24개)
 - ※ (선거 전) 연방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공석 3석)으로 민주당이 217석 과반의석을 넘은 다수당의 위치
 -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 우세, 상원은 공화당 49석, 민주당(48석)과 우호정당(2석)을 포함한 50석을 확보하여 민주당 우세(11.25. 기준)
 - 조지아주의 경우 두 후보 간 표차가 0.5%p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가 실시되며, 공화·민주 양당 후보가 최종 득표율 50%를 넘지 못하여 재투표 실시 예정

¹¹¹⁾ AP(The Associated Press)통신 발표 자료(2022. 11. 25. 기준)를 토대로 Google에서 제공한 선거 결과

¹¹²⁾ 사전 투표 종류: ① 우편으로 투표용지 전송 ②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 드롭박스 수거함에 넣기 ③ 선거일 전 지정된 기간에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조기 현장 투표

¹¹³⁾ The Washington Post, "Number of early votes cast surpasses early-vote total in 2018 midterm election," 2022. 11. 6.,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11/05/early-voting-2022-midterm-election/>, 검색일자: 2022. 11. 25.

¹¹⁴⁾ NBCNews, "Tracking early vote," 2022. 11. 9.,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2-elections/early-vote>, 검색일자: 2022. 11. 24.

- (주요 이슈)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 낙태권*/공정선거 이슈, 민주주의 수호 등
 - *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Dobby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로 인해 미국에서의 낙태 규제는 개별 주의 재량으로 바뀌면서 기존 판결(Roe v. wade)은 폐기
- (주요 한국 관련 이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등에 대해 공화당은 법 개정을 거론한 바 있어 이후 해당법의 개정 여부 및 핵·인권과 관련된 북한 대응에 대한 변화 가능성 여부에 주목할 필요
- (IRA법 관련 현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전기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발의
 -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Rafael Warnock) 연방 상원의원은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료하는 시기까지 최종 조립 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을 임시 유예하는 법안(S.5020) 발의(2022.9.29.)¹¹⁵⁾
 - 이후 연방 하원에서도 앨라배마주의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이 전기차 조항 효력 발생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 H.R. 9289) 발의(11.10.)
 - IRA 조항 수정 의사가 있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하였기에 동 법안의 수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¹¹⁵⁾ Propublica, "Bills Sponsored by Raphael Warnock (D-Ga.)," <https://projects.propublica.org/represent/members/W000790/bills-sponsored/117>, 검색일자: 2022.10.13.



II

일본*

□ 2022회계연도: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0일

표 3-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22.7.15.	내각부,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 2차 회의 개최
2022.7.2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2.7.29.	재무성, FY2021 결산개요 발표
2022.7.29.	재무성, FY2023 예산 개산요구 기본방침 발표
2022.7.29.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
2022.8.2.	중앙최저임금심의회, 2022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발표
2022.9.2.	재무성, FY2021 예산 사용상황 개요 발표
2022.9.5.	재무성, FY2023 예산 개산요구 및 요망액 발표
2022.9.20.	재무성, 2022년 일반회계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 집행 상황 및 사용 결정 발표
2022.9.22.	일본정부·일본은행, 외환시장 엔 매수·달러 매도 환율개입 실시
2022.9.22.	일본은행,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발표
2022.10.4.	기시다 총리, '제 10차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통해 종합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중점 사항을 발표
2022.10.20.	재무성, 2022년 상반기(4~9월) 무역수지 속보치 발표
2022.10.25.	내각부, 10월 월례경제보고 발표
2022.10.28.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 강민채 선임연구원(mckang@kipf.re.kr)

표 3-II-1 의 계속

일자	주요내용
2022.10.28., 2022.11.8.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및 FY2022 제2호 추경예산 발표
2022.11.8.	재무성, FY2022 국채발행계획 수정
2022.11.15.	내각부, 2022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22.12.2.	재무성, FY2022 제2호 추경예산 국회 통과·확정 발표
2022.12.8.	재무성, FY2022 2분기 예산사용현황 발표
2022.12.20.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 운용 조정 발표
2022.12.23.	재무성, FY2023 예산안 각의 결정 발표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 재무성, FY2023 예산 개선요구 기본방침¹¹⁶⁾ 발표(2022.7.29.)¹¹⁷⁾
 - 2023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¹¹⁸⁾를 강조하는 “2022년 기본방침” 및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을 미래 개척 원동력으로 삼은 “2021년 기본방침”에 따른 경제·재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
 - 개선요구 제출 기한은 8월 말일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개선요구 기준(예산 편성 지침)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금·의료 관련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 5,6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②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신경제·재정재생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
 - (③ 의무적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고,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 (④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경비)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해 부흥 필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 (⑤ 그 외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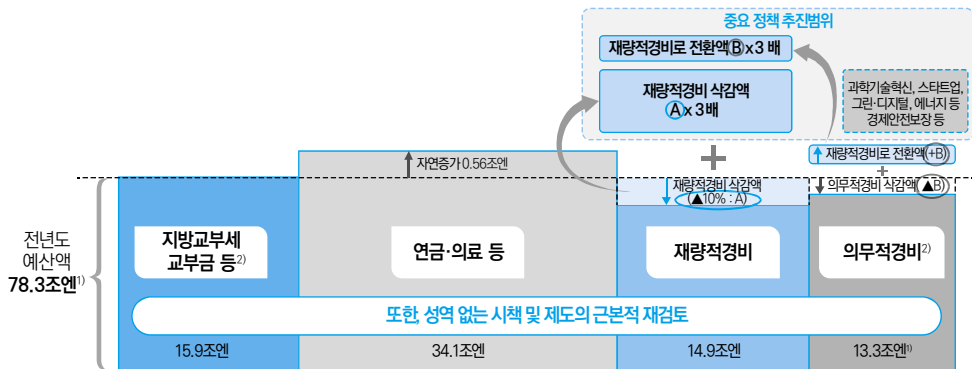
116) 개선은 어렵잖아 한 계산을 의미하고, 개선요구 기본방침은 우리의 예산편성지침과 유사함. 정부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개략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문서(개선요구서)를 작성하여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개선요구라고 하며, 각 부처 개선요구전에 개선요구 기준을 통해 예산편성의 방침 및 상한액을 명시

117)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2.7.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html, 검색일자: 2022.8.4.

118) ① 성장전략 ② 분배전략 ③ 포용적 사회 실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은 과학기술혁신, 디지털전원 도시국가구상 등 지방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경제안보 정책이 있으며, 분배 전략으로는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 인적 투자 강화, 차세대 중산층의 유지가 있고,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 및 여성 참여 증대, 고독·고립 대책,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중요 정책 추진범위’로 설정하고, 각 성장관은 ‘의무적경비가 전년도 액수 미만인 경우 차액(그림 3-II-1의 B)’ 및 ‘재량적경비 삭감액(그림 3-II-1의 A)’에 대해 각각 3배 금액 범위 내에서 중요 정책 추진범위 정책에 요망¹¹⁹⁾하도록 함
 - ‘중요 정책 추진범위’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인적투자, 과학기술·혁신 및 스타트업, 그린, 디지털에 관한 투자와 함께 에너지·식량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 국가 안보 확보 등이 해당됨
- (예산편성 과정의 검토사항) 정책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각 경비 간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으로 필요 요구에 대처하도록 함
 - 새로운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및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그린 투자 관련 경비는 “2022년 기본방침”을 기초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함

그림 3-II-1 2023년 예산 개선요구에 대한 기본방침



주: 1) 상기 전년도 예산액은 코로나 예비비를 제외한 것. 코로나 예비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 총액은 83.3조원, 의무적경비는 18.3조원

2) 지역교부세·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하고, 의무적경비는 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변화 가감산

자료: 재무성, 「令和 5 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2. 7.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220729a.pdf, 검색일자: 2022. 8. 4.

¹¹⁹⁾ 요구금액은 각 성이 재정당국인 재무성에 요청할 수 있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0% 상한을 의미하고, 요망금액은 요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운 우선 추진과제인 ‘중요 정책 추진범위’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 재무성, FY¹²⁰⁾2023 예산 개산요구¹²¹⁾ 및 요망액¹²²⁾ 발표(2022.9.5.)¹²³⁾
 - FY2023 일반회계 요구액은 105조 6,987억엔, 요망액을 합한 금액은 110조 484억엔으로 FY2022 당초 예산 102조 5,964억엔 대비 7.3% 증가¹²⁴⁾
 - 올해 요구·요망액은 전년 111조 6,559억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9년 연속 요구·요망액이 100조엔을 초과
 - 국채비는 전년 24조 3,393억엔 대비 10.9% 증가한 26조 9,886억엔
 - 재정투·융자 요구액은 14조 1,580억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 18조 8,855억엔 대비 4조 6,275억엔 감소

- 재무성, FY2023¹²⁵⁾ 예산안 각의 결정 발표(2022.12.23.)¹²⁶⁾
 - 2023년은 역사 전환기를 앞두고 일본이 직면하는 국내외 중요 과제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 국내외 중요 과제로 안전보장·외교, 지방·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어린이 정책, 녹색 전환을 중점으로 대응
 - (① 안보·외교) 현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수립
 - (방위)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3조엔 방위력 정비 계획을 실행하고, 방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120) Fiscal Year 회계연도. 일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산정

121) 국가의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성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개략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문서(개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개산요구라 하고, 올해 7월말 재무성이 예산 개산요구 기준을 발표하였고, 각 부성이 8월말까지 예산 개산요구 금액을 제출

122) 일반회계 대상의 개산요구 시 요구액은 각 성마다 전년도 예산액의 90% 상한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는 금액이고, 요망액은 요구액 30%내에서 '중요 정책 추진범위'에 관련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123) 재무성, 「令和5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040905.pdf, 검색일자: 2022.9.7.

124) FY2022 당초 예산액에는 코로나 대책 예비비 5조엔 포함

125)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산정

126)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政府案」, 2022.12.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index.html, 검색일자: 2022.12.26.

_____, 「令和5年度予算フレーム」, 2022.12.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2.pdf, 검색일자: 2022.12.26.

- (외교) 2023년 5월 개최 예정인 G7 히로시마 정상회의¹²⁷⁾ 및 2023년 일·ASEAN 우호 협력 50주년 등을 고려하여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¹²⁸⁾를 위한 예산 확보*
 - * 외무성 예산(디지털청 예산 합산)은 7,560억엔으로 전년 대비 485억엔 증가(2022년 추경예산 합산 1조 233억엔(전년 대비+1,694억엔))
- (② 지방·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¹²⁹⁾)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리먼 쇼크 이후 최고치인 18.4조엔 확보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종합전략’에 근거하여 동 교부금(2023년 1천억엔 +2022년 추경 800억엔)을 통해 지자체 디지털 구현 가속화, 디지털 활용을 통한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대처 등 지원
- (③ 어린이 정책) 내년 4월 ‘어린이 가정청’을 창설하여 어린이·육아지원 강화
 - 출산육아 일시금을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역대 최고 인상폭)
 -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동반 형태의 상담 실행(반주(伴走)형 상담)과 임신·출생 신고를 한 임신부·육아 가정에 합계 10만엔 상당의 경제지원 패키지 유지
- (④ 녹색 전환) 탄소가격제¹³⁰⁾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예상 재원을 기반으로 ‘GX 경제이행채’¹³¹⁾를 발행하여 민간 GX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¹²⁷⁾ Hiroshima summit, 「G7広島サミット」, <https://www.pref.hiroshima.lg.jp/site/hiroshima-summit/>, 검색일자: 2022.12.26.

¹²⁸⁾ 2021년 12월 기사다 총리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상으로 내세우며 현실적인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 올해 6월 평화를 위한 5개 비전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등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 ②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미일 동맹 국과 안보 협력 강화 ③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현실적인 대처 추진 ④ 유엔 안보리 개혁을 비롯한 유엔의 기능 강화 ⑤ 경제 안전 보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계 강화)

¹²⁹⁾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개성을 살린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에서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 주요 세부 정책으로 ① 지자체 디지털 인프라 통일·표준화 ② 디지털 인재 육성 ③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과제 해결·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④ 연령·성별·지리적인 제약 등과 관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활용 지원으로 구성

¹³⁰⁾ 탄소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탄소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

¹³¹⁾ 일본은 2050년 국내 실질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계 150조엔 이상의 탈탄소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투자분 20조엔 조달을 위해 통상 국채보다 상환 종료 기간이 짧은 GX경제 이행채 발행. GX 경제이행채 내년 발행 예정(배출량거래제도는 2026년부터, 부과제도 도입은 2028년부터 시행 계획)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이나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등 지원(에너지특별회계 0.5조엔, 2022년 추경 선행 실시분 1.1조엔 합산 시 1.6조엔 규모 지원)
- (탄력적인 예산) 「골태방침 2022」¹³²⁾을 근거로 세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
 - 사회보장관계비 약 6,154억엔 증가(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 비사회보장관계비 약 4조 7,417억엔 증가
 - 방위력강화 대응(4조 5,919억엔) 제외 시 비사회보장관계비 약 1,500억엔 증가
 - 방위관계비를 증액하고 경제·물가동향 등을 토대로 유연한 대응을 실시 하여 지금까지의 세출개혁 대응을 실질적으로 유지
 - 신규 국채 발행액 감액(FY2022 당초 예산 36.9조엔 → FY2023 35.6조엔)
- 재정수지적자¹³³⁾는 19.2조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 적자 21.3조엔 대비 2.1조엔 감소하였고, 공채의존도는 31.1%(전년 대비 3.2p% 감소)(〈표 3-II-2〉참고)
 - (세입)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FY2022 당초 예산 대비 6.3% 증가하였고, 이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대응에 4조 5,919억엔 증가에 기인
 - 세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69조 4,400억엔
 - (세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4조 3,812억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조 7,848억엔 증가(6.3% 증가)

(경제산업성, 「GXを実現するための政策イニシアティブの具体化について」, 2022.11.24.,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angyo_gijutsu/green_transformation/pdf/010_01_00.pdf, 검색일자: 2022.12.27. 노무라종합연구소, 「一ボンプライシングをGX経済移行債の償還財源に: 負担先送りと脱炭素の実効性に課題」, 2022.12.1.,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2/fis/kiuchi/1201_2, 검색일자: 2022.12.27.)

¹³²⁾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2」)(2022.6.7.)에서 '중장기 경제·재정운용 및 2023년 예산'에 관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적인 증점투자 추진, 단년도 예산원칙의 폐해 시정,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출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 세계개혁 시행 등 계획을 발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6월호 재정동향 및 원문 참고(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6월호 재정동향」, 2022.6.30., pp.34~3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28>, 검색일자:2022.12.27.;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2/decision0607.html>, 검색일자:2022.12.27.)

¹³³⁾ 이자지급 상당분과 정책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 공채금의 합계

표 3-II-2 FY2023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항목	FY2022 당초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변화율 (%)	비고
세출					
일반세출	673,746	727,317	53,571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력 강화자금 (가칭)은 재원 확보법(가칭)¹⁾에 따라 창설 예정
사회보장관계비	362,735	368,889	6,154	1.7	
사회보장관계비 외	261,011	308,428	47,417	18.2	
그중 방위력관계비(아래 이월 제외)	53,687	67,880	14,192	26.4	
그중 방위력강화자금(가칭) 편입	-	33,806	33,806	100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50,000	40,000	-10,000	-20.0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비상 대응 예비비	-	10,000	10,000	100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8,825	163,992	5,166	3.3	
국채비	243,393	252,503	9,111	3.7	
합계	1,075,964	1,143,812	67,848	6.3	
세입					
세수 ²⁾	652,350	694,400	42,050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23 공채 의존도는 31.1% • 재정수지적자⁴⁾ 19.2조엔
기타수입	54,354	93,182	38,828	71.4	
방위력 강화를 위한 대응	-	45,919	45,919	100	
그중 재원확보법(가칭)에 따른 것	-	14,750	14,750	100	
공채금 ³⁾	369,260	356,230	-13,030	-3.5	
건설공채 ⁵⁾	62,510	65,580	3,070	4.9	
특례공채 ⁶⁾	306,750	290,650	-16,100	-5.2	
합계	1,075,964	1,143,812	67,848	6.3	

주: 1. FY2022 예산은 2023년과 비교를 위해 재조합한 수치

2. 각각 반올림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

2) 인지수입 포함

3) FY2023 예산 기준 재정수지 관점의 공채금 분류는 ①채무상환비 상당분 16조 3,895억엔 ②이자 지급 상당분 8조 4,723억엔 ③정책지출에 의한 적자(기초재정수지 적자) 상당분 10조 7,613억엔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즉시 충당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상당분으로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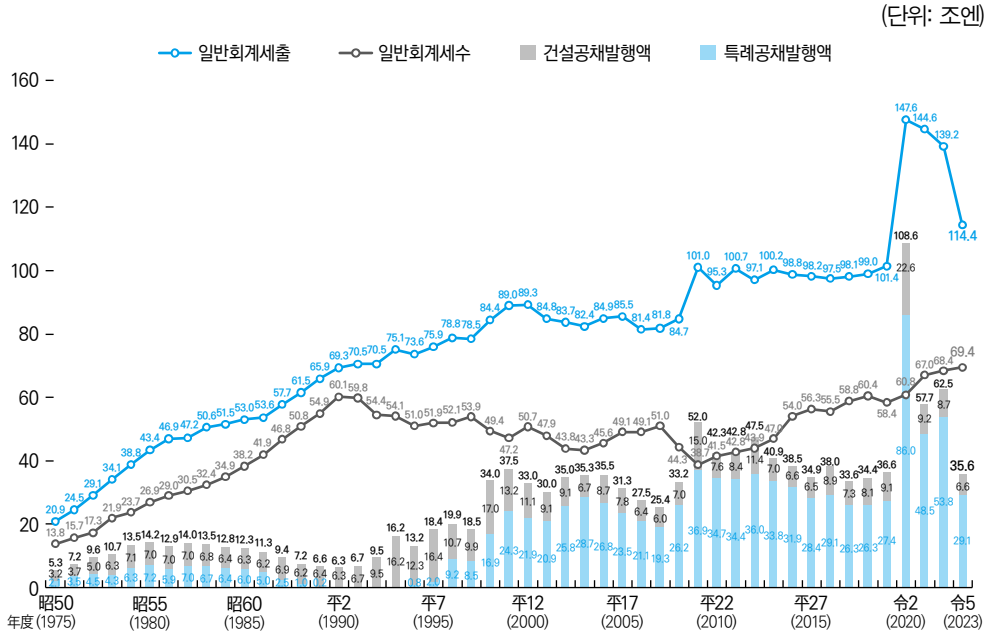
4) 이자지급 상당분과 정책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 공채금의 합계

5)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을 목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

6) 건설공채를 발행해도 여전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이외의 세출 목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그 성질에서 "적자 국채"라고 불리기도 함

자료: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p. 1, 2022. 12. 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 검색일자: 2022. 12. 26.; 「令和5年度予算フレーム」, 2022. 12. 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2.pdf, 검색일자: 2022. 12. 26.

그림 3-II-2 일반회계 세수, 세출 총액 및 공채발행액 추이



- 주: 1.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추경 후 예산, 2023년도는 정부안
 2. 공채발행액은 1990년은 걸프지역 자원조달을 위한 임시특별공채, 1994~1996년 소비세율 3%에서 5%로 인상에 앞서 행한 감세에 의한 조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감세특례공채, 2011년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부흥채, 2012년 및 2013년은 기초연금고교부담 1/2 실현 재원 조달을 위한 연금특례공채를 제외함
 3. 2023년 세출은 2024년 이후의 방위력 정비 계획 대상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위력 강화자금(가칭) 3.4조엔 포함

자료: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p. 13, 2022. 12. 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r/fy2023/seifuan2023/01.pdf, 검색일자: 2022. 12. 27.

□ 재무성, FY2022 국채발행계획 수정(2022. 11. 8.)¹³⁴⁾

- 재무성은 11월 8일 각의 결정된 FY2022 추경예산에 근거하여 국채발행계획 정부보증채 발행예정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발표함
 - 신규공채 발행액은 62조 4,789억엔으로 당초 예산 대비 22조 8,520억엔 증가

¹³⁴⁾ 재무성, 「令和4年度国債発行予定額」, 2022. 11. 8., https://www.mof.go.jp/jgbs/issuance_plan/fy2022/issuanceplan221108.pdf, 검색일자: 2022. 11. 9.
 _____, 「令和4年度国債発行計画」, https://www.mof.go.jp/jgbs/issuance_plan/fy2022/index.html, 검색일자: 2022. 11. 9.

표 3-II-3 FY2021 발행근거법별 국채발행예정액

(단위: 억엔)

구분	당초 (a)	1차 추경 후 (b)	2차 추경 후		
			(c)	(c)-(a)	(c)-(a)
신규공채	369,260	396,269	624,789	255,529	228,520
건설국채	62,510	62,510	87,270	24,760	24,760
특례국채	306,750	333,759	537,519	230,769	203,760
부흥채	1,716	1,716	-	-1,716	-1,716
재투채	250,000	250,000	165,000	-85,000	-85,000
차환채	1,529,404	1,529,404	1,484,872	-44,531	-44,531
중 부흥채	38,589	38,589	36,217	-2,372	-2,372
국채발행액	2,150,380	2,177,389	2,274,662	124,282	97,273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国債発行予定額」, 2022.11.8., https://www.mof.go.jp/jgbs/issuance_plan/fy2022/issuanceplan221108.pdf, 검색일자: 2022.11.9.

나. 추가경정예산

□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및 FY¹³⁵⁾2022 제2호¹³⁶⁾ 추경 예산 발표(2022.10.28., 2022.11.8.)¹³⁷⁾

- 올해 10월 28일 발표된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시행을 위한 추경 예산을 11월 8일 발표(<표 3-II-4> 참고)

¹³⁵⁾ Fiscal Year 회계연도,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에 해당

¹³⁶⁾ 2022년 5월 제1호 추경 편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등에 따른 에너지·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물가 상승 등 종합대책’을 올해 4월 발표하고, 대책 시행을 위한 제1호 추경을 5월에 편성

¹³⁷⁾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 2022.11.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20221108033406.html, 검색일자: 2022.11.9.

_____,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の概要」, 2022.11.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b.pdf, 검색일자: 2022.11.9.

내각부,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概要」, 2022.10.28., https://www5.cao.go.jp/keizai/keizaitaisaku/2022-2/20221028_taisaku_gaiyo.pdf, 검색일자: 2022.10.29.

수상관저, 「新たな総合経済対策が目指すもの」, 2022.11.1., https://www.kantei.go.jp/jp/keizaitaisaku_kishida/index.html, 검색일자: 2022.11.2.

- (세입) 추경 세입은 총 28조 9,222억엔으로 세수 3조 1,240억엔¹³⁸⁾, 세외수입 6,731억엔, 전년도 잉여금 수입 2조 2,732억엔, 공채금 22조 8,520억엔¹³⁹⁾ 발행 * 건설공채 2조 4,760억엔, 특례공채 20조 3,760억엔
- (세출) 고물가·임금인상 대응책 등 포함 경제대책 관계비로 29조 861억엔, 그 외 기타경비 및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¹⁴⁰⁾ 전출 등 총 28조 9,222억엔
 - 경제정책방향은 기시다 총리의 핵심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기조 아래 고물가-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에 중점
 - 총 재정지출은 39조엔, 사업규모로는 71.6조엔으로 편성(<표 3-II-5> 참고)

표 3-II-4 FY2022 일반회계 추경예산(제2호) 규모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	78,170	1. 세수	31,240
2.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34,863		
3.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54,956		
4.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75,472	2. 세외수입	6,731
5. 향후 대비	47,400		
1) 코로나19 및 원유 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37,400		
2)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0,000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22,732
소계(경제대책 관계 경비)	290,861		
6. 기타비용	2,229		

138) 2022년 세수 건적 약 3조엔 상향 조정(원천소득세 +1조 4,110억엔(당초 예산 대비 증가율 8.3%), 소비세 +5,880억엔(증가율 2.7%), 법인세 +4,510억엔(증가율 3.4%) 등)

참고: 재무성, 「令和4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補正後予算額概算」, 2022.11.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e.pdf, 검색일자: 2022.11.9.

139) (건설공채) 재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을 목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국채

(특례공채) 건설공채를 발행해도 여전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이외의 세출 목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회 의결을 거친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그 성질에서 “적자 국채”로 지칭

140)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이입 자금 등을 재원으로 공채 및 차입금 등 상환 및 이자 지불 목적의 특별회계

표 3-II-4 의 계속

(단위: 억엔)

세출		세입	
7.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전출	6,906	4. 공채금	228,520
		1) 건설공채	24,760
		2) 특례공채	203,760
8. 기본 경비 감액	-10,774		
합계	289,222	합계	289,222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2号) フレーム」, 2022.11.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a.pdf, 검색일자: 2022.11.9.

표 3-II-5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재정지출 및 사업규모

(단위: 조엔)

경제대책	재정지출	사업규모
I.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12.2	37.5
II.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4.8	8.9
III.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6.7	9.8
IV. 방재·감재, ¹⁾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10.6	10.7
V. 향후 대비	4.7	4.7
합계	39.0	71.6

주: 1) 홍수, 지진, 화재 등 재해 발생을 막고 피해를 감소

자료: 내각부,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概要」, 2022.10.28.,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2-2/20221028_taisaku_gaiyo.pdf, 검색일자: 2022.10.29.

- 제2호 추경예산 후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39조 2,196억엔으로 FY2022 당초 예산 107조 5,964억엔 대비 31조 6,231억엔 증가하였고, 공채 의존도는 당초 예산 34.3%에서 44.9%로 10.6%p 증가¹⁴¹⁾(<표 3-II-6> 참고)
- 재정수지적자*는 당초 예산 21.3조엔에서 2차 추경 후 46.2조엔으로 24.9조엔 증가

* '이자지불비용 상당분'과 '정책적 지출로 인한 적자 상당분' 공채금의 합계

¹⁴¹⁾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フレーム, 2022.5.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2.pdf, 검색일자: 2022.11.29.

표 3-II-6 제2호 추경예산 후 FY2022 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

구분	FY2022 당초(A)	FY2022 2호 추경 후 (B)	증감액 (B-A)	증감율	비고
세 출					
1. 일반세출	673,746	976,345	302,599	44.9	2호 추경 결정 시 잔액 (2호 추경 후) - 코로나19 및 원유 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잔액: 5조 11억엔 -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조엔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8,825	175,134	16,308	10.3	
3. 국채비	243,393	240,717	-2,676	-1.1	
(1) 중 채무상환비 (교부 국채 제외)	156,325	163,231	6,906	4.4	
(2) 중 이자지급비용	82,472	72,880	-9,593	-11.6	
합계	1,075,964	1,392,196	316,231	29.4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652,350	683,590	31,240	4.8	- 공채 의존도: 44.9% - 건설공채 당초: 6.3조엔 → 2호 추경후: 8.7조엔 - 특례공채 당초: 30.7조엔 → 2호 추경후: 53.8조엔
2. 기타 수입	54,354	83,817	29,462	54.2	
3. 공채금 (세출과 세수등과의 차이)	369,260	624,789	255,529	69.2	
(1) 채무상환비 상당분 (교부 국채분 제외)	156,325	163,231	6,906	4.4	○ 2차 보정 후 재정수지적자 ¹⁾ 46.2조엔
(2)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2,472	72,880	-9,593	-11.6	
(3)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 (기초재정수지적자) 상당분	130,462	388,678	258,216	197.9	
합계	1,075,964	1,392,196	316,231	29.4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1) 이자지급비용 상당분과 정책적 지출로 인한 적자 상당분 공채금 합계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2次補正後予算フレーム」, 2022. 11. 8., https://www.mof.go.jp/policy/budger/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d.pdf, 검색일자: 2022. 11. 9.

- 경제대책은 ①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②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창출력’ 회복 및 강화 ③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④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⑤ 향후 대비로 구성 (<표 3-II-7> 참고)

- 경제대책으로 실질 GDP 성장률 환산 4.6%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2%p 억제 효과를 기대

표 3-II-7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세부내용

(단위: 억엔)

경제대책	금액
I.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78,170
1.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자 지원	63,168
◦ 전기 요금 대책	24,870
◦ 도시가스 요금 대책	6,203
◦ 연료유 가격 격변 완화 조치	30,272
◦ 어업 경영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30
2. 에너지·식료품 등 위기에 강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	4,257
◦ LNG 안정 공급 강화 대책	236
◦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3,849 ¹⁾
◦ 석유가스 판매업의 운송 관련 보조금 지원	153
◦ 국내 비료 생산 확대	110
◦ 콩·밀 등 작물 국산화	100 ¹⁾
3. 지속적인 임금 인상 촉진·중소기업 지원	10,745
◦ 중소·중견기업 등 사업 재구축 촉진 보조금/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7,800
◦ 자금 유통 지원	2,609
II.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34,863
1.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및 지역 활성화	24,055
◦ 인비운드 관광의 부활, 관광업 회복·고부가가치화 등	1,500
◦ 검역체제 강화	592
2. 엔화 약세를 활용한 경제 구조 강화	10,809
◦ 첨단반도체 생산기반 정비	4,500
◦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	440 ¹⁾
◦ 공급망 대책	
- 중요 광물	2,158
- 공작기계	416
- 항공기소재	417
III.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54,956
1. '인적투자' 근본 강화 및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 : 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일체 개혁	11,313

표 3-II-7 의 계속

(단위: 억엔)	
경제대책	금액
◦ '인적투자' 패키지 5년간 1조엔으로 확대(2022~2023년 예산 포함 약 3,000억엔)	832
◦ 고용보험 재정 안정	7,276
◦ 대학 등 기능 강화	3,002
2. 성장 분야 대담한 투자 촉진 ²⁾	40,552
1) 과학기술 혁신	
◦ 첨단 국제 공동 연구 추진 사업	501
◦ 생명공학(바이오혁신사업)	3,000
◦ 우주 개발	639
◦ 지역 핵심·특색 있는 연구 대학 강화·촉진 사업	2,000
◦ 경제 안보 중요 기술 육성 프로그램	2,500
2) 스타트업 창업 가속화 ³⁾	
◦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환경 및 시스템 형성	1,500 ¹⁾
◦ 소규모기업 기술 혁신 연구 지원 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확충	2,060
◦ 딥테크 ⁴⁾ ·스타트업 지원 사업	1,000
3)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3,000
◦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700
◦ 축전지의 제조 공급망 강화 지원 사업	3,316
4)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 개발 사업	4,850 ¹⁾
◦ Beyond5G(6G) 연구개발 추진 기금 조성	662
◦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800
◦ 마이 넘버 카드 보급 촉진	630
3. '포용 사회' 실현	3,091
◦ 출산·육아 지원금(임신·출생 신고 시 총 10만엔 상당의 지원금 지급, 동반 형태의 상담 실행(반주(伴走)형 상담), 출산육아 일시금 증액 등)	1,267
◦ '신육아 안심 플랜'에 따른 보육 지원	349
IV. 방재·감제,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 안전 및 안심 확보	75,47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병상 확보 등)	15,189
◦ 백신 확보·접종 실시 및 체제 정비	12,072
◦ 코로나 대응 지방창생 임시교부금	7,500
◦ 방재·감제 및 국토 강인화를 위한 5년 가속화 대책 추진(공공사업관계비)	12,502

표 3-II-7 의 계속

(단위: 억엔)

경제대책	금액
◦ 재해 복구	5,144
◦ 자위대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의 대응	3,248
◦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지원	1,140
◦ 아시아(ASEAN·서남아시아 등), 도서국,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 지원	1,022
◦ 어린이 안심·안전 대책 지원 패키지(스쿨버스 안전장치 지원 등)	234
V. 향후 대비	47,400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및 원유 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37,400
◦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0,000
추경예산 추가 세출(일반회계)	290,861
추경예산 추가 세출(특별회계 대책 추경분 포함)	296,332

- 주: 1. FY 2022 추경예산(제2호)에는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실행에 관한 국비 외에 광열수도요금 등 추가 재정수요(2,229억엔)등을 계상
 2. 상기 특별회계 대책 추경분 포함 29조 6,332억엔에는 일반회계 추경 추가 세출 29조 861억엔 외에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 2,863억엔, 노동보험특별회계 1,721억엔 등 포함
 3. 표에 제시된 대표 정책사업들 외에 세부 정책들이 있음(V. 향후 대비 제외)
 1) 다른 분류로 정리된 사업금액을 포함
 2) 다른 분류에 정리된 사업을 합할 경우 약 6조엔
 3) 다른 분류에 정리된 사업을 합할 경우 약 1조엔
 4) 과학적 발견 및 혁신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선진 기술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획기적인 기술 포함)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の概要」, 2022.11.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b.pdf, 검색일자: 2022.11.9.

□ 재무성, FY2022 제2호 추경예산 국회 통과·확정 발표(2022.12.2.)¹⁴²⁾

-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 경제대책(10월 발표)의 실행을 위한 2022년 제2차 추경예산(11월 발표)이 정부안대로 확정¹⁴³⁾

¹⁴²⁾ 재무성, 「第2次補正予算 予算成立」, 2022.12.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fy2022.html, 검색일자: 2022.12.5.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 2022.11.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20221108033406.html, 검색일자: 2022.12.5.

¹⁴³⁾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KIPF 재정동향」, 2022.11, pp. 37~41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29>

- 기시다 총리의 핵심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기조 아래 고물가-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개혁에 중점을 두고 28조 9,222억엔 편성
-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 약 7.8조엔
-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강화 약 3.5조엔
-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약 5.5조엔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약 7.5조엔
- 코로나19 및 물가급등 예비비 약 4.7조엔 등

다. 집행 및 결산

- 재무성, FY¹⁴⁴⁾ 2021 결산개요 발표(2022.07.29.)¹⁴⁵⁾
 - FY2021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69조 4,031억엔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44조 6,495억엔으로 재정법 제 41조¹⁴⁶⁾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잉여금은 24조 7,535억엔으로 나타남

표 3-II-8 FY2021 일반회계 결산개요

(단위 : 억엔, 미만 버림)

구분	금액	참고
① 세입 결산총액	1,694,031	
② 세출 결산총액	1,446,495	
③ 재정법 제 41조 잉여금	247,535	(① - ②)
④ 2020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531	
⑤ 2021년도 신규발생잉여금	247,004	(③ - ④)
⑥ 2022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순잉여금의 계산상 공제액	224,272	

144) Fiscal Year 회계연도,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운영되고 있음

145) 재무성, 「令和3年度決算概要」, 2022.7.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1/ke040729.pdf, 검색일자: 2022.8.1.

146)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킨다.

표 3-II-8 의 계속

(단위 : 억엔, 미만 버림)

구분	금액	참고
⑦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2021년도 신규발생 잉여금	22,731	(⑤-⑥)
(1) 세입 순증가액	-40,296	
1) 세수	31,578	
2) 세외수입	8,124	
3) 공채금	-80,000	
(2) 세출 불용액	63,028	
⑧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의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8,919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자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8,290	
(2) 공항정비사업비등 자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비용 및 부흥상환비용재원 (부흥분(FY2011 추경예산(제3호) 이월분 및 2021년도분) 에 의한 잉여금)	629	
⑨ 재정법 제6조 ¹⁾ 에 의한 순 잉여금	13,811	(⑦-⑧)

주: 1. 재정법 제6조 :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1/2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 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2. 세외수입에는 부흥분(FY2011 추경예산 제 1·2호 이월분) 23억엔 포함

3. 억엔 미만 버림으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0은 단위 미만 수치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一般会計決算概要の内訳」, 2022.7.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t_workflow/account/fy2021/ke040729.pdf, 검색일자: 2022.8.1.

□ 재무성, FY2021 예산 사용상황 개요 발표(2022.9.2.)¹⁴⁷⁾¹⁴⁸⁾

- FY2021 일반회계 국가 수납 금액은 169조 4,031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144조 6,495억엔으로 24조 7,536억엔*의 잉여금 발생

* <표 3-II-9> 일반회계의 C-F

147)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使用の状況(令和3年度出納整理期間を含む。)の概要」, 2022.9.2.,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1/03_4sgai.html, 검색일자: 2022.9.6.

_____, 「令和3年度予算使用の状況(令和3年度出納整理期間を含む。財務省調査)」, 2022.9.2.,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1/03_4s.html, 검색일자: 2022.9.6.

148) 올해 7월 29일 발표된 결산개요 총액과 동일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8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p.33, 2022.9.1.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69>)

- FY2021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은 118.7%*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증가하였고, 이는 조세 및 인지도입의 증가**에 기인

* <표 3-II-9> 일반회계의 C/A

** +3조 1,578억엔

○ FY2021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4분기 수입 비율은 21.1%,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94.3%*를 기록

* <표 3-II-9> 특별회계의 F/D

표 3-II-9 FY2021 예산 사용 상황(출납정리기간포함)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425,992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D)	1,733,796
4분기 국가 수납 금액(B)	764,356	4분기 국가 지출 금액(E)	532,695
세입예산액 대비 4분기 수납 비율(B/A)	53.6% (47.5%)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4분기 지출 비율(E/D)	30.7% (22.4%)
4분기 누계(C)	1,694,031	4분기 누계(F)	1,446,495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118.7% (105.0%)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83.4% (80.9%)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4,654,997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D)	4,672,537
4분기 국가 수납 금액(B)	983,925	4분기 국가 지출 금액(E)	780,114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1.1% (23.4)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6.6% (19.5%)
4분기 누계(C)	4,555,544	4분기 누계(F)	4,410,814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97.8% (98.1%)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94.3% (94.8%)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使用の状況(令和3年度出納整理期間を含む)の概要」, 2022.9.2.,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0/02_4sgai.html, 검색일자: 2022.9.5.

- 재무성, 2022년 일반회계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 집행 상황 및 사용결정 발표(2022.9.20.)¹⁴⁹⁾
 -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예비비는 1차 추경 포함 6조 1,200억엔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4조 8,589억엔이 집행되고 예비비 잔액은 1조 2,611억엔
 - 2021년 12월 편성된 FY2022 예산에서 ‘코로나19 예비비’ 5조엔, 2022년 5월 31일 1차 추경예산으로 1조 1,200억엔이 추가 편성
 - 예비비는 기존 ‘코로나19 대책 예비비’에서 ‘코로나19 및 원유 등 물가상승 대책 예비비’로 집행 범위 확대
 - 예비비는 연료유 가격 급변 완화 사업에 1조 2,959억엔(26.7%)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
 -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금 8,540억엔(17.6%), 코로나19 긴급 포괄 지원금 8,266억엔(17%) 순으로 금액이 높음(<표 3-II-10>참고)

표 3-II-10 2022년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병 및 고물가 대책 예비비 사용실적

(단위: 억엔)

결정일	사업	금액
	2022년 예산액	50,000
	2022년 1차 추경	11,200
4월 28일	코로나19 및 원유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90
	중소기업 등 사업 재구조화 촉진 사업	1,000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여	2,043
	코로나19 감염병 안전망 강화 교부금	11
	고독·고립에 관한 각종 지원책을 전달하기 위한 체제 강화 등	10
	고독·고립대책 관련 NPO 등 지원	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8,000
	대학생 등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접종 촉진 사업	10
7월 29일	전기 이용 효율화 촉진 대책 사업	1,784
	비료 가격 급등 대책 사업	788

¹⁴⁹⁾ 재무성, 「令和4年度一般会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及び原油価格・物価高騰対策予備費使用実績」, 2022.9.2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220920.pdf, 검색일자: 2022.9.21.

표 3-II-10 의 계속

(단위: 억엔)

결정일	사업	금액
9월 20일	사료 가격 상승 긴급 대책 사업	504
	연료유 가격의 격변 완화 사업	12,959
	택시 LP가스 가격 격변 완화 사업	7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4,000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8,540
	코로나19 감염병 긴급 포괄 지원 교부금	8,266
	자위대 연료비(항공기·함선)	507
예비비 잔액		12,600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一般会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及び原油価格・物価高騰対策予備費使用実績」, 2022.9.2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220920.pdf, 검색일자: 2022.9.21.

- 재무성, FY2022 2분기 예산사용현황 발표(2022.12.8.)¹⁵⁰⁾
 - FY2022 2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21조 6,856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5조 6,928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4조 72억엔 초과
 - FY2022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10조 2,973억엔 대비 2분기 수입 비율은 19.6%로 전년 동기 17.7% 대비 1.9%p 증가
 -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19.3%로 전년 동기(20.2%) 대비 0.9%p 감소
 - FY2022 2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2.9%로 전년 동기 22.2%와 비교하여 0.7%p 상승하였고,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3.2%(전년 동기 25.0%)를 기록함

¹⁵⁰⁾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2/04_2gai.html, 검색일자: 2022.12.9.

표 3-II-11 FY2022 2분기 예산사용상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 (A)	1,102,973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¹⁾ (D)	1,327,246	세입예산액 (A)	4,705,401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¹⁾ (D)	4,728,263
2분기 국가 수납 금액(B)	216,856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56,928	2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078,091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099,399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9.6% (17.7%)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 (E/D)	19.3% (20.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2.9% (22.2%)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 (E/D)	23.2% (25.0%)
2분기 누계(C)	225,144	2분기 누계(F)	606,464	2분기 누계(C)	2,530,377	2분기 누계(F)	2,591,139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20.4% (18.4%)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45.6% (45.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53.7% (50.8%)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54.8% (54.9%)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2. 12.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2/04_2gai.html, 검색일자: 2022. 12. 9.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대책

- 내각부,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 2차 회의 개최(2022. 7. 15.)¹⁵¹⁾
 - (개요) 내각부 산하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¹⁵²⁾ 회의에서 물가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초래한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물가 대응 방안 논의
 - (물가 동향) 2022년 5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2.5%로 나타남
 - 소비자 물가상승률 2.5%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월도 동일하게 2.5%를 기록함
 - (국제 비교) 일본은 휘발유 가격 급등 완화 사업, 전기요금 조정 조치, 밀 국내 가격 상승 억제 정책 등을 통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 G20 국가의 절반 정도가 7%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나, 일본은 하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국제 협력)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 설정·준수 및 수입 금지 등과 우크라이나 밀 수출 재개 지원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이 논의됨을 알림

151) 내각부, 「第2回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開催」, 2022. 7. 15.,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2. 7. 18.

수상관저,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2022. 7. 15.,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207/15taisakuhonbu.html, 검색일자: 2022. 7. 18.

152)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는 유가 및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빠른 대응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확실하게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신설됨.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내각부 산하에 설치함. 1차 회의는 2022년 6월 21일에 개최되었음

- (정책 대응) 1조엔 규모의 지방창생임시보조금을 이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지원과 주요 물가 상승 요인*인 에너지 및 식료품에 집중 대책을 진행하고 있음

* 소비가물가 상승은 주로 에너지(약 50%), 신선식품(약 20%),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약 20%)에 기인함

- (개인) 저소득자 대상 전기료 등 에너지가격 상승분 한시적 지원, 학교급식 식자재비 지원, 연료비 조정 제도 등에 따른 전기 및 가스 일부 요금 상한 설정, 장기 계약을 통한 LNG 조달 등
- (사업자) 전기 등 요금 급등에 대응한 에너지요금 보조 및 산업 지원, 수산·시설원예·축산 등 경영 지원
- (에너지) 휘발유 등 연료 보조금 지원,¹⁵³⁾ 지방창생임시보조금을 활용한 전기요금 지원, 절전프로그램¹⁵⁴⁾을 도입하여 절전을 유도(7월 11일부터 집행단체 공모)
- (식료품) 화학비료 20% 저감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자에게 비료가격 상승분의 70%를 보전하는 등 생산비용 감소를 위한 새로운 지원금 마련, 비료 조달 국가 다각화, 밀 가격 상승의 억제 9월까지 연장 등
- (임금) 올해 전국 평균 1천엔 이상의 최저임금 조기 달성을 위해 이번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내고자 함

¹⁵³⁾ 올해 1월부터 연료 격변 완화 대책을 시행했으며, 휘발유의 경우 4월부터 전국 평균 리터당 가격이 168엔 이상될 경우 1리터당 25엔에서 35엔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35엔 이상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초과분의 1/2를 지원함. 1월 하순 이후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170엔 전후의 추이를 보임(지원 조치가 없을 경우 6월 휘발유 예상가격은 리터당 210엔 내외)

¹⁵⁴⁾ 절전에 참여하는 경우 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절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일을 등록한 가정이나 기업에 일정액의 포인트 등을 부여하고(가정용 등록 시 2천엔), 가을 이후 날씨로 인한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전력회사 포인트에 더해 정부에서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함

- 기사다 총리, ‘제 10차 새로운 자본주의¹⁵⁵⁾ 실현 회의’를 통해 종합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중점사항을 발표(2022.10.4.)¹⁵⁶⁾
 - 올해 10월 중 발표할 종합 경제대책을 위해 기사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과제 중 인적투자와 스타트업 지원 측면의 중점사항을 언급
 - (인적 투자·분배) 단기 임금 인상과 중장기적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임금 인상 추진
 - (임금 인상) 내년 봄 임금 협상(춘투¹⁵⁷⁾)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각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노사 논의를 촉구
 - 하청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청대금법 등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사업 재구축 보조금’을 지급
 - 동일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불합리한 대우차별을 금지하는 노동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
 - (노동 이동) 성장 분야로 노동 이동을 위해 재교육 지원, 민간 전문가 이직 상담, 연공제에서 직무급으로의 전환 등 기업 간·산업 간 노동이동의 원활화 추진
 - (인적 투자) 현재 3년간 4천억엔 규모의 인적투자 정책에서 5년간 1조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로 인적투자를 확대
 - 디지털 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현재 100만명에서 2026년 330만명 육성을 목표
 - 성장 분야로의 학부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등 포함 신설 학부 준비 및 운영에 관해 개선후 5년간 경비를 보조

155) 지난 2021년 10월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 원리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종 병폐를 야기했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을 위한 인적 자본,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6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pp. 34~37, 2022.6.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28>)

156) 수상관저, 「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 2022.10.4.,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210/04shihon.html, 검색일자: 2022.10.5.
내각부, 「第10回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議事要旨」, 2022.10.4.,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0/gijiyousi.pdf, 검색일자: 2022.10.25.

157) 춘투(春闘), 일본에서 매년 봄(2월)부터 열리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조건 개선을 협상하는 노동운동

- (스타트업 지원) 5년 후 스타트업 기업 수 10배 증가를 목표로 올해 말 5개년 계획 발표 예정
 -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기존 기업이 동 사업 철수 후 경영 자원을 높은 성장성 및 수익성 전망 사업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스타트업 등과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 스타트업 창업 5년 이내에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신용 보증 제도를 창설할 예정

나. 최저임금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2022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발표(2022.8.2.)¹⁵⁸⁾
 -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성 장관의 지문기관)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최저임금을 961엔으로 결정하여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¹⁵⁹⁾
 - 현재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은 930엔으로 전년도 대비 3.3%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31엔(전년 상승폭은 28엔, 증가율 3.1%)
 - 2021년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A등급 지역) 도쿄 1,041엔, 오사카 992엔, 치바 953엔 등
 - (B등급 지역) 교토 937엔, 히로시마 899엔 등
 - (C등급 지역) 후쿠오카 870엔, 홋카이도 889엔 등
 - (D등급 지역) 후쿠시마 828엔, 나가사키 821엔, 오키나와 820엔 등
 - 각 도도부현 최저임금 심의회에서 이를 참고하여 지역 임금실태 조사 혹은 자문 등을 거쳐 각 도도부현 최저임금액이 결정됨
 - 지역별 최저임금은 각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4등급(A~D)으로 나뉘며, 도쿄, 오사카 등 A지역 및 교토, 히로시마 등과 B지역의 2022년 인상액 기준은 31엔, 홋카이도, 아키타 등 C, D지역은 30엔으로 결정

¹⁵⁸⁾ 후생노동성, 「令和4年度地域別最低賃金額改定の目安について」, 2022.8.2., https://www.mhlw.go.jp/stf/newpage_27195.html, 검색일자: 2022.8.4.

¹⁵⁹⁾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분배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이 최소 1천엔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3-II-12 등급별 인상액 기준표

등급	도도부현	금액
A	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31엔
B	이바라키, 도치기, 토야마,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미에, 시가, 교토, 효고, 히로시마	31엔
C	홋카이도, 미야기, 군마, 니가타, 이시카와, 후쿠이, 기후, 나라, 와카야마, 오카야마, 야마구치, 도쿠시마, 카가와, 후쿠오카	30엔
D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돗토리, 시마네, 에히메, 고치,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30엔

자료: 第64回中央最低賃金審議会, 「令和4年度地域別最低賃金額改定の目安について」, 2022.8.2., https://www.mhlw.go.jp/stf/newpage_27195.html, 검색일자: 2022.8.4.

다. 일본은행 통화정책 등 발표

- 일본정부·일본은행, 외환시장 엔 매수·달러 매도 환율개입 실시(2022.9.22.)¹⁶⁰
 - 일본 당국 및 일본은행은 미국 금리 격차 확대에 의한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9월 22일 저녁 ‘엔 매수·달러 매도’ 환율 개입을 24년 만에 실시
 - 일본은행 총재의 금융완화 유지와 금리인상 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로 9월 22일 엔화 가치는 1달러당 145.9엔까지 하락했었으나, 개입을 실시한 한 때 140엔까지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상승
 - 일본의 환율 개입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외환 개입은 최근 엔의 변동성 고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밝힘
- 일본은행,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발표(2022.9.22.)¹⁶¹
 -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지속과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은 약하지만 완만하게 개선되고, 개인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160) 블룸버그일본, 「24年ぶり円買い介入、「過度な変動は見過ごせず」と鈴木財務相」, 2022.9.22.,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2-09-22/RILR2TTOAFB701>, 검색일자: 2022.9.26.

_____, 「米財務省、日本の為替介入に「理解」表明 - 米は参加せずと当局者」, 2022.9.23.,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2-09-22/RIMBTPTOG1KW01>, 검색일자: 2022.9.26.

161)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2.9.22.,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2/k220922a.pdf, 검색일자: 2022.9.26.

- (물가)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2%대 후반에 있으며, 기대 물가상승률이 높아짐
- (금리)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2%대의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위해 단기금리*는 -0.1%의 마이너스 금리, 장기금리**는 0%로 유지하고 장기 국채를 상한없이 매입하는 금융완화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

* 중앙은행 당좌예금 잔고에 적용하는 금리

** 10년물 국채금리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 운용 조정 발표(2022.12.20.)¹⁶²⁾

- (목적)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하면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고, 수익률곡선 통제를 위해 장단기 금리조작 운용을 일부 재검토하기로 결정
 - 수익률 곡선 조정을 통한 금융완화 효과가 기업금융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파급되게 하고, 금융완화의 지속성을 높여 물가안정 목표를 이루고자 함
- (금융시장 조절) 기존 장·단기 금리 수준은 유지하고, 장·단기금리 운용을 변경
 - (물가 목표)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장·단기 금리조작을 통한 금융완화를 지속
 - (장단기 금리) 단기 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 대상 -0.1% 금리를 유지하고, 장기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 정도로 유지되도록 운용
 -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0.082~0.250%(12/20) 수준
 - (금리 운용)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을 기존 $\pm 0.25\%$ 에서 $\pm 0.5\%$ 로 확대¹⁶³⁾
- (경제동향) 고물가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억제와 경제회복으로 반등세
 - 수출과 광공업은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기업수익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증가

¹⁶²⁾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2.12.20.,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2/k221220a.pdf, 검색일자: 2022.12.21.

¹⁶³⁾ 일부에서는 장기금리 허용폭을 확대하면 일본은행 국채매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시장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 고용·소득을 둘러싼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개인소비는 코로나 19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상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대 증반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대 물가상승률은 상승하고 있음
 - 11월 전년 동월 대비 종합 소비자물가상승률(계절조정치)은 3.8%이고,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상승률(계절조정치)은 3.7%이며,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상승률(계절조정치)은 2.8%(통계청, 12.23 발표)¹⁶⁴⁾
 -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 기여도가 큰 항목들로는 전기세 20.1%(기여도 0.72), 가스비 21.0%(기여도 0.33), 외식 5.3%(기여도 0.25), 주거 설비수리·유지 7.5%(기여도 0.25)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전망) 고물가 상황과 해외경제 성장둔화에 따라 하강 압력을 받지만 코로나19와 공급 제약의 완화로 경제회복이 전망되고,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
- (위험요인) 해외 경제·물가 동향, 우크라이나 정세와 원자재 가격 동향, 코로나 19 영향 등의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환율시장의 동향과 그에 따른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

¹⁶⁴⁾ 통계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2年(令和4年)11月分」, <https://www.stat.go.jp/data/cpi/sokuhou/tsuki/pdf/zenkoku.pdf>, 검색일자: 2022.12.26.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 재무성, 2022년 상반기(4~9월) 무역수지 속보치 발표(2022.10.20.)¹⁶⁵⁾
 - 수출은 자동차, 광물자원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유 및 석탄 등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
 -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자동차 22.0%, 광물자원 176.0%, 철강 26.7%
 - (수입) 2021년 4~9월 대비 수입 증가율은 원유 111.8%, 석탄 236.8%, 액화 천연가스 138.6%
 - 무역적자는 11조 74억엔으로 2016년 이래 반기 기준 최대 규모 무역적자 기록*
 - *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상반기 1달러당 평균 132.24엔, 전년 동기 대비 22엔 이상 약세)로 인한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 규모 증가¹⁶⁶⁾

¹⁶⁵⁾ 재무성, 「令和4年度上半期分貿易統計(速報)の概要」, 2022.10.20., https://www.customs.go.jp/toukei/shinbun/trade-st/gaiyo2022_4-9.pdf, 검색일자: 2022.10.21.

¹⁶⁶⁾ 『NHK뉴스』, 「今年度上半期の貿易赤字 11兆円超え 半期で過去最大(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11조엔 초과, 사상 최대)」, 2022.10.20, <https://www3.nhk.or.jp/news/html/20221020/k10013864771000.html>, 검색일자: 2022.10.28.
『야후뉴스』, 「貿易赤字 過去最大の1兆円」, 2022.10.20., <https://news.yahoo.co.jp/articles/2c85db7165f2be848a55a3f594c03cab27941ab7>, 검색일자: 2022.10.28.

표 3-II-13 일본 반기별(4월~9월) 무역추이

(단위: 백만엔, %)

기간	수출	동기 대비 변화율(%)	수입	동기 대비 변화율(%)	차이	동기 대비 변화율(%)
2016년 상반기	34,020,615	-9.9	31,613,735	-19	2,406,880	-
하반기	37,501,633	3.1	35,935,069	-0.7	1,566,564	772.4
2017년 상반기	38,373,600	12.8	36,509,287	15.5	1,864,313	-22.5
하반기	40,847,649	8.9	40,301,189	12.2	546,460	-65.1
2018년 상반기	40,355,544	5.2	40,135,526	9.9	220,018	-88.2
하반기	40,354,342	-1.2	42,183,443	4.7	-1,829,101	-
2019년 상반기	38,238,398	-5.2	39,091,873	-2.6	-853,475	-
하반기	37,640,394	-6.7	38,080,553	-9.7	-440,159	-75.9
2020년 상반기	30,905,678	-19.2	32,188,586	-17.7	-1,282,908	50.3
하반기	38,579,741	2.5	36,280,742	-4.7	2,298,999	-
2021년 상반기	41,464,575	34.2	41,937,140	30.3	-472,565	-63.2
하반기	44,413,091	15.1	49,334,555	36.0	-4,921,464	-
2022년 상반기 (속보치)	49,576,259	19.6	60,583,758	44.5	-11,007,499	2229.3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上半期分貿易統計(速報)の概要」, 2022.10.20., p.3, https://www.customs.go.jp/toukei/shinbun/trade-st/gaiyo2022_4-9.pdf, 검색일자: 2022.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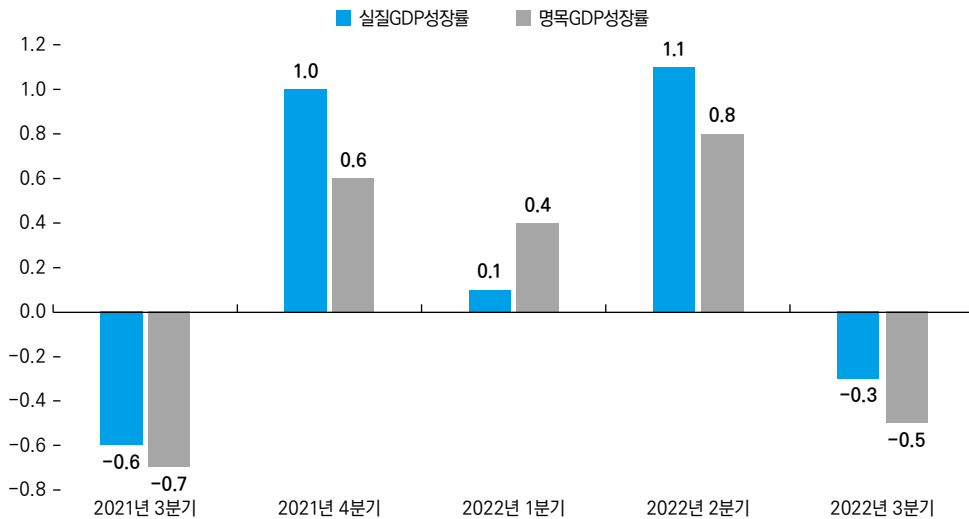
- 내각부, 2022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2. 11. 15.)¹⁶⁷⁾
-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이고(연율 -1.2%), 명목 GDP 성장률은 -0.5%(<표 3-Ⅱ-14> 참고)
 -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0.4%, 재화·서비스 순수출 -0.7%
 - 명목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1.3%, 재화·서비스 순수출 -1.8%
 - (국내수요) 2022년 2분기 1.0%에서 0.6%p 감소한 3분기 0.4% 증가
 - (민간수요) 2022년 3분기 민간수요 성장률은 0.4%(전 분기 1.0%)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3%(2분기 1.2%), 명목 1.1%(2분기 2.4%)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3%(2분기는 1.3%), 명목 1.1%(2분기는 2.4%)
 - 민간주택은 전 분기 대비 실질 -0.4%(2분기는 -1.9%)로 감소
 - 민간기업설비는 실질 1.5%(2분기는 2.4%), 명목 2.7%(2분기는 3.8%)
 - (공적수요) 2022년 3분기 공적수요는 전 분기 0.8% 대비 0.6%p 감소한 0.2%
 -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0%(2분기는 0.8%), 명목 1.3%(2분기는 0.3%)
 -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실질 1.2%(2분기는 1.0%), 명목 2.0%(2분기는 2.4%)
 - (수출·수입)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재화·서비스 수출 변화율은 실질 1.9% (2분기 1.8%), 명목 5.0%(2분기 7.6%)이고, 재화·서비스 수입 변화율은 실질 5.2%(2분기 0.8%), 명목 11.4%(2분기 11.9%)

¹⁶⁷⁾ 내각부, 「2022년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2.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2. 11. 17.

표 3-II-14 실질 GDP 및 명목GDP 성장률 추이(계절조정전기대비)

(단위: %)

구분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0.6	1.0	0.1	1.1	-0.3
국내수요	-0.7	1.0	0.5	1.0	0.4
민간수요	-1.1	1.8	0.8	1.0	0.4
민간최종소비지출	-1.0	2.5	0.3	1.2	0.3
가계최종소비지출	-1.0	2.5	0.3	1.3	0.3
민간주택	-1.8	-1.4	-1.3	-1.9	-0.4
민간기업시설	-2.3	0.3	-0.1	2.4	1.5
민간재고변동(기여도)	0.2	-0.0	0.5	-0.2	-
공적수요	0.2	-1.0	-0.3	0.8	0.2
정부최종소비지출	1.2	-0.3	0.4	0.8	0.0
공적 고정자본형성	-3.6	-3.7	-3.0	1.0	1.2
공적 재고변동(기여도)	-0.0	0.0	-0.0	-0.0	-
총고정자본형성	-2.5	-0.8	-0.9	1.5	1.2
순수출(기여도)	0.1	-0.0	-0.5	0.2	-
수출	-0.6	0.6	1.1	1.8	1.9
수입	-1.3	0.7	3.6	0.8	5.2
명목 GDP 성장률	-0.7	0.6	0.4	0.8	-0.5



자료: 내각부, 「2022년7~9月期四半期別 GDP 速報 (1次速報値)」, p.1; p.11, 2022.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2. 11. 17.

나. 경제 및 재정전망

□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2.7.29.)¹⁶⁸⁾

-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가정) 2023년도까지의 경제동향은 내각부 수정경제전망을 토대로, 2024년도 이후는 과거 실적 및 현재 경제동향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GDP 및 물가 동향 등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¹⁶⁹⁾
- (경제전망) 2021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강한 하방압력하에서도 반등 움직임이 유지되어 실질 2.2%, 명목 1.2%로 나타남. 2022년에는 서비스 소비 회복 전망으로 실질 2.0%, 명목 2.1% 경제성장 전망([그림 3-II-3], [그림 3-II-4] 참고)
- (재정전망) 2021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세출 증가 등으로 -5.3%로 전망되고, 2022년에는 전년도 추경 이월 등의 영향으로 -7.3% 전망([그림 3-II-5] 참고)
 - GDP 대비 공채 잔액 비율은 2021년 215.8%, 2022년 217.6%로 전망됨 ([그림 3-II-6] 참고)
- (중장기 경제전망)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재생을 가정 성장실현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실질 2%, 명목 3%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2025년에 명목 GDP 600조 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이후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을 가정하는 기준선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장기 경제 성장률은 실질·명목 모두 0%대 증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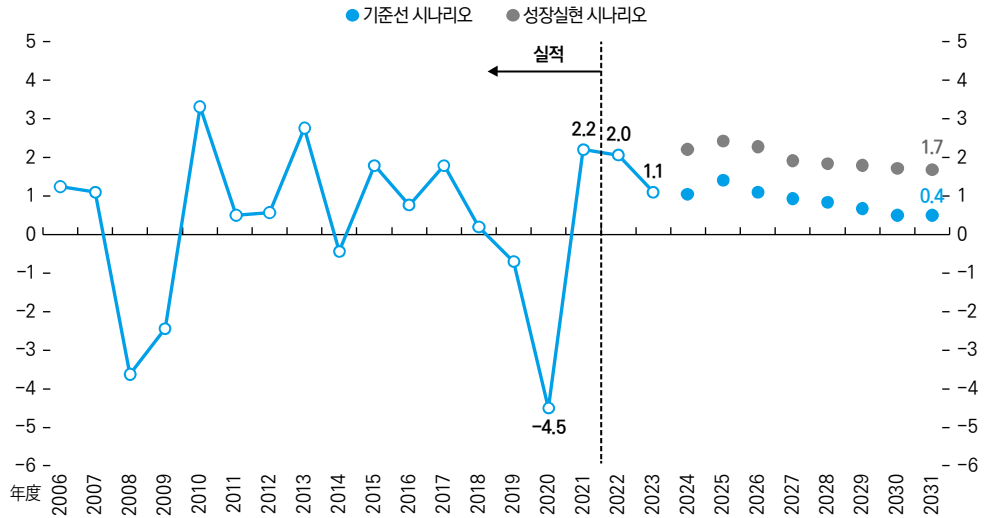
¹⁶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令和4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2.7.29.,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 검색일자: 2022.8.1.

¹⁶⁹⁾ • (성장실현 시나리오)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재생 목표를 과거 실적 수준으로 실현하는 경우(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기 이전 실제 경험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속도로 증가 등을 가정(현재 약 0.5%수준에서 약 1.4%까지 상승)
 • (기준선 시나리오)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향후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 약 0.6% 가정 등)

- (중장기 재정전망) 성장실현 케이스의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0.1%, 2026년에 흑자 전환 전망되며, GDP 대비 공채 잔액 비율은 예산기간 내에 감소 예상됨
 - 기준선 시나리오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 -1.1% 수준으로 전망 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고, GDP 대비 공채 잔액비율은 전망기간 후반에 상승함

그림 3-II-3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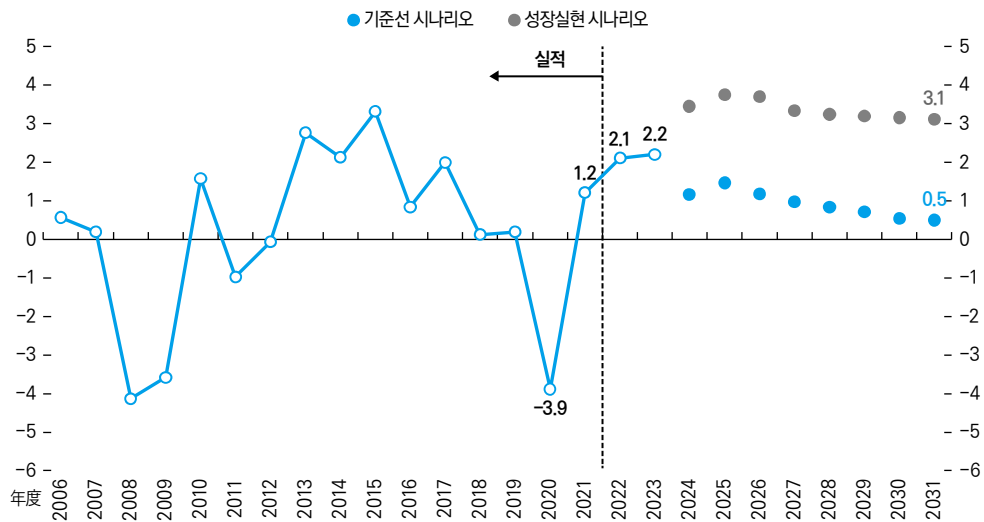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令和4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p. 4, 2022. 7.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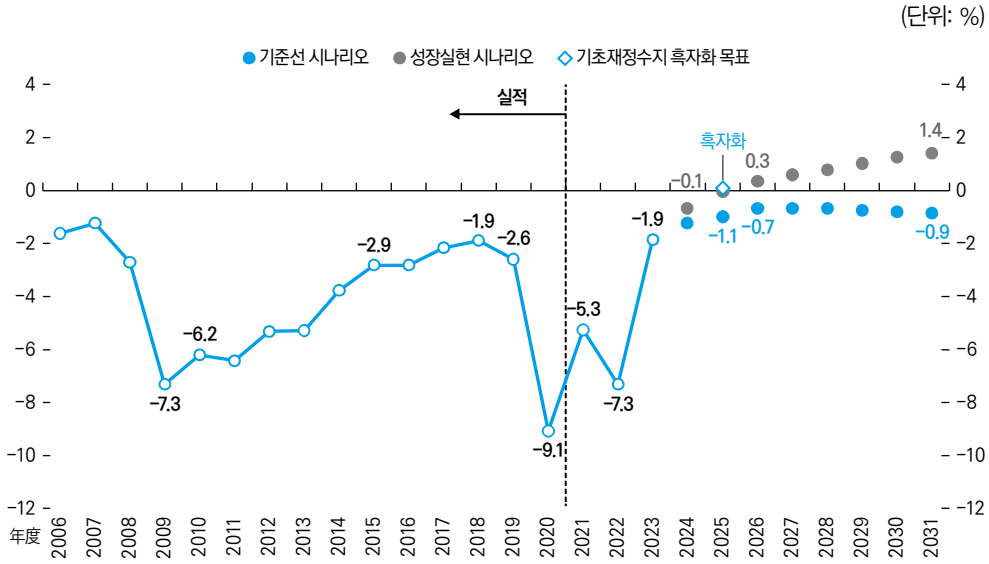
그림 3-II-4 명목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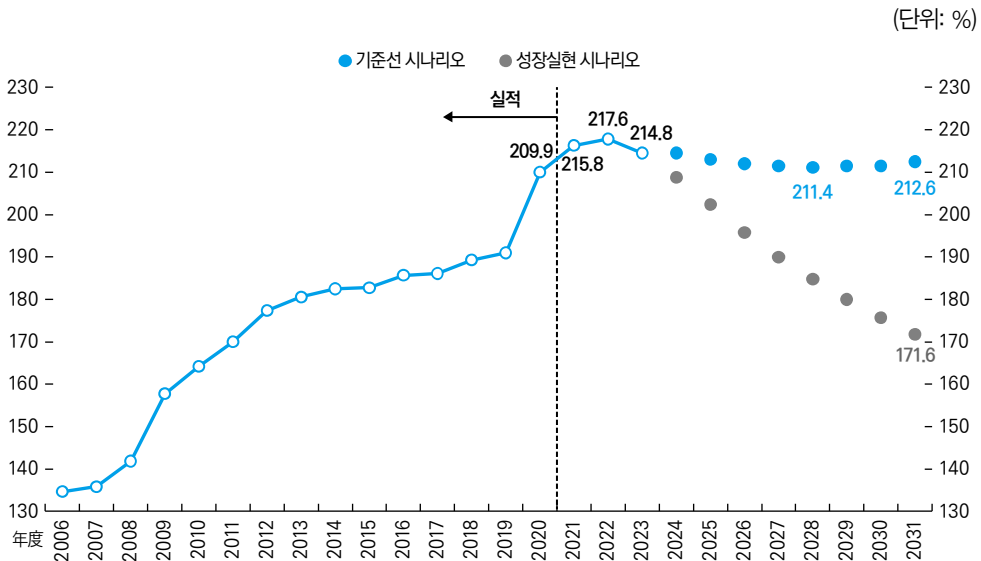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令和4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p. 4, 2022. 7.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8.5.

그림 3-II-5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令和 4 年 7 月 29 日 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p. 6, 2022. 7. 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 8. 5.

그림 3-II-6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令和 4 年 7 月 29 日 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p. 6, 2022. 7. 29.,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4chuuchouki7.pdf>, 검색일자: 2022. 8. 5.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2.7.21.)¹⁷⁰⁾
 - (경제)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있으나 코로나19 및 공급 제약의 영향 완화로 점차 경제회복 전망
 -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실질 GDP는 2022년 2.4%, 2023년 2.0%, 2024년 1.3% 전망(<표 3-II-15> 참고)
 - (물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상승률은 증가할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여가 감소하여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는 거시경제 수급 격차가 완화되어 중장기 예상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완만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2.3%, 2023년 1.4%, 2024년 1.3%로 전망
 - (위험) 대내외 코로나19 감염병 영향과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 에너지 가격 및 해외 경제·물가 동향 변화 등으로 일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음
 - 금융·환율 시장 동향과 경제·물가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전망은 당분간 하방 리스크가 있으나, 그 후는 대체로 상·하방 밸런스를 유지하고, 물가 전망은 상방 리스크가 크지만 이후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¹⁷⁰⁾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 2022年7月」, 2022.7.2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07a.pdf>, 검색일자: 2022.8.5.

표 3-II-15 2022~2024년 정책위원 경제·물가 대세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제외)
2022년	+2.2~+2.5 <+2.4>	2.2~+2.4 <+2.3>
4월 시점 전망	+2.6~+3.0 <+2.9>	+1.8~+2.0 <+1.9>
2023년	+1.7~+2.1 <+2.0>	+1.2~+1.5 <+1.4>
4월 시점 전망	+1.5~+2.1 <+1.9>	+0.9~+1.3 <+1.1>
2024년	+1.1~+1.5 <+1.3>	+1.1~+1.5 <+1.3>
4월 시점 전망	+1.1~+1.3 <+1.1>	+1.0~+1.3 <+1.1>

- 주: 1. ‘대세 전망’은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3.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 2022年7月」, 2022.7.21., p.9,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07a.pdf>, 검색일자: 2022.8.5.

□ 내각부, 10월 월례경제보고 발표(2022.10.25.)¹⁷¹⁾

-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을 기대
 - (정책 방향)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 주도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
 - (물가)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0%이고,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10월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비) 올해 9월 이후 외식, 여행·숙박 등 서비스 소비의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상황

171) 내각부, 「月例經濟報告等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資料」,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2022/10kaigi.pdf>, 검색일자: 2022.10.26.

- (생산) 제조업 생산은 기업의 투자 증가를 배경으로 기계와 건설자재 등의 투자재 생산이 견조한 성장
- (수출) 품목별로 보면 기계·자동차 등 생산용 기계 수출이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PC 등 세계 수요 감소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수출 감소
- (고용) 8월 실업률은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감은 완만하게 변동하여 고용 상황은 회복세
 -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의 비율인 유효구인배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소비 개선으로 숙박·음식업 관련 종사자 구인이 증가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2.10.28.)¹⁷²⁾

- (전망)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해외 경제 둔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코로나19와 공급 제약 완화로 경제는 회복되고,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가계) 정규직 고용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대면형 서비스 재개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예상되고, 노동 수급 개선이 임금 상승률 증가로 이어져 소득의 완만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기업) 공급 제약 완화로 수출과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입국 제한조치의 해제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수익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지연되었던 수요의 해소와 경제활동 개선에 따라 낮은 환율의 이점 등을 통해 수익 증가 예상
 - (물가)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식료품, 내구재 등 가격 상승으로 2022년 3%의 높은 물가성장률이 예상되고 2023년과 2024년 1%대 중반의 물가상승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동향, 우크라이나 정세, 에너지 가격 동향, 대내외 코로나감염 동향과 영향 등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환율시장 동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

¹⁷²⁾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2年10月), 2022.10.28.,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10a.pdf>, 검색일자: 2022.10.28.

- (금융정책) 2%의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 금리 조정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
 -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 실적치가 2%를 안정적으로 초과할 때까지 확대 방침을 유지

표 3-II-16 2022~2024 정책위원 대세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제외)	(참고)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에너지 제외)
2022년	+1.8~+2.1 <+2.0>	+2.8~+2.9 <+2.9>	+1.8~+1.9 <+1.8>
7월 시점 전망	+2.2~+2.5 <+2.4>	+2.2~+2.4 <+2.3>	+1.2~+1.4 <+1.3>
2023년	+1.5~+2.0 <+1.9>	+1.5~+1.8 <+1.6>	+1.5~+1.8 <+1.6>
7월 시점 전망	+1.7~+2.1 <+2.0>	+1.2~+1.5 <+1.4>	+1.2~+1.4 <+1.4>
2024년	+1.3~+1.6 <+1.5>	+1.5~+1.9 <+1.6>	+1.5~+1.8 <+1.6>
7월 시점 전망	+1.1~+1.5 <+1.3>	+1.1~+1.5 <+1.3>	+1.4~+1.7 <+1.5>

- 주: 1. ‘대세 전망’은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 수치에 대해 최댓치와 최솟치 1개씩을 제외한 범위로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장래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3.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2年10月), 2022.10.28., p.10,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10a.pdf>, 검색일자: 2022.10.28.



독일*

□ 2022회계연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표 3-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7.1.	연방 내각,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채택
2022.7.27.	연방 정부, 1,700억유로 규모의 기후 변화 기금(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계획 승인
2022.8.10.	연방 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
2022.9.3.	독일 연정위원회, 650억유로 규모의 제3차 구호 패키지 발표
2022.9.29.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 가을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발표
2022.9.29.	연방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보호막' 발표
2022.10.11.	연방 통계청,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
2022.10.12.	연방 경제기후부,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2.10.17.	연방 재무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
2022.11.15.	연방 정부, 가스 및 전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 통과
2022.12.16.	연방은행, 2023~2025년 경제전망 발표
2022.12.16.	안정화위원회, 제26차 회의 개최

* 박지혜 선임연구원(jihye0105@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연방 내각,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채택(2022.7.1.)¹⁷³⁾¹⁷⁴⁾¹⁷⁵⁾
 - (안정 지향적 재정정책으로의 복귀) 예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부채규정 기준 한도¹⁷⁶⁾를 넘겨 왔으나 2023년부터는 재정정책의 전환점으로써 부채 한도를 지키며 안정지향적인 재정정책으로 돌아갈 계획
 -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기후 보호, 교통, 디지털화, 혁신,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경제전망) 독일 경제는 계속되는 원자재 공급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22년 4월 27일 발표된 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2%로 2022년 3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2022년 전년도에 비하여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고정자본형성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여행 및 관광의 재개의 영향으로 2022년 전년 대비 5.5% 증가하고, 수출은 원자재 병목현상이 완화되면서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173) 연방 재무부, “Haushaltsentwurf 2023 beschlossen: Weichenstellung für eine höhere Resilienz der öffentlichen Finanzen,” 2022.7.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Bundeshaushalt/2023/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3.html, 검색일자: 2022.7.4.

174) 연방 재무부, “Staatsfinanzen stabilisieren, Zukunftsinvestitionen ausbauen, fiskalische Resilienz stärken,” 2022.7.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7/2022-07-01-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3.html>, 검색일자: 2022.7.4.

175) 연방 정부, “Für eine zukunfts- und handlungsfähige Finanzpolitik,” 2022.7.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abinett-bundeshaushalt-2023-2058762>, 검색일자: 2022.7.4.

176) 독일 기본법 제109조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 수입 없이 예산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기본법 제115 조는 신규 차입을 명목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고 있음

- 2023년에는 2.5%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2024~2026 기간 동안 연간 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23년 재정지출은 4,452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한 수치, 재정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세입은 2023년 전년 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2021년 마스트리히트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69.3%로 2020년의 68.7%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줄어 GDP의 66.75%에 이를 것이며 전망기간 동안 64.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3년부터는 부채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신규차입액이 2022년 약 1,400억 유로에서 2023년에는 172억유로로 줄어들고, 2024~2026 기간 동안에도 평균 130억유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 2014년 수준으로 인상된 금리로 인하여 이자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2023년 이자지출액은 봄에 예측한 금액보다 120억유로 이상 많은 3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정책) 독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되돌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많은 지원을 할 계획
 - 독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적이며 디지털화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연간 약 520억유로 규모의 투자 지출을 할 계획
 -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2천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 연금보험에 대한 지출은 2023년 1,124억유로에서 2026년 1,288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이며, 유아교육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억유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주택에 대한 연방의 주 정부 재정 지원도 25억유로로 크게 증가
 - 연방 정부는 불확실성이 강한 환경에서 행동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
 - 에너지 공급 확보에 54억유로, 글로벌 위기 대책에 50억유로, 코로나19 백신조달에 22억유로 제공

- 국방,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국제 기후 보호 분야에 기금을 제공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 국제 기후 및 생물 다양성 기금에 2023년에만 40억유로를 기여할 것이며, 세계 2위의 공여국으로서 개발 협력에 연간 220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표 3-III-2 2022~2023 예산안 및 2024~2026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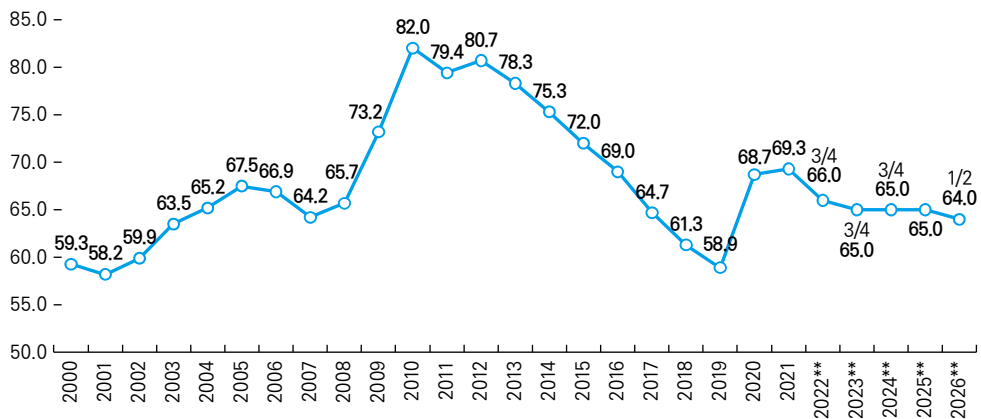
(단위: 억유로)

구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4	2025	2026
재정지출	4,958	4,452	4,237	4,286	4,363
전년대비 증가율(%)	-10.9	-10.2	-4.8	1.2	1.8
재정수입	4,958	4,452	4,237	4,286	4,363
조세수입	3,284	3,623	3,745	3,881	4,023
신규차입	1,389	172	123	128	138
투자지출	515	584	517	521	519

자료: 연방 재무부, *Bundeshaushalt 2023*, 2022. 7. 1., p. 4.

그림 3-III-1 독일 국가채무 추이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2. 2022~2026년 전망

자료: 연방 재무부, *Bundeshaushalt 2023*, 2022. 7. 1., p. 5.

□ 연방 재무부, 제163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¹⁷⁷⁾ 결과 발표(2022. 10. 27.)¹⁷⁸⁾¹⁷⁹⁾¹⁸⁰⁾

* 연방 정부의 2022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 거시경제 수치를 기반으로 추계

- 제163차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를 제외한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의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난 추계(2022. 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올해 예상 수익은 지난 5월 추계와 달리 1,2차 구호패키지에 따른 재정적 영향이 추정치에 포함되어 크게 줄어듦
 - 2023년 실제 세수는 입법 과정에 있는 인플레이션 보상법¹⁸¹⁾ 및 2022년 세법(Jahressteuergesetz 2022)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더욱 감소할 것
- 총 세수는 2027년까지 1조 1,148억유로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2021년 8,332억 유로를 기준으로 추정기간 동안 연평균 5%씩 성장한 수치
 - 2020년 새롭게 시작된 재정조정제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연방 정부 세수가 총 세수 증가율(6.5%) 대비 큰 폭(7.8%)으로 증가할 전망
 - 총 세수에서 연방 정부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39%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19년의 약 41%를 밑도는 수치

177) 독일의 세수추계는 일 년에 두 차례(통상 5월, 11월) 발표하며, 세수추계위원회(Arbeitskreis Steuerschätzungen)는 간사역할을 맡은 연방재무부를 비롯하여 연방 경제기후부, 5대경제연구소, 연방통계청,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1955년 예산안, 1968년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수추계결과를 연방 정부에 전달하였고 연방 재무부는 이를 직접 공표함 (자료: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Estimate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Taxation/Articles/working-party-on-tax-revenue-estimates.html>, 검색일자: 2022. 11. 23.)

178) 연방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2022. 10.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0/2022-10-27-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2. 11. 8.

179) 연방 정부, “Lindner: Mehreinnahmen geben wir zurück,” 2022. 10. 2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teuerschaetzung-lindner-2022-2138376>, 검색일자: 2022. 11. 8.

180) 연방재무부, “Ergebnisse der Steuerschätzung vom 25. bis 27. Oktober 2022,” 2022. 11.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11/Inhalte/Kapitel-3-Analysen/3-2-ergebnisse-steuerschaetzung-oktober-2022.html>, 검색일자: 2022. 11. 24.

181) 인플레이션 보상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재정동향 8월호』, 「연방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2022. 8. 10.)」 참고

- 올 겨울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표 3-III-3 제163차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방 정부	2022.5월 추계	3,137 (10.8)	3,452 (10.1)	3,652 (5.8)	3,787 (3.7)	3,911 (3.3)	4,044 (3.4)	-
	2022.10월 추계	3,137 (10.8)	3,380 (7.8)	3,697 (9.4)	3,903 (5.6)	4,100 (5.0)	4,241 (3.4)	4,382 (3.3)
주정부	2022.5월 추계	3,551 (12.3)	3,751 (5.6)	3,884 (3.6)	4,029 (3.7)	4,157 (3.2)	4,299 (3.4)	-
	2022.10월 추계	3,551 (12.3)	3,780 (6.5)	3,874 (2.5)	4,119 (6.3)	4,311 (4.6)	4,463 (3.5)	4,619 (3.5)
지방자치단체	2022.5월 추계	1,262 (17.4)	1,274 (0.9)	1,331 (4.4)	1,401 (5.3)	1,463 (4.5)	1,518 (3.7)	-
	2022.10월 추계	1,262 (17.4)	1,324 (4.9)	1,398 (5.6)	1,478 (5.7)	1,563 (5.7)	1,626 (4.0)	1,684 (3.6)
EU ²⁾	2022.5월 추계	382 (16.5)	416 (8.9)	418 (0.5)	430 (2.8)	446 (3.7)	457 (2.4)	-
	2022.10월 추계	382 (16.5)	393 (2.8)	404 (2.8)	430 (6.3)	445 (3.6)	456 (2.4)	463 (1.5)
총세수	2022.5월 추계	8,332 (12.6)	8,893 (6.7)	9,284 (4.4)	9,647 (3.9)	9,978 (3.4)	10,317 (3.4)	-
	2022.10월 추계	8,332 (12.6)	8,877 (6.5)	9,373 (5.6)	9,930 (5.6)	10,419 (4.9)	10,785 (3.5)	11,148 (3.4)

주: 1)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022~2027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자료: 연방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Anlage 1,2 참고하여 작성(2022. 10. 27.)¹⁸²⁾¹⁸³⁾

2022년 5월 추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연방재무부, 제162차 세수추계 (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2022. 5. 12.)」 재인용

182) 연방재무부, "Ergebnis der 163.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vom 25. bis 27. Oktober 2022 in Dessau-Roßlau," 2022. 10.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3-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 11. 14.

183) 연방재무부, "Abweichungen des Ergebnisses der Steuerschätzung November 2022 vom Ergebnis der Steuerschätzung Mai 2022," 2022. 10.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3-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 11. 14.

- 연방 의회, 2023년 예산안 승인(2022. 12. 16.)¹⁸⁴⁾
 - 2023년 연방 예산은 정부안 대비 310억유로 증가한 4,762억 9천만유로로 확정
 - (우선순위) 정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독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도록 투자하는 것에 초점
 - (투자) 투자 지출은 원래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705억유로로 확정되었고, 기후보호, 교통, 디지털화 및 혁신,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투자할 계획
 - (신규차입) 독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하여 2023년부터는 다시 부채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였고, 신규차입은 정부안 대비 280억유로 증가한 456억 1천만유로로 확정됨

¹⁸⁴⁾ 연방 정부, “Unsere wirtschaftliche Stärke mobilisieren,” 2022. 12.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lindner-bundeshaushalt-2023-2144364>, 검색일자: 2022. 12. 19.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연방재무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 (2022. 10. 17.)¹⁸⁵⁾

*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재정 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¹⁸⁶⁾ 독일은 7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현재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여 제출

- (재정수지)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년의 -3.7% 대비 나아진 -3.5%로 전망되고, 이는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¹⁸⁷⁾에서 예상한 -3.75%보다 개선된 수치
 - 세입이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예상한 GDP의 45.5%보다 더 증가한 46.5%로 예상되고, 반면 지출은 GDP의 49.25%에서 50%로 비교적 덜 증가했기 때문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2%로 나타남
- (중기재정목표: MTO)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기간 동안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5%p 줄이는 벤치마크 요건을 평균적으로 준수할 계획

¹⁸⁵⁾ 연방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3,” 2022. 10.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3.html, 검색일자: 2022. 10. 21.

¹⁸⁶⁾ 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 검색일자: 2022. 10. 25.

¹⁸⁷⁾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연방 정부,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2(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채택(2022. 4. 27.)」 참고

- (국가채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67.75%이고, 2023년에는 66.75%로 예상되며 꾸준히 감소하여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의 감소와 명목 GDP의 성장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표 3-III-4 2021~2026 독일 중기재정계획 주요 지표 변화

(단위: GDP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2.10.	-3.7	-3.5	-2	-2	-1.5	-1
	2022.4.	-3.1	-3.25	-1.5	-1.25	-0.25	0
구조적 재정수지	2022.10.	-2.5	-3	-2.25	-2	-1.5	-1
	2022.4.	-2.1	-3.5	-2.25	-2	-	0.5
총 부채	2022.10.	68.6	67.75	66.75	66	65.75	65.25
	2022.4.	69.3	66.75	65.75	65.75	65	64.5

주: 1. 2022. 4월 자료는 안정화프로그램 2022(Stabilitätsprogramm 2022) 기준

2. 2021. 10월 전망 자료는 2022. 9. 28.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독일 연방 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 10. 17., p. 5, Tabelle 1.

- 안정화위원회, ¹⁸⁸⁾ 제26차 회의 개최(2022. 12. 16.) ¹⁸⁹⁾¹⁹⁰⁾
 - (경제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2.3%로 회복할 것

¹⁸⁸⁾ 안정화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방재무부 장관, 주정부의 재무부 장관 및 연방 경제부 장관이고, 연방재무부 장관과 연방주 재무장관회의 의장이 공동 의장을 맡음(안정화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tabilitaetsrat.de/DE/Organisation/Organisation_node.html;jsessionid=A3C1E9900FF48161600E16D6BF886A9A_intranet631, 검색일자: 2022. 12. 22.)

¹⁸⁹⁾ 연방재무부, "26.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16. Dezember 2022," 2022. 12.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html>, 검색일자: 2022. 12. 19.

¹⁹⁰⁾ 안정화위원회, "Pressemitteilung zur Stellungnahme," 2022. 12.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stellungnahme-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2. 12. 19.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겨울철 반년 동안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생산 손실은 훨씬 클 것이고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안정화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로 전망되고, 이는 지난 4월 전망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
 - 반면 2023년 재정적자는 2.5%p 증가한 4.5%로 예상되며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는 1.5~2%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위기 시기인 2021년 68.6%까지 올랐던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66.75%로 소폭 하락하지만 2023년 다시 70%까지 오르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26년에는 67.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2~2026년까지 전체 연도에서 중기재정목표(MTO)인 GDP 대비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GDP 대비 2.5%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지만 2023년 다시 3.25%로 크게 증가하고 2024년 2%, 2025년과 2026년에는 1.5%까지 하락할 전망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 (의견) 자문위원회는 정부 핵심예산에는 부채 브레이크 규칙이 적용되지만 특별기금과 같은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재정에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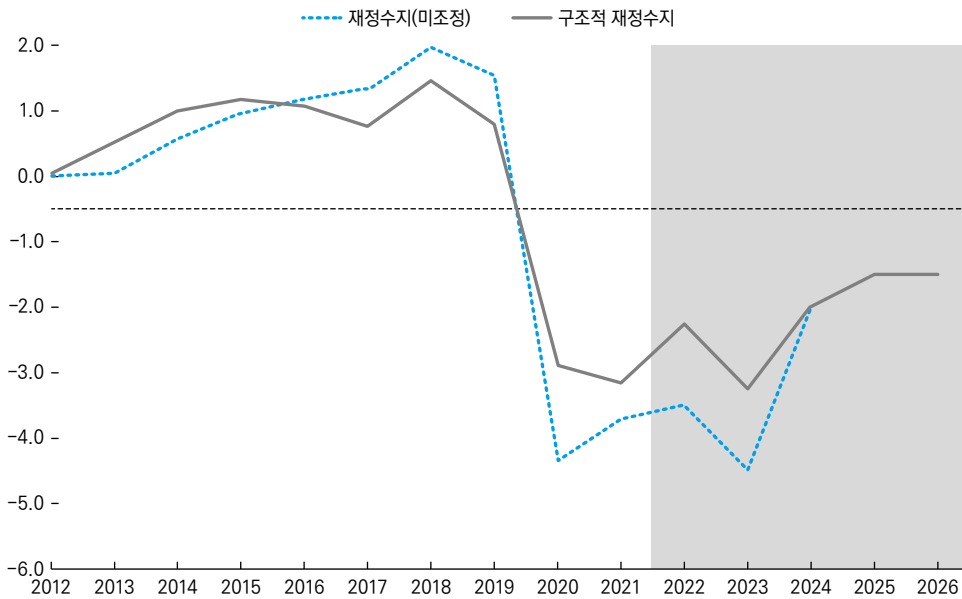
표 3-III-5 안정화위원회 12월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재정수지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2.12.	-3.7	-3.5	-4.5	-2.0	-1.5	-1.5
	2022.4.	-3.7	-3.75	-2.0	-1.75	-1.0	-0.5
구조적 재정수지	2022.12.	-3.0	-2.5	-3.25	-2.0	-1.5	-1.5
	2022.4.	-2.1	-3.5	-2.25	-2.0	-1.0	-0.5
총 부채	2022.12.	68.6	66.75	70	68.25	67.5	67.25
	2022.4.	69.3	66.75	65.75	65.75	65	64.5

주: 2022년 4월 재정전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정화프로그램 2022』 2022. 7., p.6에서 발췌
 자료: 안정화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2022. 12. 9., Übersicht 3,5,6, 발췌 및 재작성

그림 3-III-2 안정화위원회 12월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자료: 안정화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2022. 12. 9., p. 15, Abbildung 1 인용

나. 에너지 위기 대응

- 연방 정부, 에너지 보안법(EnSiG) 추가 개정(2022.7.8.)¹⁹¹⁾¹⁹²⁾¹⁹³⁾
 - 에너지 안보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 위기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을 추가 개정함
 - (비용 균등 배분 지원) 가격 조정 메커니즘의 명확화
 - 특정 조건하*에서 에너지 공급자는 증가하는 에너지 조달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가스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제24조)
 - * Federal Network Agency로부터 독일의 가스 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는 것을 승인 받아야 함(제25조)
 - 에너지 공급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 시장에 연쇄적 영향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
 - 공급자가 가격조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균형가격 조정’ 조항을 통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금으로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켜 모든 가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제26조)
 - (중요 인프라 안정화) 연방 정부는 에너지 부문 핵심 인프라 기업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투자하여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29조)
 - (에너지 절약 조치) 에너지 절약 조치를 포함한 개별 조치에 대한 조항의 권한 확대
 - 에너지 절약 조치, 에너지원 또는 대형 변압기의 철도 연결 운송 조치, 환경법의 간소화, 특히 발전소 운영자를 위한 배출 통제법의 간소화가 가능

191) 연방 정부, “Anpassung des Energiesicherungsgesetzes,” 2022.7.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limaschutz/energiemarkt-stabilisieren-2059778>, 검색일자: 2022.7.14.

192)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regierung wappnet sich weiter für eine Zuspitzung der Lage auf den Energiemärkten: Bundeskabinett beschließt Anpassung des Energiesicherungsgesetzes,” 2022.7.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7/20220705-bundesregierung-wappnet-sich-weiter-fur-eine-zuspit-zung-der-lage-auf-den-energiemarkten.html>, 검색일자: 2022.7.14.

193) 연방 정부, “Änderung des Energiesicherungsgesetzes,” 2022.7.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rieg-in-der-ukraine/energiesicherheit-2027654>, 검색일자: 2022.7.14.

- 연방 정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50억유로 지원 프로그램 발표(2022. 7. 14.)¹⁹⁴⁾
 - 연방 경제기후부와 연방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위한 에너지 비용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함
 - 에너지 및 무역 집약적 기업은 천연가스 및 전기요금에 대하여 최대 5천만 유로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프로그램의 총 예산 규모는 최대 50억유로
 -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임시위기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 TCF)”¹⁹⁵⁾을 활용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
 - 2021년 평균 가격에 비해 천연가스 및 전기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추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

- 연방 하원, 전력 부문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체 발전소 사용 법안 승인 (2022. 7. 14.)¹⁹⁶⁾¹⁹⁷⁾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독일 정부는 러시아 가스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며,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스 저장량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탄 및 석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킴

¹⁹⁴⁾ 연방재무부, “5 Milliarden Euro Hilfsprogramm für energieintensive Industrie startet,” 2022. 7. 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7/2022-07-14-hilfsprogramm-energieintensive-industrie-startet.html>, 검색일자: 2022. 7. 18.

¹⁹⁵⁾ 2022년 3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임시위기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 TCF)’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보상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보장하며, 예외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자료: European Commission, “Temporary Crisis Framework,” https://ec.europa.eu/competition-policy/state-aid/ukraine_en, 검색일자: 2022. 7. 20.)

¹⁹⁶⁾ 연방 경제 기후부, “Habeck: „Wir stärken die Vorsorge weiter und ergreifen zusätzliche Maßnahmen für weniger Gasverbrauch,” 2022. 6. 1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6/20220619-habeck-wir-starken-die-vorsorge-weiter.html>, 검색일자: 2022. 7. 18.

¹⁹⁷⁾ 연방 정부, “Weniger Gasverbrauch im Ernstfall,” 2022. 7. 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limaschutz/gasersatz-reserve-2048304>, 검색일자: 2022. 7. 18.

- 대기상태로 관리되고 있던 4.3GW 규모의 석탄 발전소 및 1.6GW 규모의 석유 발전소를 예비 전력망에 포함시킴
- 동시에 가스 소비를 줄이면서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도 시행
 - 가스 경매 모델을 도입하여 산업용 가스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THE(Trading Hub Europe GmbH)¹⁹⁸⁾의 지역 관리자에게 가스저장시설을 채울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보증한 150억유로 신용한도를 독일개발은행(KfW)를 통해서 지원
-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연방 경제기후부와 연방 환경·소비자 보호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아직까지 가동 중인 원전 3기는 계획대로 2022년 말 폐쇄될 예정¹⁹⁹⁾
- 연방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2022.8.10.)²⁰⁰⁾
 - 연방재무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제정하고자 함
 - 소득세 과표 구간 업데이트, 아동수당 인상, 기본 공제액 인상 등의 지원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인상으로 과표 구간이 높아져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을 방지
 -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기본 공제액)을 2022년 1만 347유로에서 2023년 1만 632유로, 2024년에는 1만 932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¹⁹⁸⁾ THE(Trading Hub Europe GmbH)는 11개의 장거리 가스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회사이며, 독일 시장 지역을 책임지고 있음. 법적으로 허가된 독점 과제를 수행하며 에너지 산업법(EnWG) 개정 이후, 가스 저장 시설을 필요에 따라 채우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¹⁹⁹⁾ 연방 경제기후부, "Atomenergie auf dem Prüfstand," 2022.4.27.,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2/05/12-atomenergie-auf-dem-pruefstand.html>, 검색일자: 2022.7.21.

²⁰⁰⁾ 연방재무부, "Eckpunkte für ein Inflationsausgleichsgesetz," 2022.8.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inflationsausgleichsgesetz.html>, 검색일자: 2022.8.17.

-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연간 소득 하한선도 2022년 5만 8,597유로에서 2023년 6만 1,972유로, 2024년 6만 3,515유로로 인상할 계획
 - 국민 약 4,800만 명이 1인당 평균 192유로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연방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101억유로, 2024년에는 175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족 지원) 소득세 자녀 공제액(Kinderfreibetrag)에 대하여 부모당 각각 2,730유로인 현행 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4년까지 2,994유로까지 소득세를 감면할 계획
 - 아동수당(Kindergeld)도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는 1명당 매달 233유로, 넷째부터는 1명당 매달 250유로씩 지급할 계획
 - (기본 공제액 인상) 2022년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9,984유로에서 1만 347유로로 인상
- 연방 경제기후부, 10월부터 한시적 가스 부과금 제도 도입(2022.8.4.)²⁰¹⁾²⁰²⁾²⁰³⁾ 및 연방 정부,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계획 발표(2022.8.18.)²⁰⁴⁾

201)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kabinett verabschiedet zeitlich befristete Gas-Umlage für sichere Wärmeversorgung im Herbst und Winter," 2022.8.4.,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8/20220804-bundeskabinett-verabschiedet-zeitlich-befristete-gas-umlage-fur-sichere-waermeversorgung-im-herbst-und-winter.html>, 검색일자: 2022.8.17.

202) 연방 경제기후부, "Verordnung über zeitlich befristete Gas-Umlage für sichere Wärmeversorgung im Herbst und Winter tritt in Kraft," 2022.8.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8/20220809-verordnung-ueber-zeitlich-befristete-gas-umlage-fuer-sichere-waermeversorgung-tritt-in-kraft.html>, 검색일자: 2022.8.17.

203) 연방 경제기후부, "Sicherung der Energie- und Wärmeversorgung: Höhe der Gas-Umlage steht fest - Bundesminister Habeck: „Die Umlage muss und wird mit gezielten Entlastungen einhergehen," 2022.8.1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8/20220815-sicherung-der-energie-und-waermeversorgung.html>, 검색일자: 2022.8.17.

204) 연방 정부, "Mehrwertsteuer auf Gas wird gesenkt," 2022.8.1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asumlage-mehrwertsteuer-2075248>, 검색일자: 2022.8.25.

- 연방 내각은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보안법 제26조²⁰⁵⁾에 근거하여 가스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킴
 - 천연가스 수입 비용의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가스공급업체들을 지원하여 가스 공급의 부실과 실패를 방지하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보안을 유지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 추가 부담금은 1kwh당 2.419유로센트로(2022년 8월 15일 기준), 독일 가스 시장 운영기업인 THE(Trading Hub Europe GmbH)가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조례에 명시된 방법으로 계산하여 3개월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음
 - 연방 정부는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천연가스 판매세를 19%에서 7%로 일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
 - 140억유로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가스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부담을 덜게 됨
 - 기간은 가스 부담금 시행기간과 같음(2022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 독일 연정위원회, 650억유로 규모의 제3차 구호 패키지 발표(2022.9.3.)²⁰⁶⁾²⁰⁷⁾²⁰⁸⁾²⁰⁹⁾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650억유로 규모의 3차 대책을 발표
 - 연방 정부의 구호 패키지는 1·2차까지 모두 합쳐서 약 950억유로의 규모
 - (횡재세 도입) 풍력, 태양열,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회사들의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원가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하여 이윤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

205) “연방 정부는 ‘균형가격 조정’ 조항을 통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금으로 가격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켜 모든 가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호』 「연방 정부, 에너지 보안법(EnStG) 추가 개정(2022.7.8.)」 참고)

206) 연방재무부, “Schnelle und spürbare Entlastungen in Milliardenhöhe,” 2022.9.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9.16.

207) 연방재무부, “Wichtige Unterstützung: das Entlastungspaket III,” 2022.9.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09/Inhalte/Kapitel-2b-Schlaglicht/2b-drittes-entlastungspaket.html>, 검색일자: 2022.9.26.

208) 연방재무부, “Ergebnis des Koalitionsausschusses vom 3. September 2022,” 2022.9.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chlaglichter/Entlastungen/ergebnispapier-des-koalitionsausschusses.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2.9.16.

209) 연방 정부, “Deutschland steht zusammen,” 2022.9.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entlastungen-im-ueberblick>, 검색일자: 2022.9.16.

- (전력요금 제도) 가정 및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기본 사용량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혹은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
- (탄소세 인상 계획 연기) 2023년 1월 예정되었던 탄소세 인상²¹⁰⁾을 1년 연기
- (연금수급자 및 학생에 대한 일시 보조금) 연금수급자(300유로) 및 학생·연수생(200유로)에게 12월 1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일시 보조금을 지원
- (주거급여 개혁 및 2차 난방비 지원)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1인 기준 415유로의 추가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²¹¹⁾
 - 2023년 1월부터 주거급여 개혁으로 수급자가 200만명(현재 64만명)까지 증가할 전망
- (국민수당 도입) 국민수당(실업급여Ⅱ와 사회수당 대체)은 2023년 1월부터 도입되며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현행보다 53유로 증가한 월 502유로를 지급할 계획
- (미디잡 소득 기준 변경) 미디잡(midijob)²¹²⁾의 소득 기준(현재 450~1,300유로)이 2022년 10월부터 450~1,600유로, 2023년 1월부터는 450~2천유로로 인상될 예정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 조세 부담(Kalte Progression)을 막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²¹³⁾
- (아동 수당 인상) 아동수당(Kindergeld)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월 237유로 지원
 - 아동수당 상한액을 2023년부터 현행 월 229유로에서 월 250유로로 인상
- (최대 3천유로 면제) 회사가 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최대 3천유로까지 면제

²¹⁰⁾ 2021년에 톤당 25유로로 도입되어 2022년에는 30유로로 인상되었고, 2025년까지 매년 5유로씩 인상 예정이었음

²¹¹⁾ 1인 415유로, 2인 40유로가 지원되고 추가 1인당 100유로씩 증가

²¹²⁾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

²¹³⁾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8월호』 「연방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2022.8.10.)」 참고

- (기업 지원) 에너지 집약 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 및 대체 에너지 투자 관련 신규 지원 사업 실시, 기존 지원 프로그램(KfW 특별 보증 프로그램, 에너지 비용 절감프로그램 등)은 2022년 말까지 연장
- (전기 및 에너지 세금 감면(Spitzenausgleich))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어 9천개의 기업에 약 17억유로 규모 지원
- (새로운 대중교통 티켓) 9유로 티켓의 후속으로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49~69유로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권 도입 계획
- (단축근로지원금 혜택) 2022년 9월까지였던 단축근로지원금 혜택을 무기한 연장
- (외식업 판매세 인하) 외식업에 대한 판매세(Umsatzsteuer)를 7%로 인하
- (에너지 공급에 있어 소비자 보호)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기 및 가스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
-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글로벌 최저법인세(15%) 도입을 조기 시행하여 수십억달러의 추가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
- (세계 식량 안보 기금 지원) 2022년 잔여예산으로 식량 안보를 위한 기금에 최대 10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 (연금기여금 전액 공제) 연금기여금의 세금 감면 제도를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실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
- (가스 판매세 인하)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9%에서 7%로 인하
- (재택근무 소득공제 연장) 재택근무 소득공제가 무기한 연장되며 2023년부터는 연간 최대 1천유로(현행 600유로)까지 청구 가능

- 연방 정부, 에너지 회사 Uniper 인수 결정(2022.9.21.)²¹⁴⁾²¹⁵⁾
 - 연방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일 최대의 러시아 가스 수입 업체인 Uniper의 지분 99%를 인수하기로 결정
 - 지난 7월 150억유로 규모의 구호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Uniper의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
 - Uniper는 독일 가스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업체이고, 독일 전역 200개 이상의 지자체에 천연 가스를 공급
 - Uniper 안정화 패키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당 액면가 1.7유로에 80억유로의 유상증자(총 47억주)를 실행하여 연방 정부가 Uniper의 지분을 약 93% 인수하고, 모기업 Fortum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주당 액면가 1.7유로에 매입(총 4억 8천만유로)하여 지분을 약 99%까지 확보
 - 또한 40억유로의 주주대출과 35억유로의 보증한도를 발행하여 총 75억유로의 자금을 Fortum에 상환
 - 연방경제기후부와 연방재무부 및 연방 총리는 에너지보안법(EnSiG) 제29조²¹⁶⁾에 따라 Uniper의 안정화 조치 적용을 결정
 - 새로운 안정화 패키지는 국가보조법(bei hilferechtlichen)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독일 정부가 Uniper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한 신용대출 130억유로를 포함하여 총 290억유로에 이릅니다

214) 연방 정부, “Bund übernimmt Energieunternehmen Uniper,” 2022.9.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uniper-uebernahme-2127800>, 검색일자: 2022.9.26.

215)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regierung verständigt sich auf Anpassung des Stabilisierungspakets für Uniper: Bund übernimmt 99% an Uniper,” 2022.9.21.,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teilungen/2022/09/20220921-bundesregierung-verstandigt-sich-auf-anpassung-des-stabilisierungspakets-fur-uniper.html>, 검색일자: 2022.9.26.

216) “연방 정부는 에너지 부문 핵심 인프라 기업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투자하여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너지보안법(EnSiG) 제29조)”

- 연방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보호막’ 발표 (2022. 9. 29.)²¹⁷⁾⁽²¹⁸⁾⁽²¹⁹⁾⁽²²⁰⁾
 - 연방 정부는 경제안정화기금(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WSF)을 통해 2024년까지 2천억유로를 제공하여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계획
 - (경제안정화기금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2022년 6월 만료)했던 경제안정화기금을 재활성화 및 재편성하여 사용할 계획
 -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2천억 규모의 차입을 승인할 예정
 - (가스 및 연료 가격 상한제) 2022년 10월 10일 전문가위원회는 가정 및 중소기업, 산업계를 위한 가격 상한제에 대하여 구체적 제안²²¹⁾
 - (가정 및 중소기업) 2022년 12월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3년 3월 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여 개별 사용량의 80% 수준 까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2021년 연간 사용량의 70%를 기준으로 가격상한을 두고, 이 용량에 대하여 자체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217) 연방재무부, “Wirtschaftlicher Abweherschirm gegen die Folgen des russischen Angriffskrieges,” 2022. 9.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2022-09-29-abweherschirm-gegen-folgen-des-russischen-angriffskrieges.html>, 검색일자: 2022. 10. 24.

218) 연방 정부, “Finanzierung des 200-Milliarden-Euro-Abweherschirms gesichert,” 2022. 10.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wsf-kreditermaechtigung-2132830>, 검색일자: 2022. 10. 24.

219) 연방재무부, “Gemeinsame Pressekonferenz zur Energieversorgung in Deutschland,” 2022. 9.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Video/2022/2022-09-29-pressekonferenz-zur-energieversorgung/2022-09-29-pressekonferenz-zur-energieversorgung.html>, 검색일자: 2022. 10. 24.

220) 연방재무부, “Wirtschaftlicher Abweherschirm und Gaspreisbremse: mit Entschlossenheit durch die Energiekrise,” 2022. 10.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10/Inhalte/Kapitel-2b-Schlaglicht/2b-mit-entschlossenheit-durch-die-energiekrise.html>, 검색일자: 2022. 10. 24.

221) 연방 경제기후부, “Sicher durch den Winter - Zwischenbericht der ExpertInnen-Kommission Gas und Wärme,” 2022. 10. 18., <https://www.bmwk.de/Redaktion/DE/Dossier/Gas-Kommission/zwischenbericht-expertinnenkommission-gas-waerme.html>, 검색일자: 2022. 10. 24.

- (그 외 대책)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소비 축소, 초과이윤세 도입, 가스 판매세를 인하, 관료주의 억제 등의 대책을 발표
 -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소비 축소 대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 LNG 터미널을 통한 수입구조 개발, 2023년 봄까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연장 등
- 연방 정부, 12월 가스 및 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긴급 지원 승인(2022.11.2.)²²²⁾²²³⁾²²⁴⁾
 - 연방 정부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2월 가스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보상하고 내년 예정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까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대책
 - 일반 가정 및 연간 150만kWh 미만을 소비하는 소기업은 표준 사용액(2022년 9월 예측된 연간 소비량의 1/12)을 기준으로 12월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지원받음
 - 연간 소비량과 관계없이 간호 및 재활 시설, 교육 기관, 과학 및 연구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에너지 공급자와 자체 계약은 없지만 부대비용 청구서를 받는 임차인을 위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차등적 특례가 제공됨
 - 경제안정화기금(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WSF)을 통하여 연방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자금을 지원

222)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kabinett verabschiedet Soforthilfe Dezember für Gas und Wärme,” 2022.11.2.,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11/20221102-bundeskabinett-verabschiedet-soforthilfe-dezember-fuer-gas-und-waerme.html>, 검색일자: 2022.11.14.

223) 연방 정부, “Soforthilfe für Haushalte und Unternehmen,” 2022.1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forthilfe-dezember-2139268>, 검색일자: 2022.11.14.

224) 연방 경제기후부, “Soforthilfe Dezember: Anträge auf Erstattung oder Vorauszahlung jetzt möglich,” 2022.11.14., <https://www.bmwk.de/Redaktion/DE/Dossier/Soforthilfe-Energiepreise/soforthilfe-energiepreise.html>, 검색일자: 2022.11.16.

- 연방 정부, 가스 및 전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 통과(2022. 11. 25.)²²⁵⁾
 - 연방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 12월 일회성 긴급지원에 이어 1월부터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까지 천연가스는 kWh당 12센트, 열에너지는 kWh당 9.5센트의 할인 가격을 적용²²⁶⁾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2021년 연간 소비량의 70%를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kWh당 7센트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열에너지는 kWh당 7.5센트로 할인
 - (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추가로 80억유로의 특별 원조기금 투입
 -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2023년 3월부터 도입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미만인 가정과 중소기업에 전년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기준량의 가격을 kWh당 40센트로 할인 적용²²⁷⁾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기준량을 kWh당 13센트로 할인하여 공급
 - 기준 소비량을 초과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절약 유인 효과도 있음

²²⁵⁾ 연방 경제기후부, “Gas- und Strompreisbremse,” 2022. 11. 25.,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Energie/strom-gaspreis-bremse.html>, 검색일자: 2022. 11. 28.

²²⁶⁾ 가정용 가스요금은 8ct/kWh에서 22ct/kWh로 증가(경제기후부 에너지가격 상한제 계산 예시 참고)

²²⁷⁾ 가정용 전기요금은 30ct/kWh에서 50ct/kWh로 증가(경제기후부 에너지가격 상한제 계산 예시 참고)

- 연방 정부, 화석에너지 회사의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EU 에너지 위기 기여금 (EU-Energiekrisenbeitrag eingeführt) 도입(2022. 12. 16.)²²⁸⁾
 - 지난 9월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산업 기업에 대하여 임시 초과 이윤에 대한 임시 연대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를 제안²²⁹⁾
 - 연방 정부는 EU 집행위의 요구 사항을 2022년 세법(Jahressteuergesetz 2022)에 포함하였으며 연방 의회는 이를 승인
 -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한 석유, 석탄, 가스, 정유 등의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초과이익 33%(EU 규정의 최소 비율)를 2022~2023년 2년간 징수
 - 연방 정부는 이러한 EU 에너지 위기 기여금(초과이윤세)으로 인하여 2022~2023년 2년 동안 10억~30억유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다. 기후보호

- 연방 정부, 기후 목표 준수를 위한 건축 및 교통 부문에서의 긴급 프로그램 발표 (2022. 7. 13.)²³⁰⁾²³¹⁾²³²⁾

228) 연방 정부, "Solidaritätsbeitrag für fossile Energieunternehmen," 2022. 12.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gesetzesvorhaben/eu-energiekrisenbeitrag-2145638>, 검색일자: 2022. 12. 20.

2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긴급시장개입 제안(2022.9.14.)」, 『재정동향 9월호』 참고

230) 연방 정부, "Sofortprogramme für Gebäude und Verkehr," 2022. 7.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fortprogramme-klimaschutz-gebäude-verkehr-2061972>, 검색일자: 2022. 7. 19.

231) 연방 경제기후부, "BMWK und BMWsb legen Sofortprogramm mit Klimaschutzmaßnahmen für den Gebäudesektor vor," 2022. 7. 13.,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7/20220713-bmwk-und-bmwsb-legen-sofortprogramm-mit-klimaschutzmassnahmen-fuer-den-gebäudesektor-vor.html>, 검색일자: 2022. 7. 19.

232) 연방 교통및디지털부, "BMDV legt Sofortprogramm zur Einhaltung der Klimaziele im Verkehrssektor vor," 2022. 7. 13., <https://bmdv.bund.de/SharedDocs/DE/Pressemitteilungen/2022/051-wissing-sofortprogramm-zur-einhaltung-der-klimaziele-im-verkehrssektor.html?nn=13326>, 검색일자: 2022. 7. 19.

- 연방 경제기후부(BMWK), 연방 주택도시개발및건설부(BMWSB), 연방 교통 및디지털부(BMDV)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기후 정책 측면에서 향후 연간 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 감소시키고자 함
- 2021년 기준으로 교통 부문에서 약 1억 4,8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기후보호법에서 허용된 배출량 1억 4,500만톤보다 더 많이 배출되었고, 건축 부문에서는 1억 1,500만톤 배출되어 연간 허용수준보다 200만톤 초과함

표 3-III-6 2021년 기준 교통 및 건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₂eq)

	허용 배출량	실제 배출량
교통 부문	1억 4,500만	1억 4,800만
건축 부문	1억 1,300만	1억 1,500만

자료: 연방 정부, "Sofortprogramme für Gebäude und Verkehr," 2022. 7. 13. 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건축) 2024년 1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시스템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대해서 연방 기금 지원, 연속적 리노베이션(Serielle Sanierung)을 위한 연방 기금 지원, 공공건물의 리노베이션 확대, 스포츠·청소년 및 문화 시설의 정비, 효율적 난방시설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기후 목표를 고려한 도시 열 계획법(kommunale Wärmeplanung, KWP) 도입 계획
- (교통) E-모빌리티에 대한 인프라 개발 및 확장, 도로 화물 운송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사이클링 인프라 확장, 대중교통의 확대 및 품질 개선, 재택근무 추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조절

- 연방 경제기후부, 전기차에 대한 환경보조금 단계적 축소 발표(2022. 7. 26.)²³³⁾²³⁴⁾
 - 연방 경제기후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차에 대한 환경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함
 - 2023년 1월부터 기후 보호에 효과가 있는 배터리 전기차에만 지원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2022년 말에 종료됨
 -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1년에 전기차 100만대 목표를 달성했고 2022년에는 200만대에 가까워질 것이며 전기차가 대중화되어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 보조금 단계적 축소의 이유를 설명함
 - 향후 2년간 기후변화기금(KTF)을 사용하여 34억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 2023년 21억유로, 2024년 13억유로의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을 중단
 - 독일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환경보조금 축소안은 다음과 같음

표 3-III-7 독일 전기차 환경보조금 단계적 축소

연도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22	- 4만유로 미만: 최대 6천유로 - 4만~6만 5천유로: 최대 5천유로	- 현행 최대 4,500유로 보조 - 2022년 12월 31일 종료
2023	- 4만유로 미만: 최대 4,500유로 - 4만~6만 5천유로: 최대 3천유로 - 20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을 개인으로 제한	-
2024	- 4만 5천유로 미만: 최대 3천유로	-

자료: 연방 경제기후부, “Habeck: „Umweltbonus wird ab Januar 2023 konsequent auf Klimaschutz ausgerichtet,” 2022. 7. 26.,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7/20220726-habeck-umweltbonus-wird-ab-januar-2023.html>, 검색일자: 2022. 8. 9. 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33) 연방 경제기후부, “Habeck: „Umweltbonus wird ab Januar 2023 konsequent auf Klimaschutz ausgerichtet,” 2022. 7. 26.,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7/20220726-habeck-umweltbonus-wird-ab-januar-2023.html>, 검색일자: 2022. 8. 9.

234) KOTRA, 「독일 연방 정부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2022. 8. 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_NO=1&bbsGbn=00&bbsSn=242&pNttSn=195890, 검색일자: 2022. 8. 11.

- 연방 정부, 1,700억유로 규모의 기후 변화 기금(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계획 승인(2022. 7. 27.)²³⁵⁾
 - 연방 내각은 기후 변화 기금에 대한 2023년 재정계획과 2026년까지의 증기 재정계획을 승인함
 - 연방 정부는 에너지 기후 기금(EKF)을 기후 변화 기금(KTF)으로 발전²³⁶⁾²³⁷⁾ 시켰으며 이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예정
 - 기후 변화 기금은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기후를 보호하는 데 자금을 제공
 - 2023년에만 354억유로를 사용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총 1,77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주요 항목은 건축 부문 연방기금 지원(BEG), 충전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E-모빌리티 추가 투자, 수소 산업의 발전, 에너지 효율 촉진 등
 - 특별 기금은 국가 배출권 거래 및 탄소 가격 책정의 수입과 적립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연방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²³⁵⁾ 연방 정부, “170 Milliarden Euro für Energieversorgung und Klimaschutz,” 2022. 7. 2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lima-und-transformationsfonds-2065714>, 검색일자: 2022. 8. 9.

²³⁶⁾ 기후변화기금(KTF)으로의 명칭 변경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기금이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라 기후보호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사용 목적이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함(Das Parlament, “Neuer Name, neue Ziele,” 2022. 5. 16., https://www.das-parlament.de/2022/20/wirtschaft_und_finanzen/895298-895298, 검색일자: 2022. 8. 29.)

²³⁷⁾ 연방 법, 특별기금 “기후변화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gesetze-im-internet.de/ekfg/BJNR180700010.html>, 검색일자: 2022. 8. 29.

라. 기타

- 연방 정부, 2023년 1월부터 국민수당(Bürgergeld) 도입 및 시행(2022.9.14.)²³⁸⁾²³⁹⁾²⁴⁰⁾
 - 국민수당은 구직자들을 위한 기본 보장 혜택으로 구직자들이 최소 생활수준을 확보하며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이전에 실업수당 II 또는 사회수당 수급 자격이 있던 사람들에게 혜택
 - 국민수당을 받게 되는 처음 2년 동안에는 자산 및 주택에 대한 평가 없이 급여를 지급하며 주거 및 난방비용을 전액 지원
 - 월 520~1천유로를 버는 사람들이 근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구간 소득의 공제율을 30%로 인상²⁴¹⁾
 - 학생 및 연수생의 소득에 대한 공제액도 기존 100유로에서 520유로로 인상하며 학생들은 방학 동안 수입에 대한 제한 없음
 - 구직자와 일자리센터의 전문가가 구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하며 최초 6개월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미검토
 - 반복적인 의무 위반과 보고 불이행으로 인한 혜택 감소는 해당 월별 기준 급여액의 최대 30%까지이며 주거 및 난방비는 혜택 감소에서 제외
 - 직업 알선업무에서 취업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직업 재교육 및 자격증 교육 관련 제도들을 강화

238) 연방 노동사회부, "Mehr Sicherheit, weniger Bürokratie," <https://www.bmas.de/DE/Service/Gesetze-und-Gesetzesvorhaben/Buergergeld/buergergeld.html>, 검색일자: 2022.9.20.

239) 연방 정부, "Bürgergeld löst Grundsicherung ab," 2022.9.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buergergeld-2124684>, 검색일자: 2022.9.20.

240) 연방 노동사회부, "Fragen und Antworten zum Bürgergeld," 2022.9.14., <https://www.bmas.de/DE/Arbeit/Grundsicherung-Arbeitslosengeld-II/Buergergeld/Fragen-und-Antworten-zum-Buergergeld/faq-buergergeld.html>, 검색일자: 2022.9.20.

241) 기존에는 심사 대상에서 공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100유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제하고, 100유로에서 1천유로까지는 20%, 1천유로에서 1,200유로까지는 10%를 공제(자료: 연방 노동사회부, "Einkommen und Vermögen," 2020.6.17., <https://www.bmas.de/DE/Arbeit/Grundsicherung-Arbeitslosengeld-II/Arbeitslosengeld-II/einkommen-und-vermoegen.html>, 검색일자: 2022.10.4.)

-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최대 3년 지원 및 월 150유로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비 추가 지원 등)
-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 급여율도 소급적용이 아닌 미리 예측하는 방식으로 인상이 필요하며 2023년 1월부터 독신자의 경우 502유로 지원 예정

표 3-III-8 독일 국민수당 기준 급여액(Regelbedarf)

기준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실업급여II	독신자·편부모	502유로(+53유로)
	파트너와 함께 사는 성인	451유로(+50유로)
	기관 및 특별 시설의 성인(SGB XII에 따름)	402유로(+45유로)
	부모 집에 거주하며 무직인 25세 미만 성인	402유로(+45유로)
사회수당	만 14~17세의 청소년	420유로(+47유로)
	만 6~13세 어린이	348유로(+39유로)
	만 0~5세 어린이	318유로(+35유로)

주: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며 () 안은 2002년과의 비교한 인상폭
 자료: 연방 정부, "Bürgergeld löst Grundsicherung ab," 2022.9.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buergergeld-2124684>, 검색일자: 2022.9.20.

- 연방 정부, 건강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 재정 안정화법 통과(2022.10.20.)²⁴²⁾²⁴³⁾
 - 연방하원은 2023년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2023년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170억유로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
 - 건강보험의 기여금 수입은 예년보다 적게 증가한데 반해 지출은 급격히 증가
 - 추가 조치가 없다면 법정 건강보험의 평균 추가 기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242) 연방 정부,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stabilisieren," 2022.10.2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kv-stabilisierung-finanzen-2065884>, 검색일자: 2022.10.26.

243) 연방 보건부, "Bundestag beschließt GKV-Finanzstabilisierungsgesetz," 2022.10.20.,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presse/pressemitteilungen/gkv-finanzstabilisierungsgesetz-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2.10.26.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정부의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 145억유로에서 2023년 165억유로로 20억유로 늘릴 예정이며, 1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계획
- 특히로 보호되는 의약품의 제조업체 법정 할인을 5%p 증가²⁴⁴⁾
- 2022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의약품 가격 동결 규칙²⁴⁵⁾의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
- 완제품 약에 대한 약국 할인을 1팩당 1.77유로에서 2유로로 인상
- 신규 환자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 폐지
-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

□ 연방 주택도시개발및건축부(BMWSB),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주거급여 개혁(Wohngeld Plus) 법안 통과(2022. 11. 25.)²⁴⁶⁾²⁴⁷⁾

- 연방 정부 제3차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3년 1월부터 주거급여가 개혁되어 주거급여 수혜자는 현재 약 60만가구에서 2023년에는 약 200만가구로 증가
 - 공급한도 기준이 완화되어 약 104만 저소득 가구가 처음 또는 다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회부조(SGB XII)나 실업수당(SGB II)을 받던 약 38만가구도 혜택을 받게 됨
 - 한부모 가정, 저소득 근로자, 연금 수령자 및 노인 및 요양시설 거주자 등이 포함

²⁴⁴⁾ 제조업체는 건강보험 회사에 일정 금액 없이 의약품 판매 가격에 대해 법정 할인을 부여해야 하며 현재 특히로 보호되는 약품의 경우 판매가격의 7%를 할인(연방 보건부, "Wie Arzneimittelpreise entstehen und wie man sie senken kann,"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anzneimittelpreise.html>, 검색일자: 2022.10.26.)

²⁴⁵⁾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가격 동결은 2009년 8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급여 약가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규칙(연방 보건부, "Preismoratorium für Arzneimittel,"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preismoratorium.html>, 검색일자: 2022.10.26.)

²⁴⁶⁾ 연방 주택도시개발및건축부, "'Wohngeld Plus' - Reform," <https://www.bmwsb.bund.de/SharedDocs/topthemen/Webs/BMWSB/DE/wohngeld-plus/wohngeld-plus-artikel.html>, 검색일자: 2022.11.28.

²⁴⁷⁾ 연방 정부, "Mehr Wohngeld für mehr Menschen," 2022.11.2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wohngeldreform-2130068>, 검색일자: 2022.11.28.



- 주거급여는 월 평균 약 180유로에서 약 370유로로 두 배 가량 증가할 계획
 - (난방비 요소) 증가하는 난방에너지 가격으로 인하여 주거급여에 난방비를 보장
 - (기후비용 요소)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적 개조 비용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후비용 추가
- 가구당 주거급여액은 세대원 수, 거주공간에 따른 임대료 혹은 자가 주택의 부담금 및 총소득에 따라 산정
- 연방 정부는 주거급여 개혁에 18억 5천만유로를 지원할 것이고, 주정부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절반을 부담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재정 통계

- 연방 통계청,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2022.10.11.)²⁴⁸⁾
 -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지출은 소폭 감소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재정 적자가 32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
 - (수입)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수입은 세입과 부담금의 증가가 크게 기여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총 8,414억유로로 나타남
 - (지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지출은 1.0% 감소한 8,743억유로
 - 2022년 상반기에 연방 정부의 수입은 16.5% 증가한 2,197억유로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452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남겼고 전년 동기 957억유로보다는 나아진 수치
 - 2022년 상반기 주정부는 178억유로 재정 흑자를 보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억유로의 적자, 사회보장기금은 39억유로의 적자를 기록

표 3-III-9 2022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수입 및 지출

(단위: 억유로)

연도	합계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지출					
2022	8,743	2,649	2,500	1,510	3,997
2021	8,832	2,844	2,454	1,414	3,941
수입					
2022	8,414	2,197	2,678	1,494	3,957
2021	7,521	1,887	2,364	1,357	3,733
재정수지					
2022	-329	-452	178	-16	-39
2021	-1,311	-957	-90	-57	-207

주: 2022년 상반기 잠정실적
 자료: 연방 통계청, *Pressemitteilung Nr. 432 vom 11. Oktober 2022*, 2022. 10. 11.

²⁴⁸⁾ 연방 통계청, "Finanzierungsdefizit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auf 32,9 Milliarden Euro gesunken," 2022. 10. 11.,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10/PD22_432_711.html, 검색일자: 2022. 10. 19.

나. 경제 통계

- 연방 통계청, 2022년 9월 물가상승률 10.0% 발표(2022.10.13.)²⁴⁹⁾
 - 독일의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0.0% 상승하였고 2022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7%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외에도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과 상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주된 영향을 끼침
 - 그 결과 에너지 외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도 올랐고, 특히 식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
 - 2022년 9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9% 증가하였고, 식료품의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
 -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4.6%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 전체 물가상승률에 에너지와 식료품이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음
 - 2022년 8월과 비교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1.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차 구호패키지 중 9유로 티켓²⁵⁰⁾ 과 연료가격 할인이 종료된 영향으로 보임

²⁴⁹⁾ 연방 통계청, “Inflationsrate im September 2022 bei +10,0 %,” 2022.10.13.,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10/PD22_438_611.html, 검색일자: 2022.10.25.

²⁵⁰⁾ 독일 전국의 대중교통을 1개월 동안 9유로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연방 정부, 2022.9.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fa-q-9-euro-ticket-2028756>, 검색일자: 2022.10.31.)

표 3-III-10 2022년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단위: %)

연도	소비자 물가 지수 (2015=100)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2022	1월	111.5	4.9	0.4
	2월	112.5	5.1	0.9
	3월	115.3	7.3	2.5
	4월	116.2	7.4	0.8
	5월	117.3	7.9	0.9
	6월	117.4	7.6	0.1
	7월	118.4	7.5	0.9
	8월	118.8	7.9	0.3
	9월	121.1	10.0	1.9

자료: 연방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소비자 물가 지수,”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result&code=61111-0002&deep=true#abreadcrumb>, 검색일자: 2022.10.25.

다. 경제전망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 가을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발표(2022.9.29.)²⁵¹⁾²⁵²⁾

- *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연2회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을 발표하며, 2022년 가을 보고서에는 5개 경제연구소(DIW, ifo Institut, IfW Kiel, IWH, RWI)가 참여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그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위기로 독일 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되고 있음
- (경제전망) GDP 증가율 전망치는 2022년 1.4%, 2023년 -0.4%, 2024년 1.9%

251)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Energiekrise: Inflation, Rezession, Wohlstandsv erlust,” 2022.9.29., <https://www.ifo.de/fakten/2022-09-29/gemeinschaftsdiagnose-herbst-2022-ene rgiekrise-inflation-rezession>, 검색일자: 2022.10.14.

252) Gemeinschaftsdiagnose, “Stellungnahme der Projektgruppe Gemeinschaftsdiagnose zur Herbstprojektion 2022 der Bundesregierung,” 2022.10.12.,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2/10/12/stellungna hme-der-projektgruppe-gemeinschaftsdiagnose-zur-herbstprojektion-2022-der-bundesregierung/>, 검색일자: 2022.10.14.

- 봄 공동경제전망²⁵³⁾과 비교하여 크게 하향된 전망치이며 이는 에너지 위기의 정도를 보여줌
- 특히 2023년 GDP 증가율은 봄 공동경제전망에서 3.1%로 예상하였으나 -0.4%로 낮아짐
- (소비자 물가 지수) 2022년 물가상승률은 평균 8.4%로 연방 공화국 수립 이후 최고 수준
 -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평균 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2%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고용)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규인력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고용은 일시적으로 약간 줄어들 전망
 - 2022년 연평균 실업률은 5.3%로 전망되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5%, 5.3%
- (재정수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재정적 조치들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조치들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
 -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2년 725억유로, 2023년에는 512억유로, 2024년에는 415억유로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위험요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험, 코로나19의 재유행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

²⁵³⁾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발표(2022. 4. 13.)」, 『재정동향 4월호』 참고

표 3-III-11 2022년 가을 공동경제전망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성장률	1.1	-3.7	2.6	1.4	-0.4	1.9
취업자수(천명)	45,277	44,915	44,980	45,557	45,567	45,657
실업자수(천명)	2,267	2,695	2,613	2,413	2,564	2,479
실업률	5.0	5.9	5.7	5.3	5.5	5.3
소비자물가	1.4	0.5	3.1	8.4	8.8	2.2
일반정부 재정수지(10억유로)	53.2	-147.6	-134.3	-72.5	-51.2	-41.5
(GDP 대비 %)	1.5	-4.3	-3.7	-1.9	-1.3	-1.0
경상수지(10억유로)	262.9	238.7	265.0	165.7	172.9	193.5
(GDP 대비 %)	7.6	7.0	7.4	4.3	4.2	4.5

자료: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2," 2022.9.29., p. 1.

- 연방 경제기후부,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2.10.12.)²⁵⁴⁾²⁵⁵⁾²⁵⁶⁾
 - 2022년 GDP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어 2.3%로 전망
 - 봄 경제전망²⁵⁷⁾에서는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하였으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산업 생산에 큰 타격을 입고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가을 경제전망에서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2년 8.0%, 2023년에는 7.0%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음

254)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regierung legt Herbstprojektion vor," 2022.10.12.,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10/20221012-bundesregierung-legt-herbstprojektion-vor.html>, 검색일자: 2022.10.21.

255) 연방 정부, "Drohende Rezession wegen Gaslieferstopp," 2022.10.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herbstprojektion-2133766>, 검색일자: 2022.10.21.

256) 연방 경제기후부, "Herbstprojektion 2022," 2022.10.12.,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2.html>, 검색일자: 2022.10.21.

2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방 경제기후부,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2.4.27.)」, 『재정동향 5월호』 참고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구호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

표 3-III-12 2022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수치

(단위: %)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성장률	2.6	1.4	-0.4	2.3
명목 GDP성장률	5.8	7.0	5.3	4.7
가계최종소비	0.4	4.3	-0.9	2.4
정부최종소비	3.7	2.8	-0.8	0.8
총고정자본형성	1.2	-0.6	0.3	3.9
설비	3.5	1.0	3.6	5.8
건설	0.0	-2.2	-2.1	2.9
내수	1.9	3.1	-0.5	2.4
수출증가율	9.7	1.4	2.0	3.5
수입증가율	9.0	5.4	1.9	3.6
소비자물가지수	3.1	8.0	7.0	2.4
실업률(연방고용청 기준)	5.7	5.2	5.4	5.2

주: 2021년: 잠정치, 2022~2024년: 전망치
 자료: 연방 경제에너지부, "wirtschaftliche-entwicklung," 2022. 10. 12.,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2.html>, 2022. 10. 12.

- 연방은행, 2023~2025년 경제전망 발표(2022. 12. 16.)²⁵⁸⁾
 - 연방은행은 독일 경제가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겨울 반년 동안 심각한 침체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1.8%, 2023년에는 -0.5%, 2024년 1.7%, 2025년 1.4%로 전망

²⁵⁸⁾ 연방 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for 2023 to 2025," 2022. 12. 16.,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bundesbank-projections-despite-energy-crisis-no-severe-economic-downturn-901844>, 검색일자: 2022. 12. 20.

- 연방 정부는 내년 중반까지 예상되는 경제활동의 감소의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문이라는 의견
- 2023년 중반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감소, 에너지 비용의 상승과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한 수출의 감소, 경제적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인한 투자의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날 전망
-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하락 요인 중 일부가 개선되어 경제가 회복 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 물가상승률은 2022년 8.6%로 높게 나타나지만 2023년에는 정부의 전기 및 가스가격 상한제로 인하여 7.2%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 하락하여 2025년까지 2.8%로 감소할 것
- (재정전망)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3.7%) 대비 크게 감소한 2.75%로 나타나지만 2023년에는 다시 4%로 증가할 전망
 -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지출 규모를 넘어서는 에너지 위기 관련 특별기금 및 연방군 특별기금과 관련된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 때문
 - 그러나 이러한 지원조치들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24년 1.75%, 2025년 1.5%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위험요소) 주로 에너지 공급의 잠재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하방 위험이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상승 위험이 우세

표 3-III-13 연방은행 2022년 12월 경제전망

(단위 : %)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 GDP 성장률(계절조정)	2.6	1.8	-0.5	1.7	1.4
실질 GDP 성장률(계절미조정)	2.6	1.7	-0.7	1.7	1.3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8.6	7.2	4.1	2.8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너지 식료품 제외)	2.2	3.9	4.3	2.9	2.6

주: 2022년 3분기까지는 연방통계청,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간 수치는 연방은행의 전망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for 2023 to 2025," 2022, 12, 16.,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bundesbank-projections-despite-energy-crisis-no-severe-economic-downturn-901844>



IV

프랑스*

□ 2022회계연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표 3-I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7.8.	FY2022 1차 수정예산법안(PLFR :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발표
2022.7.29.	2022~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발표
2022.8.3.	2021 결산법안(PLR :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2021) 최종 부결
2022.9.26.	FY2023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LF 2023) 발표
2022.9.26.	2023-2027 중기재정법안(PLPFP: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2027) 발표
2022.9.26.	FY2023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발표
2022.10.15.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발표
2022.11.2.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2-2) 발표
2022.12.17.	2023년도 예산법안 의회 채택으로 간주

* 이정인 선임연구원(leejungin@kipf.re.kr)·염보라 연구원(ybr119@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 프랑스 재무부, FY2023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LF 2023) 발표(2022.9.26.)²⁵⁹⁾²⁶⁰⁾
 - (경제전망)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0%를 기록할 전망
 - 긴축적 통화정책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경제 회복이 억제될 가능성
 -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5.3%, 2023년 4.2%로 전망
 - (재정전망) 경제 회복 부진에도 2023년 재정전망은 2022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전례 없는 수준인 9.0%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과 동일한 5.0%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재정적자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140억유로 감소한 1,580억유로로 전망
 - (재정지출)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60.7%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8.4%, 2022년 57.6%, 2023년 56.6%로 계속 감소 추세
 - (공공채무)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1년 112.8%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11.2%를 기록할 전망

²⁵⁹⁾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9.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3-plf>, 검색일자: 2022.9.26.

²⁶⁰⁾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26 septembre 2022*, 2022.9.26.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26-09-2022#e924610d-b3d3-4cde-96bf-c21fa06807fa-3>, 검색일자: 2022.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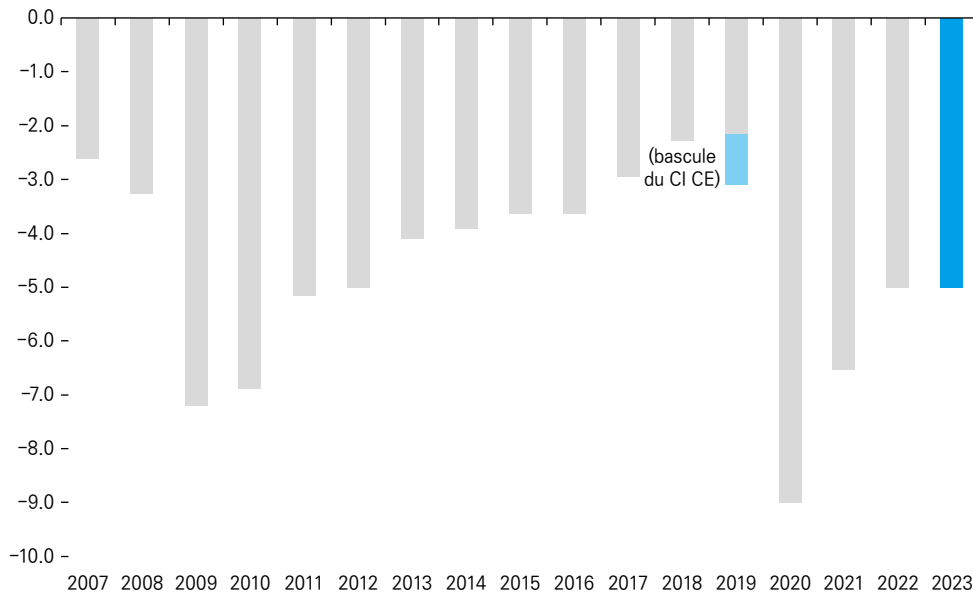
표 3-IV-2 2023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3.1	-9.0	-6.5	-5.0	-5.0
재정지출 증가율 (Croissance volume de la dépense publique, %)	1.9	6.7	2.6	-1.1	-1.5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3.8	44.4	44.3	45.2	44.7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 (hors CI))	53.8	60.7	58.4	57.6	56.6
공공채무(Dette publique)	97.4	115.0	112.8	111.5	111.2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PLF 2023*, 2022.9.26., p.6.

그림 3-IV-1 프랑스 재정수지 추이



주: 2019년 재정적자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를 일반감면으로 전환하는 특별조치를 제외한 경우 2.2%, 포함한 경우 3.1% 전망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3*, 2022.9.26., p.10.

- (예산안 주요 내용) 2023년 예산법안의 네 가지 주요 목표
 - (구매력 강화)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는 가계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인상을 제한
 - (주권 강조) 2023년 국방 및 치안 관련 예산을 44억유로 증액, 사법 관련 예산 8% 증액
 - (미래를 위한 투자) 국가 교육 예산 37억유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67억 유로, 친환경부문 투자 규모 15억유로 증액
 - 교통 부문의 친환경화와 생물 다양성 확대에도 투자
 - (재정건전성)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

표 3-IV-3 2023년 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 본예산	2022 수정 예산	2022 전망	2023 예산 법안	2022~ 2023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61.5	514.1	513.4	500.2	38.7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91.9	444.0	444.6	431.9	40.0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6	70.2	68.8	68.3	-1.3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2	43.8	43.8	43.7	0.5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6.4	26.4	24.9	24.6	-1.8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8	335.3	340.1	345.1	37.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87.6	311.6	315.1	314.3	26.7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2.4	85.3	86.8	86.9	4.5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0.0	56.8	59.0	55.2	15.2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8.2	18.1	18.0	16.8	-1.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8.4	101.2	102.1	97.4	-1.0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48.6	50.2	49.3	58.0	9.3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0.2	23.7	25.0	30.8	10.7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0.4	0.8	-3.5	-3.5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1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53.8	-178.4	-172.6	-158.5	-4.6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3, 2022.9.26., p.13, p.15

- 프랑스 재무부, 2023-2027 중기재정법안(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2027, PLPFP) 발표(2022.9.26.)²⁶¹⁾
 - 2023-2027 중기재정법은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
 -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
 - 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GDP 대비 공공채무를 2025년 111.7%에서 2027년 110.9%로 낮춤
 - 해당 기간 동안 프랑스 가계 구매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표 3-IV-4 2023-2027 중기재정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조적재정수지(Solde structurel (1))	-4.2	-4.0	-3.7	-3.4	-3.1	-2.8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2))	-0.6	-0.8	-0.7	-0.5	-0.3	0.0
일회성조치(Solde des mesures ponctuelles et temporaires (3))	-0.1	-0.2	-0.1	-0.1	0.0	0.0
재정수지(Solde effectif (1+2+3))	-5.0	-5.0	-4.5	-4.0	-3.4	-2.9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57.6	56.6	55.6	55.0	54.3	53.8
재정지출증가율(%) (É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1.1	-1.5	-0.6	0.3	0.2	0.6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5.2	44.7	44.2	44.3	44.3	44.3
공공채무(Dette au sens de Maastricht)	111.5	111.2	111.3	111.7	111.6	110.9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PFP 2023-2027, 2022.9.26.

²⁶¹⁾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9.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3-plf>, 검색일자: 2022.9.26.

- 프랑스 재무부, FY2023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SS) 발표(2022.9.26.)²⁶²⁾²⁶³⁾
 - 2020년 사회보장부문은 397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개선되었고, 2023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22년과 비교해 110억유로 개선된 68억 유로를 기록할 전망
 - 인구 고령화를 반영해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는 2026년 118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2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의 주요 조치
 - 건강 예방 정책 강화
 - 예방 접종 접근성 확대
 - 백신을 처방하고 투여할 권한이 있는 보건 전문가를 확대
 -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영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 개선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재택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혁
 - 노인요양복지시설(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의 현대화 및 확대

²⁶²⁾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2.9.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3>, 검색일자: 2022.9.27.

²⁶³⁾ 보건·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pour l'année 2023*, 2022.9.26.,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presse/dossiers-de-presse/article/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lfss-pour-l-annee-2023#1-Renforcer-le-virage-preventif>, 검색일자: 2022.9.27.

표 3-IV-5 202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건강보험(CNAM Maladie)	-1.5	-30.5	-26.1	-20.3	-6.5	-4.9	-4.4	-2.6
산재보험(CNAM AT-MP)	1.1	-0.1	1.3	2.0	2.2	2.6	2.9	3.3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1.3	-4.9	-1.1	-3.0	-3.5	-9.4	-13.9	-15.9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1.5	-1.8	2.9	2.6	1.3	0.7	0.5	0.7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	-	0.3	-0.5	-1.2	0.9	0.5	0.5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	-0.2	-37.3	-22.7	-19.2	-7.6	-10.1	-14.4	-14.0
노령연대기금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6	-2.5	-1.5	1.3	0.8	1.3	1.8	2.3
사회보장부문 지출(RG+FSV)	-1.7	-39.7	-24.3	-17.8	-6.8	-8.8	-12.7	-11.8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3, 2022.9.26., p.45.

□ 프랑스 재무부, 2023년 녹색예산(budget vert) 발표(2022.10.12.)²⁶⁴⁾

* 녹색예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및 보호 등 총 여섯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2023년 예산안의 정책 등급 제시

- 2023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지출 5,694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총 594억유로
 - 2023년 예산법안에서 여섯 가지 환경 목표 중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398억유로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연구,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지원 등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23억유로
 -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196억유로이며,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도로 건설 관련 지출 포함

²⁶⁴⁾ 프랑스 재무부, "Budget vert 2023 : 4,5 milliards d'euros supplémentaires pour l'environnement," 2022.10.12., <https://www.economie.gouv.fr/budget-vert-2023-45-milliards-deuros-supplementaires-pour-l'environnement>, 검색일자: 2022.10.25.

- 프랑스 하원, 2023년도 예산법안을 헌법 조항²⁶⁵⁾에 따라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2022. 12. 17.)²⁶⁶⁾
 - *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정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²⁶⁷⁾
 -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 표결 없이 법안이 채택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발동해 2022년 12월 17일 2023년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고 12월 19일 헌법위원회에 송부²⁶⁸⁾
 - 2022년 12월 15일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²⁶⁹⁾하였고, 12월 17일 부결²⁷⁰⁾되며 2023년 예산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
 - ※ 예산법안을 대상으로 헌법 제49조 제3항이 발동된 것은 1991년 이후로 처음²⁷¹⁾

²⁶⁵⁾ 프랑스 하원, *PLF 2023 : adoption en lecture définitive*, 2022. 12. 17.,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lf-2023-adoption-en-lecture-definitive>, 검색일자: 2022. 12. 21.

²⁶⁶⁾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 9. 2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rapports/cion_fin/116b0623_rapport-fond, 검색일자: 2022. 12. 21.

²⁶⁷⁾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검색일자: 2022. 10. 5.

²⁶⁸⁾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Conseil constitutionnel,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dossiers/plf_2023?etape=16-CC, 검색일자: 2022. 12. 21.

²⁶⁹⁾ 프랑스 의회, “Texte de la motion de censure,” 2022. 12. 15.,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tatic/16/motions_censure/20221215_Motion_de_censure_PLF_2023%20LDef.pdf, 검색일자: 2022. 12. 21.

²⁷⁰⁾ 프랑스 의회, “Analyse du scrutin n° 822,” 2022. 12. 17.,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822](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822), 검색일자: 2022. 12. 21.

²⁷¹⁾ 국회사무처, 「프랑스, 헌법 제49조제3항 발동에 따른 하원 예산토론 강제 종결 및 여야 갈등 격화」, 2022. 10. 21.

나. 추가경정예산

- FY2022 1차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PLFR) 발표(2022.7.8.)²⁷²⁾
 -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지원을 위해 편성
 - 2022년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율은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85년 이후 최고 수준
 - (경제전망)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상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로 2022년 예산법의 예측치인 4%에서 하향조정
 - (재정전망)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1,685억유로로 2022년 예산법 대비 146억유로 감소하였으나 2021 회계연도 대비 23억유로 증가
 -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구매력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반 예산 지출이 442억유로 증가함
 - (재정수입)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의 순 세수는 2022년 예산법 대비 276억 유로 상향 조정된 3,152억유로로 예상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인한 수입이 각각 30억유로, 65억유로 증가하고 2022년 5월에 징수된 법인세의 수입도 168억유로 증가
 - (지원조치) 인플레이션 상승에 직면한 가계 구매력을 지원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
 - 프랑스 구매력 보호 법안을 통해 연료수당 신설, 장학금 및 공무원 임금 인상, 유류비 지원 연장, TV시청료 폐지 등을 시행
 - 에너지 전환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

²⁷²⁾ 프랑스 예산국, *PLFR 2022 -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22*, 2022.7.8.,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207#actu-16276>(https://www.budget.gouv.fr/files/files/plfr/2022/PLFR1_2022-W.PDF), 검색일자:2022.7.20.

표 3-IV-6 FY2022 1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결산 (A)	2022 예산법 (B)	2022 PLFR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88,5	461,5	505,7	17,2	44,2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18,8	391,9	436,1	17,3	44,2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7	69,6	69,6	-0,1	0,0
재정수입(Recettes de l'État)	317,0	307,7	338,9	21,9	31,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7	287,6	315,2	19,4	27,6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8,7	82,4	315,2	19,4	27,6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6,3	40,0	56,8	10,5	16,8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8,3	18,2	18,1	-0,3	-0,1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5,5	98,4	104,8	9,3	6,5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6,9	48,6	50,2	-6,7	1,5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1,3	20,2	23,7	2,5	3,6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8	-0,1	-1,7	-2,5	-1,6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0	0,0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0,7	-153,8	-168,5	2,3	-14,6

자료: 프랑스 국회,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PLFR 2022), 2022. 7. 8.

- 프랑스 재무부,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2-2, PLFR 2) 발표(2022. 11. 2.)²⁷³⁾
 -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직면한 가구 지원 강화 위해 편성
 - (경제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 9월 편성된 2023년 예산법안 전망치와 동일한 2.7%로 전망
 - 비금융 기업의 투자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가계 소비가 회복

²⁷³⁾ 프랑스 정부, *PLFR2 pour 2022 -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2022. 11. 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2/plfr2-pour-2022>, 검색일자: 2022. 11. 14.

- (재정전망)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은 4.9%로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 및 2023년 예산법안 전망치보다 0.1%p 감소
- (주요 재정조치)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연료가격 인하 지원,²⁷⁴⁾ 고용훈련 지원정책 등이 반영
 - 1,200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100~200유로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에 총 14억유로
 -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연료가격 인하에 총 40억 유로의 재정소요가 추산되며, 이를 위해 6천만유로 추가 할당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에 2억 7,500만유로 편성
 - 농업 부문에 4억 5천만유로, 청년 고용훈련 지원 확대에 20억유로 추가 지원

표 3-IV-7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 예산법 (A)	2022 1차수정 예산법 (B)	2022 수정전망 (2023 예산법안)	2022 2차수정 예산법안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61,5	505,0	500,2	514,2	52,7	9,2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91,9	434,8	431,9	446,2	54,3	11,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6	70,2	68,3	67,9	-1,7	-2,3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7,7	335,3	345,1	340,5	32,8	5,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7,6	311,6	314,3	315,8	28,2	4,2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2,4	85,3	86,9	87,4	5,0	2,1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0,0	56,8	55,2	59,0	19,0	2,2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8,2	18,1	16,8	18,0	-0,2	-0,1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8,4	101,2	97,4	100,6	2,2	-0,6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48,6	50,2	58,0	50,9	2,3	0,7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0,2	23,7	30,8	24,7	4,5	1,0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1	0,4	-3,5	1,0	1,1	0,6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3	0,3	0,3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153,8	-168,5	-158,5	-164,7	-10,9	3,8

자료: 프랑스 재무부, 2022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2), 2022. 11. 2.

²⁷⁴⁾ 에너지 바우처 및 연료가격 인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년 9월호 재정 동향」, 2022. 10., pp. 50~51. 참고

다. 결산

- 프랑스 국회, 2021 결산법안(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2021, PLR) 최종 부결(2022.8.3.)²⁷⁵⁾²⁷⁶⁾
 - 국회는 2022년 7월 제출한 2021년 결산법안을 최종 부결
 - 법안부결은 2022년과 2023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국회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지출 수준을 비판
 - 2021년 프랑스 정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및 프랑스 회복 계획을 실시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기업 및 가계에 재정지원
 - 프랑스의 경제 활동은 2021년에 강력하게 반등하여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69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
 - 2021년에는 85만개 이상의 급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2021년 4분기에는 7.4%까지 하락하여 2008년 이후 최저 수준 기록
 - 공공 적자는 2020년 GDP의 8.9%에서 2021년 6.4%로 개선되었으며, 공공 부채 역시 2020년 114.6%에서 2021년 112.5%로 하락하였는데 주로 GDP의 반등에 기인
 - 그러나 높은 수준의 긴급 지원 조치와 프랑스 회복 계획으로 인해 공공 재정은 악화되고 있음
 - 2021년 재정지출은 비상계획 미션 및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지출증가로 2020년 대비 451억유로 증가한 4,885억유로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의 연장으로 344억유로 투입

275) 프랑스 예산국, *PLR 2021-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2021*, 2022.7.4., <https://www.budget.gouv.fr/index.php/reperes/budget/articles/le-projet-de-loi-et-de-reglement-et-dapprobation-des-comptes-de-letat-pour>, 검색일자: 2022.8.17.

276) 프랑스 국회,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et d'approbation des comptes n° 13, rejeté définitivement par l'Assemblée 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5, alinéa 4, de la Constitution," 2022.8.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116t0013_texte-adopté-seance 검색일자: 2022.8.17.

- 재정지출 증가는 비상계획 미션 외에 인플레이션 수당, 수익 손실 보상 등 다양한 예외적 재정지원에 기인
- 2021년 재정수입은 경제활동 재개와 법인세 수입 증가 등으로 2020년 대비 46.3억유로 증가한 3,170억유로
- 법인세 10억유로, 소득세 4.6억유로, 에너지제품소비세 11.5억유로와 함께 국가 보증 대출로 인한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까지 증가

표 3-IV-8 FY2021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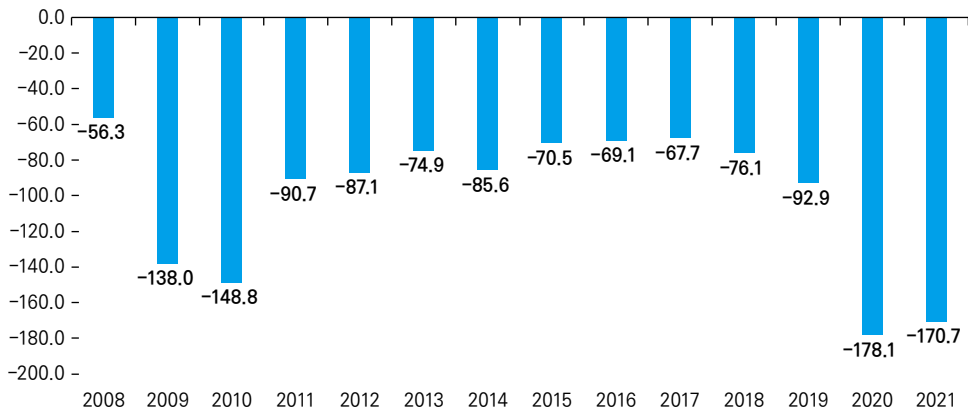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A)	2021 본예산 (B)	2021 2차수정 예산(C)	2021 결산(D)	D-A	D-B	D-C
재정지출(Depenses BG + PSR)	443.4	455.5	499.8	488.5	45.1	33.0	-11.3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56.0	257.9	277.6	295.7	39.8	37.9	18.2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8	25.3	22.4	21.3	6.5	-4.1	-1.1
특별회계(Solde comptes spéciaux)	-5.4	-0.9	-5.1	0.8	6.2	1.7	5.9
부속예산(Solde budget annexes)	0.0	0.0	-0.1	0.0	0.0	0.0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8.1	-173.3	-205.1	-170.7	7.3	2.6	34.4

자료: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1*, 2022. 7. 4., p. 13.

그림 3-IV-2 프랑스의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유로)



자료: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1*, 2022. 7. 4., p. 14.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구매력 지원 조치

- 프랑스 정부, 프랑스 구매력 보호 법안 발표(2022.7.7.)²⁷⁷⁾
 - 에너지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서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운영 중인 대책과 신규 정책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
 - (연료 수당) 10월 1일부터 근로자 1인당 100~300유로의 연료수당 지급
 - 4월 1일부터 시행한 연료가격 지원(10월 리터당 12센트, 11월 리터당 6센트, 12월 1일 종료)은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폐지예정이며,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100~300유로의 연료수당을 지급할 예정
 - 연료수당에는 직장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업무적인 이유로 연간 12,000km 이상 주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
 - (장학금 인상) 2022학년도부터 장학금은 4% 인상되며, 1유로 급식제도는 2023학년도까지 유지
 - (특별 상여금 면세) 2019년에 도입된 특별 상여금 면세 금액을 3배로 확대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세되는 특별 상여금은 개인 1천유로 → 3천유로, 회사 2천유로 → 6천유로로 확대
 - (자영업자의 사회보장기여금 축소) 자영업자들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축소하고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엔 납부 의무 면제
 - (임대료 인상 제한) 10월 15일부터 1년간 임대료 인상폭 최대 3.5% 제한²⁷⁸⁾
 - (연료 가격 유지) 2021년부터 시행된 연료가격 유지 조치를 2022년 말까지 유지
 - 전기요금 인상 4% 제한 및 가스가격 동결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

²⁷⁷⁾ 프랑스 정부, "Protéger le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2022.7.7., <https://www.gouvernement.fr/dossier-de-presse/protoger-le-pouvoir-dachat-des-francais>, 검색일자: 2022.7.18.

²⁷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2.7., p.274.

- (연금 및 사회복지급여 인상) 사회적 혜택을 재평가하여 4% 인상
 - 퇴직연금, RSA, 가족 수당 및 장애 수당 등을 재평가하여 4% 인상하고 맞춤형 주택지원(APL)은 3.5% 인상
- (푸드체크 지원) 저소득 가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유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보조금 대상자, 장학생 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며 부양자녀당 50유로가 추가로 지급됨
- (TV 시청료 폐지) 프랑스 본토 138유로, 해외 88유로 상당의 시청료 폐지
- (공무원 임금 인상) 급여회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임금 3.5% 인상

□ 프랑스 정부, 연료가격 인하 지원²⁷⁹⁾ 연장 발표(2022.8.31.)²⁸⁰⁾²⁸¹⁾²⁸²⁾

-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유류 할인²⁸⁰⁾을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리터당 18센트에서 30센트로 변경되는 새로운 조건으로 연장
 - * 기존 7월 31일까지 지원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음
 - 이후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리터당 10센트로 감소할 예정
- 해당 조치는 세금 감면이 아닌 재정지원의 형태

²⁷⁹⁾ 2022년 3월에 발표된 연료가격 인하 지원 방안은 2022년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²⁸⁰⁾ 프랑스 정부, “Remise carburant, rentrée scolaire, lanceurs d’alerte… Ce qui change au 1er septembre 2022,” 2022.8.31.,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remise-carburant-rentree-scolaire-lanceurs-dalerte-ce-qui-change-au-1er-septembre-2022>, 검색일자: 2022.9.16.

²⁸¹⁾ 프랑스 정부, “15 centimes en moins par litre de carburant dès le 1er avril,” 2022.8.24. (수정게시일),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15-centimes-en-moins-par-litre-de-carburant-des-le-1er-avril>, 검색일자: 2022.9.16.

²⁸²⁾ 프랑스 재무부, “Indemnité carburant : comment l’obtenir”, 2022.8.23. (수정게시일), <https://www.economie.gouv.fr/remise-carburant-fonctionnement>, 검색일자: 2022.9.16.

- 프랑스 정부,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 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 발표(2022.9.14.)²⁸³⁾²⁸⁴⁾
 - 가격 인상 상한을 두지 않으면 2023년 에너지 가격이 1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할 계획
 -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이 없는 경우 2023년 월 평균 추가 지출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00유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80유로로 예상
 -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면 월 평균 추가 지출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유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0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말까지 1,200만 저소득 가구에 100~200유로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
 - 최저 임금을 받는 두 자녀를 둔 미혼모에 200유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 2명의 자녀를 둔 월 소득 3천유로 이하의 가구에 100유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나. 산업 및 친환경 부문 지원 조치

- 프랑스 정부, 전자산업전략(La stratégie pour l'électronique) 발표(2022.7.12.)²⁸⁵⁾
 - 정부는 프랑스 2030²⁸⁶⁾의 일환으로 50억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산업부문의 개발, 연구 및 혁신,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산업전략을 발표
 - 전자산업전략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및 생태전환에 있어 프랑스 산업부문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함

²⁸³⁾ 프랑스 정부, "La hausse des prix de l'électricité et du gaz limitée à 15% en 2023," 2022.9.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a-hausse-des-prix-de-lelectricite-et-du-gaz-limitee-a-15-en-2023>, 검색일자: 2022.9.16.

²⁸⁴⁾ 프랑스 정부, "Discours de la Première ministre Élisabeth Borne - Conférence de presse sur la situation énergétique," 2022.9.14., <https://www.gouvernement.fr/discours/discours-de-la-premier-e-ministre-elisabeth-borne-conference-de-presse-sur-la-situation-energetique>, 검색일자: 2022.9.16.

²⁸⁵⁾ 프랑스 재무부, "France 2030 : la stratégie pour l'électronique," 2022.7.12., <https://www.economie.gouv.fr/france-2030-strategie-electronique>, 검색일자: 2022.7.14.

²⁸⁶⁾ 프랑스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5년간 30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실시함

- 생산능력개발 및 혁신기술의 산업화
 - 저전력 전자 기술(FD-SOI), 전력(GaN, SiC 등), 센서의 개발 및 생산, 인텔 디자인 및 서비스 센터 설립, 미래 산업 생산 및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등
- 차세대 혁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 10nm급 저전력 전자기술(FD-SOI) 개발로 에너지효율성 및 전력절감 강화, 학술연구 및 생태계 지원을 위한 8억유로 투자, 신형 혁신 기업·신생 기업, SMEs 혁신 지원
- 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
 - 5천만유로를 투자하여 미래기술 교육 및 개발프로젝트 지원

□ 프랑스 2030 관련 “산업 회복(Rebond Industriel)” 대책 발표(2022. 8. 3.)²⁸⁷⁾

-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직면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억유로 규모의 “산업 회복” 대책을 발표
 - 프랑스는 2030년까지 저탄소 자동차, 특히 전기 및 수소로의 전환을 위해 매년 200만대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급속 충전소, 대중교통, 새로운 형태의 여행 및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문의 가치사슬 변화에 직면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확대 및 가속화
 - “산업 회복” 대책은 다음 두 가지 지원으로 구성됨
 - (엔지니어링 지원) 새로운 산업 프로젝트의 식별 및 구체화를 촉진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과 중기 산업 회복 로드맵을 개발하며 예산은 1천만유로
 - (경제적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Transition écologique)에 기여하는 우선순위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및 상환 가능한 선지급금을 지원하며 예산은 9천만유로

²⁸⁷⁾ 프랑스 정부, “France 2030 | Lancement du dispositif « Rebond Industriel » pour accompagner les territoires confrontés aux mutations de la filière automobile,” 2022. 8. 3., <https://www.gouvernement.fr/france-2030-lancement-du-dispositif-rebond-industriel-pour-accompagner-les-territoires-confrontes>, 검색일자: 2022. 8. 23.

- 8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관심표명(Appel à manifestation d'intérêt, AMI)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연간 약 10개 지역이 지원을 받게 됨
- 프랑스 재무부, 자전거 구입을 위한 지원 강화(Renforcement des aides nationales à l'achat d'un vélo) 발표(2022.8.13.)²⁸⁸⁾
 -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인 일반 및 전기 자전거 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보너스(Le bonus écologique) 관련 시행령(Décret n° 2022-1151 du 12 août 2022 relatif aux aides à l'acquisition ou à la location de véhicules peu polluants)을 제정하여 지원을 강화
 - 새로운 자전거 구입 시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2천유로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구매비용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사람당 1대 적용
 -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전기 자전거 구매 시, 전환 보너스 금액을 더해 일반인은 1,500유로, 장애인은 3천유로까지 보너스 지급
 - * 노후 차량은 총 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2011년 이전 등록된 디젤 및 2006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 차량(승용차 또는 밴)
 - 지원금은 2022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²⁸⁸⁾ 프랑스 재무부, "Renforcement des aides nationales à l'achat d'un vélo," 2022.8.13., <https://presse.economie.gouv.fr/13-08-2022-renforcement-des-aides-nationales-a-lachat-dun-velo/>, 검색일자: 2022.8.22.

표 3-IV-9 자전거 구입 지원금

(단위: 유로)

구분	기준 소득이 6,300유로 이하인 일반인 또는 장애인	기준 소득이 1만 3,489유로 이하인 일반인	법인	오염 차량을 처분한 개인 또는 법인
일반 자전거	150	-	-	-
전기 자전거	400	300	-	1,500 3,000 (기준소득 6,300 이하 또는 장애인인 경우)
(일반)화물 자전거, 장애인용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등	2,000	1,000	1,000	-
(전기)화물 자전거, 장애인용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등	2,000	1,000	1,000	1,500 3,000 (기준소득 6,300 이하 또는 장애인인 경우)
전기 트레일러	2,000	1,000	1,000	-

자료: 프랑스 재무부, “Renforcement des aides nationales à l'achat d'un vélo,” Press Release, 2022.8.13., <https://presse.economie.gouv.fr/13-08-2022-renforcement-des-aides-nationales-a-lachat-dun-velo/>, 검색일자: 2022.8.22.

□ 프랑스 정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패키지(Forfait mobilité durable, FMD) 인상 (2022.8.17.)²⁸⁹⁾

-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패키지의 혜택 및 면제한도를 2022년 8월 재정법 개정을 통해 인상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패키지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프랑스 국민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
 - 일반 및 전기 자전거, 수소자동차, 카풀,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직원 및 고용주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함
 -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금이 기존 600유로에서 800유로로 인상

²⁸⁹⁾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Forfait mobilités durables : relèvement des plafonds d'exonération,” 2022.8.18.,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046>, 검색일자: 2022.8.23.

- 고용주는 기여금 및 사회기여금 면제한도가 기존 500유로에서 700유로로 인상
 - 2022년부터 2023년간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급여 명세서에 기록됨
 - 직원은 매년마다 운송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 또는 선서 진술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함
-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2022.8.25.)²⁹⁰⁾
- 2019년부터 시작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지원을 2022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자체 수를 더욱 확대하기로 발표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지원은 국립공원, 해양공원 및 Natura 2000²⁹¹⁾ 지역에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함
 - 2022년 재정법 개정에는 세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됨
 - 2021년 1천만 유로에서 2022년 2,430만 유로로 할당 지원금의 총액 증가
 - 지역 자연 공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유로 할당
 - Natura 2000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기존 1,230개에서 2,200개로 확대하고, 지원금 역시 550만유로에서 1,480만유로로 증액
 - 2022년 재정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지방 당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통합 가능해짐
-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법안 제출(2022.9.28.)²⁹²⁾
-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²⁹⁰⁾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Elargissement de la dotation de soutien aux communes pour la protection de la biodiversité,” 2022.8.25., <https://www.ecologie.gouv.fr/elargissement-dotation-soutien-aux-communes-protection-biodiversite>, 검색일자: 2022.8.29.

²⁹¹⁾ Natura 2000은 EU의 자연보호지역네트워크로 육상 및 해양을 포함한 회원국 영토에서의 서식지 보호, 야생 조류종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²⁹²⁾ 프랑스 정부,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2022.9.28., <https://www.vie-publique.fr/loi/286391-loi-energies-renouvelables-eolien-solaire>, 검색일자: 2022.10.12.

-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지역 거주자에 대한 전기 요금 절감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의 이점 확대
 - 2,500m² 이상 야외주차장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 설치 확대
- 프랑스 정부, 수소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2022.9.28.)²⁹³⁾²⁹⁴⁾
- 프랑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France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수소 부문에 21억유로 투자 계획 발표
 -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및 기술 지원
 - 4개의 기가와트(GW) 규모의 전해조를 건설하고 수소 탱크 생산 지원
 -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을 위한 수소연료전지(fuel cells) 및 수소 열차와 수소 자동차 개발 지원
 - 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재료 개발 지원
 - 수소 산업에서 약 5,200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기대
- 프랑스 재무부, 자동차 부문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2022.10.18.)²⁹⁵⁾
- 프랑스는 2030년까지 연간 200만대의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자동차 부문 혁신 투자 확대 계획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기술 지원에 2천만유로 지원²⁹⁶⁾

²⁹³⁾ 프랑스 정부, “Pourquoi la France mise sur l’hydrogène,” 2022.9.28.,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pourquoi-la-france-mise-sur-lhydrogene>, 검색일자: 2022.10.11.

²⁹⁴⁾ 프랑스 정부, “Faire de la France le « leader » de l’hydrogène décarboné avec France 2030,” 2022.9.28.,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faire-de-la-france-le-leader-de-lhydrogene-decarboné-avec-france-2030>, 검색일자: 2022.10.11.

²⁹⁵⁾ 프랑스 재무부, “Automobile : de nouveaux soutiens publics à la filière,” 2022.10.18., <https://www.economie.gouv.fr/automobile-nouveaux-soutiens-publics-filiere-electrique>, 검색일자: 2022.10.25.

²⁹⁶⁾ 프랑스 정부, “20 millions d’euros pour démocratiser le retrofit électrique,” 2022.10.18.,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20-millions-deuros-pour-democratiser-le-retrofit-electrique>, 검색일자: 2022.10.26.

- 자동차 산업의 협력기업 지원 강화²⁹⁷⁾
 - 미래 이동수단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적용될 필수 제품 개발 다각화 전략 지원
- 프랑스 재무부, 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 방안 발표(2022.11.21.)²⁹⁸⁾
 - 모든 기업에 대한 전력소비세(Taxe intérieure sur la consommation finale d'électricité, TICFE)를 최저 수준으로 적용
 - 매출 200만유로 이하, 직원 수 10인 이하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지원
 - 36kVA(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3년 가계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15% 상한제 적용
 - 전력 사용량이 36kVA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325유로/MWh로 설정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의 50% 지원
-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항공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발표(2022.12.9.)²⁹⁹⁾
 - 생태학적 전환과 운송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총 4억 3,500만유로 지원 계획
 -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프로젝트 지원 가속화

²⁹⁷⁾ 프랑스 정부, "Automobile | 300 M€ pour soutenir à la diversification des sous-traitants de la filière dans le cadre de France 2030," 2021.12.20., <https://www.gouvernement.fr/automobile-300-meu-pour-soutenir-a-la-diversification-des-sous-traitants-de-la-filiere-dans-le-cadre>, 검색일자: 2022.10.12.

²⁹⁸⁾ 프랑스 재무부, "Hausse des prix de l'énergie : les dispositifs d'aide aux entreprises," 2022.11.21., <https://www.economie.gouv.fr/hausse-prix-energie-dispositifs-aide-entreprises>, 검색일자: 2022.11.22.

²⁹⁹⁾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France 2030: 435 millions d'euros en faveur de la décarbonation de l'aviation," 2022.12.9., <https://www.ecologie.gouv.fr/france-2030-435-millions-deuros-en-faveur-decarbonation-laviation>, 검색일자: 2022.12.15.

라. 기타

- 경쟁·소비·부정 방지국, 일시적 레시피 변경 및 제품 라벨 표기 면제 허용 (2022. 7. 15.)³⁰⁰⁾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 및 화장품 산업의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소비·부정 방지국(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은 식품 레시피 및 제품의 라벨 표시 면제 서비스를 실시함
 - 공급 불안정은 제품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기업은 전용양식에 따라 알레르기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일시적 수정 및 표시 면제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며,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 제한된 기간(최대 6개월)
 -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레시피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보공개 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요청이 확인되면 소비자를 위한 레시피 또는 제품 구성의 임시 수정에 대한 정보가 경쟁·소비·부정 방지국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시함
- 마크롱 대통령, 에너지 절감 계획 발표(2022. 7. 18.)³⁰¹⁾
- 엠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7월 14일 연설에서 전쟁 관련 에너지 부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계획을 발표

³⁰⁰⁾ 프랑스 재무부, “Modifications temporaires de recettes et dérogation d’étiquetage de produits,” 2022. 7. 15., <https://www.economie.gouv.fr/alimentaire-modifications-temporaires-recettes-derogation-etiquetage-derogconso> 검색일자 : 2022. 7. 19.

³⁰¹⁾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savoir sur le plan « sobriété énergétique »,” 2022. 7. 18.,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ce-quil-faut-savoir-sur-le-plan-de-sobriete-energetique> 검색일자 : 2022. 7. 20.

- 향후 2년 동안 에너지 소비(연료, 천연 가스, 전기)를 2019년 대비 10% 감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4가지 전략을 수립
 - 에너지 소비 축소
 - 에너지 효율화
 -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 프랑스 원자력 부문 재활성화
 - 모든 공공 및 민간 참여자로 이루어진 총 5개의 실무 그룹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의 결과 및 운영방안 등은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임
 - 모범국가(6월 29일 첫 회의)
 - 기업 및 노동조직(7월 1일 첫 회의)
 - 공공시설 및 대규모 상업시설(7월 6일 첫 회의)
 - 2개의 실무 그룹(주택, 지방당국)은 곧 출범할 예정
- 프랑스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보증대출 연장 (2022.9.23.)³⁰²⁾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대출 (Prêt garanti par l'État, PGE)이 2022년 말까지 연장
 -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5%까지 대출을 허용
 - 기업의 법적 형태 및 규모 기준은 없고 각 기업의 재정 상황과 자금 조달 필요성에 따라 대출이 결정

³⁰²⁾ 프랑스 재무부, "Ukraine : prolongation du PGE résilience pour soutenir les entreprises affectées économiquement," 2022.9.23., <https://www.economie.gouv.fr/ukraine-lancement-pge-resilience-entreprise>, 검색일자: 2022.9.26.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2. 7. 29.)³⁰³⁾
 - 대외무역의 회복으로 프랑스의 2분기 GDP는 0.5% 성장함
 - 수출증가(+0.8%)와 수입감소(-0.6%)에 따라 대외무역이 GDP 성장에 0.4% 기여함
 - 수출은 운송 서비스(+6.3%)와 관광객의 소비(+8.6%)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석유(-9.9%) 및 기타 공산품(-1.5%)의 수입이 감소함
 - 가계소비는 1분기 -1.3%, 2분기 -0.2%로 2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관광업의 회복으로 프랑스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는 증가함
 -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정보 및 통신, 비즈니스 분야의 주도로 증가세를 유지함(+0.5%)

³⁰³⁾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rebounded in Q2 2022 (+0.5%)," 2022. 7. 2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80956> 검색일자: 2022. 8. 25.

표 3-IV-10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1Q3	2021Q4	2022Q1	2022Q2	2021	
GDP 성장률	3.3	0.6	-0.2	0.5	6.8	
가계 소비	5.8	0.5	-1.3	-0.2	5.2	
정부 소비	3.0	0.4	0.0	-0.2	6.4	
총고정자본형성 ²⁾ (GFCF)	0.5	-0.1	0.5	0.5	11.4	
수출	2.3	2.8	1.6	0.8	8.6	
수입	1.0	4.0	1.2	-0.6	7.8	
GDP 기여도 (%)	국내수요 ³⁾	3.9	0.4	-0.5	0.0	7.0
	재고투자	-0.9	0.6	0.2	0.1	-0.3
	대외무역	0.4	-0.4	0.1	0.4	0.1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rebounded in Q2 2022 (+0.5%)," 2022. 7. 29.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3분기 GDP 성장률 0.2% 발표(2022.10.28.)³⁰⁴⁾

- 프랑스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 0.5%와 비교해 다소 둔화된 0.2%
 - 국내수요가 GDP 성장에 0.4% 기여
 - 총고정자본형성(GFCF)이 1분기 0.6%, 2분기 0.4%에 이어 3분기에 1.3%로 빠르게 증가
 - 수출이 전 분기 대비 둔화되고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대외무역은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³⁰⁴⁾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slowed down in Q3 2022 (+0.2% after +0.5%)," 2022.10.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654735>, 검색일자: 2022.11.21.

표 3-IV-11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1Q4	2022Q1	2022Q2	2022Q3	2021	2022 (전망)	
GDP 성장률	0.6	-0.2	0.5	0.2	6.8	2.5	
가계 소비	0.5	-1.3	0.3	0.0	5.2	2.3	
정부 소비	0.6	0.1	-0.1	0.5	6.4	2.4	
총고정자본형성 ²⁾ (GFCF)	-0.1	0.6	0.4	1.3	11.4	2.0	
수출	2.9	2.0	1.3	0.7	8.6	7.4	
수입	4.7	1.7	1.2	2.2	7.8	8.3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4	-0.5	0.2	7.0	2.4	
	재고투자	0.7	0.2	0.3	0.2	-0.3	0.6
	대외무역	-0.5	0.0	0.0	-0.5	0.1	-0.4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slowed down in Q3 2022 (+0.2% after +0.5%)," 2022.10.28.

2) 실업률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2.8.12.)³⁰⁵⁾

- 2022년 2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4%로 전 분기 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5%p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1%p 증가한 6.7%로 안정적이었고, 50세 이상 실업률은 0.3%p 감소한 5.2%를 기록
 - 전 분기 대비 실업자는 2만 9천명 증가하였으나, 장기실업률은 소폭 하락함
 - 남성의 실업률이 7.5%, 여성의 실업률은 7.3%로 전년 대비 각각 0.4%p, 0.6%p 감소한 수치
 - 15~64세 고용률은 68.0%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통계청이 측정을 시작한 1975년 이래 최고수준 기록

³⁰⁵⁾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4%," 2022.8.12.,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83584>, 검색일자: 2022.8.26.

표 3-IV-12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구분	2022Q1	2022Q2	증감		2022Q2 실업자 수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3	7.4	0.1	-0.5	2,265
15-24세	16.5	17.8	1.3	-1.5	592
25-49세	6.6	6.7	0.1	-0.3	1,178
50세 이상	5.5	5.2	-0.3	-0.8	495
남자	7.4	7.5	0.1	-0.4	1,179
15-24세	17.0	18.1	1.1	-0.9	321
25-49세	6.5	6.7	0.2	-0.2	604
50세 이상	5.5	5.3	-0.2	-0.8	254
여자	7.3	7.3	0.0	-0.6	1,087
15-24세	15.9	17.5	1.6	-2.0	272
25-49세	6.7	6.6	-0.1	-0.6	574
50세 이상	5.6	5.1	-0.5	-0.7	241
장기실업률	2.2	2.1	-0.1	-0.3	638
고용률	68.0	68.0	0.0	1.0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 Q2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4%," 2022.8.12.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3분기 실업률 7.3% 발표(2022.11.15.)³⁰⁶⁾

- 2022년 3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3%로 전 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7%p 하락
 - 15~25세 실업률은 18.3%로 전 분기 대비 0.3%p 상승,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
 - 25~49세 실업률은 6.5%, 50세 이상 실업률은 5.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15~64세 고용률은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68.3%

³⁰⁶⁾ 프랑스 통계청, "In Q3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3%," 2022.11.15.,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659047>, 검색일자: 2022.11.21.

표 3-IV-13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구분	2022Q2	2022Q3	증감		2022Q3 실업자 수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4	7.3	-0.1	-0.7	2252
15-24세	18.0	18.3	0.3	-0.9	613
25-49세	6.6	6.5	-0.1	-0.6	1146
50세 이상	5.2	5.1	-0.1	-0.7	493
남자	7.6	7.6	0.0	-0.3	1187
15-24세	18.5	19.8	1.3	1.0	356
25-49세	6.7	6.5	-0.2	-0.4	590
50세 이상	5.2	5.0	-0.2	-1.0	241
여자	7.3	7.1	-0.2	-1.0	1065
15-24세	17.5	16.5	-1.0	-3.2	257
25-49세	6.6	6.4	-0.2	-1.0	556
50세 이상	5.1	5.3	0.2	-0.4	252
장기실업률	2.1	2.0	-0.1	-0.4	600
고용률	68.0	68.3	0.3	0.8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3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3%," 2022. 11. 15.

나. 재정 통계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2분기 일반정부 부채 발표(2022.9.23.)³⁰⁷⁾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22년 2분기 말 일반정부 부채는 전 분기 대비 62억 유로 증가하였고, GDP 증가로 인해 GDP 대비 부채비율은 113.3%로 1.4%p 감소
 -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행정 부문의 부채는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의 부채는 다소 감소

³⁰⁷⁾ 프랑스 통계청, "information rapides n. 248. At the end of Q2 2022, the Maastricht debt accounted for €2,916.8 billion", 2022.9.23.,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532687>, 검색일자: 2022.9.26.

표 3-IV-14 프랑스 일반정부 부채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년2분기	2021년3분기	2021년4분기	2022년1분기	2022년2분기
일반정부	2,768.7	2,840.9	2,821.9	2,910.7	2,916.8
(GDP 대비 %)	(114.4%)	(115.6%)	(112.8%)	(114.7%)	(113.3%)
중앙정부	2,165.1	2,230.5	2,227.5	2,292.3	2,308.6
중앙행정기관	69.6	74.5	74.3	73.0	69.4
지방공공행정	233.1	236.0	245.5	245.1	247.9
사회보장행정	300.9	299.9	274.6	300.2	291.0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 248," 2022. 9. 23.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3분기 일반정부 부채 발표(2022. 12. 16.)³⁰⁸⁾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22년 3분기 말 일반정부 부채는 전 분기 대비 400억유로 증가한 2조 9,548억유로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전 분기 대비 0.4%p 증가한 113.7%
 -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 기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공행정 부문의 부채는 다소 감소

표 3-IV-15 프랑스 일반정부 부채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년3분기	2021년4분기	2022년1분기	2022년2분기	2022년3분기
일반정부	2,840.9	2,821.9	2,910.7	2,916.8	2,956.8
(GDP 대비 %)	115.6%	112.8%	114.7%	113.3%	113.7%
중앙정부	2,230.5	2,227.5	2,292.3	2,308.6	2,345.0
중앙행정기관	74.5	74.3	73.0	69.4	70.4
지방공공행정	236.0	245.5	245.1	247.9	241.7
사회보장행정	299.9	274.6	300.2	291.0	299.8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 330," 2022. 12. 16.

³⁰⁸⁾ 프랑스 통계청, "information rapides n. 330. At the end of Q3 2022, the Maastricht debt accounted for €2,956.8 billion," 2022. 12. 16.,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678409>, 검색일자: 2022. 12. 20.

다. 경제전망 및 재정계획

- 프랑스 정부, 2022~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발표(2022. 7. 29.)³⁰⁹⁾
 - (경제전망)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2021년 6.8%로 강하게 반등한 후 2022년 2.5%까지 감소하고 2023년에는 1.4%, 2024~2027년 평균 1.7% 성장할 전망
 -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후 2022년 2분기부터 경제활동이 반등하고 구매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연말까지 가계소비가 가속화될 전망
 - 2023년까지는 지정학적 상황과 공급에 대한 긴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구매력 지원 조치는 계속될 것
 - 프랑스 2030,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³¹⁰⁾ 감면 등으로 공급부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수출실적 손실 회복, 무역정상화, 완전 고용을 위한 계획 등이 실시되면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GDP는 2023년에 +1.4%를 기록하고 2024~2027년 기간 동안 가속화되어 2024년과 2027년 사이에 1.6%에서 1.8%로 증가할 전망
 - 경제회복은 2024년부터 뚜렷해질 전망이며 2027년까지 가속화되어 2024~2027년에는 평균 1.7%에 도달할 전망
 - (재정전망) 코로나19 및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수지 및 공공채무 비율은 공공 지출 통제를 통해 개선되어 2024년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는 2020년 -8.9%에서 2021년 -6.4%, 2022년 -5%, 2024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2027년 -3% 미만까지 감소할 전망
 - 2022년 공공채무 비율은 GDP의 111.9%까지 감소하고 부채 흐름이 제한되어 2023년 공공채무 비율은 소폭 감소한 111.7%를 기록할 전망

³⁰⁹⁾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2022. 7. 29., 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2/programme_stabilite/PSTAB%202022.pdf, 검색일자: 2022. 8. 1.

³¹⁰⁾ 기업부가가치금(연간 매출액 50만유로 달성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2022. 8. 1. 참고

- 2021년 채무 수준은 GDP의 112.5%(2조 8,131억유로)로 2020년의 114.6% 대비 약 2%p 감소함
- 중기 성장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소폭 상승한 후 2026~2027년에는 안정화를 넘어 감소할 전망

표 3-IV-16 2021~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제성장률	6.8	2.5	1.4	1.6	1.7	1.7	1.8
가계소비	5.2	2.8	1.9	1.8	1.9	1.8	1.9
일반정부소비	6.4	1.4	0.5	0.4	0.3	0.8	1.0
수입	7.8	6.5	3.0	3.5	3.5	3.1	3.4
수출	8.6	7.1	3.5	4.1	4.1	4.1	4.2
총고정자본형성	11.4	2.9	0.8	1.8	2.0	1.1	1.4
GDP디플레이터	1.3	2.3	3.2	1.7	1.6	1.6	1.6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2022.7.29.

표 3-IV-17 2019~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3.1	-8.9	-6.4	-5.0	-5.0	-4.6	-4.0	-3.4	-2.9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	53.8	60.6	58.4	57.3	55.5	55.2	54.7	54.1	53.5
재정지출 증가율	2.8	6.8	4.3	3.0	1.4	2.8	2.5	2.1	2.4
총조세부담률	43.8	44.4	44.3	44.8	43.5	43.8	44.0	44.0	44.0
GDP 대비 공공채무	97.4	114.6	112.5	111.9	111.7	112.8	113.3	113.2	112.5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2022.7.29.

- (재정전략) 2023~2027년의 기간 동안 정부는 재정의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함
 - 2027년까지 공공적자 3% 미만 달성과 동시에 지출의 질을 높여 완전 고용 및 성장잠재력을 지원할 예정
 -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채무를 감소시켜, 2026년부터 GDP 대비 공공채무의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짐

- 완전 고용 달성과 활동 및 성장 잠재력 지원을 위해 생태 및 디지털 전환의 필수 투자를 강화하고, 프랑스 2030 및 프랑스 회복계획에 따른 지출은 지속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비상계획 및 회복 관련 부문을 제외하고 0.6%로 제한하고, 세금의 의무 부과율 증가는 방지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구현

□ 프랑스 재무부,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발표(2022. 10. 15.)³¹¹⁾

- (경제전망)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6.8%를 기록하며 강력한 경제 회복세를 보인 후 2022년 2.7%, 2023년 1.0%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경제 회복에 악영향
- (물가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승 제한 정책으로 EU 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5.3%를 기록하고, 2023년 4.2%로 다소 안정될 전망
- (재정수지)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2023년 5%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27년 3% 이하 기록 전망
 - 2021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
 - 2022년 코로나19 관련 지원조치의 점진적 폐지에도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5%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2023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으로 재정적자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재정지출 증가 억제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7년 3% 이하로 감소 전망

³¹¹⁾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2-10/2023_dbp_fr_en.pdf, 검색일자: 2022. 10. 17.

- (국가채무) 재정적자의 악화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112.8%까지 상승했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전략) 2027년 재정수지 3%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2022~2027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0.6% 이하로 제한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부문을 포함한 모든 정부범위에서 지출 증가 억제 노력 필요
 - 지출 증가 억제 노력은 친환경 부문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와 병행 필요

표 3-IV-18 프랑스 2023 재정계획안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6.5	-5.0	-5.0	-4.5	-4.0	-3.4	-2.9
구조적 재정수지	-5.1	-4.2	-4.0	-3.7	-3.4	-3.1	-2.8
국가채무	112.8	111.5	111.2	111.3	111.7	111.6	110.9

자료: EU집행위원회,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 10. 15.

- 프랑스 중앙은행,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2022. 12. 17.)³¹²⁾
 - 물가상승률(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은 2022년 6.0%를 기록할 전망이고, 2023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후 점차 낮아질 전망
 - 이후 2024년 말과 2025년에 물가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수준인 2%를 기록할 전망
 - 하반기 경제 활동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서비스 부문의 반등으로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전망
 - 일자리 창출 확대로 2022년 실업률은 7.3%로 감소

312) 프랑스 중앙은행, "Projections macroéconomiques - Décembre 2022," 2022. 12. 17.,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projections-macroeconomiques-decembre-2022>, 검색일자: 2022. 12. 20.

-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은 0.3%에 그칠 전망
 - 가스 공급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큼
-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공급에 대한 긴장이 정점을 지나고 2024년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2%로 완만하다 2025년 1.8%로 높아질 전망

표 3-IV-19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 GDP	1.9	-7.9	6.8	2.6	0.3	1.2	1.8
물가상승률	1.3	0.5	2.1	6.0	6.0	2.5	2.1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물가상승률	0.6	0.6	1.3	3.5	4.0	2.8	2.2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Projections macroéconomiques - Décembre 2022, 2022.12.17.

라. 최고재정자문위원회 보고서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igh Council of Public Finances, HCFP), 인플레이션 상승이 공공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2022.9.9.)³¹³⁾
 - 프랑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2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6.1%를 기록
 -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의 분모가 높아져 채무 상황이 용이해 채무 부담이 감소
 -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공공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율과 기초재정수지의 조정에 따라 변화

³¹³⁾ 최고재정자문위원회, “EN 2022, LA HAUSSE DE L'INFLATION AUGMENTE LE RATIO DE DETTE PUBLIQUE RAPPORTÉE AU PIB,” 2022.9.9., <https://www.hcfp.fr/node/226>, 검색일자: 2022.9.26.

- 통화정책의 조정과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에 따라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면 물가상승이 공공채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정부의 지원 조치 확대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물가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성장이 둔화되면 공공채무에 부정적 영향
 - 모든 요인을 종합하였을 때, 물가상승으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약 1.2%p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3년 프랑스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9.26.)³¹⁴⁾
- 2023년 예산법안의 2022년 경제에 대한 기본가정(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5.3%)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전망이라 평가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은 다른 기관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이러한 전망은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1.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
 - 하지만 2023년 성장 전망엔 다양한 하방 리스크 존재
 - 전체적으로 2023년 공공부문 재정은 느리게 회복하고 불확실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채무 수준이 거시경제적 충격과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3-2027 중기재정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9.26.)³¹⁵⁾
- 다소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정부가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를 3%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소 제한적이라 평가

³¹⁴⁾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X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3*, 2022.9.2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4-lois-de-finances-2023>, 검색일자: 2022.9.26.

³¹⁵⁾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 À 2027*, 2022.9.2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5-loi-de-programmation-2023-2027>, 검색일자: 2022.9.27.

-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과 세수 확대 계획이 부분적으로만 제시됨을 지적
 -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가장 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출 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언급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 11.2.)³¹⁶⁾
- (경제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예산법안의 전망과 동일한데, 2분기 말 이후 프랑스 경제의 회복력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에너지 공급 중단 위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
 - (재정전망) 2023년 예산법안과 비교해 0.1%p 개선된 2022년 재정수지 전망은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제언) 거시경제 또는 금융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출 통제 노력 필요

³¹⁶⁾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Avis n°2022-6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n°2*, 2022. 11. 2.,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6-loi-de-finances-rectificativ-e-ndeg2>, 검색일자: 2022. 11. 14.



영국*

□ 2022-23회계연도: 2022년 4월~2023년 3월

표 3-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7.7.	예산책임청(OBR), '2022 재정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발표
2022.7.29.	영국 통계청, 'FY2020-21 조세 및 재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
2022.9.23.	영국 정부, '2022년 성장 계획(The Growth Plan 2022)' 발표
2022.9.8., 9.21., 9.23.	영국 정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기업, 에너지 시장 지원 계획 발표
2022.10.17.	신임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한 철회 결정 발표
2022.10.18.	영국 재무부,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과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 자금 지급을 위한 FY2022-23 중앙정부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출
2022.9.28.	영국 중앙은행,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국채 매입 시행
2022.11.17.	영국 재무장관, '2022년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 발표

* 한혜란 선임연구원(hrhan@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 영국 정부, ‘2022년 성장 계획(The Growth Plan 2022)’ 발표(2022.9.23.)³¹⁷⁾
 - (개요) 퀴지 콰텡(Kwasi Kwarteng) 재무장관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생산성 및 임금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계획을 발표
 - ※ 동 계획을 2022년 9월 초에 취임한 트러스(Liz Truss) 신임 총리 정부의 첫 ‘미니 예산안’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³¹⁸⁾
 - (경제 현황)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된 후, 2022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22년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
 - 2022년 8월 CPI 상승률은 약 40년 만에 최고치인 9.9%를 기록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
 - (주요 정책) 영국 정부는 중기적으로 2.5%의 GDP 추세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면의 개혁과 기업 및 가계에 대한 감세 정책을 제시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정책(9월 초 발표)의 예상 비용도 추계
 - ※ 주요 외신은 발표된 감세 정책 규모를 약 450억파운드 수준으로 보도³¹⁹⁾
 - (민간 투자 활성화) 영국 전역의 민간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 감면 및 규제 개혁을 추진
 - (법인세) 당초 예정된 법인세 기본세율 인상(19%→25%, 2023년 4월) 계획을 철회

³¹⁷⁾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new Growth Plan with biggest package of tax cuts in generations,” 2022.9.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new-growth-plan-with-biggest-package-of-tax-cuts-in-generations>, 검색일자: 2022.9.26.

HM Treasury, *The Growth Plan 2022*, 2022.9.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05985/HMT_Autumn_Statement_2022_PRINT.pdf, 검색일자: 2022.9.26.

³¹⁸⁾ IFS, “Mini-Budget response,” 2022.9.23., <https://ifs.org.uk/articles/mini-budget-response>, 검색일자: 2022.9.26.

³¹⁹⁾ Reuters, “UK tax cuts to cost 45 bln pounds by 2026/27,” 2022.9.23., <https://www.reuters.com/world/uk/uk-tax-cuts-cost-45-bln-pounds-by-202627-2022-09-23/>, 검색일자: 2022.9.26.

- (연간 투자 공제) 당초 202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공장, 기계 등에 대한 연간 투자 공제 확대(20만→100만파운드)를 향후에도 계속 시행
- ('투자 구역' 신설) 잉글랜드 내 38개 지역에 신규 '투자 구역'을 설정하여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
- (기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³²⁰ 지원 확대, 은행원 상여금 상한 규정 폐지, 연금 기금의 영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등
- (노동시장 참여 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근로자는 더 높은 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
 - (소득세) 2023년 4월에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소득세 기본세율을 인하(20→19%)하고 고소득자 최고 세율을 조정(15만파운드 이상 과세소득에 45→40% 적용)³²¹
 - (국가보험기여금) 2022년 4월부터 시행한 국가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1.25%p)을 11월부터 적용 중단하고 당초 2023년 4월에 예정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신규 도입 계획도 철회
 - (배당세)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분야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시행된 배당세율 인상(1.25%p, 2022년 4월)도 2023년 4월부터 취소될 예정
 - (기타) 통합급여³²² 수급자 중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가 더 나은 유급 일자리를 찾도록 제도를 개혁³²³하고 구직 이행 제재를 강화하며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 구직 지원도 강화

³²⁰ 신생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원제도로 2023년 4월부터 조달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기업 적격 조건을 완화할 예정

³²¹ 고소득자 대상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퀴지 콰텡 재무장관은 10월 3일, '2022년 성장계획'에서 발표된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안을 철회한다고 표명(HM Treasury, "An update on Additional Rate tax," 2022.10.3., <https://www.gov.uk/government/news/an-update-on-additional-rate-tax>, 검색일자: 2022.10.4.)

³²²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복지급여 제도들을 단일화한 근로연령층 대상의 복지급여제도임

³²³ 국민생활임금 수준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통합급여 수급자가 취업 지도관과의 정기 면담이나 수입 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주택시장 지원) 주택 구매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개혁도 향후에 추진할 예정
 - (인지세) 주택 거래 인지세의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부동산 가액 12.5만 →25만파운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부동산 가액 30만→42.5만파운드)(2022년 9월)
 - (토지 공급 확대) 공공부문의 유휴 토지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개정
- (양질의 인프라 공급 가속화) 정부는 에너지, 수자원, 육상 풍력발전, 도로, 통신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개혁, 제도 간소화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
- (기업 지원) 기업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각종 규제 개혁, 조세 시스템 간소화 등을 추진
 - 주세 동결(2023년 2월) 및 주세 제도 개혁 시행(2023년 8월)
 - 디지털 부가가치세 면세 쇼핑 도입 등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 가격 상승 관련 대응 정책의 예상 비용을 약 600억파운드로 전망³²⁴⁾
 - (가계 지원)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Energy Price Guarantee)(310억파운드)
 - (기업 지원) 에너지 요금 경감 제도(Energy Bill Relief Scheme)(6개월, 290억파운드)
 - (에너지 회사 지원) 이 외에도 영국 중앙은행과 함께 에너지 시장 자금 조달 제도(Energy Markets Financing Scheme)를 통해 상업은행이 에너지 기업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증 제공
- (자금 조달) 정책 패키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FY2022-23에 채무관리국의 순자금소요액(Net Financing requirement)을 1,617억파운드(2022년 4월 기준)에서 2,341억파운드(2022년 9월 기준)로 상향 조정하고 자금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

³²⁴⁾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 완화 정책이 이번 겨울에 인플레이션을 약 5%p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신임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한 철회 결정 발표(2022. 10. 17.)³²⁵⁾
- (주요 경과) 감세 정책을 담은 ‘2022년 성장계획’이 발표(9월 23일)된 후 금융 시장 혼란(국채 금리 급등,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³²⁶⁾되자 영국 정부는 일부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
 -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안(45→40%)을 철회(10월 3일)
 - 트러스 전 총리, 법인세율 인상(19→25%, 2023년 4월) 취소안에 대한 철회 의사 발표(10월 14일)
 - (주요 내용) 10월 17일,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경제 안정을 보장하고 재정규율 관련 정부 약속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2년 성장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중기재정계획 발표 예정일보다 앞당겨 발표
 - (감세 정책 추가 철회) 10월 17일, 정부가 ‘성장계획’에 담긴 다수의 조세 정책을 추가 철회함에 따라 앞서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유지,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까지 고려 시 조세정책 변경을 통해 연간 약 320억파운드를 확보할 전망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0→19%, 2023년 4월)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가 가능해질 때까지 현행 20%의 세율을 유지
 - 배당세율 1.25%p 인상 취소 계획을 철회
 - 2017년 및 2021년의 IR35³²⁷⁾ 규정 개혁을 폐지(2023년 4월)하는 계획을 철회
 - 해외여행객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쇼핑 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
 - 당초 2023년 2월부터 1년 동안 시행 예정이던 주세 동결 계획을 철회

³²⁵⁾ HM Treasury, “Chancellor brings forward further Medium-Term Fiscal Plan measures,” 2022.10.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brings-forward-further-medium-term-fiscal-plan-measures>, 검색일자: 2022.10.18.

³²⁶⁾ 감세 계획의 여파로 퀴지 콰텡(Kwasi Kwarteng) 전 장관 사퇴 후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신임 재무장관이 임명(10월 14일)되었고, 리즈 트러스(Liz Truss) 전 총리도 사임함에 따라 리시 수낙(Rishi Sunak) 신임 총리가 취임(10월 25일)

³²⁷⁾ 기업-근로자 간 직접 고용이 아닌 중개업체를 통한 서비스(근로) 제공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R35(off-payroll working rules) 규정을 도입.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 직접 고용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국가보험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2017년, 2021년 개혁 이후 해당 근로자의 IR35 규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책임 주체가 클라이언트인 공공기관과 중대형 민간기업이 되었으나, 개혁 폐지 시 결정·책임 주체가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되어 기업 부담을 절감

- 다만 ‘성장 계획’에서 발표한 국가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 중단 및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 취소, 주택 거래 인지세 감세, 연간 투자 공제 확대, 투자 관련 조세 개혁 등은 계속 추진 예정

표 3-V-2 주요 조세 정책 변경의 영향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법인세율 인상(19→25%) 취소 결정을 철회	+2.3	+12.4	+16.6	+17.6	+18.7
소득세 기본세율 1%p 인하 계획을 철회	0	+5.3	+5.9	+5.8	+5.9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조정 계획을 철회	+2.4	-0.6	+0.8	+2.2	+2.1
배당세율 1.25%p 인상 철회 결정을 취소	0	+1.4	-1.0	+1.1	+0.9
IR35 개혁 폐지 방침을 철회	0	+1.1	+1.4	+1.7	+2.0
부가세 면세 쇼핑 도입 계획을 철회	0	0	+1.3	+2.0	+2.1
주세 1년 동결 계획을 철회	+0.1	+0.5	+0.6	+0.6	+0.6
합계	+4.7	+20.1	+25.4	+30.9	+32.3

주: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022 Spring Statement’ 추계(2022 성장계획의 조정) 기준) 외의 정책 비용은 ‘2022년 성장계획’에서 제시

자료: HM Treasury, “Chancellor brings forward further Medium-Term Fiscal Plan measures,” 2022.10.17.

-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 검토) 정부는 내년 4월 전까지 제공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고 2023년 4월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 재무부 주도의 검토에 착수
 - 에너지 가격 보장(Energy Price Guarantee)의 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추진을 검토
 -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는 신규 방식을 검토하고 기업 지원은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효율 제고도 고려
- (경제자문위원회 신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독립·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Advisory Council)를 운영
 -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영국과 국제 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재무장관, 재무부의 수석 경제 고문도 회의에 참석

- 영국 재무부, ‘2022년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 발표(2022. 11. 17.)³²⁸⁾
- (개요)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1월 17일에 생활비 부담에 취약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채무 및 정부 차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담은 ‘2022년 가을보고서’를 발표함
 - 지난 9월, 감세 조치를 포함한 ‘2022년 성장계획’ 발표 후 금융시장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철회하고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 전망이 동반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가을보고서’ 형식으로 주요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통상 가을에 예정된 예산안(Budget) 발표는 내년 봄으로 연기
 - (경제전망) 예산책임청은 물가상승,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와 기업 투자가 둔화되면서 영국이 2022년 3분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영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22년에 4.2%, 2023년에 -1.4%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2024년에 1.3%로 나타날 전망
 - 정부의 에너지 비용 및 생활비 지원이 없다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평가
 - (물가) 2022년 4분기에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1%를 기록하고 연간 CPI 상승률은 2022년 9.1%에서 2023년에 7.4%로 하락할 전망
 - (노동시장)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실업률은 2022년 3.6%에서 2024년에 4.9%까지 상승할 전망

³²⁸⁾ HM Treasury, “Chancellor delivers plan for stability, growth and public services,” 2022.11.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delivers-plan-for-stability-growth-and-public-services>, 검색일자: 2022.11.21.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statement-2022-documents/autumn-statement-2022-html>, 검색일자: 2022.11.2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2022.11., https://obr.uk/docs/dlm_uploads/CCS0822661240-002_SECURE_OBR_EFO_November_2022_WEB_ACCESSIBLE.pdf, 검색일자: 2022.3.24.

표 3-V-3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p)

구분	실적	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 성장률	7.5	4.2	-1.4	1.3	2.6	2.7	2.2
3월 전망 대비 차이	0.1	0.4	-3.2	-0.8	0.9	1.0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6	9.1	7.4	0.6	-0.8	0.2	1.7
3월 전망 대비 차이	0.0	1.7	3.3	-0.9	-2.7	-1.8	-
실업률(LFS)	4.5	3.6	4.1	4.9	4.7	4.3	4.2
3월 전망 대비 차이	0.0	-0.4	-0.1	0.7	0.6	0.2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2022, p.55-56, Table A.1.; A.2.

- (재정전망)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지난 2022년 3월 전망과 비교해 중기 재정전망이 상당히 악화됨
 - (재정수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채무이자 증가와 에너지 및 기타 생활비 지원 정책 비용으로 인해 FY2022-23에 7.1%로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
 - 이후에는 에너지 비용 지원 종료, 경기 회복, 가을보고서의 조세 증대 및 지출 축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순차입의 하락 추세가 예상됨
 - (채무) FY2022-23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을 제외)는 전년 대비 상승한 89.9%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FY2025-26에 97.6%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표 3-V-4 영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	39.0	40.2	41.6	41.7	41.4	41.2	41.1
총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44.7	47.3	47.2	44.9	44.2	44.0	43.4
재정적자 및 채무							
공공부문 순차입 (Public Sector Net Borrowing)	5.7	7.1	5.5	3.2	2.8	2.9	2.4
공공부문 순채무(BOE 제외) (Public Sector Net Debt ex Bank of England)	84.3	89.9	95.9	97.2	97.6	97.6	97.3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2022, p. 59, Table A. 5.

- (주요 정책) 영국 정부는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 안정, 성장, 공공서비스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 계획을 발표
 - (에너지 및 생활비 지원) 생활비 부담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약 260억파운드(FY2023-24 기준)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
 - (생활비 추가 지원) FY2023-24에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수급자(800만 가구) 대상 추가 900파운드, 연금수급자(800만 가구) 대상 추가 300파운드, 장애급여 수급자(600만명) 대상 추가 150파운드 지원
 -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 내년 4월부터 연간 에너지 요금의 가계 부담 상한을 3천파운드로 보장하여 가구당 약 500파운드의 비용을 절감³²⁹⁾
 - (에너지 효율 제고)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15% 감축 목표를 설정

³²⁹⁾ 영국은 에너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가 부과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을 제한하는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를 지난 10월부터 도입함. 에너지 요금 가계 부담 상한(표준가구, 평균 요금 기준)을 올해 연간 약 2,500파운드로 보장함에 따라 이번 겨울(2022.10.~2023.3.)에 가계 부담을 약 900파운드 절감하고 내년 4월부터 요금 상한을 3천파운드로 적용하면 내년도(2023.4.~2024.4.) 가계 부담을 약 500파운드 절감할 전망

- (연금 및 복지급여 인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근로연령 복지급여, 국가연금 및 연금 크레딧을 10.1% 인상
- (Household Support Fund 연장) 추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을 10억파운드 추가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2024년 3월 말까지 연장
- (법정 생활임금 인상) 2023년 4월부터 법정생활임금을 10.42파운드로 9.7% 인상
- (공공지출) 필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시설 등의 우선순위에 공공지출을 집중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지출을 관리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자금 지원을 FY2024-25에 최대 80억파운드 늘리고 FY2023-24와 FY2024-25에 추가 학교지원 예산을 각각 23억파운드 제공
 - (지속가능한 공공지출) 공공재정 개선을 위해 FY2025-26~FY2027-28의 부처 경상 지출 증가율(실질 기준)을 연간 1%로, 부처 자본 지출은 현재 수준(현금 기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며 부처 예산의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도 추진

표 3-V-5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계획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공공부문 경상지출	937.9	1,062.1	1,063.6	1,047.6	1,067.1	1,107.8	1,139.2
자원 AME	461.7	581.3	578.3	559.4	570.7	600.6	617.6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451.8	452.2	456.2	458.6	466.5	476.6	490.1
감가상각	24.4	28.6	29.2	29.6	30.0	30.7	31.5
공공부문 총투자	109.6	119.8	135.1	132.8	132.1	131.9	131.9
자본 AME	16.6	1.5	21.6	17.5	16.5	16.3	16.7
자본 DEL	93.0	118.3	113.6	115.2	115.6	115.6	115.2
총관리지출	1,047.5	1,181.9	1,198.8	1,180.3	1,199.2	1,239.7	1,271.1

주: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은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이며, AME(Annually Managed Expenditure)는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통제가 어려운 지출임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 11., p. 24, Table 2.3.

- (조세)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해 세수 증대 조치를 추진하고 고소득자가 더 많은 몫을 기여하도록 과세(세부 정책 내용은 <표 3-V-6>을 참고)

표 3-V-6 주요 조세 정책

구분	내용
개인 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구간 하한을 하향 조정(150,000→125,140파운드('23.4.)) - 소득세 및 국가보험기여금 부과 최저 소득 기준 동결('28.4.까지) - 소득세의 배당 공제 축소(2,000→1,000('23.4.)→500파운드('24.4.)) - 자본이득세 연간 비과세 금액 축소(12,300→6,000('23.4.)→3,000파운드('24.4.)) - 전기차 차량소비세 감면 폐지('25.4.) 등
기업 과세	- 고용주 부담 국가보험기여금 부과 최저 소득 기준을 동결('28.4.까지) - 국제 기준(Pillar 2)을 반영한 법인세 개혁 추진 - VAT 등록 면제 매출액 기준 추가 2년 동결('24.4. ~ '26.3.) - R&D 조세 감면 개혁
우발 이익 과세	- 석유·가스 기업에 부과하는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 연장('28.3.까지) 및 세율 인상(25→35%('23.1.)) - 전력회사 초과 이익 부담금(Electricity Generator Levy) 45% 신규 부과('23.1.~'28.3.)
비주거 재산세 비용 지원	-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비용 지원(약 136억 파운드 규모) • 비주거 재산세 납세자들에게 비주거 재산세 승수 ¹⁾ 를 추가 1년 동결 • 소매·접객·레저 부문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기타	- 지방당국이 주민 투표 없이 인상할 수 있는 카운슬세(council tax) 인상 폭 기준을 상향 조정 -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주: 1) 부동산 평가 가치에 승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승수는 전년도 승수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지만 이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 11.; HM Treasury, "Chancellor delivers plan for stability, growth and public services," 2022. 11. 17.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제성장) 사람, 인프라, 혁신에 투자해 성장 및 생산성을 제고
 -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및 역량(skill) 개발 지원
 - 인프라(철도, 기가비트 광대역 통신,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R&D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FY2024-25까지 200억파운드로 확대
 - 규제 합리화를 통해 디지털, 녹색기술, 생명과학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지원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성장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라 단기에는 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성장이 회복되면 채무 축소를 위해 재정건전화 추진을 가속화
 - (재정건전화) 가을보고서에서 조세 정책 결정으로 약 250억파운드를 확보하고 지출 정책 결정으로 약 300억파운드를 절감하는 550억파운드 규모 (FY2027-28 기준)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시
 - 가을보고서의 정책 결정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FY2024-25부터 차입 감소가 시작될 전망
 - (재정준칙) 지난 재정준칙 목표 개정³³⁰⁾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신규 재정준칙 목표를 제시
 - (채무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까지 감축
 - (재정수지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전망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에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복지지출 상한)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존 준칙은 유지

³³⁰⁾ 기존 재정준칙(2021년 가을예산안의 개정안)의 목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까지 감축, 경상예산수지는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까지 균형 달성,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5년 전망기간)이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 복지지출 한도 준수

나. 추가경정 예산

- 영국 재무부,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과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 자금 지급을 위한 FY2022-23 중앙정부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출(2022. 10. 18.)³³¹⁾
 - ※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은 촉박하게 긴급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³³²⁾
 - (규모) FY2022-23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본세출예산 대비 약 714억 파운드 증액되어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9,684억 파운드,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³³³⁾은 7,891억파운드로 편성(의결(voted) 예산 기준)
 - 본세출예산 대비 부처별 지출한도(DEL)³³⁴⁾는 1억 7,600만파운드, 연간관리 지출(AME)³³⁵⁾은 711억 7,500만파운드 증가
 - (변경 요인)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 패키지와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Asset Purchase Facility)에 자금 지급을 위해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세출예산을 증액

³³¹⁾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2022. 10. 1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11612/E02808483_HMT_Out-of-turn_supplementary_estimates_Accessible.pdf, 검색일자: 2022. 10. 19.

Philip Brien, Pete Brook, Matthew Keep, Alex Knight, and Stephen Morffew,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relating to HM Treasury and BEI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 10. 21.,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DP-2022-0169/CDP-2022-0169.pdf>, 검색일자: 2022. 10. 24.

³³²⁾ 이는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전년도 봄 발표)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하는 일반적인 추가경정 세출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매년 2월 발표)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편성된다는 차이가 있음

³³³⁾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를 의미

³³⁴⁾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DEL):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가능한 지출

³³⁵⁾ Annually Managed Expenditure(AM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가계 ‘에너지 가격 보장(310억파운드 증액)’ 및 기업 ‘에너지 요금 경감(290억파운드 증액)’ 지원을 위해 자원 AME를 600억 파운드(108%) 증액, 북아일랜드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자원 DEL을 1억 7,600만파운드(1%) 증액
- (재무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국채 보유 관련 자본 손실 등으로 재무부가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에 보전하는 자금 지급을 위해 자본 AME를 111억 7,500만파운드(793.6%) 증액

표 3-V-7 FY2022-23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의결 예산 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FY2022-23 현재 계획 (a)	FY2022-23 조정 규모 (b)	FY2022-23 수정 계획 (a)+(b)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	451,270	176	451,446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360,661	71,175	431,836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811,931	71,351	883,282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85,124	-	85,124
총 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897,055	71,351	968,406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79,306	-	-179,306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717,749	71,351	789,100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 2022.10.18., p.4, Table 1.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

- 영국 정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기업, 에너지 시장 지원 계획 발표 (2022.9.8., 9.21., 9.23.)³³⁶⁾
 - (가계 : 에너지 가격 보장(Energy Price Guarantee)) 가계 소비자가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연평균 에너지 요금의 상한을 2,500파운드로 설정해 전기 및 가스 요금 부담을 절감
 - (지원 방식) 표준 가구 기준, 연간 에너지 요금의 가계 부담 상한을 평균 2,500파운드로 보장
 - ※ 동 조치가 기존에 발표된 에너지 요금 상한³³⁷⁾을 대체할 예정
 - 표준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소 1천파운드의 비용을 절감(기존에 발표된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400파운드)³³⁸⁾과 합산 시 연간 1,400파운드 이상 절감)
 - 연간 절감액 중 150파운드는 한시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비용 부과(녹색 부담금(Green Levies) 포함)를 중단함에 따른 것임
 -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요금 할인액의 전액을 보전

³³⁶⁾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Government announces Energy Price Guarantee for families and businesses while urgently taking action to reform broken energy market," 2022.9.8.,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energy-price-guarantee-for-families-and-businesses-while-urgently-taking-action-to-reform-broken-energy-market>, 검색일자: 2022.9.13.
HM Treasury, "Government outlines plans to help cut energy bills for businesses," 2022.9.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outlines-plans-to-help-cut-energy-bills-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2.9.21.

HM Treasury, "Energy Markets Financing Scheme Update," 2022.9.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ergy-markets-financing-scheme-update>, 검색일자: 2022.9.26.

³³⁷⁾ 영국의 Ofgem(에너지 규제기관)은 에너지 가격, 기타 비용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 상한을 연 2회 업데이트하며, 지난 8월에 2022년 10월부터 적용할 일반 가구의 에너지 요금 상한을 1,971파운드에서 3,549파운드로 인상

³³⁸⁾ 2022년 5월에 발표된 물가상승 대응 정책 패키지에서 2022년 10월부터 6개월간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을 최대 400파운드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향후 2년
- (기업 : 에너지 요금 경감(Energy Bill Relief Scheme)) 비가정용 에너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가계의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을 지원
 - (지원 대상) 영국 기업, 자선단체, 공공부문(학교, 병원 등)
 - (지원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가스 및 전기 도매 가격에 할인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할인액은 계약 방식과 기업 상황에 따라 상이
 - 정부가 설정한 '지원 기준 도매가격(전기는 211파운드/MWh, 가스는 75파운드/MWh)³³⁹⁾과 계약 시 예상 도매가의 차이만큼 할인 적용
 - ※ 변동 계약 요금제에 대해서는 최대 할인 한도(전기 405파운드/MWh, 가스 115파운드/MWh)를 설정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1일~2023년 3월 31일(6개월)
 - (에너지 시장 자금 조달 제도(Energy Markets Financing Scheme)) 재무부가 중앙은행과 함께 400억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시장 자금 조달 제도'를 통해 높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직면한 도매 전기·가스 시장의 에너지 회사에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
 - (목적) 에너지 회사가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
 - (지원 대상)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영국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지원 방식) 상업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100%의 보증을 통해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10월 17일부터 신청)
 - 이 외에도 영국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 예정
 - (비용 절감) '에너지 공급 태스크포스'가 국내외 공급업체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장기 계약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
 - (공급 증대) 석유 및 가스 개발 면허 신규 부여, 영국 셰일가스 생산 중단 조치

³³⁹⁾ 정부는 '지원 도매가격'이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도매가격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해제,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 가속화, 2050년까지 최대 24GW의 원자력 발전 지속, 에너지 시장의 규제 개혁 등

- 한편 11월에 발표된 재무부의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에도 취약계층 생활비 추가 지원,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 운영 계획 등 추가 지원 계획이 포함됨³⁴⁰⁾

□ 영국 재무부, 주택담보대출 보증제도 연장 계획 발표(2022. 12. 20.)³⁴¹⁾

- (제도 개요) 영국은 주택 구입자가 최소 5%의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배경) 팬데믹 기간에 주택시장에서 높은 LTV(Loan-to-value)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 급감함에 따라 동 제도를 2021년 4월에 도입
 - (지원 내용) 60만파운드 이하 가치의 주택에 대해 대출 기관이 최대 95%의 LTV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보증 제공
 - (성과) 현재까지 2만 4천가구 이상을 지원했으며 제도의 약 85%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지원 연장) 재무부는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보증 제도를 2023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
 -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구들이 낮은 자기 자본으로 생애 최초 주택이나 더 나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기로 함

³⁴⁰⁾ '1. 예산 및 결산 - 가. 본예산' 부분을 참고 바람

³⁴¹⁾ HM Treasury, "Government extends Mortgage Guarantee Scheme," 2022.12.20.,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extends-mortgage-guarantee-scheme>, 검색일자: 2022.12.21.

나. 재정지출 효율화

- 영국 정부, ‘2022~2030 국유재산 전략(Government Property Strategy 2022-2030)’ 발표(2022.8.31.)³⁴²⁾
 - 영국 정부는 신규 ‘국유재산 전략’에서 정부 부동산 매각과 건물 효율화를 통한 추가 20억파운드의 절감 계획을 발표
 -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Government Hubs 프로그램³⁴³⁾을 통해 정부 직원들의 근무처를 통합하여 약 15억파운드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예정
 - 운영비용 절감, 최신 건축 자재 및 에너지원 사용, 임차 비용 축소 등을 통해 5억파운드의 비용 절감
 - 이 외에도 동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
 - 2030년까지 런던에서 2만 2천명의 공무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Places for Growth’ 프로그램 추진을 가속화
 - 3억파운드를 보조금 기금에 투자해 통합공공자산(One Public Estate) 프로그램³⁴⁴⁾을 통해 잉글랜드 전역의 소규모 재개발 부지를 주택 용지로 발굴 하도록 지원
 - 국유재산 관리가 ‘25개년 환경 계획’과 정부의 녹색 정부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원

³⁴²⁾ Cabinet Office, “Government commits to further £2 billion of property savings,” 2022.8.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commits-to-further-2-billion-of-property-savings>, 검색일자: 2022.9.6.

³⁴³⁾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직원들을 공유된 장소로 모아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³⁴⁴⁾ 공공부문의 토지·재산 활용에 있어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성장,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파트너십 제도

다. 기타 재정정책

- NHS(국가의료서비스) 인력, 교사 등 주요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³⁴⁵⁾ 계획 결정 (2022. 7. 19.)³⁴⁶⁾
 - (배경) ‘2020 지출검토’의 계획대로 지난해에 NHS 인력과 저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영국 공공부문의 급여가 동결되었으나 ‘2021 지출검토’에서는 2022/23년 ~ 2024/25년에 공공부문 급여를 인상하는 계획이 포함됨
 - (주요 결정) 2022년 7월, 정부는 NHS 인력, 교사, 군인, 경찰 등 일부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 계획을 확정
 - (NHS 인력) 정부는 올해(2022년 4월 기준 소급) 간호사, 응급구조사, 조산사 등을 포함한 NHS 인력(약 100만명 이상)의 급여를 최소 1,400파운드 인상하기로 결정
 - 저임금 근로자(포터, 청소 근로자 등)의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최대 9.3%, 의사 급여는 4.5% 인상
 -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에서 2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급여 인상으로 납세자 보호, 공공지출 관리,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고려하면서 NHS 인력의 기여를 인정하고 가계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힘
 - (교사)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교사 임금을 경력에 따라 5~8.9% 인상할 계획

³⁴⁵⁾ 공공부문 중 군인, 경찰, 교사, 고위공무원단, NHS 인력 등에 대한 임금 인상분은 장관이 8개 임금 검토 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자료: Powell, Andrew and Lorna Booth, “Public sector pay,”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1.13.)

³⁴⁶⁾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NHS staff to receive pay rise,” Press Release, 2022.7.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nhs-staff-to-receive-pay-rise>, 검색일자: 2022.7.20., Department for Education, “Government delivers landmark rises to teachers’ salaries,” Press Release, 2022.7.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delivers-landmark-rises-to-teachers-salaries>, 검색일자: 2022.7.20.
 영국 의회 홈페이지,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statements/detail/2022-07-19/hcws237>, 검색일자: 2022.7.20.
 영국 의회 홈페이지,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statements/detail/2022-07-19/hcws238>, 검색일자: 2022.7.20.

- 런던 외 지역의 교사 초봉은 8.9% 인상, 5년 이상 경력 교사의 임금은 다음 학년도에 5% 인상
 - (군인) 2022/23년의 군인 기본급을 3.75% 인상, 고위직 군인 급여는 3.5% 인상
 - (경찰) 9월 1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은 모든 계급이 1,900파운드 (전체 급여의 약 5%)의 급여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최대 8.8%까지 인상
- 영국 정부, EU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지연에 따라 국내 연구자 보호를 위한 R&D 자금을 제공 예정(2022.11.21.)³⁴⁷⁾
- (목적) 영국의 연구자들이 브렉시트 이후 EU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즉각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국 전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해당 EU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EU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이 완결 되지 못하는 상황
 - 영국과 EU는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하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연구 지원 프로그램³⁴⁸⁾ 참여 조건에 합의하였으나 당시 EU의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아 최종 확정지 지연되고 있음
 - (지원 규모) 최대 4억 8,400만파운드의 R&D 자금을 지원
 - (지원 내용) 인재 고용 유지(3천만파운드), 대학 연구 역량 강화(1억파운드), 연구 인프라 투자(2억파운드), 핵융합 산업 프로그램 지원(4,210만파운드), 유럽 공동핵융합실험장치(JET) 지원(8,400만파운드) 등
 - ‘Horizon Europe Guarantee 제도’³⁴⁹⁾를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을 제공

³⁴⁷⁾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Government commits nearly half a billion pounds for UK research to cover EU shortfall,” 2022.11.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commits-nearly-half-a-billion-pounds-for-uk-research-to-cover-eu-shortfall>, 검색일자: 2022.11.21.

³⁴⁸⁾ Horizon Europe, Euratom, Fusion for Energy, Copernicus 프로그램 등

- 영국 재무부, '2021년 지출검토'의 환경영향 평가 발표(2022. 12. 5.)³⁵⁰⁾
- (개요) 재무부가 '2021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지출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방법 및 결과, 향후 평가 방식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2021년 지출검토'의 지출 프로그램이 기후 변화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가 재무부에 보고하고 이를 재무부가 종합하여 발표
 - '2021년 지출검토'에서 재무부는 각 부처에 모든 '자본 DEL'³⁵¹⁾ 지출'과 영향력이 큰 '자원(경상) DEL 지출'에 대해 넷 제로 영향 등급을 산정하도록 요청³⁵²⁾
 - 부처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평가에 대한 지침 등에 따라 지출 프로그램의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평가
 - 재무부는 향후 지출검토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을 개선하고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와 계속 협력할 예정
 -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지출이 기후변화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구분
 - (긍정적 영향) '2021년 지출검토'에서 확정된 지출 중 평가 대상 지출의 약 54%(1,230억파운드)가 정부의 넷 제로 공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 영향) '2021년 지출검토'에서 확정된 '넷 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부처에서 기준 배출량(baseline) 대비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출 등이 포함

³⁴⁹⁾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제공

³⁵⁰⁾ HM Treasury, "Environmental impacts: analysis to accompan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2. 12.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vironmental-impacts-of-spending-review-2021/environmental-impacts-analysis-to-accompany-autumn-budget-and-spending-review-2021>, 검색일자: 2022. 12. 15.

³⁵¹⁾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3~4년 기간 동안 지출검토에서 확정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하는 통제 가능한 지출

³⁵²⁾ 모든 정부 지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자원 DEL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만 평가 대상에 포함

- (간접적 영향) 기후 공약 관련 혁신기술 상업화를 위한 R&D 지출처럼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배출량을 절감하는 지출이 포함
-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의 대부분은 주택, 학교, 도로 등 건물과 교통 인프라 제공과 관련된 지출임
- (중립적 영향) 부치는 탄소 배출의 영향이 매우 낮거나 없는 지출을 중립적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비 구입이 기후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자본 유지·보수 프로그램 지출이 포함됨

표 3-V-8 '2021년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지출의 환경영향 구분

(단위: %, 십억파운드)

구분	내용	비율	지출 금액
긍정적 영향 (직접적)	기준 배출량(baseline) 대비 배출량을 절감 - 명시적인 기후 변화 완화 목표를 가진 조치	16	37
긍정적 영향 (간접적)	기준 배출량 대비 배출량을 절감 - 명시적인 친환경 목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조치	38	86
중립적 영향	배출량 추정치가 기준 배출량 수준인 경우를 포함해 기후 변화에 중립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	20	47
부정적 영향	기준 배출량 대비 배출량 증가	16	36
영향 불분명	불확실한 정책 결정 또는 자산 활용 등으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	10	24

자료: HM Treasury, "Environmental impacts: analysis to accompan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2. 12. 5., Table 1.

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2022년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 (2022. 12. 15.)³⁵³⁾
 - (경제상황) 국내의 임금, 물가 압력과 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색된 상황

³⁵³⁾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3.5% - December 2022," 2022. 12. 15.,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2/december-2022>, 검색일자: 2022. 12. 16.

- 가계소비와 주요 주택시장 지표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투자 의향도 더욱 약화된 상황에서 2022년 4분기에 영국의 실질 GDP는 0.1% 감소할 전망
-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월에 11.1%에서 11월에 10.7%로 다소 하락했으나 지난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이후 연간 식품 및 서비스 물가상승세는 강화됨
-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8~10월 민간부문의 연간 정규 임금상승률도 6.5%로 이전 전망치 대비 상승
- (금리 인상 결정) 영국 통화정책위원회(MPC)는 2022년 12월 회의(12월 14일)에서 영국의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p 인상하기로 결정*
 - * 6인은 0.5%p 인상, 2인은 3%의 금리 수준 유지, 1인은 0.75%p 인상 의견을 제시
 -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에 0.15%p, 2022년 2월, 3월, 5월, 6월에 각각 0.25%p, 8월과 9월에 0.5%p, 11월에 0.75%p 인상된 바 있음

표 3-V-9 최근 영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일시	'21.12.16	'22.2.3	'22.3.17	'22.5.5	'22.6.16	'22.8.4	'22.9.22	'22.11.3	'22.12.15
금리	0.25	0.50	0.75	1.00	1.25	1.75	2.25	3.00	3.50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2. 12. 15.

- 영국 중앙은행,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국채 매입 시행(2022.9.28., 10.10., 10.11.)³⁵⁴⁾

³⁵⁴⁾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 announces gilt market operation,” 2022.9.28.,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2/september/bank-of-england-announces-gilt-market-operation>, 검색일자: 2022.10.24.

Bank of England, “Gilt Market Operations - Market Notice 28 September 2022,” 2022.9.28., <https://www.bankofengland.co.uk/markets/market-notice/2022/september/market-notice-28-september-2022-gilt-market-operations>, 검색일자: 2022.10.24.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 announces additional measures to support market functioning,” 2022.10.10.,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2/october/bank-of-england-announces-additional-measures-to-support-market-functioning>, 검색일자: 2022.10.24.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 widens gilt purchase operations to include index-linked gilts,” 2022.10.11.,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2/october/boe-widens-gilt-purchase-operations-to-include-index-linked-gilts>, 검색일자: 2022.10.24.



- (목적) 영국 장기 국채(길트채) 시장 변동성으로 촉발된 부채연계투자(Liability Driven Investment, LDI)³⁵⁵ 자금의 리스크에 대응하여 장기 국채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 신용으로의 전이를 방지하고자 중앙은행이 개입
 - 감세안을 담은 영국 정부의 '2022년 성장계획' 발표 이후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
- (경과) 9월 28일, 영국 중앙은행은 불안정한 국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긴급 장기 국채 매입을 결정했고 이후 후속 추가 조치도 발표
 - 최대 입찰 규모 확대, 한시적 담보 확대 레포 기구 개시 등 추가 조치 발표 (10월 10일)
 - 국채 매입 운영 범위를 물가연동국채까지 확대(10월 11일)
 - 당초 계획대로 국채 매입 조치를 종료(10월 14일)
- (주요 계획) 금융안정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특정 국채를 중심으로 매입을 시행
 - (기간) 국채 매입은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매입 대상) 유통시장에서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일반 국채(conventional gilt)만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10월 11일부터 잔존 만기 3년 이상의 물가연동 국채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
 - 단 채무관리국(DMO)에서 1주일 이내에 발행한 신규 국채나 채무관리국이 증액발행(re-open)을 공시한 국채는 제외
 - (규모) 최대 일일 입찰 규모를 초기에 50억파운드 규모로 제시(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였고, 국채 매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남은 5일간 이를 100억파운드로 확대
 - 일반 국채와 물가연동국채에 각각 최대 50억파운드씩 한도 할당
 - (자금 보전) 중앙은행이 이번 금융안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부가 이를 전액 보전할 예정

³⁵⁵ 부채연계투자는 보유 자산 가치의 변동이 부채(향후 지급할 연금) 가치에 더욱 연동되도록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활용하는 투자 방식임. 연금금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장기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이면서 수익 제고를 위한 고수익, 고위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양적완화 축소 연기) 9월에 발표된 800억파운드 규모의 보유 국채 축소 목표는 변경되지 않지만 자산매입기구(APF) 보유 국채의 매각 개시일을 당초 예정된 10월 3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
 - 영국 중앙은행은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31일 예정된 정부의 재정 정책 발표를 고려해 보유 국채 매각 개시일을 11월 1일로 재차 연기
- (기타 LDI 유동성 지원) 국채 매입 종료 후에도 LDI 자금이 직면한 유동성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시적 담보 확장 레포 기구(Temporary Expanded Collateral Repo Facility)’를 개시
 - 11월 10일까지 적격 담보 범위를 물가연동국채 등 스텔링 통화 체계(Sterling Monetary Framework, SMF)의 적격 담보와 SMF보다 넓은 범위의 담보(회사채 등)까지 확대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 영국 통계청, 2022년 3분기 GDP 성장률(1차 추계) 발표(2022.11.11.)³⁵⁶⁾
 - 2022년 3분기 영국의 실질 GDP는 직전분기 대비 0.2% 감소하였고 분기 GDP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0.4% 낮은 상황임
 - (경제활동별) 서비스업, 생산업, 건설업은 2022년 3분기에 성장세가 둔화됨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압력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 관련 추가 공휴일(9월)로 인한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분기 성장이 정체
 - 제조업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생산업은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1.5% 감소하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지출항목별) 2022년 3분기에 가계 소비는 0.5% 감소한 반면 정부 소비는 중앙정부 소비(특히 공공행정 및 국방) 증가에 힘입어 1.3% 증가
 - 또한 3분기에 수출 규모는 8.0% 증가

³⁵⁶⁾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uly to September 2022," 2022.11.11.,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julytoseptember2022>, 검색일자: 2022.11.17.

표 3-V-10 분기별 GDP 성장률과 주요 요소별 증가율(전 분기 대비)

(단위: %)

구분		2021		2022		
		Q3	Q4	Q1	Q2	Q3
실질 GDP 성장률		1.8	1.6	0.7	0.2	-0.2
경제활동별	농림어업	3.8	0.2	0.6	0.6	-
	생산업	-0.7	-1.1	-0.6	-0.2	-1.5
	건설업	-1.1	1.0	2.9	1.1	0.6
	서비스업	2.4	2.2	0.8	0.2	-
지출항목별	가계 소비	2.9	0.7	0.6	0.1	-0.5
	비영리기관 소비	0.5	0.9	0.4	3.0	0.2
	일반정부 소비	0.3	1.4	-1.1	-1.5	1.3
	총고정자본형성	0.7	1.2	3.5	-1.4	2.5
	(기업 투자)	1.2	1.0	-0.7	3.7	-0.5
	수출	-3.7	10.5	-4.5	3.6	8.0
	수입	4.3	1.1	11.2	-1.5	-3.2

자료: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uly to September 2022," 2022.11.11.

나. 재정 통계

□ 영국 통계청, 2022년 9월 공공재정 현황 발표(2022. 10. 21.)³⁵⁷⁾

- (재정적자) 2022년 4~9월의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공공부문 은행 제외)은 725억파운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9억파운드 감소
- (채무) 2022년 9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공공부문 은행 제외)는 2조 4,502억파운드(GDP 대비 약 98.0%)로 전년 동기 대비 2,130억파운드(GDP 대비 2.5%p)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추가 정부 지원, 현금 수입 감소, GDP 하락 등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 상승에 영향

³⁵⁷⁾ ONS, "Public sector finances, UK: September 2022," 2022.10.21.,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september2022/pdf>, 검색일자: 2022.10.24.

- 다만 중앙은행까지 제외된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의 약 85.1%로 전년 동기 대비 0.6%p 감소
- (중앙정부 수입 및 지출) 2022년 4~9월의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4,364억파운드,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4,665억파운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31억파운드, 111억파운드 증가
- 채무이자 지급이 전년보다 약 222억파운드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종료로 관련 보조금 지출은 순감

표 3-V-11 공공부문 재정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p)

구분	2021년 4~9월	2022년 4~9월	증감
공공부문 순차입	97.4	72.5	-24.9
(GDP 대비 %)	4.5	3.1	-1.4
공공부문 순채무	2,237.2	2,450.2	213.0
(GDP 대비 %)	95.5	98.0	2.5
중앙정부 경상수입	383.4	436.4	53.1
중앙정부 경상지출	455.5	466.5	11.1

주: 1. 순차입과 순채무는 공공부문 은행이 제외된 공공부문 기준
 2. 순채무는 각 연도 9월말 시점 기준

자료: ONS, "Public sector finances, UK: September 2022," 2022. 10. 21., Worksheet PS6A.

다. 주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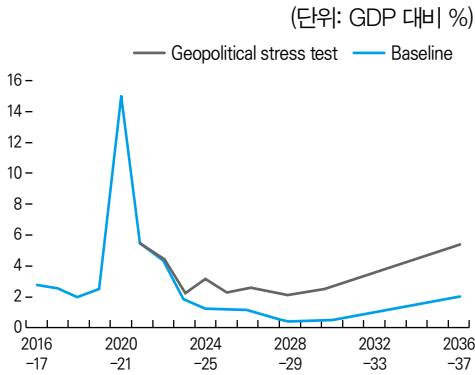
- 예산책임청(OBR), ‘2022 재정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발표(2022.7.7.)³⁵⁸⁾
 - (개요) 예산책임청은 기존에 격년으로 발간하던 ‘재정 리스크 보고서’와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022년에는 하나의 연례 보고서로 통합하여 발표함
 - 주요 재정 리스크 요인 분석과 공공재정 장기 전망 분석을 통합함
 - 이번 보고서는 공공재정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위협 요인(지정학적 갈등 고조,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 재정 압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
 - (지정학적 갈등)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안보와 글로벌 경제 통합에 대한 위협이 실현되면 재정전망이 악화될 수 있음
 - (① 국방지출 시나리오) FY2036-37의 국방지출 수준을 GDP의 1%(2차 대전 이후 추세), 2%(NATO 약속)로 가정 시 지출이 각각 270억, 20억파운드 절감 되나 3%(NATO 내 2위), 4%(냉전 시기 수준)로 가정 시 240억, 490억파운드 추가 소요
 - (②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중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해에는 GDP 대비 1.6%의 충격과 290억파운드의 추가 정부 차입이 발생
 - (③ 글로벌 경제 분절화 시나리오) 무역 긴장이 세계 무역 전쟁으로 진전될 경우 세계 교역 규모가 17% 감소하고 FY2036-37까지 정부 차입 비율은 GDP 대비 2.3% 상승, 채무 비율은 20% 이상 상승
 - (스트레스 테스트³⁵⁹⁾ 결과) 다수의 리스크들이 동시 실현되면 FY2036-37에 공공채무는 기준선 전망 대비 GDP의 약 28% 상승(주로 보호 무역 강화로 인한 세계 경제 분절화의 영향임)

³⁵⁸⁾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7., https://obr.uk/docs/dlm_uploads/Fiscal_risks_and_sustainability_2022-1.pdf, 검색일자: 2022.7.12.

OBR, 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speaking notes, 2022.7.7., https://obr.uk/docs/dlm_uploads/FRS2022_presentation_speaking_notes.pdf, 검색일자: 2022.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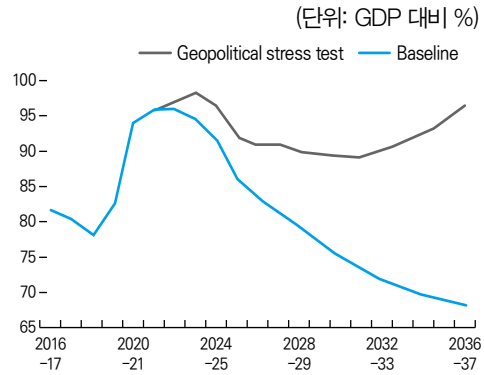
³⁵⁹⁾ ① 2020년대 중반 중대 사이버 공격 발생 ② 전통적 안보 위협 증가로 2030년대 중반까지 GDP의 3%로 국방 지출 증가 ③ 세계 무역 전쟁으로 인해 향후 15년간 국경 간 교역 및 투자 감소를 가정한 분석

그림 3-V-1
공공부문순차입(지정학적 갈등)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 7., p. 69, chart 2. 24.

그림 3-V-2
공공부문순채무(지정학적 갈등)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 7., p. 69, chart 2. 25.

-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변동) 영국의 탈탄소화 목표를 고려해 화석 연료 가격 상승 (중기)과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변화(장기)의 재정적 리스크를 평가함
 - (화석 연료 가격 상승) 화석 연료 가격의 '일시적 급등 시나리오'³⁶⁰⁾에서 차입이 FY2023-24에 300억파운드(GDP의 1.2%), 채무가 FY2026-27까지 630억 파운드(GDP의 1.8%) 추가되고, '지속적 충격 시나리오'³⁶¹⁾에서 차입은 FY2023-24에 170억파운드(GDP의 0.7%), 채무는 FY2026-27까지 500억 파운드(GDP의 2.2%) 추가됨
 - 재정 지원(에너지 요금 지원 등) 연장 리스크를 반영 시 차입과 채무 증가는 더욱 확대되며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의 부담을 미래의 가계에 전가하는 것임
 - (에너지 믹스 변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별로 잠재적 비용이 소요되고, 화석 연료 가격 상승 및 사용 감소로 관련 정부 수입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할 수 있음

³⁶⁰⁾ 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1섭(therm)당 7파운드(3월 전망의 두 배 이상 상승),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로 (21세기 최고 수준) 상승 후 2025년까지 3월 전망에서 가정한 수준으로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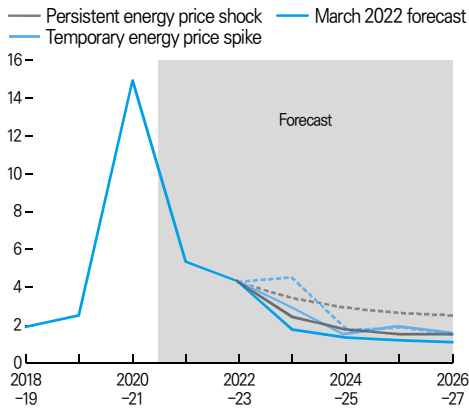
³⁶¹⁾ 첫 2년간 가스 가격은 1섭당 3파운드,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로 상승하여 유지되고 이후 실질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

- 유가 상승은 화석 연료 운영비용을 높여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한계 비용을 줄이고 화석 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고
- 배출권 거래제, 기타 탄소세 등 가스 사용으로 창출되는 정부 수입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탄소세를 확대하지 않고 보조금과 규제에 더욱 의존한다면 재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임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 더 많은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
 - * 국내 천연가스 사용 확대 시 탄소 포집·저장 인프라에, 원자력 발전 확대 시 신규 원전 건설·해체 비용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시 간헐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저장 용량에 더 많은 공공투자가 필요

그림 3-V-3

공공부문순차입(에너지가격 상승)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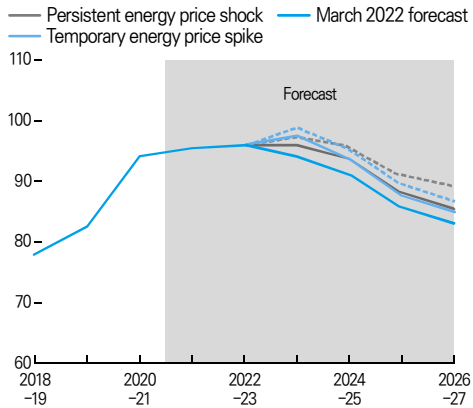


주: 점선은 정부 지원 확대 효과를 포함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7., p. 11, chart 8(좌).

그림 3-V-4

공공부문순채무(에너지가격 상승)

(단위: GDP 대비 %)



주: 점선은 정부 지원 확대 효과를 포함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7., p. 11, chart 8(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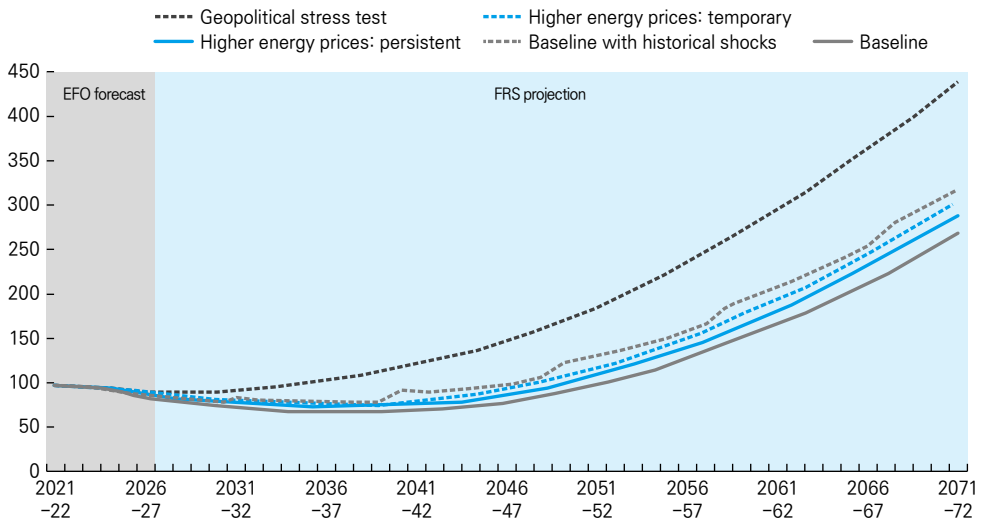
- (재정 장기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6-27에 84%에서 FY2052-53에 100%를 상회하고, FY2071-72에 267%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로가 나타날 전망

* 팬데믹 이후 조세 증대에 따른 기초적 재정수지 개선, 인구 전망 변화(출생률 감소, 인구 순유입 감소, 기대수명 개선 둔화), 휘발유차 단계적 폐지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기타 경제·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장기 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함

- 의료, 사회적 돌봄, 연금 등의 지출 증가와 자동차세 등 수입 감소로 FY2026-27 ~ FY2071-72 사이에 기초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11.4% 악화
- 또한 에너지 가격 쇼크 시나리오는 GDP의 약 300%로, 지정학적 갈등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나리오는 GDP의 400% 이상 수준까지 FY2071-72의 채무가 더욱 상승
- 채무를 GDP의 7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세 증대, 지출 축소 등으로 향후 50년 동안 매 10년마다 GDP의 1.5% 규모(약 370억파운드)의 추가 긴축이 필요

그림 3-V-5 장기 공공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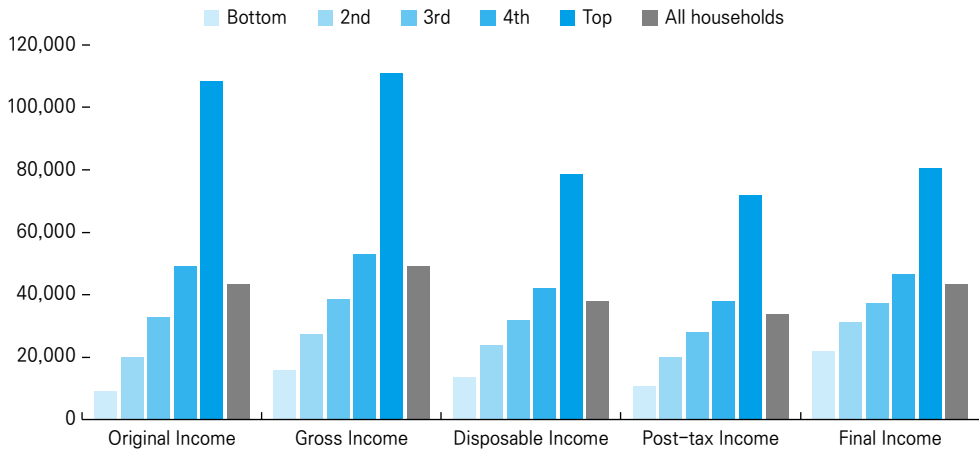
자료: OBR,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2022.7., p. 5, chart 1.

- 영국 통계청, 'FY2020-21 조세 및 재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분석' 발표(2022. 7. 29.)³⁶²⁾
- 영국 통계청은 직·간접세, 현물·현금급여 등이 소득 분위별 개인 및 가계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FY2020-21에 조세 및 현물·현금급여는 소득이 더욱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기여
 - 중위 가계소득 기준,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전 소득은 3만 4천파운드였으나 반영 후 소득은 3만 7,600파운드로 늘어남
 - 소득 상위 20%의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전 평균 가계소득은 소득 하위 20%의 약 13배(각각 10만 7,600파운드와 8,200파운드)가 넘지만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후의 평균 가계소득은 약 4배로(각각 7만 9,200파운드와 2만 1,400파운드) 격차가 축소
 - 또한 FY2020-21에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반영 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30.9→29.9%, 최종소득 기준)는 전년 대비 약 1.0%p 감소
 - FY2020-21에 현금 급여(지니계수 약 9.5%p 감소)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간접세(지니계수 약 3.8%p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확대
 - FY2020-21에 가처분 소득 중 간접세 지출 비중이 소득 하위 20%는 22.9%이지만 소득 상위 20%는 약 9.1%로 나타남
 - 조세부담보다 재정수혜가 더 큰 개인의 비율이 FY2020-21에 54.2%로 전년 대비 약 7%p 늘어나 통계 시작(1977년)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간접세 감소(한시적 VAT 축소, 소비 규모 감소)와 현물급여 증가(NHS의 지출 증가 등)를 반영

³⁶²⁾ ON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022. 7. 2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21>, 검색일자: 2022. 8. 18.

그림 3-V-6 소득분위별 가계소득(FY2020-21)

(단위: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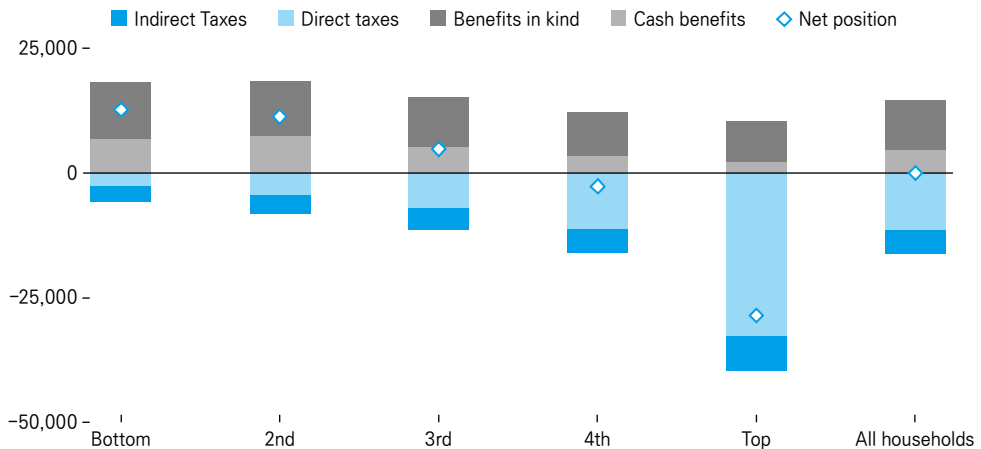


주: 유형별 소득은 ① 본원소득(Original Income: 근로, 개인연금, 투자, 기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② 총소득(Gross Income: 본원소득과 현금급여를 합산) ③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차감) ④ 세후소득(Post Tax Income: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차감) ⑤ 최종소득(Final Income: 세후소득에 현금급여를 합산)을 나타냄

자료: ON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022. 7. 29., Figure 1.

그림 3-V-7 조세 및 재정수혜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FY2020-21)

(단위: 파운드)



자료: ON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1," 2022. 7. 29., Figure 5.

- 영국 감사원,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2022. 10. 13.)³⁶³⁾
- ※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지원제도(2021년 9월 말 종료) 운영·개선 관련 소관 부처의 리스크 관리, 제도의 영향, 부정수급·오류 관리 방식 등을 분석
 - (정책 목표 달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유지 지원³⁶⁴⁾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³⁶⁵⁾ 제도를 통해 일자리와 기업 보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팬데믹 기간 동안 1,460만명에게 약 969억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
 - (고용유지 지원) 1,170만개 일자리(고용주 130만명)에 총 689억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해 일자리당 평균 5,887파운드를 지급
 - (자영업자 소득지원) 자영업자 290만명에게 총 281억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당 평균 9,700파운드를 지급
 - 자영업자 소득지원은 고용유지 지원보다 인당 지원액이 더 높았고 평균적으로 보조금 수급자의 소득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상승시켰음
 - 자영업자 소득지원 수급자는 보조금 수급 후 거래이익이 팬데믹 이전 대비 평균 2,217파운드(14%) 증가(보조금이 없었다면 평균 5,164파운드(32%) 감소)
 - 다만 팬데믹이 수급자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보조금을 수급해도 소득이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한 사람들이 있음
 - (효율적 제도 설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판단하는 명확한 요건을 조기에 활용하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집중 지원해 사중손실을 축소 가능
 - 코로나19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 발생

³⁶³⁾ NAO, *Delivery of employment support schem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2. 10. 13.,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22/10/NAO-report-Delivery-of-employment-support-schemes-in-response-to-the-COVID-19-pandemic.pdf>, 검색일자: 2022. 10. 24.

³⁶⁴⁾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CJRS):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원들이 임시 휴업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³⁶⁵⁾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SEISS):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2021년 7월부터 자영업자 소득지원 수급 기준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기준을 명확히 도입하면서 최대 25억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
- (부정수급·오류) 국세관세청이 추계한 코로나19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 부정수급·오류 규모는 약 45억파운드(전체 비용의 4.6%) 수준
 - 고용유지 지원의 부정수급·오류 중 약 2/3은 직원이 근로 중이면서 고용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약 23억파운드)로 추정
 -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잘못 청구한 보조금을 상환한 경우도 9억 6,800만 파운드 수준
 - 국세관세청은 2023-24년까지 약 11억파운드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주요 자료 출처



EU

- EU 법령포털, <https://eur-lex.europa.eu/>
- EU 보도자료, https://europa.eu/newsroom/home_en
-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
- EU 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
- 유럽중앙은행, <https://www.ecb.europa.eu/>
- EU 통계청, <https://ec.europa.eu/eurostat>

IMF

-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OECD

-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oecd-ko/index.do>

미국

- 미국 관리예산처(OMB), <http://www.whitehouse.gov/omb>
-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igned-legislation>
-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
- 미국 의회예산처(CBO), <https://www.cbo.gov/>
-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appropriations.house.gov>
-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
- 미국 노동부, <https://www.dol.gov>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s://www.bls.gov>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
-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

일본

-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Japan), <http://www.mof.go.jp/>
-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http://www.cao.go.jp/>
- 수상관저(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https://www.kantei.go.jp/>
- 일본 통계청(Statistics Japan), <http://www.stat.go.jp/>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ttp://www.mhlw.go.jp/>
- 일본 농림수산업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ttps://www.maff.go.jp/>
- 일본 은행(Bank of Japan), <https://www.boj.or.jp/>



독일

- 연방 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
- 연방의회, <https://www.bundestag.de/>
- 연방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연방경제기후부, <https://www.bmwk.de/>
- 연방보건부,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
- 연방노동사회부, <https://www.bmas.de/>
- 안정화위원회, <http://www.stabilitaetsrat.de/>
- 연방은행, <http://www.bundesbank.de/>
- 연방 통계청, <http://www.bundesregierung.de/>

프랑스

- 프랑스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
- 프랑스 예산국, <http://www.budget.gouv.fr/>
- 프랑스 정부, <http://www.gouvernement.fr/>
-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default.asp>
- 프랑스 내무부, <https://www.interieur.gouv.fr/>
-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

영국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 재무부(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rime-ministers-office-10-downing-street>
-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and-social-care>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business-energy-and-industrial-strategy>
-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https://www.nao.org.uk/>
- 영국 의회(UK Parliament), <https://www.parliament.uk>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http://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2년 12월 27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세종, 사00002

조판 및 인쇄 경성문화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